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안 번호	2319

제안연월일 : 2024년 12월 19일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1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2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24년. 11. 4.(월) ~ 11. 17.(일) 〈14일간〉

※ 제327회 정례회 : 2024. 11. 1.(수) ~ 12. 20.(금) <50일간>

□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 주요 감사대상 업무

○ 2023. 11월 ~ 2024.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 감사 착안사항

○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3 세 부 추 진 계 획

☐ 감사대상 선정 기관 : 145개 기관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현황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기 획 경 제	환 경 수자원	문화체육 관 광	보 건 복 지	도시안전 건 설	주 택 공 간	도시계획 균 형	교 통	교 육
계	145	3	13	14	6	11	40	43	5	6	4	42
위원회의 결	94	3	9	7	6	6	7	43	4	5	4	42
본회의의 결	51	-	4	7	-	5	33	-	1	1	-	-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의결 선정기관(94),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51)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94)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51)
운영위원회(3)	○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13)	○ 비상기획관 ○ 민생사법경찰국 ○ 행정국 ○ 재무국 ○ 평생교육국 ○ 인재개발원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기획경제위원회(14)	○ 기획조정실 ○ 경제실 ○ 민생노동국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 서울연구원 ○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남부기술교육원 ○ 서울패션허브
환경수자원위원회(6)	○ 기후환경본부 : 1본부 1센터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 정원도시국 : 1국, 4센터, 1식물원 - 정원도시국 - 공원여가센터 • 동부, 중부, 서부, 북부 - 서울식물원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94)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51)
	○ 서울아리수본부 : 1본부, 1연구원, 8수도사업소,, 6정수센터, 1자재관리센터 - 서울아리수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 수도자재관리센터 ○ 미래한강본부 : 1본부, 1단 - 미래한강본부 - 한강사업추진단 ○ 서울대공원 ○ 서울에너지공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11)	○ 대변인 ○ 홍보기획관 ○ 문화본부 ○ 관광체육국(서울시체육회 포함)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보건복지위원회(40)	○ 여성가족실 ○ 복지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9)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복지실 소관(17)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 홍은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94)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51)
		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시립 양평 쉼터,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 광역자활센터,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시민건강국 소관(7)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 서울시 제대혈은행, 에이즈 예방 홍보, 에이즈 예방 교육, 한센병관리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도시안전건설위원회(43)	○ 재난안전실 ○ 도로사업소(6)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 소방재난본부 ○ 서울종합방재센터 ○ 소방학교 ○ 특수구조단 ○ 소방서(25) ○ 물순환안전국 ○ 물재생센터(2) • 중랑, 난지 ○ 건설기술정책관 ○ 품질시험소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택공간위원회(5)	○ 주택실 ○ 미래공간기획관 ○ 디지털도시국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서울디지털재단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94)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51)
도시계획균형위원회(6)	○ 도시공간본부 ○ 균형발전본부 ○ 디자인정책관 ○ 미래청년기획단 ○ 글로벌도시정책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교통위원회(4)	○ 교통실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교육위원회(42)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학습관 (4개) ○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 (17개)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11개)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 감사위원회 편성 : 각 상임위원회별

연번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1	운 영 위 원 회 (1 3)	이숙자	박성연 김성준	김춘곤, 박 석,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	최현재, 성옥현, 김정덕, 이시우, 김혜진, 장수진, 김정원, 채학기, 유기정, 전은애, 박은영,
2	행정자치 위 원 회 (9)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김태한, 김성택, 정찬일, 류홍섭, 최석훈, 이태기, 최문숙, 최현종, 임재빈, 변천원, 김경선, 강태영, 여양모, 이슬기 ,정숙영, 이승후.
3	기획경제 위 원 회 (1 2)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이준석, 김성만, 정형석, 정주원, 최범준, 김용우, 신현두, 정항우, 김혜진, 김소연, 김수은, 이성찬, 정희숙, 김범석, 김한울, 박재윤, 안태호, 이정수
4	환경수자원 위 원 회 (1 1)	임만균	박춘선 한 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박귀수, 현진숙, 배성진, 조창훈, 유시범, 양현민, 정주현, 김선희, 윤소민, 김경혜, 손정욱, 강규이, 박진수, 서효정, 원유준, 한상임
5	문화체육관광 위 원 회 (1 0)	김 경	송경택 아이수루	김규남, 김형재, 김혜영, 이성배, 이종배, 김기덕, 유정희	강옥심, 오주석, 임창균, 박지혜, 심형준, 정재윤, 홍민지, 김대인, 이순복, 최재현, 김다운, 김동규, 김보미, 박수형, 조지훈, 최기쁨.
6	보건복지 위 원 회 (9)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이종환, 신복자, 강석주 도문열, 김인제, 이병도	주병준, 황동연, 김소은, 박현우, 나혜미, 심선영, 조용민, 우현재, 이윤진, 도미화, 신현태, 한송이, 김종훈, 박서영, 양옥수, 백순정, 양희수, 권민진

연번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11)	강동길	김용호 박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이상근, 고은미, 박남권, 심현보, 권혁일, 정민선, 김성연, 남기태, 홍민아, 백제리, 구본장, 공혜정
8	주택공간위원회(12)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 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윤은정, 김숙희, 강대만, 이정현, 조동륜, 오태민, 박영신, 한승윤, 김태훈, 조윤길, 전재성, 강주연, 금민정, 김지혜, 박주용, 배재현, 송명희
9	도시계획균형위원회(10)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 훈, 송재혁, 임종국	조성준, 김상원, 하미경, 권수정, 박성원, 김금란, 이주병, 공현주, 이지인, 박성하, 장미영, 김유진, 김영광, 윤주이
10	교통위원회(13)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장 훈, 김민호, 박준영, 배효인, 온순현, 이성엽, 안진주, 김유라, 남승연, 채원석, 이동남, 이지선, 박은비, 박은샘, 박정렬, 송경희, 최혜민, 홍수희
11	교육위원회(13)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심혁보, 김성룡, 정진국, 이헌구, 이성훈, 이가영, 이성윤, 김지수, 김명신, 이현주, 송여정, 최명현, 김문주, 백경하, 온현지, 권현경, 백승호, 양성옥, 이윤지, 이지희, 이진석

5 감사일정 및 장소

1. 운영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운영위원회	11.15.(금)	10:00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2.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행정자치위원회	11. 4(월)	10:00	○ 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5(화)	10:00	○ 자원봉사센터 ○ 민생사법경찰국		
	11. 6(수)	10:00	자료정리		
	11. 7(목)	10:00	○ 재무국		
	11. 8(금)	10:00	○ 인재개발원 ○ 비상기획관		
	11. 9(토) ~11. 10(일)		휴 감		
	11. 11(월)	10:00	○ 자치경찰위원회		
	11. 12(화)	10:00	○ 서울장학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 50플러스재단		
	11. 13(수)	10:00	○ 평생교육국		
	11. 14(목)	10:00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감사위원회		
	11. 15(금)	10:00	○ 종 합 감 사 (비상기획관,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진흥원) ※ 운영위원회 감사		
	11. 16(토) ~11. 17(일)		휴 감		

3. 기획경제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 간			
기획경제위원회	11.4.(월)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1.5.(화)	10:00	○ 경제실 ○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 패션허브		
	11.6.(수)		자료정리		
	11.7.(목)	10:00	○ 민생노동국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11.8.(금)	10:00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연구원		
	11.9.(토) ~11.10.(일)		휴 감		
	11.11.(월)	10:00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 서울신용보증재단		
	11.12.(화)	10:00	○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남부기술교육원		
	11.13.(수)		자료정리		
	11.14.(목)	10:00	○ 종합감사		
	11.15.(금)		자료정리		
	11.16.(토) ~11.17.(일)		휴 감		

4.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 간			
환경수자원위원회	11. 4(월)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5(화)	10:00			
	11. 6(수)	10:00	○ 정원도시국 - 정원도시국 - 공원여가센터(4개소) - 서울식물원 ○ 서울대공원		
	11. 7(목)	10:00			
	11. 8(금)	10:00	○ 서울에너지공사		
	11. 11(월)	10:00	○ 미래한강본부 - 미래한강본부 - 한강사업추진단		
	11. 12(화)	10:00			
	11. 13(수)	10:00	○ 서울아리수본부 - 서울아리수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11. 14(목)	10:00			
	11.15(금)	10:00	○ 자료정리 및 보충감사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 5(화)	10:00	○ 대변인 ○ 홍보기획관 ○ 120다산콜재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1. 6(수)	14:00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11. 7(목)		자료정리		
	11. 8(금)	10:00	○ 관광체육국(서울시체육회 포함) ○ 서울관광재단		
	11. 13(수)	10:00	○ 문화본부 ○ 서울문화재단		
	11. 14(목)	10:00	○ 세종문화회관 ○ 서울시립교향악단		
	11.15(금)		자료정리		

6.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 간			
보건복지위원회	11. 4(월) ~11.5(화)		행정사무감사 준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1.6(수)	10:00	○ 여성가족실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1.7(목)	10:00	○ 여성가족 관련 기관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11.8(금) ~11.10(일)		감사결과 자료정리		
	11.11(월)	10:00	○ 복지실 ○ 서울시복지재단		
	11.12(화)	10:00	○ 복지 관련 기관 -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 홍은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시립 양평 쉼터,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월 일	시 간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 광역자활센터,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11.13.(월)		감사결과 자료정리		
	11.14.(화)	11:00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11.15(금)	10:00	○ 특수 법인 - 서울의료원 ○ 직영 병원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 위탁 병원 - 보라매병원 ○ 건강 관련 기관 - 서울시 제대혈은행, 에이즈 예방 홍보, 에이즈 예방 교육, 한센병관리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11.16(토) ~11.17(일)		감사결과 정리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 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1. 4.(월)	10:00	○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11. 5.(화)	09:30	○ 재난안전실 ► 현장확인감사		
	11. 6.(수)	10:00	○ 소방재난본부		
	11. 7.(목)	09:30	○ 소방재난본부 ► 현장확인감사		
	11. 8.(금)	10:00	○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11. 11.(월)	09:30	○ 물순환안전국 ► 현장확인감사		
	11.12.(화)	10:00	○ 건설기술정책관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11.13.(수)	09:3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현장확인감사		
	11.14.(목)	14:00	○ 종합감사		
	11.15.(금)	10:00	감사결과 정리		

8. 주택공간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 간			
주택공간위원회	11. 4.(월)	10:00	○ 주택실 (1일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11. 5.(화)	10:00	○ 주택실 (2일차)		
	11. 6.(수)		감사중지 ※감사자료 정리		
	11. 7.(목)	10:00	○ 현장확인감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사옥		
		15:00	○ 서울주택도시공사 (1일차)		
	11. 8.(금)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차)		
	11. 11.(월)	10:00	○ 미래공간기획관		
	11. 12.(화)	10:00	○ 디지털도시국		
		16:00	○ 서울디지털재단		
	11. 13.(수)	10:00	○ 주택실 ○ 서울주택도시공사		
		14:00	○ 미래공간기획관 ○ 디지털도시국 ○ 서울디지털재단		
	11. 14.(목)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11. 15.(금)		감사중지 ※ 운영위 일정		

9.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 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1. 4.(월)	10:00	○ 도시공간본부(1일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11. 5.(화)	10:00	○ 도시공간본부(2일차)		
	11. 6.(수)		휴 감		
	11. 7.(목)	10:00	○ 미래청년기획관		
	11. 8.(금)	10:00	○ 디자인정책관		
	11.11.(월)	10:00	○ 서울디자인재단		
	11.12.(화)	10:00	○ 글로벌도시정책관		
	11.13.(수)	10:00	○ 균형발전본부(1일차)		
	11.14.(목)	10:00	○ 균형발전본부(2일차)		
	11.15.(금)		휴 감 ※ 운영위원회 행감		

10. 교통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월 일	시 간			
교통위원회	11. 4.(월)	10:00	○ 교통실	교통위원회 회의실	㈜피유엠피 대표 ㈜더스윙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티머니 대표
	11. 5.(화)	10:00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씨엔지㈜ 대표이사 한국스마트자동차㈜ 대표이사
	11. 6.(수)	10:00	○ 서울시설공단		
	11. 7.(목)	10:00			
	11. 8.(금)	10:00	감사결과정리		
	11.11.(월)	10:00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자회사5개포함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서해철도㈜ GTX-A운영㈜)		현대로템㈜ 대표 ㈜우진산전 대표 ㈜다원시스 대표
	11.12.(화)	10:00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11.13.(수)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11.14.(목)	10:00	〈종합감사〉 ○ 교통실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삼천리 대표이사 김한솔(온라인콘텐츠 제작자)
	11.15.(금)	10:00	감사결과정리		

11. 교육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 간			
교육위원회	11. 4.(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무)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5.(화)	10:00			
	11. 6.(수)		※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검토		
	11. 7.(목)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11개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11) 소관 사무) ※대표보고 : 동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11. 8.(금)	10:00			
	11.11.(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 사무) ※대표보고 : 마포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		
	11.12.(화)	10:00			
	11.13.(수)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검토		
	11.14.(목)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사무)		
	11.15.(금)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종합감사 및 총평		

6 감사결과 총괄표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562	1,619	998	945
운 영 위 원 회	84	39	30	15
행정자치위원회	400	189	124	87
기획경제위원회	479	200	108	171
환경수자원위원회	329	141	107	8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71	116	73	82
보건복지위원회	387	151	110	12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98	211	37	50
주택공간위원회	236	54	117	65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16	105	56	55
교 통 위 원 회	330	168	92	70
교 육 위 원 회	532	245	144	143

7 위 원 회 별 세 부 감 사 결 과

1. 운영위원회

□ 총 괄

감사대상기관	계	시정 ·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84	39	30	15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23	10	9	4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61	29	21	11

시정·처리요구 사항 ---------- 39건

□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10건

1. **기후동행카드 재검토**

- 서울교통공사 손실 분담금, K-Pass 중복 교통비 지원, 경기도민 혜택 비교우위, 코레일-서울교통공사 손실금 지원 등 형평 문제 재검토 필요

2. **러시아 해킹 조직의 사이버 위협 대응**

- 러시아 해킹그룹이 서울시홈페이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보안 강화 등 사이버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주길 바람

3. **디지털 장비 보안 완결성 강화**

- 하드웨어 스파이칩 침투를 통한 해킹 피해 가능성 있음. 서울시 디지털 장비 구매 시 보안 완결성 검증 절차 도입 검토를 해주길 바람

4. 위례신사선 교통개선분담금

- 교통개선분담금 광역지자체 회계 편입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
- 위례신사선 교통개선분담금 사업시행자 귀속 문제 재검토

5.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공사비 현실화

-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공사비 현실화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창동 의료복합바이오시티, 수색역 DMC 등 공사비로 인한 민간사업자 수요 부재

6. 광복80주년 지역 유적 활용 행사

-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독립운동가와 연관된 지역 유적을 활용한 행사를 기획
- 행사 준비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 제안

7. 서울파트너스하우스 2층 간담회장 사용

- 시정 현안 간담회 등 서울파트너스하우스 2층 간담회장에서 거의 매일 시장 개인식당처럼 사용하는 문제 지적

8. 대시민 정책 발표 관련

-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계획 및 공공의료 확충계획 등이 대시민 공개발표 후 설명 없이 변경되거나 지연되고 있음
- 대시민 정책 발표 시 신중히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발표하고, 변경·지연 또는 미추진 상황 발생 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할 것

9. 출연기관 통·폐합 성과 진단

- 2022년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통폐합하였으나, 성과와 시너지 효과 나타나지 않음. 분석과 진단을 통해 통폐합 목적 실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시행할 것

1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TBS 관련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 및 해산과 TBS 조례 폐지 및 출연금

중단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처리방식이 명확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부족했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기조에 맞게 사회서비스와 공영방송에 헌신한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다할 것

▢ 시의회사무처 : 29건

1. **별관 공간 재배치 관련**

- 별관 3층 기경위에 비해 행자위 공간 협소하고, 행감 등 상임위 회의시 집행기관 직원 대기로 인해 혼잡도가 높은 상황 감안, 해당 공간 재배치 구조화 필요

2. **체육대회 추진 관련**

- 체육대회 추진 비용을 복수 상임위를 사유로 운영위 미배정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

3.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 운영위원회 대상 홍보물 관련 보고 미비
- 현재 예정된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 중지 요청
- 상임위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상임위원장뿐 아니라 상임위원도 함께 출연하여 상임위 활동을 홍보하길 바람

4.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 TV 광고 제작 시 특정 의원만 출연하는 형식보다는 모든 의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요청
- 광고 내용은 재미 요소보다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우선 제작 요청
- 일부 의원만 출연하는 후반기 홍보영상 콘셉트 변경 요청
-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의원들에 대한 홍보 반영 요청
- 홍보물 편찬위원회 구성 시 동일 위원의 중복 연임을 시정하여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

5. **현수막 등 홍보물**

- 의회 홍보물은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재미나 흥미 위주가 아니라 정보제공에 포커스를 두고 제작해 주길 바람

6. 서울시 인사 발령 공유 관련

- 서울시 인사 발령 및 승진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보고해 주길 바람

7. 의회청사 리모델링 및 청사관리 철저

- 별관 화장실 공사직후 타일 하자 발생
- 8-2 회의실 집기 보수 필요
- 별관 2층 출입기자실 명패 파손
- 지하 진입로 입구 천장에 큰 나사 돌출되어 미관 저해 및 안전 우려

8. 청사 보안 강화

- 청사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필요

9. 업무협약 체계적 관리

- 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 이행을 위해 총괄 관리부서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10. 법제처 업무협약 관리

- 법제처와의 협약('21.1.)에 관련된 추진 실적 개선 필요

11. 대학 업무협약을 통한 위탁교육

- 직원 교육 결과보고서 공개 및 교육이수후 보직변경 등 체계적 관리 미비
- 위탁 교육 수혜자가 적은 상황으로 검토 후 개선 사항 별도 보고

※ (예시) 동국대 법무대학원의 경우 협약으로 인한 학비 감면 혜택 보다 일반적인 공무원 감면 혜택이 더 큼

12. 의회 회의록 서명 관련

- 개원 후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서명받은 후 매회 활용하는 절차 개선

13. 의정활동 영상 홍보물

- 옥외 전광판(시정질문) 자막에 소속 정당, 질의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발견되므로 개선 필요

14. 의회 홈페이지 운영

- 의원 상임위 출석률 오류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과 즉시 조치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어 홈페이지의 포토갤러리, 동영상갤러리에 자료 현행화가 안 되어 있어 개선 요구

15.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운영

- 자유게시판 게시글이 없는 등 관리가 미비하고 활성화 방안 요구

16. 직원 겸직허가 관련

- 겸직(외부 강의 등) 관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가, 출장, 출장비 수령 여부 등 철저한 복무 관리 필요함
- 계속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예외적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 매년 반복적으로 외부 강의 등을 통한 고액 수익자에 대한 겸직 허가 시정 필요

17. 서울의회소식지 제작

- 친환경 용지로의 전환, 웹진 확대 등 제작방식에 대한 고려 필요

18. 본관 여성휴게실 관련

- 본관 여성 휴게실 관리가 미비함. 여성 입장에서 보다 안전한 휴게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19.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배포가 많은 회기 기간에는 보도자료 배포 마감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의원 개인 명의 이메일로 배포하면 기자 일독 확률이 낮고 기사에 반영되지 않는데 지역 활동이라도 소관 상임위 사안이라면 배포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해주기 바람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언론보도사항에 기사 누락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함

20. 의장표창 시스템 개선

- 현재 표창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긴 하나 정책지원관이 수작업이 필요해 효율적인 의장표창 운영을 위해 관리시스템 개발 검토 요청

21. 인사 채용 심의절차

- 서류심사를 통과한 인원 대비 최종 인사위원회 합격 비율이 적은 것은 심의 절차상 정량·정성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
- 정책지원관 결원 발생시 즉시 충원되어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신규 정책지원관 임용 시 업무처리에 필요한 의회 시스템 현황, 이용방법 등이 들어간 매뉴얼 책자를 지급해 빠른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함

22. 의원 정보시스템 개선 필요

- 의원 요구자료 공개여부 선택 기능 도입('24.10.) 하였으나, 여전히 시스템상 제목 공개, 전문위원실 직원 공유 등 미비점 존재
- 모바일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자료 요구 및 확인 등) 기능 개선 필요

23. 의안발의 문자 메시지 발송

- 이번 회기 의안 연서 요청 문자대비 의안접수 문자 현저히 적었음 시스템 오류 예상되며 별도 보고 요청

24. 공무국외출장 관련

- 의장단 국외 출장 추진 시 모든 의원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배정을 요청

25. 연구용역 중복

- 입법정책연구용역과 정책개발연구용역 간 중복 과제는 지양할 것을 요구

26.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

- 청소년 시의원이 준비한 조례안이 실제 의원들에게 전달되고,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27.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법률검토 추진

-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의원-사무처 입장 정리 후 법률검토 의뢰 요청

28.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와 관련**

- 최근 3년간 법정 비율을 미충족하고 있어 원인 분석 및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9. **타임캡슐 활용**

-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타임캡슐이 방치되고 있어 배치 장소 변경 등을 고민해 당초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

건 의 사 항 ---------- 30건

□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9건

1.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 서울시 산하 공기업 행안부 경영평가 관련 동일 기준 적용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에 따른 기준 개선 대정부 건의
2. **지하철 첫 차 운행시간 조정제안**
   - 서울 지하철 첫차 운행 시간 조정을 제안, 새벽에 출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하철 첫 차 운행 시간을 약 30분 앞당기는 방안 제시
3. **업무 특성에 맞는 육아 지원제도 검토**
   - 육아공무원 재택근무 제외신청 비율 높은 부서 현황 파악해 맞춤형 육아 지원제도 마련 당부
4.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노력 강화**
   -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위해 담당부서 인력확충, 서울시 인근 도시 협력 등 집행부 철저 준비
5. **외국인 무임승차**
   - 65세 이상 영주권자 대상으로 외국인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현 제도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제도 개선
6. **조례에 따른 구속력 있는 3자 협의체 구성**
   - 시-시의회-교육청 간 유보통합·돌봄 등 여러 가지 협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소통하도록 조례 상 구속력 있는 3자 협의체 구성
7. **교통시설·교통개선 분담금 설명 요청**
8. **사업 초기 평가 관련**
   - 메타버스 사업, 한강버스 등 사업 초기 타당성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 평가 지침 마련
9. **서울 광장숲 관련**
   - 서울 광장숲 조성사업이 추진실적에 비해 환경보호를 과장하여 홍보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있음. 내년도 서울 광장숲 2단계 조성때는 당초 목적인 도시숲 기능에 부합되도록 추진할 것

□ 시의회사무처 : 21건

1. **사무처 개선사항 안내**
   - 후반기 의정담당관 사무처 환경 개선 검토 진행 사항 운영위원들에게 배부·안내
2. **의회 홍보물**
   - 의회 홍보물 제작시 홍보물편집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면 함
3. **권익위 조사 관련**
   - 서울시의회 위상 관련, 의회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처에서 잘 대처해 주기 바람
4. **의원연구실 집기비품 관리**
   - 의원연구실 집기비품 경우, 의원에게 치우침 없이 균등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분 기준(가이드라인) 필요
5.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소통**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 관련 사무처 조직개편 등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미비한 상황으로 소통 강화 필요
6. **조직개편 관련**
   - 특정 분야에 전문성·유연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임기제 직책의 장점을 살려 적절히 운영 필요
7. **격무 직원 초과근무**
   - 전문위원실 직원, 정책지원관 등의 업무강도가 높은 행감기간(11월) 실제 초과근무 인정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8. **인사권 독립 관련**
   -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처 조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인사권 독립의 본래 취지를 살릴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 도출 필요
9. **불용물품 개발도상국 기부**
   - 市 사례(노후 소방차 기부) 참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노트북 등 불용물품을 개발도상국으로 기부하는 방안 검토 건의

10. **민원해소자문단 관련**

-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 의원공유 방안 검토 필요
- 자문단 외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근거와 사유
- 자문위원 참여율 저조에 따른 자문단 관리방안 개선
- 상·하반기 개원에 맞추어 자문단 구성 검토

11. **SNS 활성화**

- 유튜브 구독자 수가 타 광역의회와 비교해 적음. 구독자 확보를 위해 컨텐츠 다양화 등 유튜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보기 바람

12. **방문·홍보기념품 개선**

- 방문기념품은 서울을 떠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 등 받는 분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해주기 바람

13. **순환보직 관련**

- 순환보직 예외 사항으로 한 부서에서 5년 장기간 근무시 발생하는 업무생산성 하락, 매너리즘 발생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고민 필요

14. **정책지원관 배치 변경 관련**

- 정책지원관을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로 이동 또는 전문위원실 간 이동 관련 조례, 규칙 개정 등 적법성 검토 필요

15. **임기제 직원 채용 관련**

- 임기제 채용시 내부 면접위원 참석 경우, 면접 대상자의 직전 상급자 여부까지 포함하여 제적·회피 할수 있도록 방침수립 검토 요청

16. **의회 특성을 반영한 직원 교육**

- 소규모인 사무처 특성상 신입 직원 직장내 실무 교육 어려움. 市 동종 직렬 직원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임기제 비중이 높은 사무처 특성 반영 의회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 교육 참여도 제고를 위해 비회기 기간에 집중 교육시행 필요

17. **정책지원관 제도개선 노력**

-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지원관 임기제에서 별정직 전환 필요
-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중앙정부 등 개정 촉구

18. **직원 근무평가**

- 수석전문위원이 기존 6급 조사관들과 함께 정책지원관 근무평가를 하는 것은 형평성 저해 우려
- 직원 근무평가시 온정주의에서 탈피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 안내 필요

19. **성비위·직장내 괴롭힘 등 예방**

- 성비위·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 발생시,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이동이 제한적으로, 강화된 예방교육 필요

20. **물품 적정 관리**

- 상임위원회와 의원 연구실에 있는 가구나 물품이 내구연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되어 폐기되는 상황이 있음. 불요불급한 교체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1. **의회내 택배함 설치**

- 시의회 본관 1층에 택배가 방치되어 통행에 방해가 되고 도난 분실의 우려가 있음. 택배함을 설치할 것을 건의함

기타(자료제출 등) ---------- 15건

□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4건

1. 市 조직담당관 - 의회사무처 수발신 공문
2. 민간위탁 고용승계 의무 규정 적용으로 인한 반시장적인 제도 개선방안
3. 부시장단 근조기·축기 예산 편성 내역
4. 부시장단 근조기·축기 발송 현황

□ 시의회사무처 : 11건

1. 수시 인사 발령 후('24.10.) (병가)휴직중인 직원의 병가 이유를 관련 자료와 함께 동향 별도 보고
2. 수석전문위원 임기 연장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관련 판결문
3. 알림톡 활용 보도자료 당 보도 건수 38.8건에 대한 근거자료. 30건 이상 보도된 보도자료 목록
4. '22년 이후 시의회 조직진단 용역 결과
5. 市 조직담당관 수발신 공문 목록
6. 시의회 책임정원제 대상 여부 관련 증빙 자료
7. 최근 3년간 일반직 4급 직위 확대(5개) 사유
8. 홈페이지,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최근 3년 월별 방문자 수
9. 옥외광고 및 TV광고 등 홍보 영상
   - 홍보 영상은 시의원들의 시민 대표로서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
   - 〈버스킹 인 서울〉과 같은 프로그램은 상임위원회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출연 기회를 균등히 제공
10. 현수막 홍보물
    -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홍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을 건의
11. 디지털 게시판 설치에 대해 향후 유지 관리 주체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바람

□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10건

1. **기후동행카드 재검토**

- 서울교통공사 손실 분담금, K-Pass 중복 교통비 지원, 경기도민 혜택 비교우위, 코레일-서울교통공사 손실금 지원 등 형평 문제 재검토 필요

2. **러시아 해킹 조직의 사이버 위협 대응**

- 러시아 해킹그룹이 서울시홈페이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보안 강화 등 사이버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주길 바람

3. **디지털 장비 보안 완결성 강화**

- 하드웨어 스파이칩 침투를 통한 해킹 피해 가능성 있음. 서울시 디지털 장비 구매 시 보안 완결성 검증 절차 도입 검토를 해주길 바람

4. **위례신사선 교통개선분담금**

- 교통개선분담금 광역지자체 회계 편입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
- 위례신사선 교통개선분담금 사업시행자 귀속 문제 재검토

5.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공사비 현실화**

-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공사비 현실화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창동 의료복합바이오시티, 수색역 DMC 등 공사비로 인한 민간사업자 수요 부재

6. **광복80주년 지역 유적 활용 행사**

-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독립운동가와 연관된 지역 유적을 활용한 행사를 기획
- 행사 준비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 제안

7. **서울파트너스하우스 2층 간담회장 사용**

- 시정 현안 간담회 등 서울파트너스하우스 2층 간담회장에서 거의 매일 시장 개인식당처럼 사용하는 문제 지적

8. **대시민 정책 발표 관련**

-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계획 및 공공의료 확충계획 등이 대시민 공개발표 후 설명 없이 변경되거나 지연되고 있음
- 대시민 정책 발표 시 신중히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발표하고, 변경·지연 또는 미추진 상황 발생 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할 것

9. **출연기관 통·폐합 성과 진단**

- 2022년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통폐합하였으나, 성과와 시너지 효과 나타나지 않음. 분석과 진단을 통해 통폐합 목적 실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시행할 것

1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TBS 관련**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 및 해산과 TBS 조례 폐지 및 출연금 중단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처리방식이 명확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부족했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기조에 맞게 사회서비스와 공영방송에 헌신한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다할 것

□ 시의회사무처 : 29건

1. **별관 공간 재배치 관련**

- 별관 3층 기경위에 비해 행자위 공간 협소하고, 행감 등 상임위 회의시 집행기관 직원 대기로 인해 혼잡도가 높은 상황 감안, 해당 공간 재배치 구조화 필요

2. **체육대회 추진 관련**

- 체육대회 추진 비용을 복수 상임위를 사유로 운영위 미배정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

3.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 운영위원회 대상 홍보물 관련 보고 미비
- 현재 예정된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 중지 요청
- 상임위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상임위원장뿐 아니라 상임위원도 함께 출연하여 상임위 활동을 홍보하길 바람

4.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 TV 광고 제작 시 특정 의원만 출연하는 형식보다는 모든 의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요청
- 광고 내용은 재미 요소보다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우선 제작 요청
- 일부 의원만 출연하는 후반기 홍보영상 콘셉트 변경 요청
-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의원들에 대한 홍보 반영 요청
- 홍보물 편찬위원회 구성 시 동일 위원의 중복 연임을 시정하여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

5. 현수막 등 홍보물

- 의회 홍보물은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재미나 흥미 위주가 아니라 정보제공에 포커스를 두고 제작해 주길 바람

6. 서울시 인사 발령 공유 관련

- 서울시 인사 발령 및 승진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보고해 주길 바람

7. 의회청사 리모델링 및 청사관리 철저

- 별관 화장실 공사직후 타일 하자 발생
- 8-2 회의실 집기 보수 필요
- 별관 2층 출입기자실 명패 파손
- 지하 진입로 입구 천장에 큰 나사 돌출되어 미관 저해 및 안전 우려

8. 청사 보안 강화

- 청사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필요

9. 업무협약 체계적 관리

- 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 이행을 위해 총괄 관리부서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10. 법제처 업무협약 관리

- 법제처와의 협약('21.1.)에 관련된 추진 실적 개선 필요

11. 대학 업무협약을 통한 위탁교육

- 직원 교육 결과보고서 공개 및 교육이수후 보직변경 등 체계적 관리 미비
- 위탁 교육 수혜자가 적은 상황으로 검토 후 개선 사항 별도 보고

※ (예시) 동국대 법무대학원의 경우 협약으로 인한 학비 감면 혜택 보다 일반적인 공무원 감면 혜택이 더 큼

12. 의회 회의록 서명 관련

- 개원 후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서명받은 후 매회 활용하는 절차 개선

13. 의정활동 영상 홍보물

- 옥외 전광판(시정질문) 자막에 소속 정당, 질의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발견되므로 개선 필요

14. 의회 홈페이지 운영

- 의원 상임위 출석률 오류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과 즉시 조치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어 홈페이지의 포토갤러리, 동영상갤러리에 자료 현행화가 안 되어 있어 개선 요구

15.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운영

- 자유게시판 게시글이 없는 등 관리가 미비하고 활성화 방안 요구

16. 직원 겸직허가 관련

- 겸직(외부 강의 등) 관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가, 출장, 출장비 수령 여부 등 철저한 복무 관리 필요함
- 계속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예외적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 매년 반복적으로 외부 강의 등을 통한 고액 수익자에 대한 겸직 허가 시정 필요

17. **서울의회소식지 제작**

- 친환경 용지로의 전환, 웹진 확대 등 제작방식에 대한 고려 필요

18. **본관 여성휴게실 관련**

- 본관 여성 휴게실 관리가 미비함. 여성 입장에서 보다 안전한 휴게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19.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배포가 많은 회기 기간에는 보도자료 배포 마감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의원 개인 명의 이메일로 배포하면 기자 일독 확률이 낮고 기사에 반영되지 않는데 지역 활동이라도 소관 상임위 사안이라면 배포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해주기 바람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언론보도사항에 기사 누락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함

20. **의장표창 시스템 개선**

- 현재 표창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긴 하나 정책지원관이 수작업이 필요해 효율적인 의장표창 운영을 위해 관리시스템 개발 검토 요청

21. **인사 채용 심의절차**

- 서류심사를 통과한 인원 대비 최종 인사위원회 합격 비율이 적은 것은 심의 절차상 정량·정성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
- 정책지원관 결원 발생시 즉시 충원되어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신규 정책지원관 임용 시 업무처리에 필요한 의회 시스템 현황, 이용방법 등이 들어간 매뉴얼 책자를 지급해 빠른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함

22. 의원 정보시스템 개선 필요

- 의원 요구자료 공개여부 선택 기능 도입('24.10.) 하였으나, 여전히 시스템상 제목 공개, 전문위원실 직원 공유 등 미비점 존재
- 모바일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자료 요구 및 확인 등) 기능 개선 필요

23. 의안발의 문자 메시지 발송

- 이번 회기 의안 연서 요청 문자대비 의안접수 문자 현저히 적었음 시스템 오류 예상되며 별도 보고 요청

24. 공무국외출장 관련

- 의장단 국외 출장 추진 시 모든 의원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배정을 요청

25. 연구용역 중복

- 입법정책연구용역과 정책개발연구용역 간 중복 과제는 지양할 것을 요구

26.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

- 청소년 시의원이 준비한 조례안이 실제 의원들에게 전달되고,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27.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법률검토 추진

-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의원-사무처 입장 정리 후 법률검토 의뢰 요청

28.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와 관련

- 최근 3년간 법정 비율을 미충족하고 있어 원인 분석 및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9. 타임캡슐 활용

-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타임캡슐이 방치되고 있어 배치 장소 변경 등을 고민해 당초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

2. 행정자치위원회

시정·처리요구 사항 ---------- 189건

□ 비상기획관 : 17건

1.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 징수관련 행감자료 요청 시 제출 자료에 오류가 많음. 정확한 자료가 기한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국민 의무 사항임. 민방위법과 규정에 교육 불참자 중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이 있음. 과태료 부과와 징수 허점에 대하여 국회에 제안 등 정확하게 하기 바람.
3. 예비군 수송버스 신청률이 자치구별로 최소 6.9%에서 최대 71%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낭비임. 향후에는 각 구별 실수요와 이용률 등을 분석해서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버스 운행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
4. 비상소집 미응소자가 예년에 비해 현격하게 많음. 비상사태 발생시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시민들이 민방위 대피소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아 대피소 길찾기 안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또한 약자, 장애인 등 재난 약자를 위한 대피소 시설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6.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역민방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지만,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및 전국 대비 서울시 방독면 확보율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국비 확보 요구.
7. 을지훈련은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의견 개진 요구
8. 2023년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 개선 대책」으로 경보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 등이 조정되었으나 시민들에게 홍보와 안내에 대한 계획이 없음.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서울시의 홍보 방안 마련할 것

9. 민방위경보 가청률 조사는 2017년 이후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없이 도상 측정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른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 및 신규설치 계획이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어 대책 마련 필요
10. 누리집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창구임. 그러나 민방위 표준교재와 방사능 수치 모니터링의 갱신이 미흡하여 정보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신속한 정보 갱신과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
11. 시민 대피시 혼란 최소화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 진행중인 대피소 즉시 해지 등 건물명, 위치정보 최신화 필요함.
12. 비상상황 대비 실질적인 대피시설(비상용품, 면적 등)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전문경력관 제도는 조직 구성원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수 있어 향후 인사이동의 유연화에 대하여 검토할 것.
14. 예비군 홈페이지의 미흡한 관리에 대해 한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았음.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15.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저하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당국의 안내 및 홍보 부족, 준비 불충분과 점검 미흡도 원인임. 훈련 빈도를 늘리거나 대피시설 위치의 정확한 안내와 표시, 비상용품함 접근성 개선 및 개방 조치, 시민교육 강화, 훈련 시 장비·공간·대피소 만반의 준비 등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대책이 필요함.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피시설 면적 기준 개정 대정부 건의, 시민 참여 유도 방안 등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16. 여성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편성 현황 및 인원의 편차를 줄이고, 자치구에 모집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재원 마련 등 여성민방위대 대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
17. 실제 상황 발생 시 동방위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예산 등 지원방안 강화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민생사법경찰국 : 11건

1. 서울시 누리집에 보면 민생사법경찰국 직무범위가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환경 보전 분야에 청소년보호가 포함되어 있음. 민생사법경찰국의 직무구분이 잘못된 것으로 즉시 시정할 것.
2. 청소년에게 마약을 구매하게 한 자에 대한 수사권이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행하지 않음.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지명된 직무범위 내에서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올해 상반기에 동물보호단체와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것 외에는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업 활동이 미흡하며, 하반기에는 협업 실적이 거의 없었음. 민생사법경찰국은 인력 부족으로 타 기관과의 협조 및 공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협업 효과를 분석해 협업 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
4. 방문판매 등 주로 노인 피해가 많은 범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함. 경로당, 동주민센터,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등 주민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지역 내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
5. 피해자 성향 분석에 기반한 범죄예방 안내 및 홍보 활동 강화 필요. 예컨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과 협력하여 대자보 게시판이나 청년밀집지역 카페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 동물병원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피해 유형별 협업 대상의 전략적 선정과 피해자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
6. 민생사법경찰국에 접수된 범죄신고에 대해서 소관이 아닌 경우 수사권한 밖이니 관할 기관으로 다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신고자 입장에서는 핑퐁이며 불편을 초래하는 일임. 해당 안건을 적절한 기관으로 이첩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관할 기관 안내 시 링크 첨부 등 세부적인 안내시스템을 매뉴얼화해 신고자의 편의 증진 도모할 것.
7.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원산지 위반 의류뿐 아니라 철강(주방용품) 등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필요.
8. 민사국 직원의 재직기간이 1～2년이 50%가 넘는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필요

9. 서울시내 실내동물원 4곳이 있으나 실내공간 특성상 폐쇄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 그동안 실내동물원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실내동물원 운영 관련 전수조사에 나설 것.
10. 내수면 분야가 민생사법경찰국의 17개 지명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한강 수상시설물 및 선박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도 내수면 분야에 대한 점검 수요가 있는데 향후 한강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화되면 수상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미래한강본부와 공조하여 내수면 수상 분야가 추가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아울러, 지명 가능성에 대비해 인력 확보, 업무 조정, 전문성 확보 등 필요한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
11. 온라인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이 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정상 진행 중이나,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보안 및 해킹 방어 역량이 충분한 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버범죄도 민생침해와 직결된 만큼, 이번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수사에 필요한 분석 및 대응 역량을 갖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보안 강화 및 첨단 사이버 수사 기술을 확보해 신기술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것.

□ 행정국 : 26건

1. 지방자치법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있어 구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구성 중임.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돼있어 구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구성 중임.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3.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이 된 건데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 임기 만료로 조례안이 자동 폐기가 된 상태임. 향후 위원회가 내실있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4.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는 23년부터 회의 진행 건수가 단 한번도 없었음. 조례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이 아무것도 없으니 활성화를 잘 시켜주시든지 다른 수순을 밟든지 정리가 필요해 보임.

5.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될 때 심의를 받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전혀 안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내실 있게 운영해주시기 바람.
6. 23년 기준 집행률이 낮거나 용도 변경 및 잔액 이월이 발생. 또한, 특별교부금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사용되거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자치단체에 배부되고 있음. 특별교부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사후점검, 현장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7. 서울시에서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국민운동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4곳이 있음.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작년 행감 지적 사항에도 불구하고 34.2%에 불과함. 그리고 민주평통은 2024년도 보조금 카드 사용이 전혀 없음. 보조금 카드 사용률 제고 방안이라든지 패널티 검토 등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람.
8.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될 경우 전산망 다운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디지털 공무원증, 디지털 운전면허증 운영 개선 방안 수립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람.
9.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과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각하 제도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상충되어 시정이 필요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신고서식 간소화, 신청절차 및 각하사유의 합리적 수정, 전담인력 확충 등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0.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인적 구성에 있어 균형성을 확보할 것.
11. 한남동 파트너스하우스의 2층 공간 등이 시장의 행사나 간담회 장소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건물 전체가 공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엄연히 3층만 시장 공관이므로 파트너스하우스 전체를 공관처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에 공관과 파트너스하우스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철저히 분리 사용할 필요.
12. 속초연수원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소파 등의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담배 냄새나 청소 불만이 다수 제기되는 바, 청결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 서천연수원은 식당 음식 품질이 낮아 평가가 좋지 않으므로 메뉴 개발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위탁업체 선정 시 식당 이용 편의성까지 고려할 것.

13. 행정국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서 일부 건수 누락 발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규정 위반 방지를 위해 2건 이상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4.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유관기관 회의가 1회 개최되었을 뿐 개선 및 진척사항이 없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안전한 서울역광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5. 청사 공간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자체 청사 확보 로드맵 마련 등 종합적 개선 필요함.
16. 서울시 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도 별도의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휴양시설을 균형있게 운영해주기 바람.
17. 장기 국외 교육 훈련의 경우에 영미권 국가 편중, 자년 영어교육 수단으로 전락, 2회 이상 중복 수혜, 5급 이상 공무원 편향된 선발, 허술한 성과평가, 교육중 학칙위반과 성적 저조로 복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 국외훈련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8. 키즈센터의 노후화, 주차공간 협소, 에어컨 필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 필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수원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재점검 필요.
19. 자치구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주민자치 참여율이 저조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세대의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청년세대가 참여하고 토론을 넘어서 숙론이 이루어지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영상 등 홍보콘텐츠 구성 및 제작에 대해 고민할 것.
2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시 대학들에 모집공고문 등을 공유하여 청년들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2. 공무원들이 열악한 임금과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 면직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수가 늘고 있음. 공무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예산 증액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23. 공무용 차량 운영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하는 업무도 있는 만큼 운전직원이 과태료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과실 책임의 범위를 조정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4. 공무용 차량의 사고율이 늘어나면서 보험 처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 문제도 중대함. 보험가입 방식을 포함한 보험금액 과중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비용 절감을 꾀할 것.
25. 힐링센터의 만족도 점수는 높게 나오지만 실제 스트레스가 줄거나 상담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직원은 많지 않다고 함. 실적 건수나 점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이나 민원 사항을 들어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26. 장기국외훈련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특히, 훈련 후 관련 직무에 복무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미배치 비율이 50%에 달해 시정이 필요함. 더욱이 4급 이상 관리자들에게 훈련 기회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고위 공직자 자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관련 직무에 배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 대상과 주제 선정, 예산 책정 등 운영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무국 : 17건

1. 변상금 사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
2. 콜드월렛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기울일 것.
3. e-호조 시스템 관리 소홀 관련, 수의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오기입을 방지하고, 조건에 맞는 계약만 수의계약 추진할 것.
4.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5.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평가조작 이슈, 방만 운영, 잉여금 문제, 연구성과 정체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운영을 드러내고 있음. 행안부와 권익위 감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를 통해 출연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6. 조직개편 과정에서 주요재산 전략적 발굴 및 매입 업무 이관이 불분명하게 정리되어, 현재 재무국과 미래공간기획관이 소관을 서로 떠넘기고 있음. 부서 간의 핑퐁을 멈추고 재무국과 미래공간기획관이 신속히 협의하여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업무 공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7. 시세 징수교부금의 자치구별 배분 격차로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바, 2025년 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징수교부금 배분 방식 개선, 징수업무 전산화, 서울시 직접 징수 방안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
8.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 10월에 예산 편성, 11월에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의회 심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회 운영 일정을 조정하기 바람
9. 차량 신규 등록 시 발생하는 공채 매입률이 타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운영 대수가 많은 리스차 운영 법인의 경우 의도적으로 타시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제 차량 수에 비해 취득세 세수가 현저히 낮게 징수되고 있는바, 공채매입률 인하를 통해, 일반 시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타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고액의 서울시 취득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0. 모범유공 납세자로 선정되어도 보상이 적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유공 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1. 계약심사 절감 성과목표가 매년 4%대에 맞춰 계약심사 절감 규모를 성과지표에 맞춰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성과목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성과목표 조정에 대해 고민해 고민해 볼 것.
12.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조건에 맞게 추진하고, 사후 관리를 위하여 관련 이호조 시스템 운영 개선을 추진할 것.
13. 서울시의 뒤 늦은 채권소멸시효 관리로 문제로 소송이 발생하고, 패소해서 서울시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적극적인 대처로 체납된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4. 시효완성정리로 매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소멸되고 있는 바, 체납금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또한 각 세입부서에서도 체납 과징금,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재무국 차원에서 관리에 책임을 다할 것.
15.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과정은 사전 협의 부족, 일방적 추진, 시스템 오류, 행정 혼란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 이에 서울시는 통합 참여를 철회하고 독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선회한 바, 행정안전부에 기납부한 분담금 127억을 조속히 반환받을 것.

16.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매우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조정실에 배치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시민 홍보나 보호관의 겸직 구조 개선 건의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무국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17. 2024년도 1인 수의계약 자료에서 다수의 입력 오류와 특정 업체의 반복 등장이 확인됨. 이는 행정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 강화나 매뉴얼 개선 등 사전적 예방책이 필요함. 다음 업무 보고 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람.

□ 평생교육국 : 15건

1.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는 균형 있는 교육을 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 시행할 것.
2. 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관련 법령 위반을 해소할 것.
3.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민주시민 교육자문위원회,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 등 위원 구성과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및 사문화된 조례 등을 정비할 것.
4.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는 시장공약사항으로, 운영방식(민간위탁→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과 사업내용(청년 특화→전 세대 평생교육)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승인을 거쳤어야 함. 이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공약 위반임. 지금이라도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승인을 거치도록 시정 바람.
5.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계획이 5년간 3차례나 변경되면서 약 1억 원의 용역비와 연간 2~3억 원의 유지관리비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성급하게 발표부터 하는 졸속 행정은 시정되어야 함. 앞으로는 중장년 종합지원 대책의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지나 시설 활용방안 수립 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
6. 서울런 멘토의 활동 중단으로 멘티의 학습에 불편이나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멘토단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멘티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7. 업무협약 절차 개선 사항을 준수하여 업무협약 체결 후 지연 보고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바람.
8.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균형 있는 성교육 진행할 것

9. 연합거리상담 사업이 한 번의 상담으로 정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상담 비율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와 상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
10. 청소년시설에 대한 고질적인 평생교육국의 지도 감독 미흡을 시정할 것.
11. 청소년 인권조례에 근거해서 마련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실적이 저조한 편임. 청소년의 정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12. 현재 서울 청소년 참여 포털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음. 청소년들이 정보를 얻고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
13. 청소년쉼터 무단퇴소는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위험신호이므로 사후 관리에 신경 쓸 것.
14. 시립 청소년시설의 평가 결과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평가기관 변경에 따른 기준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므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 청소년시설협회 차원에서도 평가결과 공유 및 점수변동 설명, 이의신청 절차 등을 강화해 각 시설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 향후 강북청소년센터장의 운영 성과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인 바,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람.
15. 청소년시설협회는 청소년센터의 장기수탁과 관련된 고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해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지적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것. 또한, 위탁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직원들이 새로운 기관에 흡수되는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 인재개발원 : 9건

1. 2024년 1월 이후 민간위탁을 통해서 어린이집 정원축소, 교사축소, 이용비율 조정 등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어린이집 현원 감소로 운영 자체가 어려워 보임. 아동수가 감소할 경우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해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법도 있음. 어린이집 운영 대안마련을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 건의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인재개발원의 인재상(정책비전)과 목표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호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음.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3. 공무원의 AI기술 활용역량의 강화,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정보보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AI 교육과정 전반의 재구조화 검토가 필요함.
4. 중도 퇴교자의 퇴교사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입교자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 미수료 사유로 교육훈련시간 80% 이상 미충족이 많은데, 미수료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함.
5. 신임자의 공직적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7~9급 신임자 교육의 실무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현업적용도 평가결과는 점수가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교육내용의 실무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1주 본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려가 됨. '23년 대비 본교육 기간이 1주 늘어남에 따라 교육만족도와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높아졌는지에 대해 향후 보고 바람.
6. 외국도시 공무원 국제연수의 경우 온라인 연수 수료율이 오프라인 연수 수료율보다 낮아 국가별 여건을 반영한 섬세한 계획 수립으로 온라인 수료율은 높이고 오프라인 연수는 확대할 것.
7. 교육생들이 국제연수를 통해 습득한 서울의 노하우를 자국에서 어떻게 적용하였고 어떤 정책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사후 피드백 과정이 필요함.
8. 서울정책공유 글로벌포럼에 시립대 MUAP과정 교육생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앞으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e-러닝 콘텐츠가 매년 대동소이하고 장애 및 오류 발생도 많아 개선 노력이 필요함. 학습 만족도는 수년째 4.2~4.3점 대를 유지하며 변동이 없고, 5점 만점의 단순 평가체계는 콘텐츠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e-러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력 있는 신규 콘텐츠 발굴과 주기적인 업데이트, 오류 및 장애 개선, 평가체계 연구·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감사위원회 : 13건

1.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정밀감사 요구.
2. 21년도 감사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적시에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 소관부처 지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처리할 것.
3. 조사담당관 업무보고 자료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와 관련된 담당 인력 및 수행체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업무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움. 향후 업무보고에 전담 인력과 구체적인 수행 체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할 것.
4. 올해부터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전략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 분야를, 투출기관은 일반관리 분야(인사·예산·복무 등)를 자체 감사하고 있음. 이러한 방침이 시 감사위원회의 역할 축소로 비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투출기관의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투출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
5.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과도한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하였는 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제출 전에 위원장이 철저히 확인하기 바람.
6. 명예하도급호민관은 공개채용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임기기간과 지원자격도 별다른 이유없이 변경되어 4명은 9년째 연임하고 있는 등 위촉절차가 불투명한 문제 시정할 것.
7. 행감자료 제출시 개인정보를 담아 제출한 바 개인정보 유출에 엄중하게 조치
8.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사례의 부재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줌. 공익제보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직적인 지원 강화 필요.
9. 공익감사단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음.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감사가 아닌 점검에 치중되어 있음. 외부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10. 낮은 공익제보 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져야 함. 해외의 경우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례를 검토하여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임.

11. 안심변호사 정원 10명 중 현재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조속히 충원이 필요하고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 상담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시민 상담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 필요.
12. 서울시 공익제보 처리 과정에서 안건을 타 기관이나 자치구로 이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처리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함. 현행 공익제보 처리 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13. 공익제보 안건을 자치구 감사담당관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예컨대, '공직자 비리 신고' 관련 공익제보가 접수됐을 때 해당 건을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이송할 경우, 공익제보 내용과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검토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교한 이첩 원칙과 절차를 마련할 것.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1건

1. 인권지킴이단의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여 역할을 강화할 것.
2. 인권지킴이단 2인 1조 구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
3. 법률자문단 위원별 전문 분야를 고려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서울시립갱생원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 업무는 자활지원과가 아닌 인권담당관실에서 주도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업무 이관 및 조직 개편 요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인력 증원 등 선제적 준비 필요.
5.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인권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인권 실태조사 관련, 당초에는 4,500만원 규모의 용역 2건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4건의 조사가 진행됨. 이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의심케 하며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해 예산 전용의 가능성이 있음. 또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동일 업체와 중복 계약하여 공정성 시비도 우려됨. 향후 예산 설명서에 명확한 산출 근거 기재, 예산 집행 범위 준수, 업체 중복 계약 방지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7. 범죄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상권의 근거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없는 상황임. 조례 개정 및 연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체계를 마련하고 환수 등 세입 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8. 고충 민원의 이송 이첩 비율이 높아 고충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직권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9. 7월 1일 조직 개편 이후 홈페이지 업무소개에 개편 내용 반영이 지연되었음. 홈페이지를 찾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변경사항이 있을 시 빠르게 업데이트 할 것.
10. 주민자치감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 시장실, 소방서 등 직원들의 인권교육 이수율이 낮은 부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
12. 온라인 감사 청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홍보할 것.
1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에 대해 대시민 인지도를 높일 것.
1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각 연도 및 센터별로 지원 처리 기간과 예산 집행에 있어 비현실적인 데이터 및 불균형적 예산 배분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정책 집행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
1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예산 부족으로 추가적인 피해자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
16.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22년 최종결과보고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23년에도 민원 등의 이유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피해자 지원에 대한 만족도 관리 실시할 것.
17. 민원배심원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으므로 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8.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비율에 비해 범죄피해자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이 필요.
1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유투브 채널의 마지막 업로드 영상이 8개월 전이며 구독자 또한 적어 사실상 채널을 방치한 것이 아닌지 우려. 홍보에 힘써줄 것.
20. 4기 인권위원회는 위원의 80%가 법조인 출신임. 법조인 위주의 편중된 구성에 대해 향후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인권 전문가를 포함할 것.
21. 인권위원회의 실적이 미미하므로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

□ 자치경찰위원회 : 14건

1.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면담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
2. 지하철 경찰대 인력 감소에 따른 치안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관광경찰대 폐지 이후 기동순찰대가 업무 공백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지 못함. 기동순찰대는 관광지 범죄예방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외국어 능력 등 전문성이 부족해 관광경찰대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려움.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관광지 순찰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4. 지구대·파출소 일선 경찰관들이 각종 서울시 축제·행사, 치안, 방범, 순찰 등 많은 자치경찰 사무에 동원되고 있음에도 국가경찰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후생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경기도 등 타 시도는 이미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바,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경찰의 복지포인트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
5. 축제나 행사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다중 운집이 발생하는 상시 취약지역(서울 면적의 13.6%)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이를 위해 지능형 CCTV 도입 등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과 경찰력 증강 등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대책 마련할 것.
6.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정지선 후퇴,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 창의적 정책 개발로 보행자 안전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바람.
7.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
8. 노인학대 및 장애인 학대 신고에 대한 통계관리 및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9. 증가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문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실적 감소, 만족도 조사 미실시 등의 문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 서울경찰청이 여성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0. 매년 유실물 접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반환율은 연간 60%에 머물러있음. 시민홍보 등 유실물 반환율 제고 대책 마련과 유실물 관리 업무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

11. 예산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과 그에 따른 변동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행정감사 자료 준비 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또한 예산이 변경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파악 후 철저히 보고할 것.
12. 자율방범 활동 활성화 및 치안협력 체계 구축 관련 예산집행 현황이 9월과 11월 업무보고 현황이 다른데, 일치시킬 것.
13. 9월에 보고했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예방지원 활동 예산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여청수사팀 역량 강화 예산이 빠져 있는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것.
14. 성범죄자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근처로 이사 온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민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112 신고 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12건

1. 자원봉사 캠프 활동가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와 지원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함.
2. 바로봉사단의 경우 각 자치구별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재난대응 자원봉사 부문 강화할 것.
3. 광역센터로서 서울지역 자치구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각 자치구별 특화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부산에서는 현재 자원봉사 은행을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 서울시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시간 인증형의 획일적인 봉사활동에 국한되지 말고, 온라인 자원봉사, 적립형 자원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 인증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
5. 자원봉사 활동 중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함. 안전교육, 보호장구 지급 외에 스트레칭 등을 통한 몸풀기 과정 등을 매뉴얼화하여 부상예방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6. 최근 5년간 자원봉사 참여율은 등록인원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7.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 센터에서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 필요.
8. 3회 이상 중복참여 인원이 전체 참여인원의 38%임. 이는 일부 인원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만 나머지 인원은 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9. 장애인 및 소외계층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
10.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11. 서울 동행 등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 수치가 연차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서로 불일치함. 이 불일치에 대한 소명과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할 것.
12. 대학생 등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서울장학재단 : 4건

1. 공익인재 장학금은 수혜자에게 특정 활동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조건부 대가성 장학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또한, 공익법인법 시행령 상 의무 활동이 장학금 지급 조건이면 사전에 시장이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여부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장학생 활동 조건을 법령과 정관의 무상성 원칙에 맞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2. 사업별 장학생 선정기준 상이 등 업무 공통기준 마련 관리·운영 등 검토
   -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사업 간 기준 통일 필요
   - 서울 선순환 인재 장학금 심사기준의 적정성 및 재검토
3. 서울 자치구 장학재단 보다 기부금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이사장의 역량을 발휘하여 향후 기부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서울꿈길장학금의 지원대상을 서울시교육청 미등록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장학생 선발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15건

1. 공용차량 운행 기준 및 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 관리한 사항을 시정할 것.
2. 공용차량 운행일지 철저히 작성할 것.
3. 서울시 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해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4. 기획조정본부장과 시민대학본부장 겸임 해제하고 신규 임명할 것.
5.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6. 포털 내 혼재되어 이는 강좌 나열 방식을 개선해 학습자들이 원하는 강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 필요.
7. 수강 신청 후 자리가 남아도 추가 신청을 받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여, 대기자 시스템을 개발해 대기자에게 추가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간 입과를 허용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개선 필요.
8.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것.
9. 서울시 차원에서 국가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것.
10. 키오스크, 식료품, 택시 앱 등 생활에 밀접한 평생교육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지역 네트워크 연계 사업을 지역평생교육사업팀과 시민대학본부에서 진행 중임. 그러나, 지역평생교육사업팀의 낮은 프로그램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것.
12. 50플러스재단과 유사중복사업 줄일 수 있도록 협의채널을 갖추고 차별화에 신경쓸 것.
13. 평생교육진흥원의 유튜브 채널 운영의 경우 투입 예산대비 홍보효과가 적어 자체 기획인력 충원 등 효율적 홍보 방안을 검토할 것.
14. 시민학위제가 공인된 학위 또는 학점은행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 외부 연구용역 사업 예산에서 노무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아울러 대학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연구 인력과 실제 연구를 수행한 인력이 다르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점검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15건

1. 서울시 50+ 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시설이지만, 일방적인 센터 예산 삭감으로 자치구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50+센터 운영 예산을 재검토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것.
2. 재단 명칭이 정체성과 맞지 않으므로 변경·검토해 볼 것.
3. 오랜 기간 정착된 '보람일자리' 브랜드를 굳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넣어 '가치동행 일자리'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기존 브랜드 정체성 훼손 문제를 초래함. 앞으로는 BI 교체와 브랜딩 작업 시 신중하게 접근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정착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4. 직원 후생복지비의 불용률을 낮춰 직원 복지를 강화할 것.
5. 재단의 시민만족도가 투자·출연기관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6. 강남권 캠퍼스 없는데 지역적으로 중장년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
7. 재단 명칭이 정체성과 맞지 않으므로 변경·검토해 볼 것.
8.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
9. 직원들의 근무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사업간 유사 중복사업 예방을 위한 협의 채널 구축 마련과 각 기관의 고유사업 및 차별화 모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1. 홍보 전략은 재단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지만, 유튜브와 카카오채널 구독자 정체, 참여율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춘 홍보강화 전략을 강화
12. 50플러스재단의 유튜브 채널 운영의 경우 투입 예산대비 홍보효과가 적어 자체 기획인력 충원 등 효율적 홍보 방안을 검토할 것.
13. 최근 3년간의 정책연구 과제들이 지나치게 유사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연구 제목은 다르지만 본질적 내용은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연구주제의 키워드 또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더욱이 연구주제를 포럼을 통해 발굴하고 있는 바, 이는 중장년 연구 발상의 빈곤함과 연구진의 역량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중장년 지원 전문기관답게 중장년 정책 연구를 선도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 수행체계를 쇄신할 것.

14. 50+재단의 연구윤리 문제가 심각함. 정책연구 포럼 인사이트 보고서는 중장년 정책 연구 포럼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는 자료라고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의 원문을 제대로 인용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짜깁기하여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함. 일반 시민 눈높이 맞는 연구윤리를 지키고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15. 2024년 연구과제 8개 중 3개가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 연구 일정을 지키지 않는 문제 시정할 것.

건 의 사 항 ---------- 124건

□ 비상기획관 : 10건

1. 향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예비군 수송버스 요구자료 일부가 제때 제출되지 않은 것은 보조사업자인 수도방위사령부와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임. 서울시가 수방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만큼 수방사와의 협업체계를 개선해서 필요한 자료를 적시 확보하고, 비상기획관이 주도성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
3. 예비군 수송버스 자치구 비용 분담은 자치구별 예비군 인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4. 경기도 비상기획관과 협의하여 대북 전단 및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5. 민방위 훈련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6. 쓰레기 풍선 피해지원은 증빙자료 제출 후 보상체계를 신속하게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7. 피해 유형별로 세부 지원기준이 미비한 것 같음. 차량, 건물, 물건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원 기준 명시 필요함. 보상절차 간소화,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8. 기초의원이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업무를 수행한 선례가 있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할 것.
9.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 사업의 경우,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격차를 고려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0. 비상기획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 사안도 많은 만큼 현원 55명의 직원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 차제에 인력 보강과 조직 정비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 민생사법경찰국 : 7건

1. 바디캠, 액션캠 등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계 운영시에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수사장구, 장비에 대한 내부규정 마련이 필요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위해, 임기 만료 폐기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음. 임기만료 폐기 또는 계류 중인 법안들을 대상으로 국회와의 접촉 등을 통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법 개정 적극 추진할 것.
3.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중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되는 바,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4. 대포킬러 기능 개선으로 청소년유해전단지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확대 예정인 불법 의약품, 불법 대부업 외에도 타 민생침해분야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함.
5.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인 단속 요청.
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경찰청 간 수사 범위와 권한 충돌 문제는 중요한 사안임.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역할 충돌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명사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함.
7.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게시판이 서울시 응답소로 통합되는 것이 실질적 효용성을 가져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응답소를 통해 신고를 처리하는 방식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도 요구됨.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보완을 요청함.

□ 행정국 : 17건

1. 본관 청사 1층 로비 리모델링으로 설치된 9억원 규모의 미디어월은 실제 미디어아트 전시보다는 시정 홍보에 치중되어 있음. 미디어아트와 시정 홍보 비율을 재조정하고 퀄러티 높은 미디어아트와 예술 작품 전시 확대 필요.
2.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경색을 야기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을 중단할 것.
3. 자치구별 자체·보조사업 분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비교 및 통계 활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통일된 자체·보조사업 분류 기준 마련 및 통보, 자치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조정교부금 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기준재정수요액 및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시 복지수요 등 보조사업 비율이 높은 자치구를 배려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5.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이 되었는데 직무급 체계인 행안부와 달리, 서울시와 타 지자체, 중앙부처는 호봉제가 많아 인건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수성상 일률적 정년연장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관 사정에 따라 고용 연장을 선택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점진적 접근으로 근로자 간에 형평성을 도모해야 함.
6.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및 육아시간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좋으나,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떠안는 구조에 대해 인력 충원 등 대책 필요.
7. 공무원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는데, 민간부문과 달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므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이루도록 제도 도입 초기단계부터 잘 운영해주기 바람.
8. 위례신도시 행정통합 관련하여 주민 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 마련 필요.
9.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이 2025년중 추진 예정인 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 등 용역 추진하기 바람.
10.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서류전형합격자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하여 마련해 주시기 바람.
12. 서울광장 등에서 지역 특산물 장터를 자주 개최하는데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13. 서울광장에서 김장하는 행사는 자원봉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홍보가 되므로 사업 진행 필요.
14. 서울광장과 한강을 계절에 따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날씨에 따라서 광장과 한강에서 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시설물 배치 검토할 것.
15. 자치구의 재원을 다른 자치구에 재분배하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치구별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함.
16. 공무원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장기국외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

17. 힐링센터 상담사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과 경력 요건에 비해 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상담 업무 중 발생하는 고충으로 인해 고비용의 수퍼바이저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함. 상담사 역량이 공무원들의 상담 만족도에 직결되는 만큼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무국 : 9건

1. 변상금 조사대상 시유재산 목록, 수탁기관인 SH공사에 대해 지도감독 실행 내역,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 해소 방안 도출을 위한 매뉴얼 문제점 개선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2. 서울계약마당 사이트에 도급업체 검색 기능 추가, 엑셀 다운로드 자료에 도급업체 정보 표시 등 이용자 편의 개선 필요.
3. 계약서 작성 시 근거 규정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숫자를 다루는 부서인 만큼 입력 과정에서 근거 조항의 오기입 등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국장이 자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
4. 시금고 선정 시 ATM 설치 등 금융약자를 배려하도록 배점 조정 및 사후관리 필요.
5. 정확한 세입 예산 추계 노력을 기울일 것.
6. 정리보류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추가 징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재산 은닉과 체납 회피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
7.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부정, 직장 내 괴롭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적립기금 문제를 해결하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
8. 신한은행의 시금고 관리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
9.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녹색금융이 장려되는 만큼 시금고의 녹색금융 이행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것.

□ 평생교육국 : 13건

1. 서울런 계정 공유 및 판매 금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계정의 양도 판매 등 악용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한정면허를 활용해서 수요응답형 스쿨버스 도입 필요.
3.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종료 후 기존 민간위탁 기관 소속 직원의 고용 승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음.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가능 여부 검토하여 보고할 것.
4. 청소년사업 관련된 민간위탁은 시설 위수탁 운영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외형적인 성장에 맞춰 단체별 내실화 및 고유사업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며, 성과지향이 아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평가체제 개선이 필요할 것.
5. 중장년 대상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고령자 대상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디지털 중심의 온라인 활동은 사회참여 한계로 이어져 고령층의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이기에 이에 따른 실질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검토할 것.
7. 평생교육 개념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부서별 연계성이 부족해 보이고 이로 인한 부서조직 규모의 편차, 비효율성이 나타남. 평생교육국 사무 및 조직편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8.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9. 위기청소년 생활지원대상을 세분화하여 정책을 마련할 것.
10.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고질적인 지도 감독,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시설협회도 노력할 것.
11. 일부 자치구에서 청소년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음.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청소년 자율 예산제 기획을 적극 검토할 것.
12. 한 재단에 계시는 동일인이 두 개 위탁기관의 이사직을 동시에 맡는 것 적절치 않으므로 시정할 것.
13. 청소년시설협회장과 평생교육국장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자주 소통할 것.

□ 인재개발원 : 9건

1. 현재 인재개발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은 강화되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은 부족함. 이에 신규자와 상급자 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과정(개념, 신고절차, 정당한 업무 지시 등)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 또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역 괴롭힘 방지를 위해 6급 이상 리더십 교육과정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유형과 대응방법에 대한 심화학습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내년 업무보고 시 해당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2. 타시도 교육기관들과 교육생 교류, 우수강사풀 공유 등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을 위해 교류협력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공무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반해, 현재 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MZ세대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직가치관 교육이 필요함.
5.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착안한 '서울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구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추진에 앞장설 것.
6. 도시외교 활성화 차원에서 유럽도시와의 공직사회 교류 강화를 위해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유럽 지역 분원 설립에 구체적 기획안 수립 요청.
7.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인재개발원과 장학재단이 함께 협업해 줄 것.
8. 서울시는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 8·9급 공무원을 위탁 선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 비용을 자치구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상 비용을 산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포함해 비용 징수와 미징수 중 어떤 방향이 더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할 것.
9. 4·5급 창의행정 리더십 과정에 전·현직 부시장들이 강사로 꼭 참여해야 했는지 의문이 듦. 교육과정의 성격상 시정 철학을 전달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향후 강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적절성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기 바람.

□ 감사위원회 : 14건

1. 감사 원처분에 대한 재심의 인용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처분에 대한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를 하는 직원의 연령대와 직급에 편차가 크면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 직원으로 구성할 필요.
3.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노동정책과가 아닌, 조사를 실제 수행하는 조사담당관에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4. 직장 내 괴롭힘 업무 효율을 위해 인권담당관과 TF를 구성하는 방안 검토할 것.
5.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각하 요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내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 취지에 맞는 기준과 절차로 개선·보완할 필요.
6. 분리조치 개정 시 '피해자 분리 조치'를 '가해자 분리조치'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7. 가해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피해자는 결과 통보도 못 받고 이의신청도 못 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8. 피조사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으로부터 강압적인 태도를 느꼈다는 지적이 있음.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 활동 교육 확대.
9. 한강버스 추가 조사에서 최근 제기된 각종 지적사항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감사 결과 나오면 신속히 보고 바람.
10. 청계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시공사간의 다툼으로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관련사항 검토 후 감사해 주기 바람.
11. 반부패 청렴제도 관련하여 부정한 수의계약 악용을 막아야 할 것이며, 청렴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12.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13. 공익감사단의 실적이 저조하며, 활동이 점검에 머무르고 있음. 공익감사단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
1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따르면 '주요 시책 사항 점검' 업무는 조사담당관 소관이지만 실제 주요 시책 사항 점검 실적은 최근 3년간 없음. '주요시책'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업무분장 재정립을 통해서 조사담당관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8건

1.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권지킴이단 구성이 필요하며, 건축사 인권지킴이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 업무를 이관하였으니 정리가 필요함.
2. 인권지킴이단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인권지킴이단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3. 인권지킴이단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 해결에 한계가 드러남.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선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 활동 수행 필요.
4.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
5.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 공공중점감시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전문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필요.
7. 성소수자 인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문제는 아니기에 회피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섬세하게 접근해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8. 서이초 비극 후 학생 인권, 교권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인권위원회의 청년, 청소년 균형을 위해서도 노력해주기 바람.

□ 자치경찰위원회 : 15건

1. 가정폭력 통합솔루션 회의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2. SPO와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할 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과 협업.
3. 서울시 교통공사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112 직통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외의 노선에서도 적합하게 설치가 안된 곳이 있는지 살펴봐 주기 바람.
4. 반려견 순찰대 사업이 잘 정착되고 주민 인지도가 향상된 점은 높이 평가함.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합동순찰 등이 있을 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기 바람.
5. 한강 교량에 설치된 CCTV 정보를 공유해서 인명 구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6. 한강경찰대 이전에 따른 각 센터의 관할범위가 넓으므로 센터 추가 설치 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7. 국제치안산업대전을 서울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모색할 것.

8. 시민경찰학교를 꼭 경찰서에서 운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은지 등 시민경찰학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이륜차 배달 업체와 소통을 해서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신호 위반 등에 대해 배차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것.
10. 이륜차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앞면 번호판 부착 등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
11. 주취자해소센터를 새롭게 설치할 때 응급실과의 거리, 주민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할 것.
12. 주취자 신고건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취자의료센터 운영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할 것.
13. 자치경찰위원회도 도심 집회 소음에 대해 접근하여 시민들의 평온권 보장에 힘써야 할 것.
14. 생활안전 분야 인력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 배치와 수급 문제를 적정하게 관리할 것. 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치안 수요에 따라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람.
15.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경찰서와의 협력에서 한정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것. 특히 민원 처리와 같은 문제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8건

1. 다양한 연령층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선정시 고령층을 포함하는 방안 제안.
2. 학생자원봉사 참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례화, 봉사학습시간 인정 기준, 포상 및 상장 기준, 봉사활동과 교육과정 연계 규정 등 학생 자원봉사 지원 조례 제정 희망).
3.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브랜딩 노력이 미흡함. 브랜드가 될 만한 사업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트렌드에 맞는 브랜딩 사업에 집중해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여야 함.
4. 팝업스토어 등 체험형 공간을 청년 밀집 상업지역 중심으로 추진할 것.

5. 서울시 거주 외국인을 자원봉사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문화 및 외국인 특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필요.
6. 새로운 자원봉사 아이템 발굴 및 신규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공모 추진.
7. 민간 기업과의 협력 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협업할 것. 기존의 물품 기부 방식에서 벗어나 ESG 경영 및 CSR(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 필요.
8. 자치구별 자원봉사 유공자 수상 기준이 극단적으로 상이하여 유공자 수상에 대한 기준안이 필요하다는 시민제보를 접수받은 바 있음.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향후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와 부합하는 기준안 마련에 노력할 것.

□ 서울장학재단 : 5건

1. 질 좋은 장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내부 만족도 하락의 해결방안 마련 필요.
2. 업무보고자료 등 인쇄물 제작 시 재생지 등을 사용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것.
3. 민간기탁금이 지속적으로 소하고 있는데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 출연금과 이자수입 이외에도 기부금 기탁 확대 등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4.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지원분야 확대 검토 (e-스포츠, 연기, 영화, 모델 등)
5.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장학금 운영 계획 수립 시 풀브라이트 등 해외 장학제도의 운영방식을 검토해볼 것.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4건

1.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진행 고려.
2. 고령층 커리큘럼 내 AI인공지능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
3. 7학년교실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차질없이 확대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관련 내실있고 공공외교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5건

1. 시민이 골고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공정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 주기를 바람.
2. 캠퍼스와 센터간 운영 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
3.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스타그램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
4.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에서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재단은 '해당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음. 목표 대비 이행실적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낮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성과 미흡 사유나 원인 파악 없이 결과만 제출한 점은 매우 유감임. 새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에는 이러한 부실한 자료 제출 행태가 없기를 바람.
5. 50+재단의 사업은 주로 단순 일자리 분야, 특히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 관련 강의가 주요 실적을 차지하고 있음.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정책 사업의 결정과 수행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

기 타(자료요구 등) ---------- 87건

□ 비상기획관 : 5건

1. 최근 3년간 자치구별로 과태료 체납자 차량 압류한 현황 수합 자료
2. 예비군 훈련장별 수송버스 운행횟수 및 운행일자별 세부 실적 제출
3. 예비군 수송버스 사업이 보조사업인 만큼 성과평가 및 자료관리에 철처를 기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자료 제출
4. 2024년 민방위경보 사이렌 가청률 조사 결과
5. 디펜스서울 2030 추진, 안보포럼, 예비군의 날, 민방위 창설 등 관련 행사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

□ 민생사법경찰국 : 3건

1. 민생사법경찰국 미파견 자치구 사유
2. 대외무역법 위반 라벨갈이 단속실적(21, 22년)
3.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보고

□ 행정국 : 11건

1. 국민운동단체 4개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패널티 받은 사례
2. 퇴직 공무원 참여 시정 모니터링 관련 의견수렴 방법, 모니터링 요원 인원, 인원별 실적 및 선발 방식
3. 남해권역 임차연수원(여수) 관련 진행 상황
4. 공관과 공공청사와 차이점 및 관련 근거 규정
5.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현황
6. 2024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7. 2024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계획
8.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시범운영 사업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요건 및 절차
9. 연수원 운영에 따른 투입 예산, 민간위탁의 경우 선별조건, 인원, 회사의 재정 상황 등
10. 최근 3년 간 공무용차량 부서별 차량 보유 대수 및 보험료 납부 현황
11.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주요 이력

□ 재무국 : 11건

1. 시금고와 관련하여 예금 과목별·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신한은행 현황 분석)수익성, 리스크 관리 현황, 유동성 현황, 파생상품 현황, 재무재표, 출연금 등), 금고지정심의위원회별 평가결과, 정량평가/정성평가 지표, 심의 최종 결과표, 협약서, 사회공헌활동 협력사업 내역
2. e-호조 관련 수의계약 관련 별도 정리자료, 어린이 신문 내친구 제작물과 방침서, 선사고대 기획전 4건 관련 세부내역, 2024 서울 역사의 대중화 계약 이하 15개 계약 관련 세부내역,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 계약 관련 방침서, 규격서 등 세부내역, 2024 온라인 리뷰 공유서비스 계약 사유(특허) 관련 세부내역
3.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합동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특정감사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보고 바람
4.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특정 4개 회사(이스트아이그룹, 이스트씨에이, 파란디자인, 이스트엔지니어링)와의 계약체결 현황(공동도급, 하도급 포함)
5. 민간자산 전략적 매입과 활용 업무 관련 과거 업무분장 자료 및 재무국과 미개공간기획관 간 업무분장 협의결과 제출
6. 시세 직접징수 관련 기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7. 미사용 해피머니 상품권 보상 결과
8. 소규모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공평동 관련 유적지 발굴 현황
9. 고금리, 부동산 경기 둔화, 정부 정책 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변수에 대응할 것인지 보고하시기 바람.
10.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서울시 정책에 활용할 보고서를 표절에 따른 징계 결과 보고
11.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에 설치한 이유

□ 평생교육국 : 12건

1. 2023회계연도 기준 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 관련 600만원 예산 변경 사유
2.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고용승계 내용 및 공약 변경계획
3. '24년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세부 운영 현황.
4. 2024년 스쿨버스 운영학교 현황
5.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

6. 학교급식 전국단위 생산자 계약 현황
7. 민선 8기 오세훈시장 공약 중 평생교육국 소관 공약 사업 목록 및 추진사항.
8. '수유 영어마을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 공고문 서류 일체, 용역계약서
9.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사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전환 추진계획(방침서) 고유사업 전환 추진계획
10. 최근 3년간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세부 운영실적
11. 참고인이 문제 제기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과정 중 발생한 학생의 부적절한 발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 이후 학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12. 예산 변경이나 전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최근 50플러스재단 비상임 감사께서 불용 처리될 예산을 맞지 않는 목적에 사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었음. 해당 사안에 대해 국장이 내용 파악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 인재개발원 : 2건

1.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교육성과 평가체계
2.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의 2023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이 변경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것. 또한 '23년 교육 전·후 효과성이 하락된 이유 설명

□ 감사위원회 : 10건

1. 21년도 감사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이 적절하였는지 자료제출
2. 투자·출연기관 감사사례집 자료 제출
3. 감사이원화 정책에 따라 사업 성과 감사에 좀 더 집중했음에도 SH공사 종합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사업들이 누락됐던 이유
4. 공익신고 처리결과 현황
5. 공익감사단 분야별 참여, 미참여 인원 현황
6. 공익제보 접수 현황 중 부정청탁 13건 처리 결과
7. 공익감사단의 실적이 저조하며, 활동이 점검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 보고
8. 공익감사단이 운영 목적에 따라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방법 보고
9. 공익제보 타 기관 이첩 시 첨부한 조사의견서 일체, 각 건별 처리사항 자료 제출
10. 공익제보 관련 민원 처리 결과 설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6건

1. 위원회 사업별 월별 활동 사항(2024.1월~현재)
2. 온라인주민감사 송파구건 보고
3. 2024년도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을 통한 주민·시민감사 온라인 감사청구 내역
4. 범죄피해자 보조사업비 지급기준, 예산소진에 대한 대책, 긴급건수, 센터별 예산 재원(서울시, 법무부 등), 연도별 보조금 집행현황 등
5. 민원배심원제 홍보 등 활성화 방안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SNS 인스타그램 홍보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 9건

1. 위기청소년 면담 대상자 관리체계 보고
2. 가정폭력 통합솔루션 회의 관련 피해자 직접 지원 설명자료
3. 경기도와 같은 수준의 복지 지원을 하려면 서울시의 경우 대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하므로 정확한 지역경찰 인원 파악하여 제출
4. 관광경찰대를 폐지한 이후 5개 관광경찰 개방센터(종로·명동·동대문·홍대·이태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고해 줄 것
5. 한강 경찰대가 그레이트한강 사업에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유재산 심의 준비 철저 당부
6. 한강 교량 CCTV 관리주체, 설치대수 등 현황
7. 지구대, 파출소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이원화 자치경찰 도입 건의 관련 총괄 자료
8. 정책발굴 자문단 구성 관련 시민참여단의 선정 기준과 홍보 방법
9. '22년부터 현재까지 반려견순찰대 활동 실적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3건

1.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관련 선정 기준
2. 최근 3년간, 유공자 표창 공적심의회 관련 자료
3. 청년 자원봉사 다양화를 위한 2025년도 사업계획 제출

□ 서울장학재단 : 3건

1. 서울장학재단 급여현황(2022~2024년)
2. 기관장의 직무 전문성 보고
3. 서울꿈길 장학금 관련 외부 심사위원 및 장학생 선정위원회 명단 (2021~2024년)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6건

1. 2024년 1월 25일 공용차량 운행 관련 자료
2. 업무추진비 및 공용차량 운행 관련 자료
3. 개인정보 관리강화 및 개선방안 자료
4. 평생교육진흥원 외부시민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5.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
6. 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 관련 자료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6건

1. 2024년 사회공헌 일자리 신규 브랜드 운영 계획안 및 자문회의 내용
2. 시민만족도 조사 내용, 점수 저조한 사유 및 대책
3. 기관장의 직무 전문성 보고
4. '24.11. 6. 진행한 이사회 회의록
5. '24년 연구 중 서울시 중장년 민간 일자리사업 효율성 분석 연구 보고서
6.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관련 연도별 평가 내용 및 결과

※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 대비계획 및 민방위 계획의 수립·조정 사항 • 비상사태 대비 자원동원 계획 총괄 및 민방위 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사항 •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사항 • 저소득 UN참전국가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모금 지원 사업 • 재난(풍수해, 코로나19 등)·재해 업무 사항 • 북, 오물 풍선 피해 보상 업무 사항 • 보훈 관련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록·관리 사항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항 • 서울안전통합센터 운영 사항 • 지원(여성) 민방위대 관리 사항 •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사항 • 전시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사항 • 비상사태 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 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사항 •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사항 • 군 관련 업무 및 병무 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 협회 등)의 지원·협조 •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 Defense Seoul 2030 추진 사항 • 비상사태 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사항 •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설치 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민생사법 경 찰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수사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 ● 민생사법경찰국 홍보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디지털수사 지원 및 각종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지정 지명 분야 관련 사항 - 불법 대부업 관련 분야 - 불법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거래 관련 분야 - 환경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분야 - 상표권 침해·원산지 표시(공산품) 위반 분야 - 부동산 불법행위 분야 - 식품·원산지 표시(농·수산물) 위반 분야 - 사회복지·청소년보호 관련 분야 - 공중위생·동물보호 관련 분야 - 의료·정신시설·의약·화장품·의료기기 분야 -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분야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주요업무 계획수립, 신년인사회, 시무식·직원조례 개최, 시장단 이·취임식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임차청사 운영,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및 사무공간 재배치에 관한 사항 • 시 자체 행사 조정 및 국경일 등 국가 주요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광장, 다목적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당직, 보안, 청사방호, 공공안전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환경, 청소용역 및 폐기물 재활용,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본관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기획에 관한 사항 • 청사투어 운영 및 프로그램 발굴, 안내데스크 운영에 관한 사항 • 본관 직원식당· 간담회장 운영, 카페 등 후생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소문청사 구내식당, 다락, 회의실(후생동강당),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공무용차량 관리·운영(운전원, 차량 등) 및 업무택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사내 시설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 공관, 청사내·외 각종 안내표지판 관리, 에너지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 인터넷전화, 시설관리망, 법인휴대전화 등 유무선 통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 CCTV,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및 무인출동 경비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관리, 역량평가, 대우공무원 선발·관리,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및 행정직군 임용후보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제1·2인사위원회, 공무원 복무관리 및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및 상시기록평가, 실적가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수 및 수당, 공무원 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 • 조직문화 개선방향 수립·실행, 유연근무제 운영, 근속승진,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증 관리에 관한 사항 • 상훈·표창, 정년·명예 퇴임식 등에 관한 사항 • 개방형 직위 인사관리(선발),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직·공공안전관 단체·임금 교섭 및 노동조합, 인사·복무·징계,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노동조합,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미래서울 아침 특강 운영, 장·단기 국외 훈련,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관한 사항 • 장·단기 국내위탁교육,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퇴직준비교육 운영, 직장교육 운영, 직장 외국어 교육 운영, 직원 소통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습사무관 실무수습, 국내 배낭연수,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 후생복지계획 수립, 선택적복지제도, 후생복지포털 운영, 직장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직장 어린이집, 직원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연수원 확충 및 운영, 콘도 및 일반휴양시설 운영, 공연문화 바우처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청매점 운영 및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종합건강검진 및 직원 건강 DB 구축, 힐링센터 및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부속의원 관리, 예방접종 지원, 만성질환 및 비만관리,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시·자치구 협력사업, 구·동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장 정책현장 방문, 시장·구청장 회의, 면담에 관한 사항 •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예산 총괄,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에 관한 사항 • 특별조정교부금 사후관리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 신속집행, 소비투자 등 자치구 재정 현안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행정1부시장 업무지원 및 현안관리, 행정1부시장 산하 간부회의에 관한 사항 • 커뮤니티 공간 기능개선,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 법령 해석, 주민등록, 자치구 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행정사 교육, 지명위원회, 인감 및 본인서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서울혁신파크 운영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 봉사상, 유공자 시민표창,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사회공헌 우수사례집 제작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공유기업 단체 지정, 공유허브 등 공유서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법정단체 지원, 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및 비영리법인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시·도 교류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회의, 고양시 공동실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상생 추진계획 수립,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교류협력기금운용 및 지역교류협력기금사업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지자체 MOU체결 등 교류협력사업 기획·발굴 업무에 관한 사항 •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지역 비대면 방과후 학습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세종시 서울사무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캠핑장 운영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동행상회)에 관한 사항 •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동행마켓, 농부의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 추석 농수산물 서울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 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운영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추진 거버넌스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이산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기초물품, 입주청소·방역 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정서 멘토링 사업, 학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동행한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 • 지역적응센터(동부·서부·남부·북부)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실태 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가정방문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사업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Banking시스템 운영 •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 회계관계 공무원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 시금고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운용 종합계획 수립 •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 민간자산의 전략적 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납세홍보 및 지방세·부가가치세 직무교육 관련 사항 •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 •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 지방세 공개세무법정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결정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 불납 결손처분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 업무 •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인사, 조직, 시의회, 주요업무계획, 예·결산, 서무업무 등 • 입학준비금 및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경비보조사업 총괄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 • 교육플랫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관리 • ‘서울런’ 운영계획 수립 • 교육플랫폼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용역 등 추진관리 • 교육플랫폼 에듀테크 사업 발굴 • 유관기관 연계 플랫폼 홍보 및 활용방안 마련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과, 비교과 부분 발굴·관리 • 온라인 학습 교재 지원(협력기관 발굴 등) • 서울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서울런’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추진 • ‘서울런’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 ‘서울런’ 홈페이지 학습지원센터 운영관리 • 관련 기관 및 정보시스템 연계·공동활용 추진 •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온/오프라인) • 대학탐방 등 멘토-멘티 친화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표준매뉴얼 제작 및 성과지표 개발 • 시립시설 체험프로그램 관리 및 학교 홍보 • 서울런 4050 중장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 중장년 직업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운영 • 50플러스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 명예시민학위제 총괄 • 권역별 평생학습 특성화 시설(시민대학) 확충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비영리단체 등록 관련 업무 •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수립,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 문해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서울시 문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 생활문해교육(디지털, 교통, 건강 등) 활성화 추진 • 학력미인정 문해교육 및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디지털 평생교육 및 시민성 교육 확대 강화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 민주시민교육,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 서울런 4050 평생학습포털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리 • 평생학습포털 콘텐츠 임차 및 운영 • 서울런 4050 직업전환 콘텐츠 확대 및 제공 • 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 민간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 •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시설물 관련 업무(안전, 기능보강 등) • 서울리테크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평생학습도시 국비지원 및 대한민국 인재상 관련 업무 • 서울런 4050 세부사업 성과관리(총괄) • 서울런 4050 홍보에 관한 사항 • 자치구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운영 • 서울시 50+재단 보람일자리사업단 관리 운영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 신중년(경력형) 사회공헌활동사업 운영 • 50+캠퍼스 건립계획 수립 및 확충(총괄) •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 및 관리 • 청소년정책개발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실행계획 수립 • 청소년 행복동행학교, 방학캠프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 서울시민상(어린이, 청소년부문) 운영 • 성년의날 기념행사, 청소년 축제 • 청소년시설협회, 청소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국내·국제교류, 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 특화시설(활동진흥센터, 미디어센터, 문화교류센터, 음악센터) 관리·운영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 청소년센터(21), 특화시설(2), 유스호스텔(2) 등 관리·운영 •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특성화사업 운영 • 청소년센터 청소년 코디네이터 운영 • 청소년센터 사용료감면 손실보전, 할인손실금 지원 • 국고보조사업(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지도사 등) 및 특화사업(유스데이, 찾아가는 수련관) • 청소년시설 건립 검토 및 추진 •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검토 및 지원(자치구) • 청소년 시설 내 체험공간(디지털체험관, 아지트 등) 조성 • 청소년센터 안전점검 및 시설 유지관리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건립·확충 •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지원) • 청소년쉼터 연합거리상담 추진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임대주택 등) •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 및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시립,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드림센터 관리·운영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 청소년시설 평가기본계획 수립, 운영평가 추진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평가지표 관리 및 개선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소년시설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및 만족도 조사 • 청소년시설 지도·점검(특별점검 포함) 실시 • 수탁법인 평가위원회 운영 및 협약불이행 제재조치 처분 •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의회,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 시행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허가, 등록 관리 및 후원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총괄 • 친환경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계획 수립 • 친환경 학교급식 및 유치원 급식 예산교부 및 정산 • 친환경 학교급식 및 유치원 급식 예산집행 합동점검 • 공공급식 체계 개편 후속조치 지원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관리 및 사무위탁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계획 수립 운영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련 점검 및 실태조사 • 학교급식 식재료 취급·품질기준, 가격 실무 협의 등 • 친환경 급식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운영 • 식재료관리운영위원회 및 협력업체선정위원회 관리 • 공공급식 자치구(참여시설) 확대 추진 및 홍보 •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안정화 • 공공급식 콜드체인 지원사업 및 가공식품 공급관련 업무 • 공공급식 지원 계획 수립 운영 •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품질·안전성 관리 •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러닝 콘텐츠 개발, 보수에 관한 사항 • e-러닝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직장어린이집 관리에 관한 사항 • 인재개발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통합시스템(LMS)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 운영, 강사 관리, 강사 Pool 관리에 관한 사항 •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7~9급 신임자 과정 계획 및 운영, 직무전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창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직급·직위별 리더십 교육에 관한 사항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인생2막 퇴직설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신규 공무원(7~9급)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 간호조무사, 수렵면허 등에 관한 사항 •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5~6급, 가~나급)에 관한 사항 • 전문경력관, 중증장애인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 4·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 역량개발 교육 과제개발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청백-e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청렴도·부패방지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반부패·청렴 교육에 관한 사항 • 청렴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심의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퇴직자 취업심사,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비리신고센터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안전·재난 대비 대책 등 안전감사에 관한 사항 •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 사항의 감사 •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 하도급호민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시비보조단체·시금고의 감사에 관한 사항 • 시비보조단체·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 민 감 사 옴 부 즈 만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 세계옴부즈만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누리집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블록체인 기반 주민 · 시민감사 청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대상 선정시스템 및 양방향 소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감사시스템 운영(DB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관련 응답소 시스템 개선 협의 사항 • 민원배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배심제 홍보에 관한 사항 • 시민 · 주민감사 재심의 관련 사항 • 위원회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사항 • 위원회 연차보고서, 안내책자 제작 · 발간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청원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원사항 접수, 조사,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조례 및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제도 발전방안 연구 및 토론회 관련 사항 • 감사·조사·감시 등 위원회 소관 법규집 관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법령질의 회신, 법률자문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 민 감 사 옴 부 즈 만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시민·주민·직권 등 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만·주만·직권 등 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만·주만·직권 등 감사 심의(검토)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시만·주만·직권 등 감사 감사결과 재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공표 및 공공감사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단 구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접수 및 이송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활동실적 보고(분기별)에 관한 사항 • 소극행정 보고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사항 • 자치구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관한 사항 • 응답소 현장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응답소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 감시 업무 안내서, 사례집 작성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옴부즈만 관리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 해촉, 연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 민 감 사 옴 부 즈 만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사항 •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사항 •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및 지도점검 사항 •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항 •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사항 • 인권침해 조사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사항 • 시민권익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보조금 지원) 사항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사항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사항 • 인권교육 운영 사항 •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지원)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자 치 경 찰 위 원 회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장비, 통신 등 정책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수행관련 경찰청, 서울경찰청 협의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관련 서울시 관련부서 협력 총괄에 관한 사항 • 치안 협력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반려견 순찰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반려견 순찰대 및 대학생 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경찰관서장 보임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표창 등 포상 업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홍보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관련 민원·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경찰서장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市행정-치안행정 업무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부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치안상황 및 주요 사건·사고 보고 총괄에 관한 사항 • 여성청소년 치안정책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청소년 주요사업·사건사고 관리(시-경찰 협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자 치 경 찰 위 원 회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아동안전지킴이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치안정책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사건·사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서울시-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주요 협의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감소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속도 5030 및 탄력 운영제에 관한 사항 • 보행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교통 소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서울경찰청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평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관 후생복지 제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사업비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종합 감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감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인권침해 민원에 관한 사항 • 특수지역 경찰대(한강, 지하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센터 정책 및 사업개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전략체계, 경영전략, 성과관리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평가 만족도(시민) 조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창의경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예산·결산 업무에 관한 사항 • 국고 보조금,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 • 센터 감사(윤리경영, 인권경영 등) 업무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기획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브랜드 개발 및 매체 홍보·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발간물 및 자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시·구 전산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센터 회계, 세무, 일상경비 업무에 관한 사항 • 센터 정·현원, 직제관리 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인사, 급여, 보수체계,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사무(공익활동지원센터) 관리(채용, 노무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 직원 복무(유연, 시간외, 연차 등), 복리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 임대차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총회, 이사회 등) • 센터 채용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직무교육, 법정교육 등) • 전략사업(이웃회복 프로젝트, 도전형 자원활동 모아 플랫폼 운영, 자치구프로그램지원)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자치구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이웃회복프로젝트 봉사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웃회복 프로젝트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웃회복 프로젝트 협력기관(기업)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웃회복 프로젝트 홍보, 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전형 자원활동 모아 플랫폼'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전형 자원활동 모아' 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역점사업 혁신성과(서울동행) 관리에 관한 사항 • 약자동행지원 청년봉사활동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 활동기관 서울동행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활동기관 관리교사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동행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관리자 통합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시민석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온라인 e-러닝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 참여 대학생 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 온·오프라인 모집 및 확산 홍보에 관한 사항 • 대학생 등 활동 용품 제공에 관한 사항 • 서울동행 기획봉사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 동행 참여자 인정격려(문화나눔, 시장표창) 운영에 관한 사항 • 시·구자원봉사센터 간 지역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기업, 기관, 단체, 캠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대응 민·관 자원봉사 협력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대응 봉사단' 활동 운영 ·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재난대응 봉사단 역량강화(도상훈련 및 견학)에 관한 사항 • '내곁에 자원봉사' 캠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내곁에 자원봉사' 사업 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캠프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캠프 활동가 역량강화(보수·심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관협력(기업·공공기관 등) 자원봉사 운영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 업무(영문소개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요처 관리 및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 자원봉사 기본 및 심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캠프 신규활동가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캠프 계절별 집중 봉사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재난 예방 활동(여름철·겨울철)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및 시상식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 울 장 학 재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위원회 운영(장학생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24~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 성장지원사업 총괄 • 글로벌 장학사업 런칭(유학생 지원) • 장학사업 실적관리, 경영평가(사업 및 혁신지표) • 장학사업 제규정 관리, 고객만족도 • 서울희망대학진로 장학금 • 서울교환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 장학금 • 서울선순환 장학금 • 서울희망고교진로 장학금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 청춘스타트 장학금 • 성장지원사업(멘토링, 아카데미, 썸포터즈, 선순환 프로그램) • 서울희망공익인재 장학금 • 서울희망고교예체능 장학금 • 오토꿈이룸 서울장학금 • 홍보(뉴미디어홍보, 보도자료) • 서울꿈길 장학금 • 서울희망하나고 장학금 • 이사회, 법인관련 업무(시교육청 등) • 감사, 안전・보건, 개인정보 보호, 규정 관리 • 장학생선발관리시스템(정보화전략, 홈페이지), 그룹웨어 운영 • ESG경영(인권경영 등), 성별영향평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경영기획 및 경영혁신 추진 • 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기관장 경영계약 • 이사회 운영 및 시의회/국회/시 대응 대외업무 • 진흥원 원규 제·개정 관리 • ESG경영(인권/환경경영 및 사회공헌 등) • 창의경영 및 적극행정 추진 • 경영공시 및 정보공개 • 진흥원 언론홍보 및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 기관 홈페이지, SNS 채널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기관 홍보물 제작 및 연차보고서 발간 • 인사·노무제도 기획 및 운영 • 임직원 교육 기획 및 복리후생 관리 • 급여 및 총인건비 관리(퇴직연금 포함) • 회계, 세무 및 결산(4대 보험·원천세 신고 등) • 계약 총괄 및 공공구매 관리 • 전산 및 보안 업무(통합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등) • 시설안전보건 관련 업무(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기록물 관리 및 출판물 관리 • 기관 민원 접수(응답소) 및 민원 처리 • 서울시 평생학습 싱크탱크 위원회 운영 •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이슈 분석보고서 〈이슈포커스〉 개발 및 발간 •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공유 및 학습의 장 〈작은 세미나〉 개최 및 운영 • 〈국가평생교육통계〉 서울지역 현황조사 및 관리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공급 및 수요 분석 연구 • 서울시 성인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 서울 평생교육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연구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사업성과측정 도구 개발 연구 • 평생교육 정책보고 실무가이드 개발 연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신노년층 맞춤형 교육과정 및 운영체제 개발 연구 • 진흥원 연구수행관리체계 개발 및 운영 • 서울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관계자 워크숍 운영 • 자치구 현황조사 및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운영 •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 및 보수교육 운영 • 서울형 성인 문해교육 콘텐츠 개발 •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및 관계자 연수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 • (국비)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광역 단위, 프로그램 단위) 운영 • (국비)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 햇살버스 운영 •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점프업, 릴레이 특강 운영 • 서울마이칼리지 사업홍보 및 성과확산 • 대학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응 • 교육과정 종합 기획 및 예산 관리 •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대외협력 • 시민대학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4050 인생디자인학교 기획 및 운영 • 학습매니저 선발 및 역량 강화 • 신규 강사 선발 및 역량 강화 • 유튜브 시민대학,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및 성과 확산 • 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인문교양, 생애설계, 직업역량 • 명예시민학위제(시민학사・석사・박사)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 중장년 맞춤형 경제교실 운영 • 대사관·국립기상박물관·지역 연계 시민대학 운영 • 평생학습포털 관리 및 대응 • 캠퍼스 홍보지원 • 캠퍼스 시설관리 및 대관,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인문교양, 생애설계, 직업역량) •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운영(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등) • 디지털 시민성 전문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전문자격연수 등) • 시민갤러리 및 도서라운지 운영 • 캠퍼스 디지털 특화공간 운영(VR, 창작실, 상설 디지털 배움터 연계 등) • 지역 네트워크 연계 사업 운영(중장년 및 초등학생 디지털 체험, 문화행사 등) • 시민 커뮤니티 운영 및 활성화 • 사회공헌 프로젝트 운영 •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교육 운영(유관기관·문화행사 등) • 캠퍼스 공유공간 운영(책방 북큐레이션 등) • 시민 커뮤니티 공모 사업 운영 및 커뮤니티 활성화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경영전략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재단 제규정 및 내규 관리 •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지속가능경영 이행 및 활성화 • 신규캠퍼스 개관 지원 등 • 50+정책 연구 개발 • 50+통계 구축 및 조사 분석 연구 등 • 50+정책 이슈 발굴 및 당사자연구사업 • 50+정책 확산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중장기 인적자원 계획 수립 및 인사제도 운영 •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및 조직문화 활성화제도 운영 • 법인세 및 기타 세무신고·납부(부가세, 원천세, 지방세 등) • 홍보기획, 관리 등 전사 홍보 총괄 • 뉴미디어 홍보전략 수립 운영 • 전사 홍보물 제작 및 관리 총괄 • CI·정책 브랜드 기획 및 관리 총괄 • 캠퍼스 시설 및 안전관리, 재물・자산관리 • 전사적 정보화 체계 기획 및 운영 총괄 • 고객 데이터 관리·기획·운영(분석) 총괄 • 전사적 데이터 기획·구축·관리 등 지식자산화 총괄 •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중장기 인프라·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정보보안(사이버침해대응, 시스템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총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사업운영 정책 및 성과 확산 컨텐츠 기획·운영 지원 등 • 사업운영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분야 대외협력 총괄 • 시민서비스 온라인화 및 고객맞춤 데이터 기반구축 기획 협력 • 50+정책 전달체계 지원·관리 기반 조성 및 수행 • 경력전환 및 취업 지원사업 운영 •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운영 • 창업·창직 지원 및 공유사무실 운영 • 50+상담센터 운영 • 생애설계프로그램 기획·운영 • 당사자 활동 지원 • 캠퍼스 홍보, 서무, 환경관리 등 지원 업무 • 서울런 4050 40대 직업전환 지원 사업 종합 성과관리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업전환 협력체계 구축 • 40대 직업전환 프로그램 기획·운영 • 40대 경력전환 및 취업지원사업 운영

3. 기획경제위원회

□ 총 괄

연번	기관(실국)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
계		479	200	108	171
1	기획조정실	77	40	12	25
2	경제실 (시립과학관, 서울패션허브 포함)	73	19	27	27
3	민생노동국 (농업기술센터포함)	108	50	22	36
4	서울시립대학교	32	16	5	11
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가락시장정산(주) 포함)	31	12	7	12
6	서울연구원	51	24	7	20
7	서울경제진흥원	59	13	17	29
8	서울신용보증재단	31	18	7	6
9	기술교육원	17	8	4	5

시정·처리요구 사항 ---------- 200건

▢ 기획조정실 : 40건

1. (시정고문단 관련) 고문단이 아닌 법률가, 전직 서울시 간부, 특정 정당 당직자로 편향되어 있음. 이에 정당 편향성과 전직 간부를 대신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 시정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고문단으로 구성할 것
2. 시정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부실함. 충실한 논의와 자문 필요
3. 시정고문단 구성 조례의 성별 균형을 위반하여 구성
4. 2023년 예산은 전년대비 2조 2,500억 감소하고, 2023년 결산에서 2,921억 원의 불용예산 발생. 2024년 세입이 2023년과 유사한 규모인데 서울시가 2025년 예산으로 2조 3,000억 증액편성함. 대규모 개발사업 지양하고, 세입규모를 고려한 시민 안전, 복지,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확대하는 예산 재조정 할 것
5.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숙려할 기간이 짧았음. 의회 일정은 예측 가능하니 의회일정을 고려하여 조직개편을 해주기 바람
6.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대상을 서울시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한정할 것
7. 시민참여예산제의 지정제안형 사업과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공모사업'과 유사함. 두 사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행할 것
8. 민간위탁 적격 심사시 평가항목이 많고 자료가 방대한 것에 비해 검토시간은 10분으로 매우 짧음. 충분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시정바람
9. 시민참여위원회의 반복적인 안건상정, 일부 의원의 독점적인 진행과 발언 등과 같은 운영상 문제를 시정하고, 안건설명시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절차를 추가할 것

10. 시의회 예산심의 때 「시민참여예산」이라는 표기를 해서 상정할 것

11. 공공위탁의 경우 법제정 촉구 및 조례제정 여부를 검토할 것

12. 민간위탁의 경우, 고용승계 원칙이 수탁기관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운영지침의 개정을 검토하고 정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촉구할 것.

13. 고향사랑 기부제도 답례품 선호도가 지역상품권으로 편중되어 있음. 답례품 선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 바람

14. 조직개편 시 정원 동결 기조하에 사무는 줄이지 않고 인력만 재배치하고 있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무리한 조직개편 지양 필요

15. 불필요한 기존 사업부서나 조직은 대거 축소·폐지하고 시민의 욕구와 시 정책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함

16. 재정사업 사전심사와 최종 평가가 상이한 경우 많음. 사전심사와 최종평가 사이 간극을 줄여야 하며, 부서 자체평가가 주관적이므로 평가방식 개선 바람

17.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시도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례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 있음

18. 위원회 관련 법령이 여러차례 변경되었음에도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은 '18.9월 이후로 개정되지 않고 있음

19. 위원회 운영평가 시 위원회 개최 횟수 등 양적 실적만 평가하지 말고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평가하기 바람

20. 동일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부서 간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바람

21. 마을변호사 만족도 조사 표본인원이 적음. 법률상담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개선이 필요함

22. 수탁기관 관리, 형식적 종합 성과평가 문제 대책 마련 등 민간위탁 재정비 및 개편 필요

23. 기조실 업무보고에 기조실의 방향을 설명해주는 비전, 목표 등이 빠져 있음

24. 위원회 운영평가 지침을 현재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위원회 운영평가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음(예시 :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위촉 비율 표기 상세하지 않음)

25. 동일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총괄부서에서 면밀히 확인 바람

26.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 시 의무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및 검토의견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27.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투출기관의 조직, 기능 및 역할이 상황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음.

28.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교육 등을 통해 시에서 관리해주기 바람

29. 공약이행현황 관련 예로 '영등포 문래동 일대 기계금속 뿌리산업 지원 강화'의 경우를 보면, 사업비가 5년간 116억 정도이고 3년차 집행율은 31%에 불과함, 정상추진이라고 평가하려면 연차별로 투자수요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그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시민이 공약이행여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임

30. 투출기관 경영평가 중 기관 내 직원 만족도 조사가 객관적인지 의구심이 생김. 구직자들이 보는 취업관련 사이트를 보면 투출기관 만족도 조사와는 너무 다른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음. 투출기관의 건강한 조직관리를 위해 매뉴얼 개발 등 기타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투출기관의 조직, 기능 및 역할이 상황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음.

-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교육 등을 통해 시에서 관리해주기 바람

31. ’23년 서울시 약자동행지수에서 노동부문이 없으며, 고용환경이 열악한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을 지표로 다루고 있지 않음

32.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되고 있음. 심의회 결과를 기다린다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부에 재난관리기금 보전 요구를 해야함

33. 4년 전 3개 투자출연기관(교통공사, SH, 신보) 콜센터 직영화를 약속했으나 현재도 이행되지 않음.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 필요함. 다산120재단으로의 통합 고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34. 현재 기관장 성과급 등을 결정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민간에 맡기고 있음. 평가를 하는 민간회사의 주업이 경영컨설팅인데 필연적으로 평가대상인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음. 경영평가 개선이 필요함

35. (약자동행지수) 전반적인 약자동행지수는 높아졌으나 실질적으로 약자들에게 필요한 위기가구 지원, 노동일자리, 교통약자 관련 지표는 하락하였음. 하락한 지표에 대한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함

36.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타 지자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정기부제를 유도하고 있음. 市에서도 지정기부제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37. 고향사랑기부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향후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활용계획 수립 시 시민의견 수렴, 기부한도액 상향 안내 등은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좋은 홍보방안이 될 것임

38. 김포시 서울 편입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재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큼에도, 서울시가 공동연구반과 TF 운영 등을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해 주기 바람

39.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수탁법인의 상임이사를 겸직하고 2개 대학에 출강하는 등 겸직이 과도하여 위탁 사무를 맡은 기관장 업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함.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장의 근무 관리·감독과 징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함

40. 2019~2021년 진행된 자치구 정책연구 지원사업이 중단됨. 이를 계승할 구정연구단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서울연구원과 자치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구 맞춤형 정책연구 지원을 재개해야 함

▢ 경제실(서울시립과학관, 서울패션허브 포함) : 19건

1. 파트너스하우스 운영 실적의 54%가 교류협력 분야로 대부분 서울시 정책간담회 등으로 활용.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시장의 전용공간 되고 있음

2. (파트너스하우스 관련) 도시외교나 투자유치 등의 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추후 파트너스하우스가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기 바람

3. 민간위탁 적격 심사시 평가항목이 많고 자료가 방대한 것에 비해 검토시간은 10분으로 매우 짧아, 발표에 의존하고 있음. 충분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

4. 공공위탁의 경우 법제정 촉구 및 조례제정 여부를 검토할 것.

5. 민간위탁의 경우, 고용승계 원칙이 수탁기관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운영지침의 개정을 검토하고 정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촉구할 것

6.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도 집행부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차순위 후보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또 그와 같은 처분에 담당자들이 감사원의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선정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태도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권한과 존재 의의

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7.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사정 변경 시 의회 보고 관련

- 당초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새로운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차질이 생겨 수탁기간의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 상임위에 보고 하지 않았음
- 위탁기간 종료 후 기존 수탁자에게 7개월 간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생겼음에도 이를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민간위탁 동의의 권한을 가진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임

8. 과학문화행사 관련하여 4,900%이상의 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상적인 수치라고 생각하는지

- 600명 기준으로 행사를 준비했을텐데 구성원들이 얼마나 고강도 노동을 했을 것이며, 질적 성취를 했다고 볼 수 없음. 더불어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오해와 혼돈을 줄 수 있는 보고자료라고 판단되며, 실질적인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함

9. (동대문 상권 관련) 현재 의류업계는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등으로 인해 동대문 상권에서 버티기 힘든 상황임. 한류가 힘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K-패션 업계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함. 내수시장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공격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함

10. 여성기업인 디지털 교육 관련 지원 현황은?

11. SBA의 베트남 해외 판로 지원사업 관련

- 시민의 세금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한건데 주의 처분만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됨
- 당사자가 마곡단지 등 부정확한 처리 사례도 있던 만큼 삼진아웃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12. 솔루션앵커 관련

- 뷰티패션산업과 사업중 '솔루션앵커' 라는 명칭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 기원에 대해 설명 요망.
- 강북 솔루션앵커의 현장 방문 당시 건물주가 엘레베이터 사용을 못하게 해 노인 종사자가 80kg에 달하는 원단을 직접 계단으로 운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음. 장소 변경 관련하여 검토 요망

13. 기술혁신성 제품 관련

- 현행 공공구매 비율(1.5%, 241억원)이 너무 낮음. 기술혁신성을 인정받는 기업들의 상품들은 적어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 썩는 기저귀와 같은 기술은 실제 판로개척 지원 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가 시작이라도 되어야 할 것임
- 기술 혁신성 제품의 공공부문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법적 규제 내에서 혁신제품 우대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14. 시립과학관 활성화 방안 수립 필요

- 시설 노후화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하나의 대표 성과 도출하기 위해 2025년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15. 서울패션허브 운영 관련

- 디자이너들이 우선적으로 찾는 패션허브를 만들기 위한 방안 수립되어야 함
- 디자인-생산 일원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16. 세텍(SETEC) 활용방안 수립 요구

- 잠실 MICE 완공(2031년) 이후 검토하는 것은 코엑스와 연계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포기하는 소극적 대응이므로 산업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종합계획 수립되어야 함

17. (경제동향 및 지표 소통 관련) 경제지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시 자치구 지표가 굉장히 중요함. 홈페이지 내 경제자료실 탭으로 들어가면 경제동향 마지막 업로드 시점이 2019년도임을 확인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함

18. 자치구별로 경제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자치구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 세부 경제지표가 필요함. 이 역시 부재하므로 자치구 관련 세부 경제지표를 관리하고 공개해야 함

19.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된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민생노동국(농업기술센터 포함) : 50건

1. 풍물시장은 청계천을 복원하며 노점상을 위해 점포 공간을 마련해 준 것으로 임대료는 10만원 미만이고 시설 보수도 시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음. 임대료가 낮아서 문 닫고 있는 점포가 많으니 점포 임대료를 올려서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함

2. 풍물시장 증인으로 전무, 관리소장이 참석하였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므로 퇴장요구함

3. 노동권익센터 통폐합과 관련하여 감정노동센터는 2024년 8월에 통합할 예정이라고 하여, 작년 8월 20일 시의회에서 동의하고 9월초에 의결하였음. 그러나 시의회 동의없이 2023년 12월 31일에 감정노동센터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함. 이는 시의회 의결 과정 중에 이미 조기종료를 염두에 둔 상황으로 시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하는 매우 나쁜 행태임. 이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아니 됨

4. 23년 노동권익센터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청계천 사무실(제1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서남권 지원센터(제2사무실, 금천구 소재)로 이전하였음. 센터장이 업무 효율성 측면이나 조직을 관장하는데 제1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속적으로 제2사무실에 근무함.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5. 센터장이 업무와 관련없는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고 1～2회 출장여비를 수령했는데 부적절하므로 시정조치하고 출장여비에 대하여 세밀히 점검할 것.

6. 서울시물가정보 관련

- 서울시 물가 정보 품목별 가격 편차가 심한데, 모니터링단이 조사한 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 1년반 전(23년 3월)에 교육하고 맡겨뒀다는 것은 관리 소홀 아닌지?
-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람
- 알뜰정보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 지속적인 업데이트 통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필요

7.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관련 용역을 작년에 실시했는데 프리즘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인바람, 실태조사 결과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람

8.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여성실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금체불, 통행금지, 취업규칙 미작성 등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민생노동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9. 민생노동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관심있게 체크하고 대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음

10. 곤충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체험학습을 주로 하는데, 산업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하면 적극적 창업이나 곤충산업 영역으로 확대시켜서 사업추진을 해야하지 않는지? 앞으로 사업내용에 저변확대에 대한 취지를 보완할 것

11.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전통시장 · 골목상권 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

12. 시장별 이벤트 지원에 따른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에 대해 추상적인 평가항목을 보다 구체화 할 것.

13.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사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할 것.
14.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사업 시 보조금 사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마련할 것.
15. 전통시장 지원사업 사후관리로서 점검을 나갈 때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상인 및 주변부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직접 듣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상담위원과 조정위원 명단 중복이 4명이 있는데, 다양성 측면과 상담 및 조정 시 답변의 중복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확보하기 바람.
17. 풍물시장 증인으로 전무, 관리소장이 의원님들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못 하는 등의 문제가 많음. 운영 관리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 반영할 수밖에 없음.
18. 상권에 대한 유인정책이 없으면 풍물시장 활성화는 힘들다고 생각함. 해결방안 모색 필요
19. 방학동 도깨비 시장 '엄마 아빠 VIP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실질적인 방문율이 낮은 사업에 단순한 개선조치를 찾지 말고 예산이 투입 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할 경우,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20.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의 문제는 사업을 진행해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고객이 늘지 않으면 이유를 분석하고 활성화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연예인 초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음. 연예인 초청 이벤트는 폐지해야 함.
21.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편성된 골목상권 특화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현재까지 0%임, 연내 집행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22.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련 마포구에 과거 쓰레기매립장 조건으로 시유재산을 시장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으나 현재 시장 일대 주변 환경 개선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해 서울시가 시장 운영을 위한 환수가 필요함

23. 풍물시장 조직진단을 `23년도에 수립하였는지? 보수공사는 왜 지연되고 있는지?

24. 증인출석 요구받은 백상 대표가 불참한 것은 큰 문제임.

25. 풍물시장은 `23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교육청에 매년 8억여원 임대료를 내면서 전체 점포 중 절반도 운영이 안 되고 활성화도 되지 않으며 민원도 많음 의원님들과 추가 논의하여 2025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음

26.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공사 중 토양오염물질(불소)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토지는 농협과 교환한 토지로써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는 정화책임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화비용에 대해 농협에 구상권 청구 조치를 해야하며, 조속히 이행해주시기 바람.

2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더라도 서울시민이 먹는 양곡이 유통되는 것으로써 오염토양 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화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람.

28. 토양오염조사 중으로 공사중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농수산유통과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29. (직장내괴롭힘 관련) 2023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본청의 괴롭힘 목격률이 44.6%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근로기준법에는 신고기한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매뉴얼은 1년이 지난 사건 각하 사유로 규정하여 시정이 필요함.`

30. (직장내괴롭힘 관련) 서울시에서 1년 이상된 사건은 각하한다는 규정은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피해자분들은 2년 주기로 부서 옮기는데 제보, 고발하고 싶어도 주변 관계에 묶여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다수임. 이후 부서장이 떠나거나 피해자가 전보로 이동하게 되면 신고할 용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미 1년을 도과해버린 상태임

31. (이동노동자쉼터 관련) 이동노동자 쉼터를 가보니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패널이 필요하다고 봄

32. (이동노동자쉼터 관련) 에어컨이든 난방기든 꼼꼼히 일일이 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기를 바람

33.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식당 노동자의 추가 노동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이 사업에 따른 노동자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34. (가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09년 현대화 계획 수립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현재의 유통환경에 대응하지 못함. 현재 현대화사업은 채소1동, 2동, 과일동, 수산동에 집중되어 있고, 통합배송장은 나대지로 되어있음.

35. (가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현재 새벽배송, 소포장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게 통합배송장, 저온창고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36. 소상공인들은 산업재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고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가입률이 매우 낮음.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37.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다른 여러 지자체는 이미 지원사업 시행 중인 상황.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해 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38.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해 여러 번 질의한 바 있고, 사업구조를 개편해 자부담률을 낮추기도 하였으나, 화재보험 가입률은 아직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이로 인해 노후전선 등 국비사업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39.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면,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여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0.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발주자가 프리랜서로부터 노무(용역)를 제공을 받는 계약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자가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할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또한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구축 예산(15.7억)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41. 매몰비용 발생이 우려되어 예산삭감 의견이니, 예산심의 시 충분한 설득논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람

42.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최근 3년간 아케이드 설치 보수를 한 전통시장은 총 48개인데 이 중 31개소가 아케이드에 사용된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인데 화재에 취약하고 난연성 소재여도 유독가스 발생량은 오히려 더 많아 화재 발생시 인명사고 위험성은 더 큼.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

43. 인천 등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PC를 소재로 한 아케이드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음. 서울시에서 관련 제도나 지원예산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해 사고를 예방해야 함

44.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노동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몇 차까지 되어 있는지?

45.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을 수렴했는지?

46. 노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도 없었는데 수립 중이 맞는지?

47.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감독 부실) 협동조합지원센터와 통합 이후 상담시간, 상담방법 등을 대폭 축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함. 또한 전문성 있는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상담 건수가 급감함. 분야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상담 서비스를 정상화하여야 함.

48. 센터장이 주 3회 대전과 울산으로 대학 출강을 다니며 상근직 센터장의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음. 내부 관련 규정을 변경해가며 근무를 태만함에도 소관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24년도 센터장 근무내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입증 가능한 출퇴근 자료와 보충근무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요구함.

49. 통합 이후 뉴스레터를 발행하지 않고 블로그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민 소통 부족하여 시정이 필요함.

50. 10년간 축적된 협동조합지원센터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해짐.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정책사업 결과물에 대한 아카이빙이 필요함.

▢ 서울시립대학교 : 16건

1. 연구 성과 부족 관련하여 논문 및 피인용률 등을 철저하게 심사·관리하여야 함
2. 외국인 유치에 있어 시립대학교는 매우 소극적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거는 다른 대학의 적극적인 모습을 본받아야 함. 추후 글로벌 도시정책관과 협업 및 협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것
3. 쓰레기 수거함 확충 및 쓰레기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등 학내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4. 대체실적형 학위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하되, 학과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별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
5. 시립대 도서관 장서 포화도가 상당히 높음. 장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도서관 신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기숙사 수용률이 현재 전국 평균에 비해 너무 낮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7. 대학평가에서 교수 연구 부문이 굉장히 낮은 걸로 확인됨. 연구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관리·감독에 힘써주시기 바람.
8. 100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 대표 대학이 이제야 학술연구에서 국제적 수준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보아야할지 의문임. 시립대학교학교 연구실적이 타 학교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짐(교원 1인당 논문 등재 비율 등). 시립대가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하여 연구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람.
9. 시립대학교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SNS 홍보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함.

10.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시립대 교수님 중에서도 4개 혹은 5개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이 계심. 시립대 내부적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이 안 되도록 내부 에 안내해 주시기 바람.
11.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70%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립대 제2캠퍼스 조성 계획이 무산됨. 서울시 집행부가 스스로 수립하고 발표했던 계획을 특별한 해명이나 후속 대책 없이 폐기함. 서울시는 멀티캠퍼스 무산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과 보완 대책을 제시해야 함. 시립대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함.
12. 전임 교원 중 모교출신이 타 대학 대비 적음. 모교 출신이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함. 모교 출신 쿼터제 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13. (서울시립대 학생식당 직영 운영 관련) 시립대 학생식당 만족도 조사가 상반됨.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향상이 됐는데 반대로 시립대신문에서 학생들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 80%가 나옴. 표준화된 조사가 되도록 학생참여를 보장해 조사방법을 개선해 줄 것.
14. 전임교원 확보 비율이 국립 거점 대학들에 비하여 많이 떨어짐. 증원을 위한 구제적인 계획이 필요, 기간별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람.
15. 5대 영역 20대 과제에 대한 사업 설계와 계획 수립 시 정량적/정성적 성과 확인을 위한 구간별 지표 관리가 필요함. 또한, 목표치 설정이 불명확하며 기간별 달성 계획이 부재하며 평가 결과의 환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KPI 지표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16. 개인 역량 중심 교육에서 사회적 소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함. 관련 프로그램 검토와 보강이 필요함.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식품관리㈜,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포함) : 12건

1.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관련 1차 시범사업을 3번 추진하고 연구용역도 나왔음. 휴업을 하더라도 가격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앞으로도 개장일 탄력적 운영 시범사업이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점진적인 추진을 요청함.
2. 든든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평가에서 최저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주고 탈락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람
3. 전자송품장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산지에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바람
4.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어도 서울시와 공사는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정부가 나서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편임. 공사는 지정권과 평가권은 서울시로 일치가 돼야 한다는 말뿐 중도매인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5.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한창인데 중도매인들의 시장참여는 저조한 편임. 유통업체의 영세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율을 올려야 할 것임.
6. 가락시장 내 신규 도매법인이 지정된다면 경쟁을 통해 언론에 이슈화된 문제점이 개선될 거라 생각함. 이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의 실질적인 노력과 방안을 주문함.
7. 가락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도매법인의 품목해제는 서울시에 강력한 요청이 필요함
8. 공사와 도매시장은 관리직, 유통인, 하역근로자, 운전직 등 다양한 직군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므로 직군간, 또는 같은 직군내에서도 소통의 어려움이나 의견불일치 등으로 인한 갈등과 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공간 특성상 작은 갈등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인사관리프로그램에 모든 임직원들의 정서관리 또한 포함시켜 관리하여주시기 바람

9. 6개 도매시장 법인이 2022년 24.3%, 2023년 22.1%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매법인만 안정적 고수익 구조 유지하고 있음. 높은 수익률에 비해 상생기금 출연 등 공익적 역할 미흡함. 수익 대비 적정한 수준의 상생기금 출연을 유도하고 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10. 출하장려금 지급률이 법정 한도(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8-10% 수준) 출하장려금 지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11. 법인 평가권한과 지정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어려움이 있음. 평가권한과 지정권한의 일원화하고 공사의 법인 평가·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5년마다 법인 재지정 심사가 있으나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객관적 심사 어려워 탈락 사례가 전무함. 실효성 있는 재지정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연구원 : 24건

1. 홍보기능의 강화 및 보고서 중 단순 조회수가 많은 것을 마치 연구원의 업적인 양 보고하는 것은 허위임. 추후 내실있는 홍보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기 바람

2. 작년 서울연구원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관련 지침 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3. 성비위 발생 건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마무리한 것은 연구원 출신 인사위원 등이 포함되는 등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 직원이 현재 중요 보직을 맡고있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위원회에 다시 한번 건의하여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음

4. 서울시 22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중 서울연구원만 직원인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부원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있음. 부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다른 투출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의전으로 시정을 요구함
5. 원장님이 취임 전후에 연구원 통합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질의한 적이 있음. 개별보고를 받지 않았냐고 질의를 드렸음. 통폐합 관련하여 매우 쟁점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으면 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함.
6. 서울도시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탈락 후 원고투고 및 심사 결과를 보면, 매우 미비함. 학술지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7. 연구과제 활용도에 대해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할 것.
8. 연구 실적이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는데, 승진 인사 규정에 연구실적을 평가 반영하도록 하면서 연구실적 측정을 착수 시점으로 하고 있음. 3개월 미만 1개월짜리 수시/현안 연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장기 연구나 연구결과 평가가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임.
9.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 매우 적음. 수탁연구의 경우 저작권이 서울시 귀속되어 있어 비공개하고 있음. 서울시민의 재산인 수탁연구 결과도 공개하여야 할 것임.
10. 예산 절감 규모를 봤을 때, 10억 이상이라고 하면 충분히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있다는 것인데 예산이 과잉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1. 수탁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연구원 고유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행해 주기 바람.

12. 서울시 본청만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구 단위에서도 시민들과 좀 더 밀접하게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들에도 유용한 정책적 지원을 해 주기 바람.

13. 인구 변화 관련 연구가 주로 서울시의 현재 정책 중심으로 한정된 것처럼 보임. 저출산 대책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 바람.

14. 매년 작은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연구결과를 보면, 그 정도의 금액을 받을만한가를 살펴보게 되었음. 요즘에는 챗GPT가 논문을 쓰는 시대인데, 작은연구 사업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임. 해당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

15. 1,840개의 연구보고서가 축적되어 있으나 실제 서울시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음. 연구결과가 행정부서와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부재함
    - 연구결과의 정책화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수립 필요
    - 연구결과에 대한 해당 행정부서와의 정례미팅, 발표회, 질의응답 시간 의무제도화
    - 정책 반영 전후(비포-애프터) 결과 공유 체계 구축

16. 연간 서울시 출연금 400억원, 전체 예산 600억원 중 인건비가 300억원 차지함.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예산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부족함.
    - 예산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17.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 간 인적 교류가 있음에도 공동연구나 협력사업이 부족하고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미비함.
    - 서울시립대-서울연구원 공동 연구과제 선정 및 추진
    - 연간 공동 성과 발표 및 성공사례 공유 체계 구축
    - 양 기관의 시너지를 통한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

18. 연구결과의 정책화를 위한 의회와의 협력 체계 부족함. 연구원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정책 반영의 한계가 있음
  -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통한 연구결과의 정책화 경로 구축
  - 기획경제위원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 마련
19. 서울연구원의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율이 기술연구원과 통합후 현재 2.4%에 그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 의무고용율인 3.6%에 미달함. 저조한 고용율이 21년부터 지속되었고 통합 후 급격히 하락함. 총 327명의 임직원 중 9명만 장애인으로 최소 5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일반 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직까지 포함해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해줄 것.
20.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통합 과정에서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임금 삭감이 제일 큰 문제임. 현재 조정 수당으로 보존하고 있으나, 향후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임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1. 서울연구원 국외 출장 관련 위반 사항 점검. 여비규정에 위반하는 직원 비즈니스클래스 이용내역에 대한 조사 후 보고
22. 현재 서울연구원 항공마일리지 적립 관련 규정을 보니, 공무상 출장으로 항공마일리지 적립은 하지만, 이후 공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관한 시스템이 구축 되어있지 않음. 이를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출연기관 마일리지 시스템에 대한 관리체계를 검토해 주기 바람.
23. '구정연구단' 사업 중단 후 대안이 부재한 상황임. 축적된 연구 경험과 노하우가 단절되었고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연구 부재한 상황임. 서울연구원 중심의 자치구 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구 요청 시 능동적 협업을 수행해야 함. 또한 '구정연구단' 연구 성과의 계승과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함.
24. 연구성과물의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보 아카이빙 시스템의 기준과 설계가 미흡함. 연구 결과에 대한 시민적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할 것.

▢ 서울경제진흥원 : 13건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온라인 대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단 한 건의 온라인 대관실적이 없음. 이런 원인은 무엇인지, 시민접근성을 위해 온라인 대관 활성화시킬 것
2.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상품 스토어와 DDP 디자인 스토어의 연계 및 협력 확대 필요
3. 기관 내 중복되는 사업과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의 편중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조정할 것
4. 청년 취업사관학교 관리체계 및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 청년 취업사관학교 운영과 관련한 예산, 교육의 질, 취업률 등 주요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필요함
5. 적절한 부채관리 수단 및 수입 증대방안 고민 필요
6. 오픈이노베이션 참여하는 협력기관에는 이용료 부과하지 않았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여 공정성 제고해야함
7. 과거 국제유통센터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맞지 않는 시설운영이 있었음. 자체규정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SBA 다른 시설에 대한 점검필요
8. 제품화지원센터 고가장비 중 유휴 장비가 있음. 구매 대신 대여 검토하기 바람
9.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베트남) 감사 관련 징계결과 적합한지 검토바람
10. (서울콘(Seoul Con) 운영 관련) 행사 효과 측정의 객관성 부족(직접경제효과 295억, 유발효과 700억 등 수치의 신뢰성), 인플루언서 활용의 실효성 부족(형식적인 콘텐츠 생산에 그침) 등의 문제 발생

- 행사 성과 측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 수치에 매몰되기보다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홍보 효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많은 인플루언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홍보 컨셉과 메시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부합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소수 인플루언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11. (기술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 관련) 테스트베드 운영 및 기술혁신기업 인증 체계가 미비하고 서울시 공공입찰에서의 가산점 제도 부재함

- SBA 주도의 테스트베드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기업인증 체계 구축할 것
- 인증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가산점 제도 도입 등 매출확대 방안 수립할 것

12.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용역을 수주하고 있음. DDP 쇼룸(32억), 비더비 운영(17억), CES 운영(14억) 등 주요 용역이 단독 입찰 또는 특정 업체 중심으로 선정됨.

- 단독 입찰 지양 및 공정한 경쟁 체계 구축할 것
-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할 것

13.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조직문화 문제) 대표 부임 이후 내부 만족도 수치 하락.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대표의 지시에 순응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 인사상 차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 정립 필요
-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 확립

▢ 서울신용보증재단 : 18건

1. 행정용어는 한글로 순화할 것
2.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연구주제 선정부터 성과관리까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방안을 마련할 것.
3.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정기간행물 관리를 체계화할 것.

4. 미환급보증료 환급 규모가 최근 증가하였는데, 적기에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보증사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부실증가에 대비한 사전 조치들 강구하기 바람
6. 창업 소상공인과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지원 내실화하기 바람
7. 보증심사와 관리업무에서 동일한 오류가 매년 각 지점 들에서 반복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의 기초적인 업무인 보증심사, 신용조사, 연체여부 확인, 회수관리 등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있음. 대위변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의심됨.
8. 신속히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
9.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실수들이 인사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음. 명확한 인사 평가 기준을 마련해 직원들이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임.
10. 직원 해외출장 결과가 어떤식으로 사업에 반영되는지 관리해주기 바람
11. 불용되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예산 사용 관리해주기 바람
12. 대환대출(희망동행자금)의 부실률을 감안 시, 금융지원과 더불어 비금융지원도 강구 바람
13. 고졸 채용 제도 관련 최근 3년간 2000년대생 채용이 3명에 불과함. 고졸 채용 의무를 시니어 고졸자 채용으로 대체하여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음. 제도 취지에 맞게 청년 고졸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람. 고졸 청년 채용을 위한 별도 전형 마련하는 등 청년 고졸자 대상 적극적 채용 정책을 수립하기 바람.

14. 내부 구성원 간 노노 갈등 존재하고 조직 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공공기관으로서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15. 25개 자치구에 지역협의체를 운영 중이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지방의원들(시의원, 기초의원)이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이 어려우므로 지역협의체에 지방의원들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여야 함

16. 상권분석보고서 등 재단의 연구 결과물이 지역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재단의 분석보고서와 정책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17. 지점에서는 지역상권의 현안과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동적인 업무처리에만 머물러 있음. 지점장과 직원들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적 투자를 하여야 함

18. 사해행위 적발 후 법적 조치의 실효성이 낮으며(106건 중 37건 승소, 실제 회수는 17건에 불과) 사후적 대응에 치중되어 있음. 대출 이후 소상공인들의 상환능력 유지를 위한 예방적,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하여야 함.

□ 서울기술교육원 : 8건

1. 교육생 출결관리 지문 등록 시 카드사용을 금하고, 출결지문인식 손가락을 지정할 것

2. 현원대비 징계사유가 높은 것은 교육원의 기강의 문제로 보이므로,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것.

3. ′23년 지도점검에서 통합발주 가능한 공사 건도 쪼개기 분리발주를 하고, 유사 계약을 둘로 쪼개서 진행하고 여성기업 수의계약을 남발한 것이 지적된 바 있음. 안전진단 및 시설공사/보수공사도 동일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두드러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4. 교육과 무관한 임시취업자도 취업자로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취업률 산정 기준과 방식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할 것
5. 취업 유지율 확인 체계 미흡함. 취업 유지율에 대한 별도 기준과 조사를 수행하여 공개할 것
6. 20-30년된 노후 장비로 교육 진행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시설 개선 부족함.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할 것.
7. 과목명만 변경하고 실질적 내용 개선은 미흡함. 현대적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할 것.
8. 간부진과 일반 직원 간 출석체크 방식 이원화되어 대리출석이 만연하고 식대 등 회계 처리의 불투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출석관리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건 의 사 항 ---------- 108건

▢ 기획조정실 : 12건

1. 엠보팅은 본인인증을 통해 투표가 가능하나, 중복투표 방지 및 서울시민 만이 투표하는 방안으로 제도보완이 필요
2.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업체의 불법행위와 부실운영에 대한 처벌규정 방안 마련할 것
3. 민간위탁 사업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강화안 마련할 것
4. 지난 23일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경의선 일부 구간이 제외됨(DMC~수색역) 서울시 전역이 지하화 대상 구간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5.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이라는 명칭을「서울시립 김병주가재울도서관」또는「서울시립 가재울김병주도서관」과 같이 지역명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 바람
6. 청년 자율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하여 청년 정책을 폭넓게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7. 학술연구용역 계약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데 공정한 학술용역이 되려면 입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8. 경의선 숲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적대응보다는 조정·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 바람
9. 조직이 방대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아쉬움 있음. 조직에 맞는 적재적소 인사를 하면서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사업 정리 등 효율적으로 조직 편성 바람
10. 지속적인 고향사랑 기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속 기부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람

11.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공적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관리 방안 제안함

12. 서울시 기조실 차원에서 민간위탁 관련 수탁법인과 기관장의 업무 책임감 향상을 위해 겸직을 비롯한 기관장 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경제실(서울시립과학관, 서울패션허브 포함) : 27건

1. 서울영화센터 '25년 9월 개관 후 센터 운영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람

2. (기술교육원 관련) 현실에 맞는 학과 개편이 되도록 하고 통합 수탁기관 선정 시 잡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

3. 현재 서울시립과학관의 경우 성인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주로 아동과 함께 온 성인들은 보호자인데 굳이 성인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지

4. 현장과 가까이에서 현장 친화적으로 패션허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길 바람

5. 패션허브 센터장(총괄PM)은 합리적인 전문성을 배양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장비, 기기 등의 특징을 완벽하게 이해·숙지하여야 함

6.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네트워크론 등 시중 은행이 실시하는 사업과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을 점검하고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7. 기술교육원 통합을 위한 인사, 노무, 조직의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할 것

8. 기술교육원 통합 후 수탁기관과 운영에 관한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

9. '25년까지 25개 자치구에 조성 예정인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시, 권역별로 묶어서 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10.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업체의 불법행위와 부실운영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방안 마련

11. 민간위탁 사업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강화안 마련

12. 해외중심의 홍보와 마케팅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

13. 바이오산업 집중투자 필요

- 바이오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R&D 예산의 집중 투자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14. 서울시 경제현황 관련

-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충분한 교육'이라고 생각함.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태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보강하여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람.

- 서울시에서도 경제부서에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런 진행에 있어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15. 산업별 허브 시설 관련

- AI허브가 현재 임차시설로 분산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 부지마련 등의 노력 바람.

- 미래 먹거리산업은 집중투자를 통한 선제 대응 필요함.

16. 기술교육원 관련

- 기술교육원의 공사 실적 검토해 보니, 매년 동일업체가 참여한 것이 확인됨. 수의계약 과정도 일괄 여성기업 위주로 진행하다가 2023년 지도점검에 지적사항으로도 남아 있는데 지도감독 정확하게 해주시길 요청함

17. 서울패션허브 관련

- 내년 행정감사 때는 수탁기관 변경 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노력해주길 바람.

18. 창업지원정책 관련

- 도시제조업과 관련된 시설과 창업지원 시설의 격차가 커서 도시제조업 2세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생각한다면 관련 정책과 관련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청년취업사관학교 경우 25개 자치구에 모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 특화된 정책이 필요함

19. 공덕 서울창업허브 관련

- 서울창업허브 내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모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기기의 수명이 짧고 사용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렌트나 리스 등의 방법을 제안함
- 도시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도록 더 광범위한 시책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 파트너스하우스 관련

- 파트너스하우스는 공유재산인데, 사용자가 편중된다는 생각이 들며 좀 더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21. 경제실 정책 관련

- 서울의 경제 및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이 부재. 서울시가 참고하는 자료는 국책연구기관 자료나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하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존재.
- 밑바닥 경제가 흘러가는 흐름은 소상공인과 같은 분들을 활용해 현장과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

22. 창업허브공덕 관련

- 제품화지원센터의 기계 중 사용률 적은 기계의 경우 타 기관(도시제조허브나 기술교육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

23.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마련 관련)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기구 등을 설치함. 그러나 여전히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지 않음.

24.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마련 관련) 12월 말까지 연구용역 기간이므로 내년 초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위기대응과 경제실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

25.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마련 관련) 다양한 경제지표에서 전망 양상이 좋지 않은 만큼 경제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마련 필요

26. (서울비전 2030 펀드 관련) 펀드 조성액의 총액은 목표치에 달하고 있으나 핵심분야인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등 펀드조성 실적이 30%에 머물러 있음. 핵심분야의 펀드 조성목표 부진에 대한 분석과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7. (서울비전 2030 펀드 관련) 펀드 조성으로 인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부진. 사업 초기 영향일 수 있으나 펀드 조성에 따른 기업의 매출증가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민생노동국(농업기술센터 포함) : 22건

1. 대형마트 내 입점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함. 이에 대한 형평성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2. 대부업관리를 위해 민사경과의 협력방안 마련할 것.
3. 치유농업센터가 이미 서울시의 타 부서에서 진행 중인 심리치료와 같은 중복 사업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4. 현실적 여건과 계량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5. 풍물시장 점포가 폐쇄적인 건물 안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활성화가 되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음.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헤어나오기 어려우므로,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풍물시장의 여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주기를 바람.

6. 서울시 중점사업 중 하나로 제로페이 진행했는데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7. 당시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개입한 것인데, 애초에 소비자가 카드 수수료 부담해야 하는데 가맹점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제로페이사업이 이어진 것이 상품권 사업임. 상품권은 2020년부터 발행되어서 내년에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도래 예정. 미사용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8. 학원비로도 많이 내는 등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발행한 상품권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향후에도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9. 시립 거점 5개 쉼터에 예산은 상당히 투입되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적은데, 너무 외진 곳에 있는 문제가 있음. 이용객들이 충분히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좀 숫자를 줄이더라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
10.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업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계획수립 시 사업내용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길 바라며, 소비자와 가맹점 가입률을 높이고 홍보 등 예산 집행에도 신중히 적극적 개입 필요
11. 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대리 참석 중인데, 이사회는 보증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
12. 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 자생력이 갖춰졌을 때 창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서울시에서도 창업에 대한 준비가 지금보다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함
13.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자영업자들의 급전 창구가 되어가고 있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신의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이자 부담을 지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가 공제금의 일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길 바람.

14. 도매시장법인의 수를 확대하여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위탁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의 공간(규모)이나 법인 지정기준 부분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15.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고 생활임금이 오히려 시장 임금체계에 혼란을 주고,있음. 당초 필요에 의해 만들었더라도 최저임금이 상당히 오른 현재 생활임금제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오염물질에 대한 토양검사는 하고 있지 않고 농사하기에 적합한 토양인지만을 검사하고 있음.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앞으로 토양검사 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17.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아직 64%인데 연내 100% 집행 가능한지? 감추경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18. 골목상권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는 골목상권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임. 골목상권에 대해 점포가 몇 개가 있는지, 거리 또는 면적 기준이 어떠한 상권이 골목상권 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9. 신용보증재단 사업들이 점점 복지 사업으로 가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현장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기관임.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경제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잘해나가기 위한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함. 소상공인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정책화해주길 바람

20. 건설노동자 관련

- 건설노동자는 민생노동국에서 다루지 않는지?
- 건설노동자들이 임금도 못 받고 고통받는 일이 많은데 민생노동국에서 개입 할 문제 아닌지?

21. 관련 조례에 따라 노동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조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26년 첫 임시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건의함

22.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하여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공감사 청구를 우리 상임위 차원으로 의결할 것을 건의함.

□ 서울시립대학교 : 5건

1. 평생교육 관련하여 지난 업무보고 때 세무 부문 및 재개발, 재건축 등 시립대에 특화된 부문에 대해 외연 확대를 제안했었는데, 현재 자산 증식 및 재테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현재 시립대 로스쿨이 조세법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람.
3. 현재 시립대 직원구성이 시직원과 대학직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임. 조직이 일원화 되고 일사불란한 정책결정 및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4. 시립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부족함. 시립대가 서울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람.(반값 등록금으로 성공한 자랑스러운 동문과의 소통 등)
5. 교육부의 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인 전공자율선택으로 모집하는 학생수가 수도권 내 유명대학 중에 78명으로 가장 작은 이유가 뭔가? 자율전공은 ICT 기반 미래 디지털 기술 연구와도 연결될 것임.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주관 R&D 사업은 학교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 교수님들의 의지가 중요함. 대학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바람.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식품㈜,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포함) : 7건

1.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 성과는 어떤지. 감정노동자, 하역노동자 관련 당부를 수차 드렸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노동자 관련 사항도 포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개선해주기 바람

2. 든든급식 등 발주 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다해줄 것
3. 향후 전기차 증가 대비 가락시장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4. 공동이배송 시스템에 유통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산교육 등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시기 바람
5. 착한가격식당 농산물 원가공급 사업은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업이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
6. 유통물류 공간 부족, 개설자 평가 및 지정 권한 강화 조례 개정에 대한 정부 불승인 등 도매법인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장애 요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음.
7.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적절한 도매법인에 대해서도 개설자가 재지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고민하고 있음. 내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자 함.

▢ 서울연구원 : 7건

1. 앞으로 시의회와 밀접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발굴·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보행일상권”과 “녹지” 등 실효성 있는 주제의 연구를 수행할 때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함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기 바람.
3. 메가시티싱크탱크협의체(Metta)를 잘 활용해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해 주기 바람.
4. 시의회 인근에 정동청사를 개관하였으니, 앞으로는 시의회와 밀접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발굴·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5.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나오는 투자분석, 타당성 분석 등의 연구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에게도 공유가 필요함.

6. 연구원에서 포럼과 세미나 과다하게 개최하는 것 같은데, 회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연구직들이 강연 등 외부 활동 횟수도 많은데, 연구에 도움 되는 대외활동 위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7. 연구원의 본연의 목적은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라고 생각함. '라이즈사업'처럼 위탁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기관 본연의 사업이 약화되고 위탁사업에 역량이 소모될 수 있음. 설립 목적과 고유사업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서울경제진흥원 : 17건

1. 스바TV 등 유튜브 라이브 채널 활성화할 것
2. SBA 해외시장진출, 글로벌커머스 사업 등에 대한 허위 보고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추후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 철저한 사전 계획 아래 사업을 실시할 것
3. 본연의 업무보다는 수탁의 업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고유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글로벌 마케터 사업 및 자격검증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 기본에 충실한 사업을 추진 하기 바람.
5. 홍보사업의 경우, 사내 홍보팀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6. 외식 창업 초기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키친 인큐베이터와 같은 우수사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 바람
7. 사업심의원위회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기 바람.
8. DMC 지역 활성화 바람
9. 뷰티패션 분야 R&D 예산이 감소된 부분 아쉬움. 트렌드를 쫓는것도 좋지만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
10. R&D 사업 관련 다음단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11. 사업 추진시 진흥원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확인 및 성과 낼 수 있는지 판단 필요

12. 청년 취업사관학교의 취업률이 매년 70% 이상 성과를 내고는 있으나 취업 이후 사후 관리가 필요함. 단순 취업률 외에 청년들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이탈을 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고민해주기 바람.

13. 11개 대외 수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외 홍보도 해주기 바람

14. 여성기업 계약 시 공정한 기회 담보 필요

15. CES 참여기업 선정 시 절차적 공정함을 담보로 해야함. 또한 CES 참여기업들에 대한 홍보확대 바라고 CES 행사가 서울시, 기관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6. 서울시 뿌리산업 관련 공약사업을 진흥원에서 맡아서 하는 방향 검토

17. 인베스트서울,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

- 사업 관련 투자유치 외에 고용 창출 효과, 생산성 향상 등 다른 경제 효과도 놓치지 않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7건

1. 그동안 시중은행으로부터, 특히 임원이 재직한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이 전무함. 이는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음. 금융기관 등 민간 출연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

2. 이사회는 재단의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임. 이사회 구성원들이 가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24년 경제상황 고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보기 바람

-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단의 공공 역할 중요

4. 25개 지점 업무량 불균형 개선 방안과 업무 많은 지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5. 재단의 경영지원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함. 스토리텔링 가진 사람을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홍보 바람
6.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 자녀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할 것
7. 현장 지점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점 근무인력을 늘리고,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현장 중심 조직으로 개선을 건의함

▢ 서울기술교육원 : 4건

1. 기술교육원이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할 시기인 듯 함. 현재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실생활에서 안정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 및 중장년이 생활·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는 면모를 보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원장들이 책임성을 한층 가지고, 제도적으로도 꼭 훈련생들이 취업가능하도록 애써주시기 바람
2. '23년 지도점검 당시 안전관리 강화 조치 받음. 동부기술교육원은 매년 2건씩 안전사고 발생함.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
3. 기업체 맞춤형 취업률 높일수 있도록 파악해서 개선책과 대책수립 마련
   - 교수전담제를 통한 취업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교육원 수료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함
4. 교육생 선발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기타(자료제출 등) ---------- 171건

▢ 기획조정실 : 25건

1.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중 인센티브 사업의 기 선정이력 및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
2.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8개 분과별 / 구별 선정 위원수 구분하여 명단 제출
3. 최근 3년 재정사업평가 이후 일몰된 사업 목록
4.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중 '로봇아카데미 운영 사업' 관련 계획서 및 사업평가서, 결과서 일체
5. 조직관리 관련, 감사위원회 내 부서별 인력 배치 현황(사회복지 포함)
6. 약자동행지수 관련 자체평가 외에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별도 평가 실시 여부
7.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통합 관련, 보수체계 통합(안) 마련하기 위해 '24년 7월~9월 노사임금교섭을 총 7회 개최했음. 회차별 일시, 참석자, 협의내용(또는 협의되지 않은 이견이 있는 내용) 정리하여 자료 제출
8.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보유 중인 관용차량 중 지정된 관용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 (기관명, 관용차 지정자, 차량 차종 등 목록)
9. 집행율 61.3% 보고 받았는데, 현재 기준일(11.4.) 집행율 60% 미만인 사업 목록
10. 시 전체 대상 낙찰 차액이 5% 이상 차이나는 사업 제출(최저가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포함)
11. 약자동행지수 6개 영역 중 주거 영역 관련 자료
12. 출자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의 액수와 실제 예산 편성 액수가 다른데, 사유 기재하여 제출

13. 시민참여예산 관련, ’20～’24년도(5개년) 최종 선정된 사업 대상 사업제안서 및 예산액(제안 시 예산액, 사업 결정 시 예산액,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4개년) 포함)
14.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공동연구반(1～5차) 회의 내용 및 관련 자료 일체
15. ‘일부추진’ 공약 사업 목록 및 분류 사유
16. ’23년 불용된 사업의 예산액, 불용예산, 불용사유 및 해당 사업의 2024년, 2025년 예산안
17. 약자동행지수 지표 하락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자료
18.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가 분석 및 진단한 보고서, 김포시 편입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 철도사업 전환에 따른 비용증가 등 유·불리 분석 자료, 공동연구반과 TF 추진계획
19.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관련 재정사업평가 자료
20. 4개 자치구(광진, 노원, 동대문, 강남구) 대상 기존 자치구에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행 결과, 2024년도 사업시행 결과 자료
21.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목록과 특허연한에 대한 현황 세부자료
22.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취업규칙 관련 고소고발 건 업데이트 및 사법처리 판결문 제출
23. 요구자료 7번 관련, 기제출한 9월 이후 노사임금교섭이 진행된 건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하여 제출
24. 재정사업평가 통해 (미흡 이하 받은 사업 대상) 일몰된 사업, 예산 삭감된 내역,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유지된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 등
25. 11월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수색·DMC역 안건 관련 자료 제출

▢ 경제실(서울시립과학관, 서울패션허브 포함) : 27건

1.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위탁보다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구
2. 철도지화하 관련 발표시 경제성분석이 중요한데 경의중앙선이 DMC역까지 지하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람.
3. (창업허브 공덕 관련) 창업허브공덕의 키친인큐베이터 사업이 폐업율을 낮추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함
4. 철도지화하 관련 발표시 경제성분석이 중요한데 경의중앙선이 DMC역까지 지하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람.
5.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시의회에 바라는 한 가지를 말해보고, 과학관 모든 임직원들이 '이것 하나는 무조건 이루어낸다'는 식의 목표설정이 있길 바람.
6. 서울패션허브 관련 시의회에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7.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별 임차현황
8. 최근 3년간 기술교육원별 취·창업 현황(취·창업인원, 취·창업률, 취업처, 고용유지율) 및 수료 후 타 기술교육원 입학 현황
9. 서울영화센터 운영 사무 대행 추진계획
10.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 상세 추진과정
11. 2024년 공공일자리 계획 및 성과
12. 서울창업허브 공덕 키친인큐베이터 추진배경, 사업현황 및 실적
13.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현황 및 성과
14. 인베스트서울 투자유치 자료
15. 최근 2년간 해외 영상물 서울로케이션 촬영지원 실적
16. 「2024 서울뷰티위크」 추진 성과
17. 서울AI허브에 공군이 와있는 이유(목적)
18. 홍릉바이오클러스터에서 IPO 추진하고 있는 기업 자료

19. 기업인간 간담회 등 소통활동 실적

20.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자문단 의견조사 결과 및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

21. 중부·남부 통합운영 성과 및 기술교육원 통합 후 예산절감 효과

22. 2024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현황

23. GTX-A 6공구 관련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공사 결과

24. 앵커시설 관련 평가자료(만족도 조사결과)

25. 창업뜰 재구조화 계획(시기, 규모)

26. 패션허브 수탁기관 변경 전후 비교자료(해외진출 성과등)

27. 지상철도 지하화

- 서대문구의 경의선 지상철도 지하화 구간을 5.8km에서 10km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방향을 틀고, 지상 구역은 공원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고자 함.

▢ 민생노동국(농업기술센터 포함) : 36건

1. (이동노동자 쉼터) 자치구 간이쉼터 운영의 원인행위액과 집행액이 10월말 기준 100%가 됐는데, 이후 11, 12월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2. 노동권익센터 예산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99.1%인데 11~12월 인건비나 기본 운영비 등은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시의회에서 예산 집행을 파악코자 하는 것은 그 사업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함인데 실집행액이 아닌 예산배정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개선방안은 없는지? 실집행 기준으로 보고 요망

3. 지난 24.10.31.(목) 오후 노동권익센터 방문 시 사무실 출입문에 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분신 조장 패륜 발언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알고 있는지?(자세한 내용 파악 후 추후 보고 요망)

4. 공정 경제 기본계획 내 세부 사업들은 추진 중인지? 각각의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5.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검사 후 언론보도 및 제품판매 중지 요청,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구제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 피해구제센터에서의 소비자구제를 위한 절차와 상담건수, 판매중지 요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

6.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본회의 자유발언 시 SH공사, 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 콜센터 직원 직고용 약속 관련하여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다산콜재단으로 전환해서 고용승계 했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 4년 전에 서울시가 약속한 일이므로 서울시의 책임이 있음.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야하며 완전경쟁 채용이든 채용과정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음. 투출기관도 동의 안하고 있으니 차선이라도 택하여 해결하자는 의미임. 기관별 특수한 상황은 인정함. 조례 개정 절차 해결하겠음. 늦어도 25년 1월부터는 다산콜재단 정직원으로 변경되면서 하던 업무는 더욱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7. 제출한 서대문구 남가좌동, 북가좌동 착한가격업소 현황 확인 필요

8. 자치구 간이쉼터 운영의 원인행위액과 집행액이 10월말 기준 100%가 됐는데, 이후 11, 12월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9. 홈페이지에 노동정책팀의 업무가 공개되어 있는데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총괄 담당이 있는데 맞는지?

10. 3개 투자·출연기관 직고용 문제의 가장 가까운 담당자는 누구인지?

11. 교통공사에서 콜센터 직원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했으나 관련 자료를 비공개 중인데 이것도 노동정책팀과 관련이 있는지?

12. 용역명, 금액, 수행업체 등 모두 공개되어있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교통공사에서 자료 받아주기 바람

13.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노동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몇 차까지 되어 있는지

-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도 없었는데 수립 중이 맞는지 현재까지 작성된 문서 제출해주기 바람

14. 대부업 5개 업체 점검 리스트

15. 지역특화 전통시장 지정 시장 리스트

16. 집행률 부진 사업 관련 계획서, 산출내역 등(방침서)

- 골목상권 특화지원
-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 비료가격 안정지원
- 토양개량제 지원

17. 전통시장·골목상권 사업 현황(공모사업, 지정사업 구분 / 선정과정 / 선정심의위원회 현황)

18. 소상공인 역량강화, 위기극복 관련 교육, 폐업지원 전략계획서

19.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기구) 위원 명단,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실적

20. 에스크로 도입 전략계획서, 회의 개최 현황

21.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서

22. 착한가격업소 서대문 남가좌/북가좌동 리스트

23. 대부업체 서대문 남가좌/북가좌동 리스트

24.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계획서 및 성과자료

25.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계획서 및 성과자료

26. 노란우산 공제 관련, 3년간 담보대출 현황, 가입자 중 폐업자 현황

27.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벤트 고객증가 현황, 연예인 초청 이벤트 현황, 전통시장 고객감소 원인 분석자료

28.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농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한 사항 자료(품목 확대 등)

29. '23년부터 현재까지 마포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서울시와 마포구, 마포구 시설관리 공단 간 공문 수발신 목록

30. 마포 농수산물시장 관련

- 운영계획서, 기본현황(매출액, 방문객 숫자 포함)
- 최근 3년간 운영실적(상인간담회, 시민 민원 접수 및 처리, 상인회 위반행위 단속 등 포함)
- 최근 10년간 마포구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마포농수산물 시장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
- 시설 개선 용역 관련 계획서, 방침서

31. 서울사랑상품권부정유통단속 결과(민원접수 내용 등)

32.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공사 토양오염 관련 공문내역

33. 청년밀키트 관련 '22년 이후에 실제로 출시된 제품 관련 자료(대형마트에 입점 연계 현황 등)

34. 2024년도 화재안전점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시장내역

35. 제3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36. 사회적경제센터 2014년부터 10년간 운영한 실적 내용 성과 기록의 자료

▢ 서울시립대학교 : 11건

1. 라이즈사업 관련 자료(계획 등)
2. 평생교육 교통공사 교육과정 계획(예산 포함)
3. 기숙사 증축 관련 자료
4. 취업역량, 연구경쟁력 강화 계획서, 연구성과 등 관련 자료
5. 로컬상권인재양성 프로그램 관련 자료
6. 평생교육과정 내년도 계획서, 성과서(이제까지의)
7. 3년간 국가지원금 세입 세부현황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지원 현황 포함)
8. AI 빅데이터 중소벤처기업과의 협약 공동연구 실적 관련 자료
9. 학생 창업 성공 실적 자료
10. 최근 5년 신임교원 모교출신 현황 자료
11. 핵심성과지표(KPI) 모니터링 현황 자료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식품유통㈜,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포함) : 12건

1. 든든급식 소단량 소포장 연구용역 종료 시 결과물 공유해 주시기 바람
2.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관련 정부 건의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자료 제출 요구
3. 강서시장 파렛트 관련 주요 민원 및 처리 현황, 대처 방안
4.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병행 운영 법적 근거, 농식품부 공문 등 근거자료
5.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3곳) 수박 거래물량 전년대비 변동사항 (22년~24년 10월)

6. 채소2동 공사 계약서(종이 제출), 시방서, 감리서 등 공사 관련 자료(usb 제출)

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내용(종이 제출)

8.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실적보고서 중 인사 관련 성희롱, 성폭력에 소명자료 제출본 및 인사조치 내역

9. 대아청과 품목해제 관련 연구용역 자료

10. 착한가격 시범사업 관련 소상공인 지원 실적

11. 환경조성본부 인력, 직군, 조직표

12. 농수산시장관리 인력 직군(인원 현황, 자격현황, 하는 업무)

▢ 서울연구원 : 20건

1. 연구 실적이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는데, 3개월 미만 1개월짜리 수시/현안 연구도 다수 수행하는데 이 건들을 어떻게 양평가 할 수 있는지 의아함. 연구의 질과 양평가 및 평가결과 이의신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2. 취임 이후 기관 통합 관련해서 구두로만 보고 받고 서면자료를 보고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확인 후 종합감사에서 보고 바람

3.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 재구조화가 필요함. 지상철도 지하화 등 사안에서, 가좌역까지 뿐만 아니라 DMC역까지 철도 지하화가 필요함. B/C분석 등 결과에 의하면 어려운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임.

4. 라이즈 지원센터 준비 관련 자료

5. 기관장 취임 전 후 업무보고 서면 자료

6 (관용차량 관련) 서울연구원 전체차량 운행일지(`23.1.1.~`24.10.30.)

7. 연구성과 활용도(정책반영 등) 계획 및 결과보고서

- 95% 활용/활용예정 구체적 내역

8. 시의회 의정활동 연구 6건 착수계획/결과보고

9. ESG 경영포럼 개최결과 정리 회의록

10.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1년간 생산한 사업성과 리스트

11. 서울연구원 세미나 포럼 개최 횟수/목록 리스트

12. 서울경제모니터링연구단 목적, 구성, 운영현황

13. 인구변화대응연구단 운영 세부자료

14. 수탁연구 내역, 활용내역, 활용부서

15. 기술연구원 3년 연구성과 시정 반영도

16. AI 빅데이터랩 구성원 최근 3년간 연구실적

17. 서울연구원 발간물 2종 제출 관련

- 2040 기본계획 요약본 자료
- 구정연구 성과보고서

18. 서울연구원 연구실적 관련 인사 고과 반영 내용

- 서울연구원 연구 양 평가 내용
- 서울연구원 연구 질 평가 내용
- 2025년 연구 실적 및 성과 반영 개선 방안
- 인사(승진 등)와 관련한 직원 민원 조정 내용 등

19. 국외출장 관련

- 관련 규정 위반 내역

(직원이 비즈니스석 이용 등 잘못 지급, 환수조치한 사례)

- 마일리지 적립 및 마일리지 사용 현황

20. 최근 5년간 초빙선임연구위원 채용현황

▢ 서울경제진흥원 : 29건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3층 공관을 뺀 나머지는 일반 시민에게 누구에게라도 오픈이 되는지. 옥상정원도 공개가 되는지. 추후 방문해보겠음.
2. CES 만족도 조사 결과, 낮은 부분이 있었음(서포터즈, 숙소환경)
3. 내부만족도 현황 및 낮은 이유
4. 업무 추진 시 및 계약 체결 시에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5. 제121회 이사회(임원 징계) 의결서
6. 투자유치 전체 금액, 기업 지원 세부내역
7. 서울시에서 다양한 기업을 지원하는데 청년사관학교 연계한 취업률
8.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 폐업률
9. 워케이션 사업 관련 자세한 자료
10. 서울시 펀드 조성 목적, 추진과정, 추진성과
11. DMC 활성화 관련 계획서, 7차 무산된 과정 자료
12. SETEC 컨벤션 마이스 산업 관련 계획서, 미래 방침 등
13. DDP 아트홀 1층 복합문화공간 명도소송 추진현황
14. 뿌리산업 지원현황 제출
    - 뿌리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추진계획, 지원내용, 방법
15. 뷰티패션 산업 지원대비 동대문 상권 활성화 저조, 이에 대한 대책, 문제점, 향후 계획
16. R&D 테스트베드 기업 선정 자료 일체
17. 서울혁신성장펀드 운영사 선정심사 자료 일체
18. 동대문 ddp 쇼룸 선정자료 일체
19. CES 운영사 선정자료 일체
20. DDP 관련 본사 1층 낙타 조형물 발주 내역

21. 서울기업 워케이션 홍보 세부내역 제출

22. 청년취업사관학교 취업 유지율 관련 자료

23. CES 참여 기업 지원내용, 선정 방식

24. 테스트베드 혁신사업 관련 기업 신청자격 제한 개선 등을 통한 매출 선순환 기여 방안

25. 오픈이노베이션 공간 이용료 부과내용

26. 낙타 재물등록 관련 자료

27. 해외 출장 관련 기록 (미국 LA)

28. 대표이사 미국 출장기록

29. 파트너스 하우스 업무분장 및 협약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 6건

1. 연도별 소각업체 현황(최근 3년)
   - 소각 업체수, 금액, 누계액, 업무처리기준
2.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최근 2년)
   - 계획서 및 성과서 일체
3.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연구보고서 전자파일 제출
   - 서울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계획 수립
4. 지역협의체 활동사례 주요 성과
5. 해외연수 출장결과보고서(2023년, 2024년)
6. 자체 검사 지적사항 관련 후속조치 등
   - 지적사항 발생에 따른 부실규모 현황
   - 감사 처분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 사항

▢ 서울기술교육원 : 5건

1. 기술교육원 인사운영 규정집 및 22~24년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름, 기간, 약력 등)
2. 최근 3년간 성과급 평가표 및 지급 결과
3. 24.10월~현재까지 직원 출결확인부 원본
4. 최근 3개월간(8~10월) 초과 근무 수당 지급내역 및 초과 근무 시간내역
5. 24년 안전진단 내역서

- 지붕안전시설공사, 식당후드공사 내역 및 계약서 사본 제출

〈 붙임 〉 주요 감사 사항 (기관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 시정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정책 총괄 · 조정 【 국회협력 분야 】 ○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 · 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정당 · 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 【 조직 분야 】 ○ 조직·정원관리 및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업무의 총괄조정 ○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 · 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약자동행 분야 】 ○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획 수립 · 총괄 조정 ○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 동행 지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 창의행정 분야 】 ○ 창의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창의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 창의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창의행정상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시 투자출연기관 연구 활동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학술용역심의회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 법무 분야 】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기획조정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법률지원 분야 】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법령 제·개정 관련 법률검토 등 지원 ○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 중요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률자문 및 시정관련 중요사항 법률지원 ○ 민간투자·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 【 예산 분야 】 ○ 세입·세출 예산편성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 ○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재정 분야 】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채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 민간보조금사업에 관한 사항 ○ 재정수요 통계지표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 예산절감,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 평가 분야 】 ○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조정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및 종합관리 ○ 국정시책합동평가 업무 수행 ○ 지시사항 평가·관리 ○ 위험관리의 총괄·조정·평가 등 종합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기업 분야 】 ○ 투자·출연기관 신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혁신경영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의 부채감축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상시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경제정책 분야 】 ○ 산업경제정책 총괄 · 조정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경제진흥원 지도 · 감독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비지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 · 조정 ○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 · 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 · 분석 ○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운영 · 관리 ○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기업 애로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감독 · 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지원센터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기업의 국내 · 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전략산업 선정 및 계획 수립 총괄 ○ 로봇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행 ○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일자리정책 분야 】** ○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총괄 · 조정 ○ 취업지원 및 직업안정 계획 수립 · 조정 ○ 민간취업 관련 구인기업 발굴 · 협력 ·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용촉진 훈련 등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업 훈련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직업 훈련 시설의 지도 · 감독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창업정책 분야 】** ○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창업교육 및 상담 ·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창업기업 투자금융 · 유통 · 마케팅 지원 등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관한 사항 ○ 민간창업 기관과 협력 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펀드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대학협력 분야 】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담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대학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 창업기업 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학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 분야 】 ○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에 관한 사항 ○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 마케팅에 관한 사항 ○ 글로벌기업 등 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부채납 계획수립 등 금융허브 조성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담 지원시설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창조산업 분야 】** ○ 서울 창조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 서울 확장현실(XR)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운영 ○ 게임 · e스포츠 산업 육성 및 e스포츠 경기장 조성 · 운영 ○ 1인미디어 허브 조성 및 산업 지원 ○ 웹툰 · 만화 ·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조성 ○ 웹툰 · 만화 · 애니메이션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창조산업 전문인력 양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 **【 뷰티패션산업 분야 】** ○ 뷰티산업 육성 ·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패션 · 봉제산업 육성 ·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귀금속 · 보석 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서울패션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뷰티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조정 ○ 서울도시제조허브 및 패션제조 기반시설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제조업 및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경제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첨단산업 분야 】** ○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홍릉 바이오 · 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 서울바이오허브 앵커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 바이오 · 의료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 · 의료, 인공지능) 등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서울 AI 허브 운영에 관한 사항 ○ AI 서울 테크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 분야 】** ○ 산업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 ·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 온수산업단지 재생 ·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마곡산업단지 관리 · 운영 총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뿌리산업 육성 ·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인쇄 · 기계금속 산업 지원시설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민생노동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소상공인정책 분야 】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매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노동정책 분야 】 ○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노동존중 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민생노동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상권활성화 분야 】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정경제 분야 】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 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 · 육성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 · 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 · 검정 · 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 · 수리 ·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 등록 ·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민생노동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육성 시책 수립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농수산유통 분야 】** ○ 농수산 유통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 · 안정 및 유통 지도 · 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 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미래비전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 · 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지보전 및 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인권센터 분야 】**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 신고사건 처리,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 ○ 장애학생 대학생활 지원 ○ 인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 교무 분야 】** ○ 교원·조교의 정원, 인사 및 복무관리 ○ 교수업적평가 ○ 교육기자재 수급 및 관리 ○ 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학사관리 ○ 학생현원 관리 ○ 교과 및 교직과정 관리 ○ 학적관리 ○ 수업·시험·성적 및 교구 관리 ○ 논문심사 관리 ○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제공 **【 입학관리 분야 】** ○ 대학·일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 신·편입생 선발 ○ 주요 입학전형 확정 ○ 입학전형 모형개발 ○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 **【 학생 분야 】** ○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상벌, 집회, 행사, 간행물 지도감독 ○ 학생취업지도 및 부업에 관한 사항 ○ 학생병무에 관한 사항 ○ 학생보건 및 학생 후생복지관리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학생의 해외연수 ○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 비교과교육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기획 분야 】** ○ 장 · 단기 대학발전계획 수립 ○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 대학주요업무계획 수립 ○ 대학혁신 관련 사업 총괄 ○ 대학평가, 혁신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 대학통계 및 정보공시 **【 대외협력 분야 】** ○ 대학홍보 종합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대외협력지원 ○ 재정지원사업 총괄 ○ 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강촌수련원 운영 **【 연구지원 분야 】** ○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교수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비 관리 총괄 및 자체감사 ○ 연구노트 관리 ○ 부설연구소 지원 및 관리 ○ 연구기자재 수급 등 그 밖의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분야 】** ○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지원 ○ 외국 학생 선발 및 입학전형관리 ○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 ○ 외국인 입시설명회 개최, 기획 및 홍보 ○ 외국 학생 및 교원 지원 관리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 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총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 보안, 비상계획, 문서 및 관인관수 ○ 청사관리 및 방호, 차량관리 ○ 직원인사, 직제 및 정원 조정 ○ 직원상훈,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직원의 의료보험·연금·상조회 및 제증명 발급 ○ 자체 감사계획 수립·시행 ○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재무 분야 】 ○ 일반 및 대학회계 집행 및 결산 ○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급여, 국민저축, 의료보험, 연금관리 ○ 행정재산 관리 ○ 물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 【 시설 분야 】 ○ 학교건물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 수목 및 환경관리 ○ 통신시설 관리 ○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 【 중앙도서관 사서 분야 】 ○ 도서구입의 선정 ○ 도서의 등록 ○ 도서 집계, 제본, 목록의 편찬 및 보관 ○ 도서의 열람, 대출, 장서 및 서고관리 【 전산정보원 분야 】 ○ 학내 정보화사업 총괄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 · 보급 및 유지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생활관 관련 분야 】** ○ 생활관 운영 및 관리 ○ 관생의 선발과 지도 ○ 관생납부금 책정 및 수납 ○ 생활관 예산 및 결산 ○ 시설물의 유지·관리 ○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원 분야 】** ○ 장·단기 운영계획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 교육홍보, 자료수집 ○ 학생의 모집 ○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 교구 및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 교육진행 제반사항 **【 창업지원단 분야 】** ○ 창업강좌 · 창업실습 운영관리 및 지원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창업경진대회 운영 및 지원 ○ 예비기술창업자 발굴 및 육성 ○ 일반인 대상 창업운영 관리 및 지원 ○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사 · 연구 ○ 기타 정부지원사업 기획 및 발굴 지원 등 **【 교육혁신원 분야 】** ○ 교육혁신 관련 전략 및 연구 개발 지원 ○ 교양 교과목 교육과정 관련 총괄 운영, 개편 및 학사행정 ○ 외국어 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 · 학습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개발 ○ 교육 및 교수학습 관련 소통 및 홍보 활동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 시립대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분야 】** ○ 학내 사회공헌사업 총괄 추진 ○ 국내 · 해외 사회공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사회공헌 소양 교육 개발 및 운영 ○ 사회공헌 단체 및 활동자 연계 **【 박물관 분야 】** ○ 고고학 · 미술사학 · 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발굴에 관한 사항 ○ 수집 및 발굴된 자료의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 등 **【 대학보건소 분야 】**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집단검진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등 **【 체육관 분야 】** ○ 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수칙 등의 제 · 개정 ○ 체육시설 및 장비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출판 분야 】** ○ 대학의 학술연구 문헌 및 간행물 출판 ○ 대학과 연구소 논문집 발간 등 **【 대학언론사 분야 】** ○ 대학신문사 운영 및 관리 ○ 대학방송국 운영 및 관리 ○ 영자신문사 운영 및 관리 **【 부설연구소 관련 분야 】** ○ 부설연구소(15개)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 도시과학연구원, 공학연구원, 도시과학빅데이터 · AI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소, 도시홍수연구소, 서울디자인연구소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농업교육 분야 】 ○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촌진흥시책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 ·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형 도시농업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농업인 및 도시농업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 현장 적용기술 및 효과분석 연구 ○ 시민 및 학생들의 농업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장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전문가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생활농업교육, 학교원예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치유농업 육성 및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기술보급 분야 】 ○ 새기술 ·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 훈련에 관한 사항 ○ 농업지도자 · 후계농업경영인 · 생활개선회 · 4-H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귀농 · 귀촌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에 관한 사항 ○ 곤충산업활성화 및 관련 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 전통음식교육 및 농업 · 농촌 전통문화 계승, 소비자 농업에 관한 사항 ○ 서울시 반려식물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업인 기술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총무 분야 】** ○ 과학관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조직 · 인사 · 예산 · 회계 · 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 과학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 마케팅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지원 ○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전시 분야 】** ○ 과학기술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 전시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전시품운영 심의회 등 운영 ○ 전시품 DB 구축 및 전산화 ○ 고객만족도 및 고객서비스 향상 관련 사업 추진 ○ 매표 및 안내데스크 관리 **【 교육지원 분야 】** ○ 과학교육 교재, 기자재 확보 및 운영 ○ 교육 ·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도슨트 교육 및 운영 · 관리 ○ 과학관 견학 및 자원봉사자 등 관리 ○ 교육청,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추진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분야】**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예산, 회계, 복무, 보안, 재산관리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상설전시 · 기획전시 기획 및 운영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홍보, 교육 프로그램 · 문화행사 운영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시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 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 시장정산(주)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공정 ·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유통업무종사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 ○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안전 · 품질 관리 ○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 사업 ○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관리 및 컨설팅 ○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사업, 이외 부대사업 ○ 공사 자회사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공사 출자회사인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연구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 · 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 · 기술개발 · 연구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 · 기술개발 · 연구 ○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 · 기술개발 · 연구 ○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 · 평가 · 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 · 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 ○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경제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 산업 · 금융 · 경영 · 무역 · 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인력 · 자금 · 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 · 외 판로 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 · 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 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 · 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 · 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신용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직원, 시설, 지점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여사업, 사회적경제, 미래성장산업, 서민금융 등 특별보증 포함 ○ 소기업 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 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도 ○ 구상권 관리와 행사에 관한 사항 ○ 정책자금 융자대상업체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수탁대행사업(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 그 밖에 재단의 업무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패션허브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서울패션허브(창작뜰, 배움뜰, 창업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첨단장비 운용·교육 및 생산·지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혁신인재 육성 및 예비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입주기업의 발굴과 성장,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중·남부 기술교육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직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집행실태 및 지원기준과 관련한 사항 ○ 기술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이용자, 기술교육 이수자 만족도 ○ 기술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 이용자,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 훈련 학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 · 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실태 ○ 장애인 대상 이용현황, 기술교육 및 취업실태 ○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4. 환경수자원위원회

□ 총 괄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29	141	107	81
기후환경본부		79	32	28	19
정원도시국	소 계	89	43	30	16
	정원도시국	65	29	22	14
	서울대공원	24	14	8	2
서울아리수본부		71	24	24	23
미래한강본부		57	27	11	19
서울에너지공사		33	15	14	4

시정·처리요구 사항 ---------- 141건

기후환경본부 - 32건

1.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가독성 제고, 정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2.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료 작성 및 검수 과정을 철저히 하여 종이 낭비를 줄일 것.

3. 전기차 보급, 원전하나 줄이기, 태양의 도시, 미세먼지 없는 서울 등 주요 사업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지 못한바, 향후 계획 수립시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설정할 것.

4. MZ세대의 에코마일리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은 앱 개발이 필요하며, '내손안의 서울' 앱에 추가 연계 등을 검토할 것.

5.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와 통합 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6.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에게 보조금 및 지원 내용에 대한 홍보 확대할 것.

7. 전기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할 것.

8. 차량 보급보다 충전시설 구축이 우선이므로,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가 원하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와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할 것.

9. 수소버스 충전소(현행 1개소) 부족으로 수소버스 보급이 저조하므로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구축 계획과 병행한 버스 보급 계획을 수립할 것.

10.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사업이 통신료 납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종이 사용 절감에 관한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

11.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분소 포함) 민간위탁의 적정성, 조직, 사업 내용 등 검토 필요.

12. 주민지원센터(분소 포함) 운영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

13.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자치구별 발생량 증감 원인분석, 인구수를 고려한 반입 할당량 등을 검토할 것.

14.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니 의정부시의 소통 과정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5. 신규 및 기존 자원회수시설 건립 방향인 주요시설 지하화에 따른 근로자 근무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16.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1회용 플라스틱 감축대책, 직매립 금지 대책, 반입량 관리제 등 市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할 것.

17. 에코존 시범사업 관련,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1회용 컵 회수함 설치 확대를 고려할 것.

18. 폐기물 감량정책 관련 소각시설 자치구별 쓰레기 반입량을 심도있게 분석할 것.

19. ’26년 직매립 금지 대비하여 적극적인 감량 정책 또는 소각장 증설 등 대안을 마련할 것.

20. 노원자원회수시설 내 분진처리시설 설치 등 노동자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

21. 자원회수시설 근로자·인근 주민들의 다이옥신 노출에 대해 각별히 관리할 것.

22. 장기간 보관 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평가·매각·제공을 빠르게 판단·활용될 수 있도록 조기에 대책을 세울 것.

23. 가로쓰레기통의 무분별한 설치가 우려됨에 따라 계획적으로 설치할 것.

24. 제대로 된 녹색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펀드에 대해 관리·감독·평가를 철저히 할 것.

25. 다회용컵 세척기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와 계약 만료 이후(’25.1.1.) 이후 물품 관리 체계 및 소유권 관련 약정 미비 등 사업의 변질 우려가 있어, 재검토할 것

26. 1회용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새로운 다회용기 플라스틱 용기 양산은 지양하고 다회용컵 이용 시민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27. 다회용기 제작 및 유통과정의 수량을 관리하고, 배달 매장에서 다회용기 관리를 할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8. 녹색기업창업펀드 업체 선정부터 운영 등 전체적으로 개선할 것.

29. 실질적으로 기후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고 자치구에 확산될 수 있게 할 것.

30. 리튬배터리 잦은 화재 발생에 따른 수거함 관리부터 최종 재활용까지 엄격하게 관리할 것.

31. 스마트서울맵 내 폐배터리·폐의약품 수거함 정보제공 미흡 및 관리부실 등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2. SR센터 현대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정원도시국 등 - 43건

〔정원도시국〕 - 29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2025년 실효가 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등의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임.

2. 공원유지관리 측면에서 방문 시민과 직원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시설 등을 점검하여 정비해야 할 것.
3. 반려견 놀이터를 24시간 상시 개방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 안전사고 등 우려 있으므로 대비할 것.

4. 반려견놀이터에 대해 토양 정비 및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

5. 시설녹지 보상 시 감정평가 이후 당해연도에 보상 집행하여 재감정평가 비용 등 예산낭비 없도록 노력할 것.

6. 서남권이 타 권역에 비해 공원율과 녹피율이 낮아 서남권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위해 사업대상지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7.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의 지난 3년간 참석인원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므로 홍보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라며, 관심있는 전문분야 및 지역주민 등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 개최장소를 앞으로는 서울식물원 공간을 활용하기 바라며, 공동주최 시 기관간 역할분담, 예산 등에 대해 방침이나 협약 체결을 통해 명확히 할 것.

9. 중부공원여가센터의 관용차량 유류비 지출이 과다해 보이므로 유류비 지출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

10. 중부공원여가센터의 경우 차량운행일지에 유류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데 차량 운행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1. 이촌 녹지 보상 1구역이 점용료도 내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2. 임야나 공원 내 맨발(건강)길에서 세족시설 를 위한 공간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13. 서울둘레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방문객이 쉴 수 있는 서울둘레길 2.0 정책을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4.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의 '23년 예산 집행률이 낮고 사고이월 금액이 매우 큼.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15. 도시자연공원구역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사례, 화해 권고에도 서울시는 불수용해 소를 진행해 패소, 과도한 공권력 남용, 행정력 낭비이므로 동일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16. 2023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 건 중 분할 부동의로 인해 매도 철회한 건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동의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매도 철회는 최소화 하도록 개선할 것.

17. 2023년 협의매수 부족예산을 2024년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것.

18. 지난해 관악산 사건 이후 작년 특별교부금과 올해 시비를 편성하여 CCTV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황을 살펴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된 CCTV가 일부 있으므로 이러한 CCTV를 우선하여 지능형 CCTV로 교체할 것.

19. 기관별 치유의 숲길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운영일수 등 기관별 추진실적 편차가 크니 개선 방안 마련할 것.

20. 예산을 들여 조성했음에도 미운영 중인 치유의숲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21.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전시금지 유예기간 이후 보유동물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

22.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23. 서울둘레길 누리집 개편 결과를 보면, 서울테마산책길 기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24. 유기동물응급치료센터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응급 치료가 아닌 경미한 치료에 집중된 지원, 사업 관련 민원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운영방식 개선할 것.

25. 정원산업박람회와 맞지 않은 과업내용 및 폐막을 앞두고 조정 완료된 작가정원 등 운영개선 요구.

26. 정원박람회, 정원산업박람회 조성 정원의 관리체계 이원화 개선 요구.

27. 중랑 청소년체험의숲 시설개선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업체의 시설 미운영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선할 것.

28. 남산 하늘숲길 조성 시 환경파괴, 수목훼손 등 우려되므로 샛길 정비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것.

29. 기본계획 실시 후, 사업 분리를 통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바, 향후 사업추진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 주기 바람.

〔서울대공원〕 - 14건

1. 캠핑장 카드결제 전면 시행한다 했는데, 실제 결제과정에서 현금, 계좌이체를 요구함. 철저히 관리하길 바람.

2. 편법적으로 캠핑장 이용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남. 캠핑장 이용요금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편법적 요금 인상을 시정하기 바람.

3. 캠핑장 주차장에 직원 및 업무용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92대이며, 실제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57면으로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함.

4. 플레이월드 이용 가격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고지되어 있지 않음. 현 상황에 맞게 지속적인 업데이트 바람.

5. 플레이월드 운영계획 변경,승인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6번을 제출했고, 두 달 간격으로 바뀌기도 함.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6. 플레이월드와 같이 최고가 입찰로만 업체를 선정하니 문제가 많음. 운영업체가 선정된 후 업체가 내부 시설공사를 할 때 서울대공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람.
7. 캠핑장주차장 입찰이 공개경쟁입찰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변경되면서 입찰가 하락, 계약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특혜의혹이 제기됨. 사용수익허가시 동일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관리 철저 진행할 것

8. 캠핑장주차장 지분은 서울시가 78%, 현대미술관이 22%인데 총149면 중 현대미술관에서 정기주차로 92대를 주차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해결바람.

9. 시베리아 호랑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것을 보면 시민들의 관심이 높으며, 최근 호랑이 폐사율이 AZA인증을 같이 받는 에버랜드 보다 높음. 전문적인 호랑이 관리인력 및 시스템 마련하길 바람

10. 시민들의 동물원 동물 이상행동에 관한 제보가 계혹됨. 동물들 이상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11. 곤돌라 사업자 선정 시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도한 요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선정 바람.

12. 서울계약마당에 등록된 내용과 수의계약 현황이 불일치함. 수의계약을 포함한 서울대공원 발주사업에 대하여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발주계획을 철저히 공개할 것.

13. 제설대책 관련 예산을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예산에서 지속해서 변경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정식으로 신규 편성하여 사용하기 바람.

14. 제출자료에서 예산 집행 내역과 수치 오류 등이 다수 발견되는 바, 향후 항목별 수치 재검증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서울아리수본부 – 24건

1. 아리수트럭 대시민 홍보효과가 뛰어남에도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 아리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것 .

2.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경보오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3.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특정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관세척 예산이 내년도에는 대폭 삭감되어 깨끗한 수돗물 공급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5. 정수센터내로 슬러지 처리 용역의 비용 단가 차이가 연례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통합 발주 등 조치가 필요할 것 .

6.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시 미사용된 상품권에 대한 유효기간과 재고파악을 실시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

7. 최근 상수도공사나 맨홀 주변에서 땅꺼짐 발생으로 자동차 바퀴 낌 사고 등 주변지역 피해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8. 학교음수대의 학생들의 이용이 매우 저조, 음수대 설치 확대에 대한 재고 필요와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 대상 및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9.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 실적이 저조한데 교체원 충원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10. 동파안전계량기의 성능저하 문제 등 과거에 새로운 계량기 도입 후 폐기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에는 충분한 성능 검증을 철저히 할 것.

11. 친환경 병물아리수 도입에 따른 공병 단가 상승 등 비용부담 개선안을 마련이 필요할 것.

12.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수 지원 사용 자제 권고 요청과 동시에 여름철 폭염시 아리수 사용을 권고할 것.

13. '23~'24년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관리자 교육 미이수, 위생점검표 미보관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어 저수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14. 과태료 부과사유 중 계량기 무단이설 및 철거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15. 분말활성탄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실제 사용시 분말활성탄 성능저하로 투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개선책을 마련할 것.

16. 분말활성탄 재고가 몇 년째 묵혀 있고, 흡착성능이 계속 감소해 가고 있는데, 재고량에 대한 처리 계획이 필요할 것.

17. 본부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 사항이 다수 누락되어 있어 개선안(조례 개정 검토 등)을 마련할 것.

18. 본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저조에 따른 원인 검토와 비중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올해 새롭게 조성한 아트음수대 '아리수림'의 벌써부터 유지관리가 매우 부실해 실제 이용 시민이 전무한 상황임에 따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20. 2024년 원격검침 단말기 고장 오류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 규명 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21.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의 하반기 집중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 행정사무감사시 관사 장기거주자 및 주택 보유자의 관사 입주에 대한 매년 지적에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 필요할 것.

23. 사업소 직원 근무지 이탈 등 시민제보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복무 점검을 철저히 할 것.

24. 본부 안전조사과의 감사업무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

미래한강본부 - 27건

1. 사용허가 관련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허가 기간 갱신 등)할 것인지 관리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관련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한강버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크루즈 투자금 관련 의혹이 많으므로 부당한 수익확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

3.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이 22년보다 사고 건수가 늘었음. 포장 이설, 시설물 튀어나온 부분 등 이용자 편의성을 세심히 살펴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

4.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는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자전거 수요에 맞춰, 현재 2개소인 자전거 교육장도 추가로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할 것.

5. 전동킥보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관련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6. 생태계 교란 식물이 11개 한강공원보다 생태경관보존지역 내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 특히 고덕·암사 지역 외래종 비율 급격히 확산 중임. 총력을 가해 현장에서 신속히 제거할 것.

7. 매점 인근 편의점과 가격 조사 시, 동일 제품이 20~30% 비싸게 팔리고 있음. 사용허가 시 최고가 입찰로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됨. 입찰방식 개선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8.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자 선정 시 공고 과정부터 이후 운영 갱신 절차 등이

너무 서둘러 진행된 것이 문제라고 보이므로, 낙찰자 취소 등에 대비하여 선정 절차를 2개월 정도 일찍 추진하도록 할 것.

9. 한강버스의 경우, 선착장 조성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접근성 개선 내용까지 포함해 일정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한강버스 추진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0. 정기권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차 장기 주차 문제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해 과태료만 부과해서는 안 되고 압류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울 것.

11.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공정상 크게 문제 되는 점은 없어 보이나, 접근성 및 안전 문제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또한 시범 운항 계획 역시 철저히 점검할 것.

12. 한강 아라호 매각이 제때 되지 않아 방치되다가 이번 감정가액이 35억원까지 내려간 것처럼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되면 안 될 것임. 또한, 매년 선착장 수리에만 1억 원 이상 드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13. 복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수상레포츠센터 전체 정상 운영이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할 것.

14. 점용료 체납(큐브인사이트) 해소 여부와 새로운 운영업자 현황 등을 확인한 만큼 서울 마리나 정상화 조치를 조속히 할 것.

15.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 단속 중이지만, 여전히 불법 영업 성행. 배출되는 쓰레기 및 오폐수, 식품 위생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합법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자치구 불법 노점 우수 관리 사례 참조)

16. 한강에서 음식물 조리가 하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수상푸드존 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이므로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판매시설로서 불법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검토할 것.

17. 현재 수상 노후 구조물도 많고, 향후 신규 수상 구조물이 더 많아질 텐데 점용 허가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본부의 종합적인 안전 점검 매뉴얼이 필요할 것.

18. 현재 수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만, 일반적인 안전 보호구, 소화기 등에 대한 점검에 그치고 있음. 구조물 안전에 대한 점검도 포함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19. 선박안전법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시설이 많으므로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검토하여 실시할 것.

20. 한강공원에서 장기 불법 주차 등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1. 최초 계획 대비 한강 헬스장 개소가 줄었음에도 인건비, 운동기구 구매비 등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할 것.

22. 서울세계불꽃축제 등으로 인해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화두이므로 처리에 신경 쓸 것. 또한 음식물 쓰레기 등 제출 자료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처리 방식 등에 따라 개선할 것.

23. 한강버스 예비선박 용도를 고려한다면, 리스크 분담을 위해 1~2대 정도는 디젤로 해야 했을 것임. 앞으로 20년간 배터리 관련 비용까지 포함해 서울시 부담 비용을 계산하여 제출할 것.

24. 여의도 선착장 협약서에 선박 선령 기준이 2008년 1월 이후 진수한 선박이라면 가능하게 나와 선령이 17년 지난 배도 다닐 수 있음. 한강버스만 친환경 선박으로 할 게 아니라, 여의도 선착장도 안전을 위해 최소한 선령이라도 다시 해당 업체와 논의할 것.

25. 여의도 선착장 착공 후 협약서에 제시한 기간을 훨씬 지나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했다는데, 이는 절차상 문제로 보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6.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허가 시 금액이 큰 경우, 영세업자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

27. 한강은 하상계수 차가 크고 홍수 문제가 있음. 앞으로 수상에 지을 아트피어, 수상푸드존, 수상 호텔 등 수상 구조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서울에너지공사 - 15건

1.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실천 과제 외 公社 사업 성격에 맞는 ESG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ESG 경영 계획을 수립할 것.

2.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원문공개율이 20% 이하 수준인 바, 원문 공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3. 전기차 충전기 고장 보수 기간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전기차 충전기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른 보수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재기간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적정 수준의 제재 기간을 부과할 것.

5. 公社 계약금액과 구상에너지 하도급 계약금액의 차이 금액에 대한 처리방안을 보고할 것.

6. 서남 2단계 사업은 지연될수록 지역주민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임을 고려해 조속히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7. 미완료 감사 지적사항은 노사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외부강의 관련 감사 지적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바, 외부강의 관련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9. 수의계약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되는 바 수의계약 등 계약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것.

10. 취약구간인 결합부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진행할 것

11. '22년~'26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 및 투자계획은 출자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등 시정할 것.

12. 서남 2단계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서울연구원에 대응할 것.

13. 公社 열공급 설비 안정화를 위해 노후밸브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14. 유휴상태인 신정플랜트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15. 사회공헌사업은 公社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할 것.

건 의 사 항 ---------- 107건

기후환경본부 -28건

1.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사업 관련 간담회를 추진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람.

2. 1회용 플라스틱 종합대책 중 재활용정거장,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플라스틱존 설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등 사업에 대한 지적 사항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가로쓰레기통 설치와 병행하여 인식개선이 중요한바, 시민의식 모니터링이 필요함.

4. 가로쓰레기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설치 대수보다 청결 유지가 중요하므로 환경공무관 인력 및 예산 확충 등을 검토하기 바람.

5. 가로쓰레기통 해외사례 중 서울시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를 검토하기 바람.

6. 전기차 화재 대책 중 충전율 제한 시행은 정부 대책과 맞지 않은 바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7. 전기차 화재에 관한 여러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8.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9.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결과를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10. 가로쓰레기통을 확대 설치 추진 중으로 보급보다 관리가 중요하므로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기 바람.

11. 무단투기 단속 없이도 청결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12.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재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변경 시, 시의회 보고할 것.

13. 열부족 예상 시기의 차이 등에 관해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에너지공사, 각계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4. 열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15.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장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사업을 직접 추진해야 서남권 열부족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인바. 서울시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16.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상 사업장폐기물인 민간처리업체의 음폐수를 서울시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반입료 책정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바람.

17. 자원회수시설별 성상 감시 활동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게 바람.

18.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시설로 건설할 수 있게 자치구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시설 확대를 위해 시비 보조금 지원 비율 등을 변경 하기 바람.

19. 생활폐기물 처리 원가보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매우 낮아 폐기물을 많이 배출할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구조인바, 종량제봉투 가격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비용 등을 반영하는 등 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20. '25년부터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공공기관에 ESS 의무설치 실효성이 없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2. '서울가족프라자' 지하2층에 설치된 ESS 인근에 위치한 시설로 인해 화재 심각성 문제가 있어 확인하기 바람.

23. 폐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정부와 협조하여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24. 다회용컵 세척기가 지원된 매장들의 제로웨이스트 실천 의지가 부족해 적극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하기 바람.

25. 전자제품 재사용 촉진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수리 및 공유 관련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기 바람.

26.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사업에 대해 전문가 집단들과 논의하여 조속하게 마무리할 것.

27.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8. 서울시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을 높이기 바람.

정원도시국 등 - 30건

〔정원도시국〕 - 22건

1. 공원, 녹지 확대를 통해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권장수종 및 유형별 숲 조성방안을 서울시 현황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시민정원사를 양성한 이후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람.

3. 가로수 가지치기 중 사각전지의 경우 미관상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민 반응들을 살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 바람.

4. 가로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트리맵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가져 주기 바람.

5.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정원의 사회적 효용성과 가치를 알렸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시민참여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원문화 확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산불 관련 안전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을 예산편성 목적 달성 이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예산 행정상 적절치 않고, 더욱이 안전 예산을 행사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매력가든 조성에서 '사계절 꽃길 자치구 특화정원'의 조성면적과 예산의 차이가 심하므로 조성단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8. 매력가든 중 '시그니처가든'은 같은 위치에 여러 개로 나누어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연간 300개 조성목표를 위해 개수늘리기로 보이므로 주의하기 바람.

9.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도 좋지만 주택가 인근 지역형 어린이공원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적인 어린이놀이공간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임.

10. 성줄어린이공원은 현재 어린이 놀이환경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으므로 관리주체 등 파악하여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북서울꿈의숲 주차장 정기권 과다발행을 지적하여 정기권 발행비율을 50% 이하로 일괄 제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서울꿈의숲의 경우 2024년 사용수익허가 시 정기권 발행비율을 야간 70% 이하로 미준수하였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12.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운영시 안전관리계획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수준 높고 친절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13.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해식물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14. 서울시가 정원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록정원이 단 한 개소도 없음. 다양한 정원형태가 있음. 등록정원 추진해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15. 뚝섬한강공원을 지방정원 추진하고 있으나 녹지율 40% 기준 및 하절기 침수우려 있으므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16.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수 추진 관련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서울시의 보상의지 의문, 방침서상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보상비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함.

17.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민원 대응 획일적, 정원도시국 민원 대부분이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원보상 내용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18.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조례가 제정됨. 서울시에서는 수질관리 방법으로 대부분 염소소독 하고 있으나 염소 직접투입하는 사례 많음. 직접투입하는 경우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하며, 염소자동주입기도 저렴하므로 적극 검토 바라며, 반려동물 이용 제한도 적극 홍보하기 바람.

19. 맨발산책로 이용 시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임.

20. 공원 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21.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시 행사 위주가 아닌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서울형 정원이 있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22. 북서울꿈의숲 주차장 대형버스 정기주차에 대해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서울대공원〕 - 8건

1. 플레이월드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음,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서울대공원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빈도 분석 등 일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대공원 이용객 증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 불만족 사유' 등을 추가하고, 캐나다 등 해외 동물원 만족도 조사를 참고하여 새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3. 캠팡장 주차장 사업자의 경우, 지명경쟁으로 추진하였는데, 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 공정하게 추진하기 바람.

4. 플레이월드 내 티니핑 캐릭터 공간이 전시로 계획했으나 단순 판매용 부스로 운영되고 있음.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 바람.

5. 플레이월드 내 입장객 추락사고의 경우 운영사 직원들의 대처 미흡으로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으니 사용허가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영사에서 일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에서 관리하여 주기 바람.

6. 침팬지 광복, 관순의 해외반출 사례와 같이 동물 반입·반출을 할 때 동물단체, 외부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7. 서울대공원에서 매년 다수의 멸종위기 동물들이 노환이 아닌 외상, 질병 등으로 폐사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8. 플레이월드 운영사와 곤돌라 최초 제안자 삼층버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두 업체 간 임원이 친족관계로 의심됨. 곤돌라 운영업체 선정 시 능력없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을 잘하여 주기 바람.

서울아리수본부 - 24건

1. 아리수본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아리수본부내 대형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아리수 홍보 강화를 위해 미디어(PPL 광고) 활용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4. 획일적인 아리수음수대 디자인을 개선하여 텀블러 이용이 쉽고 음수대 위생관리가 용이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5. 수도관계자 초청연수 사업 추진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 바람.

6. 중대재해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지적된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에 주의하기 바람.

7. 온라인 이사정산 분리고지 시스템의 이용률이 낮으므로 이용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기를 바람.

8. 여의도 아리수 혁신지구 시범사업이 중단 이후 후속 조치나 사업 확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9. 상수도관 누수사고가 스테인리스관 이음새 고무링의 마모에 의해 많이 발생하므로 유지관리 철저히 하기 바람.

10. 초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전오존 구축시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은 국내기술 도입 등을 검토하기 바람.

11. 수도계량기에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부착시 환경유해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시험 연구를 진행하기 바람.

12. 폭염기간 무더위 쉼터에 아리수를 지원했는데, 각 구청별로 형평성에 맞게 공급해 주기 바람.

13. 최근 수돗물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사례가 나타고 있어, 물연구원과 본부 등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대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4. 정수센터내 염소소독설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소독 방식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15. 스마트정수센터 사업 등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추진시 신중한 검토 이후 도입하기 바람.

16. 정수처리시설내 오존 배출설비의 사고예방과 인근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17. 아리수트럭의 대시민 아리수 홍보 효과가 매우 좋은데, 1대로는 부족해 보임. 확대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18. 관세척이나 상수도관 정비 사업 도중 누수사고로 인해 인근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19. 유수율의 지역별 편차의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원인 중 하나인 대형 누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기 바람.

20.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된 입상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혼합 활성탄, 재생방식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국내 활성탄 생산 업체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우선 구매를 검토하기 바람.

22. 사업소별 업무보고 자료를 통일성 있게 작성하기 바람.

23. 노후밸브 정비사업 실적과 예산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해 주길 바람.

24. 검침불편 등 검침 위험수전에 대한 원격검침 교체를 적기에 단행하여 검침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기 바람.

미래한강본부 - 11건

1. 한강공원 내 시설 운영 방식이 사용허가 방식, 민간위탁 방식, 민간 자체 운영방식 등으로 다양한데, 각각 해당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사유 등을 분명히 하여 관련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2. 지적한 중증장애인특별법에 의거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문제, 재공고 없이 이후 기존 운영 업체의 1년간 연장 갱신 사유 문제 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람.

3. 한강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발생률이 높은 특정 장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길 바람. 상담 전화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또는 경보 장치 등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고 민간 전문가 등과 협조하길 바람.

4. 한강버스 등 수상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난 대비 훈련 시 의용소방대 등 지역 전문가와의 협조 바람.

5. 강서 파크골프장 설치 바람.

6. 강서 자전거(BMX 등)경기장 설치 바람.

7.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한강공원에의 접근성 개선 측면에 지속해서 신경 써 주기 바람.

8. 한강버스 동작선착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는데, 용역 당시 검토하지 않은 흑석동 일대를 포함해 출발지를 여러 군데 더 정하면 운항 시간 및 배터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새로운 선착장 조성을 추진하기 바람.

9. 한강 수상 구조물 관리 및 운영체계가 제각각이므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기준 마련하길 바람.

10. 최초 제시한 속도를 맞추지 못한 한강버스 전기 추진체 등 잘못된 설계에 대한 패널티 요구하길 바람.

11. 공동출자자인 이크루즈의 대여금 미이행에 대해 해당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MOU를 체결한 사업 주체인 미래한강본부가 강력 대응하기 바람.

서울에너지공사 - 14건

1. 광섬유 신기술을 비롯한 열수송관 누수감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GS파워 공급량이 연간 계약물량에 미달할 경우 지급하는 패널티를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서남 2단계 건설사업 지연으로 마곡지역 열부족이 예상되는 바 열공급 중단에 대한 보상기준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바람.

4. 도로 점용 열수송관 공사 시 교통 등에 불편이 없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5. 내년 상반기에는 서남 2단계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市-公社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6. 안전점검결과 등 자료작성 시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기 바람.

7. 가정용 태양광에 대한 공사의 사후관리가 `26년부로 종료되고 개인에게 이관되므로 차후 자체 관리가 되지 않아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최근 서남권역에 잇따라 발생한 열수송관 누수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겨울철 열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기 바람.

9. 광운대 역세권을 경유하는 열수송관 설치 경로는 향후 유지·보수비용을 고려해 광운대 역세권 측과 경로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 바람.

10. 안전진단 등급 A, B 구간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정밀한 안전진단에 대한 대책 마련하기 바람.

11. 목동에서 마곡까지 송열량이 열수송관의 적정유량을 넘는 수준으로 열수송관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바 겨울철 열공급 시 관련 점검 등을 철저히 진행하기 바람.

12. 市 대행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 대수 및 유지보수 건수 증가 등 늘어나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행사업 계약을 추진하기 바람.

13.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市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公社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4.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기타(자료제출 등) ---------- 81건

기후환경본부 – 19건

1. 광역환경교육센터의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원 현황(방안)

2. 서울시 관내 환경교육사 현황

3. 에코마일리지 개선관련 MZ세대 설문조사 자료요청(설문방식, 설문지 내용 등)

4. 배달업체 협업 MOU 내용, 다회용기 배달 건수

5. 가로쓰레기통 설치 2차 자치구 지원분 실집행률 현황

6. 25개 자치구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센터 현황

7. 무단투기 단속 관련 수용·불수용 사례, 시간 외 배출 단속 건수 없는 자치구 사유

8. 서울시 석면 제거 관련 수요

9. 조리흄 지원사업 처리실적 결과

10. 사업장폐기물(300kg/일 이상) 신고 사업장 실태

11. ESS 미설치된 곳 중 자체 예산으로 설치 예정 현황

12. 제로캠퍼스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13. 녹색기업창업펀드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업 현황
(창업부터 폐업까지)

14. 다회용기 연대별 회수율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제작 개수 및 회수 개수)

15. 다회용기 지원사업 환경부 사업지침서

16. 행정안전부 서울에너지공사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결과 제출 서류

17. SR센터 현대화 사업 부서간 협의지연 관련
    - 구체적 사유, 책임소재, 분기별 세부추진 계획

18. 강북구 오현 적환장 현황(현대화사업, 시설내역 등 포함)

19. 폐의약품 수거 우편 비용 부담 관련 자료

정원도시국 등 - 16건

〔정원도시국〕 - 14건

1. 이촌녹지 보상예산 요구내역

2. 용산가족공원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현황

3. 서남권 공원녹지 네트워크 사업 우선대상지 최종 선정과정에서 별도 계획으로 대상지 제외된 사유(3개소)

4.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행정2부시장 방침

5. 맨발산책로 이용 시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임

6. 공원 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마련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7.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존치 정원 관리주체 및 계약현황

8. 서울 광장숲 관련 2차 용역 과업내용서, 상반기 업체 선정과정 및 용역비, 업체실적

9. 서울 광장숲 관련 소나무생육환경 개선공사 관련 내용

10.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및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정원산업전 세부프로그램

11. 2022~2023 서울정원박람회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내역

12.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및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정원산업전 예산 현황 및 세부프로그램, 참여업체

13. 최근 2년간 동물보호 관련 사업 추진실적
    -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사업('23~'24)
    -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중성화사업('23~'24)
    -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23~'24)
    - 정비구역 등 유기견 예방활동 추진사업('23~'24)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진료내역('24)

14. 중랑청소년체험의숲 코로나 기간 사용료 감면 관련 자료

〔서울대공원〕 - 2건

1. 캠핑장 사용료 납부현황 자료

2. 서울대공원 대형주차장 월별 운영 실적(2023년~2024년 현재)

서울아리수본부 – 23건

1. 2024년 수질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용 산출 근거 및 최근 5년간 입찰 참가 업체 현황

2. 2025년 수도관계자 초청연수 사업계획서

3. 최근 3년간 관세척 실적 및 향후 3년간 계획

4. 상수도요금 체납 합동징수 활동 결과

5. 아리수 음수대 향후 설치계획 및 집행계획

6. 누수신고 포상금 관련 (미사용 상품권 사용 현황)

7. 서울시 오존접촉방법 관련해서 해외공법을 쓰려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한 구체적 자료

8. 친환경(폴리케톤) 수도계량기, 동파안전 계량기 도입시 사전 성능검사, 절차

9. 친환경(폴리케톤) 수도계량기 도입배경, 구매 및 설치현황

10. 동파안전계량기 도입배경, 구매 및 설치현황

11. 올해 동파대책 주요 추진사항

12. 만기 계량기 교체지연에 대한 대책

13. 생수, 정수 비교분석표. 생수회사별 자료. 회사별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14. 병물아리수 플라스틱, TOP물병에 쓰는 알루미늄 재활용도, 사용가격, 다회성 비교자료

15.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조치 현황(활성탄지 교체공사 시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부적정 과태료 처분)

16. 정수센터 분말활성탄 재고 물량

17.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 산출 근거

18. 아트음수대 관리 내역 및 향후 계획

19. 2024년 학교 아리수 음수대 관리 현황

20. 최근 3년간 아리수본부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 목록 및 단가 비교

21. 노후밸브 정비 관련(노후밸브 교체 수량 배정 근거)

22. 최근 3년간 관사관리위원회 심의 · 의결 관련 문서 일체

23. 서울아리수본부 2023~24년 자체 감찰조사 내용 및 결과

미래한강본부 - 19건

1. 매점이행보증금 납부현황(보증금, 이행보증금 구분, 매점개시일시 포함)

2. 매점사용료 분할납부 현황, 근거, 규정, 매점별 현황, 낙찰가 분할납부 금액

3. 사용허가 취소 후에 본부 손실보상 내역, 미납 차감분도 표시

4. 생태교란 식물 분포 현황(3년간 발생면적, 일반 한강공원과 생태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포함해 개소별 공원면적, 발생면적, 발생률, 발생위치)

5.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추진계획

6. 여의도 공원 불법노점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미납 금액 월별 자료

7. 수상구조물 설비 안전 기준

8. 수상구조물 재원(건조연도, 규모, 만조하중, 실재하중, 물밖 높이)

9. 잠원한강공원 침수사고 조사 결과서, 수상레포스센터 침수사고 조사결과서

10. 레그프레스 등 운동기구 가격 해외 시세자료, 한강 헬스장 협상에 의한 계약한 사유, 실시설계용역 계약 전에 선발주한 사유

11.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드는데, 처리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자료상 잘못된 작성에 관한 설명자료, 쓰레기 매각금액에 대한 자료

12. 한강버스 드라이포스 계약서, 배터리 사양 가격, 약정기간, 오퍼레이팅 띠어리, 사용배터리 수명 커브, 드라이브 포스 및 카네기

13. 하이브리드 포함한 오퍼레이팅 띠어리 상세 구간별, 항차별, 배터리 소모량, 드라이브 커브(배터리 커브), 약정기간, 선체 가격 9억 증가한 사유 등

14. 향후 20년간 배터리 비용까지 포함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계산

15. 한강버스 감독업체 설립 등기부등본, 직원명부 등

16. 전기추진체 가격(76억원)에 대한 상세내역, 6~9억원 증액된 사유, 재정분석 자료

17.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30년 초과 시설물 최근 5년간 안전점검 내용

18. 한강버스 명칭 내부결재 공문

19. 가덕중공업은 직접생산증명서(8/22발급)를 보유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해서 선박 건조 진행 중인데 계약서상에 하도급 시 발주자에게 서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 서면 승인 내역

서울에너지공사 - 4건

1. 구상에너지 하도급 과다비용 지급 지적사항에 대한 차액 처리 내용

2. 2021~2023년 전 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3. 2020년 이후 서남하수열 수열현황, 손익현황, 2024년 흑자 전환 사유

4. 노후밸브 교체 계획

※ 주요감사 지적사항

○ 주요 사업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지 못한 바, 향후 계획 수립 시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충실할 것

○ 서남 집단에너지(2단계) 사업은 조속한 계획 수립 및 열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책 마련하고,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을 높일 것

○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향상, 광역화를 통한 시·구 재정건전성 강화 및 광역화 시 시비 보조율 증가(기존 80%→ 개선 100%) 방안 등 정책 마련할 것

○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그린워싱을 경계하고 사업에 대한 지적 사항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제정원박람회의 행사성 사업 지양, 존치정원 관리계획 부실, 관리예산 부족 등 대책 마련하고 서울시 전체에 파급효과 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일부 관용차량의 경우 차량일지 시스템에 거리만 등록하고 유류비를 등록하지 않고 있는 문제 개선할 것

○ 사용수익허가 시설 관리부실 재발 방지 및 시설개선 계획 필요할 것

○ 멸종위기종인 시베리아 호랑이가 평균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폐사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

○ 서울대공원 사용수익허가 시설 점검결과, 경력이 없는 업체 참여, 캠핑장 주차장의 입찰 방법・기간 변경 특혜, 주차장 내 월정기권 난발 등 여러모로 시민이 이용상 불편함을 겪고 있어 수익 허가시설이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 아리수 음수대 설치 확대에 대한 제고 필요와 음용율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 대상 및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 사업소 직원 근무지 이탈 등 시민제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무 점검을 철저히 할 것
-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수 지원 사용 자제 권고 요청과 동시에 여름철 폭염 시 아리수 사용을 권고할 것
-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자 선정 시 공고 과정부터 이후 운영 갱신 절차 등이 너무 서둘러 진행된 것이 문제로 보이므로, 낙찰자 취소 등에 대비하여 선정 절차를 2개월 정도 일찍 추진하도록 할 것
- 한강공원에서의 장기 불법 주차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불법 노점상 문제 시정을 위해 압류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우고, 자치구 우수사례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 건조 중인 한강버스 선박 내 전기추진체의 잘못된 설계에 대한 패널티를 제대로 확보하고, 배터리 안전성 및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
- 현재 지어져 있는 노후 구조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유식 방식으로 지을 수상푸드존, 잠실 마리나 등 수상 구조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기차 충전기 보수 기간이 늦어지는 사유를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지침을 개선할 것
-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이 지연될수록 지역주민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총괄표

기 관 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등)
계	271	116	73	82
대 변 인	10	4	6	0
홍 보 기 획 관	36	21	3	12
문 화 본 부	31	16	9	6
관 광 체 육 국	52	25	12	15
서울역사박물관	29	11	11	7
서울시립미술관	34	13	9	12
세 종 문 화 회 관	13	4	5	4
서울시립교향악단	22	11	6	5
서 울 문 화 재 단	6	2	2	2
서 울 관 광 재 단	15	1	3	11
120다산콜재단	23	8	7	8

나. 시정요구 사항

▢ 대변인 : 4건

1. 방송뉴스 저작권을 신문뉴스 중점 구매한 사업예산 부분에서 사용된 점이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점으로 비쳐질 수 있어 철저한 예산 관리를 하기 바람.
2. 프린터 토너 구매를 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이외, 구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에 대해 직인 여부 등 점검 및 개선 요청
3. 서울시 실·국 신문 구독 관리 총괄 부서로서 타 실·국의 추가 구독 부분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해주기 바람.
4. 시장의 언론매체 인터뷰 관련해 7월 기사에는 이재명 기본 소득 관련 정책 비판 기사 게시, 8월 기사에는 2036 하계올림픽 주제가 내용상 이재명 후보 비판에 이어 마지막 대선 출마로 이어지는 등 내용 현안 이슈와 동떨어진 내용 전달로 개선 필요.

▢ 홍보기획관 : 21건

1. 상징물 홍보 시, 전반적으로 홍보마케팅에 설문조사, 선호도 조사 등 시민들 반응을 살피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아쉬움. 홍보전략을 수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으면 함.
2. 홍보대사 선정에 별다른 절차가 없고, 연임, 보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규정이 없음. 조례에 선발 기준, 연임, 보수에 관한 구체적 기준 수립이 필요함.
   - 구체적 기준 마련해서 보고 바람
3. 서튜버 1년차이나, 조회수 등 성과가 저조함. 좋은 사업 아이템이니만큼 성과가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명예시장 성별 및 연령, 직업군 분포를 보니 50~60대 교수 비중이 높음. 명예시장은 분야별 대표성과 상징성이 중요하나, 전문성을 요하는 시정자문단과 구분이 되지 않음. 시장님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 시민들의 언어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명예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5.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실적이 저조함. 조례상 연 4회 개최하기로 되어있으나 실적은 미치지 못함. 위원회 전반에 대해 다시 검토 후, 필요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함.
6. 시우회 법인카드 사용 2건이 있음.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법인카드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작은금액이라도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으니 자제 필요.

7. 서울브랜드총괄관 자문료가 건당 30만원인데 증빙이 없음. 향후 자문료 지급에 대한 자문 증빙 필요.
8. 조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서면 심사를 했으며, 참석수당도 서면심사의 경우 10만원 지급 하도록 되어있으나 20만원이 지급됨.
9. 서울라면, 서울아몬드 등 콜라보 굿즈 기업 선정 시, 특혜 의혹이 없도록, 기업 이미지와 인지도 등 면밀히 고려해 진행할 것.
10. 브랜드가 홍보되기 위해서 서울라면, 서울아몬드 등 콜라보 상품에 시각적으로 브랜드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특혜의혹이 없도록 협약 시, 수익에 대한 사회 환원 비율 조항을 명문화 하는 등 보완 필요.
11. 또한 효과적 브랜드 확산을 위해 보다 점유율이 높은 회사와도 협의해볼 것.
12. 서울시 개최 토론회, 세미나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협의가 있는 행사임에도 공개가 안되는 부분이 많음. 유튜브 중계 등을 통해 서울시 주최 토론회가 대시민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3. 행정부에서 TBS 관련 발언을 할 경우 TBS 직원들이 희망을 갖거나, 혼선이 없도록 표현에 신중을 기할 것.
14. 시민청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도시홍보관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사전절차 없이 리모델링 진행해서는 안됨.

    - 시민 여론 관련 종합 계획 수립 후 보고 바람
15. 올해 3~5월 TBS에서 추진된 ‘TBS 위상, 조직, 정체성 변화 방안 모색’ 내용에 대한 용역 결과 공유 부재 지적 및 컨설팅 용역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지 필요.
16. 용역 수행 전 과정에서 TBS 일부 임원과 서울시의 적극적 개입 및 용역 수행사의 의도적 선정 우려 지적.
17. 용역 절차와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전 임원이 TBS 자체감사 지시했으나, 서울특별시에서 무마시켜 용역 준공처리에 대한 지적.
18. 9988 포인트로 서울시 굿즈샵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19. 그동안 시의회는 TBS에 혁신에 대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음. 대표 등 경영진도 책임이 있음.
20. TBS 출연동의안 92억은 인건비로 의회에서 승인한 것인데 사업비로 쓰였음은 물론 증빙이 부족함.
21. TBS는 그간의 정치 편향적인 방송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대표 등 경영진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함. 앞으로 홍보 부분에서도 이런 정치편향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문화본부 : 16건

1. 시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정기조사 후 등급에 따른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기조사 실시주기도 단축이 필요함. 시지정 문화유산이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등 실적이 없는 조례에 대한 조치 필요.
3. 서울시 문화상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관련, 당일 자료열람 가능으로 심사 시간 불충분, 분야별 공적심사위원 수 부족, 심사위원 선정기준 부재, 미선정 분야 발생 등 문화상 시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4. 현재 노들섬 다목적홀 숲 공간을 발레단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화장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
5. 한양도성의 훼손된 부분들에 대한 빠른 수리 조치가 필요함.
6. 삼일로창고극장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함. 민간 위탁 시에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위탁하는 것이 필요함.
7. 외부강의 시 출장 처리한 직원들에 대하여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지침' 준수 여부 등 문화본부 직원 외부강의 전수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8.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 1차 선정 후 3~4개월만에 미사용자 취소하는 것은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음. 이용실적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 청년 문화권의 향상과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9. 서울사진미술관 관련 2월 워크숍에서 해당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해당 용역에 단독응찰하고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은 업체 대표인 것은 부적절함.
10.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주민 의견수렴이 너무 부족함. 타당성 조사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엠보팅, 설문조사, 요구분석 등 추진 필요.
11. 제2세종문화회관 중투 재검토 결과로 인해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까지 지연되고 있음. 세종문화회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으므로 세종리빌딩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2. 장애인도서관 관련하여 이용하지 않는다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13. 문학의 집 관련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진행 및 예산 불용 등 절차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
14. 문화비축기지의 주무부서인 미래공간기획관 및 정원도시국 위주의 용역 수행 및 문화본부와의 부서 간 협력 부족 등 현재까지 문화본부의 미진한 역할에 대한 지적. 향후 문화비축기지 재탄생을 위한 문화본부의 역할 확립 및 향후 계획 필요.
15. 작은 도서관의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방문자가 일일평균 10인 이하인 곳이 많음. 자치구에 넘기든지 사업을 정리하든지 해주기바람.
16.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에 대한 홍보 및 활용도가 부족함.

☐ 관광체육국 : 25건

1.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 해당 가해자(선수)의 실력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경감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큰 문제임. 독립기구 분리에 대해 검토 바람.
2. 마라톤과 러닝크루 민원 다수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주문.
3.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하고 활성화된 곳은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하며, 일괄적인 지원은 배제해야 함.
4. 한강드론라이트쇼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나,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음. 교통, 화장실, 흡연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5. 서울 관내 설치된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외국어 표기 오류가 약 천 건으로 상당히 많고, 의미를 살린 표기가 필요함.
   - 예시 : 탑골공원
6. 외국인 현장 점검단을 사후 점검으로 할 게 아니라, 사전 점검을 해야하며, 대책 마련 필요.
7.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한 기준도 모호함.
8. 야구장 할인으로 다자녀 야구장 할인이 포함될 수 있게 검토 요청.
9. 잔디관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0. 잠실야구장 인파 관리 개선 및 대체야구장 조성 시 인파안전 관리 대책 수립 필요.
11. 서울달 예약시스템을 마련하고, 대기시간이 꽤 긴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검토 바람.
12. 서울달 타당성 조사가 적절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필요.

13. 2021년 감사위원회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 시 목동운동장의 일부 임대시설물 사용료 축소 부과, 무단 용도변경, 무단증축 등이 지적되었으며, 당시 감사위에서는 도시계획심의 등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사용수익허가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는데, 지적사항을 2023년 3월에 입주단체에 최초 공문 통보하면서 감사위 시정요구서의 결론을 축약하고 조치할 사항을 삭제하여 교부하였음.
14.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근무 중 음주, 일정 시간 결재 금지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으니 주의 바람.
15. 〔체육회〕 야구소프트볼협회는 보조금 집행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학자금의 근거 없는 지급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대해 여러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조치가 되지 않아 다시 요청함.
16. 〔체육회〕 대의원 선거 규정에 따르면 학교 단체 지도자는 대의원이 되기가 불가능하며, 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혀 허가를 받지 않았음(제비뽑기로 뽑음). 확실한 조사가 필요함.
17. 〔체육회〕 작년에 의원 발의로 태권도시범단 운영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인건비 설정에 특별한 기준이 없고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18. 〔체육회〕 공식대회나 행사에서 공연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훈련비 명목으로 부단장, 감독, 코치, 단원에게 지급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다른 간부들까지 지급되는 것은 이해가 안되며 제출된 증빙자료에는 수취인이 다 가려져 있어서 확인이 불가함. 해당 자료로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청구를 건의드림.
19. 서울미식 100선 리스트에 포함된 식당들의 경우 한식보다 양식 식당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20. 양식의 경우에는 한끼당 20만원을 상회하는 고가 식당이 많기에 가격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 재검토가 필요함.
21. 서울미식 100선 리스트를 선정하는 전문가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외식업계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음. 전문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함.
22. 〔체육회〕 상근부회장의 야구협회 회장 출마와 관련하여 야구협회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였고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었음. 서울시체육회에서 먼저 특정감사를 하기를 요청함. 안되면 의회에서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23.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라운드 잔디(가변식)로의 개선 및 일반 공연과 관련한 향후 개선대책 마련 필요.
24. 〔체육회〕 지도자들에게 정년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음. 지도자들의 의견을 재수렴 할 필요가 있음.
25. 〔체육회〕 전지훈련 숙박비 등 지원비가 너무 부족함. 현실화가 필요함.

▢ 서울역사박물관 : 11건

1. 박물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에 집중할 뿐 홍보의 적극성이 부족하므로 대책 필요.
2.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하여 보존환경 관리기준이 미흡하므로 개선 필요.
3. 생활사박물관 옴팡 어린이전시실에서 최근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호자 주의의무 강조 등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4. 조례에는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귀국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
5. CCTV 관제인력이 적정인원보다 4배가 부족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화소도 야간에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우니, 운영개선 방안이 필요.
6. 유물 D,E 등급의 수가 많음에도 연간 복원률은 매우 낮으니, 대책 필요.
7. 홈페이지 온라인전시실에 각종 오타, 역사적 오류가 발견되므로 정정 필요.
8. 청계천박물관에 관람객이 적음. 관람객의 적극적인 유치방안 마련 필요.
9. 메타버스 사업이 예산낭비가 되었는데, 원인분석이 필요하고 디지털 방식의 대안 마련 필요.
10. 박물관 미니버스를 활용한 관람객 이용 수가 많지 않으므로 최소 1일 2회는 차량운행 필요.
11. '찾아가는 박물관' 관련 운영횟수의 경우, 사업목표인 자치구의 고른 교육 제공과 달리, 최소 3회에서 최대 10회까지 자치구별 차이가 심해 자치구별 균등한 교육 제공 필요.

▢ 서울시립미술관 : 13건

1. 미술관 본관 출입구에 정문 좌측에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있고 우측에는 없음. 색상도 황색이 아니라 은색으로,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는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 바람.
2. 서소문 본관 장애인화장실이 좁아 사용이 어렵고 등받이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시급하게 보완해주길 바람.
3. 친환경차량 자동할인 될 수 있게 시정 바람.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가 정보공개망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5. 진품보증서가 없는 미술품들이 많음.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를 맡기는 등 진품보증서가 누락된 모든 미술품들에 대해 진위 감정을 실시해야 함.
6. 학예인력이 40명인데 KCI 등재 논문은 1건으로, 32건을 등록한 국립현대미술관에 비해 연구 성과가 부족하므로 개선 바람.

7.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소장작품 DB관리시스템 정보화 사업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 후 조치 바람.
8. 주차장 후문 출차시스템 내년에 반드시 마련 요청.
9. 공무국외출장 중 세마걸작전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미술관 협력사업 참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가 조례상 귀국 후 15일 내 제출 의무기한을 어겼는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행정처리를 주의하기 바람.
10. 극한 호우 등 기후재난 대비 안전관리 매뉴얼 훈련 시 방법, 대피방법, 안전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람.
11. 미술관 관람객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어야 하므로 리더기를 설치하는 등 정확한 집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북서울미술관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수용인원, 지원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바람.
13. SeMA카페 사업자 관리비 징수 관련하여 향후 조치방안 보고 바람.

☐ 세종문화회관 : 4건

1. 오랜 기간동안 동일한 법무법인을 이용하고 있음. 특정 법무법인과 장기적으로 고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개선방안 강구 바람.
2. 특정 법무법인과 장기 계약을 맺고 매월 고문료와 건당 자문료를 지급하고 각종 소송까지 맡기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3. 직원의 복무 관리 문제 및 비리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교육 관련 외부강사에게 1시간에 200만원의 고액강의료를 지급하였음. 아무런 기준 없이 외부강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해도 되는지 외부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지급 기준을 재설계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서울시립교향악단 : 11건

1. 직단원 채용 시 남성의 병역필 지원 자격 개선 필요.
2. 관용차량 관리 철저 당부 및 차량일지 ERP 연동 조치 필요.
3. 단체협약 개선 요구.
4. 업무 미숙 직원에 대한 징계 자제 및 계도 필요.
5. 용역사 선정 시 노조가 심사 평가하는 상황 개선조치.

6. 단체협약 제39조 인사권 침해 부분 개선 요구.
7. 합리적인 단원 평가제도 도입 요구.
8.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9. 행정사무감사 중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요구.
10. 단원 정년제도 도입 요구.
11. 서울시 합창단의 총 443석대비 5석에 불과한 휠체어석 실태를 지적.

☐ 서울문화재단 : 2건

1. 대학로극장 쿼드 공연 예정 작품 취소 관련 공연 계약 전 성비위 사항 등을 점검하여, 성비위자의 공연 참여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필요.
2. 2020년 코로나 긴급 지원금 관련하여 공정성 저해하는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검토 바람.

☐ 서울관광재단 : 1건

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바람.

☐ 120다산콜재단 : 8건

1. 스마트 상담센터 만족도 조사에 설문 문항을 보충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람.
2.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성과관리 기준을 CPD(Call Per Day)등 동일하게 통일하여 관리하기 바람.
3. 보다 구체적인 저성과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응대율을 총인입대비 응대율로 기재하는 것을 강조함. (아이수루 부원장)
5. 종합감사 결과 직원 외부 강의 출강 시 복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니 이에 상응하는 조치 바람.
6. 직원들이 외부 강의 출강 시 휴가를 내고 간 사례가 전무함. 재단 업무과 무관한 곳에 외부강의를 나갈 시에는 휴가처리를 하고 가도록 조치 필요.
7. 종합감사 결과 사후 겸직 허가건이 지적되었는데 조치 바람.
8. 몽골 국외공무출장 관련 보고서가 작년 보고서와 중복내용이 있는 등 보고서 관리에 문제가 있음.

다. 건의사항

☐ 대변인 : 6건

1. 해·설명자료 배포에 따른 최근 3년간 언론사 인용 건수가 감소 추세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 바람.
2. 시정 홍보에 있어 중요한 시장님 인터뷰 최근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3. 외신 모니터링 업무의 경우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직원 추가 채용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최근 3년간 동일 업체가 지속 수주한 점 고려
4. 외국 사례와 같이 조례 제·개정 공포 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함께 서명하는 퍼포먼스 방식의 시정 홍보 아이템 검토해주기 바람.
5. 종이신문 외 구독환경이 많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현 구독 관리체계를 개선해주기 바람.
6. 서울시를 대변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인 바, 타 정당 비판이 아닌 주제별 내용에 맞게 시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 및 홍보 필요.

☐ 홍보기획관 : 3건

1. TBS가 공공에 기여를 해온만큼 주파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람.
2. 명예시장은 전문적 식견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체험해서 소통과 공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 취지를 고려했을 때, 명예시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시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3.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연동하여 명예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문화본부 : 9건

1. 책방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살리는 것이 필요.
2.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상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교수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활용에 관련된 다른 위원도 위촉 건의.

3. 야외도서관 집객 관련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집계에 확인이 필요.
4. 노들섬 다목적홀 숲 화장실 이용이 어려우므로 주차장에 조립식 화장실 설치 건의.
5. 서울청년문화패스 이용대상이 20대 초반인 점을 고려하여 기후동행카드처럼 모바일 카드가 가능하도록 조치 요청.
6. 야외도서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경우 학교신청을 받아서 체험학습 형태로 단체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7.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하여 곤돌라가 한양도성 성곽 훼손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에 응대하는 것이 필요.
8. 내년 광복 80주년 등을 고려하여 호국 안보와 접목된 문화행사, 청소년 및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한 문화적인 측면을 접목하여 2025년 사업에 반영 요청.
9. 2014년 이후 10여 년간 추진되지 못한 문화비축기지의 재탄생을 위해 미래공간기획관 및 정원도시국뿐만 아니라, 문화본부 본연의 역할을 위한 노력 촉구.

▢ 관광체육국 : 12건

1.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를 요하며, 일본, 스페인 등 해외의 가변식 경기장(스마트팜으로 잔디관리) 사례도 검토 바람.
2. 미식이 뜨거운 관광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요즘 관광 트렌드가 식도락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예산 확대 등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3. 〔체육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태권도협회 선거규정 개정(태권도 지도자 15%를 선거인단으로 선출)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번 선거는 기존의 규정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람.
4. 2025~2029년 의료관광 5개년 계획 용역에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챙겨주기 바람.
5.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포함된 서대문 노선이 서울시티투어버스 노선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6. 서울시체육회 1년 계약직 직원의 사기 진작과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계약기간 연장 적극 검토 바람.
7. 공공생활체육시설, 자치구 인구수 대비 부족 순위 현황을 파악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자치구 순으로 시설 건립 추진 검토 바람.

8.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올림픽유치팀 증원 및 적극적인 유치 활동 추진을 검토 바람.
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파일 제출시 의원명 아닌 자료 주제별로 분류·분리해 제출해 주기 바람.
10. 서울페스타 등에서 나타난 관광체육국과 관광재단 업무 중복으로 운영 효율성 떨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분업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람.
11. 서울달 관광객 이용 증대를 위해 연계 시설·사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 바람.
12. 해외사례 및 적용 가능성 도입을 위해, 잔디구장을 실내 수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방식인 스마트팜(smart farm) 방식 도입 필요.

☐ 서울역사박물관 : 11건

1. 대부분의 관광객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다니고, 구글 번역기 앱 등 기술은 충분하므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 관람 서비스 개발 및 적용 필요.
2. 소비자의 수요 및 다양한 유물에 기반한 문화상품을 개발할 필요.
3. 박물관 나들이 사업은 자치구별 편차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4. 서울을 알리는 데는 시기와 때가 중요하므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연구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
5. 카자흐스탄, 몽골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슨트 서비스 제공 필요.
6. 재해시 유물관리가 중요하므로 박물관 내 설치된 진열장 면진시스템 전면 재점검 필요.
7. 전시물 및 학술총서 등에 오타나 내용상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 및 내부자정시스템을 운용한다고 하는데,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8. 다자녀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사업 필요.
9.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약자와 동행하는 좋은 사업이므로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개발할 필요.
10.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이 자치구별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개발도 필요함.
11.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예식장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수용인원, 지원범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 바람.

☐ 서울시립미술관 : 9건

1. 미술관 보도자료가 서울시보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배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길 바람.
2. 야외 전시 운영 시 주민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더욱 고려하여 추진하길 바람.
3. 주차업체가 주차요원을 추가 배치하게 하는 등 이용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계약서대로 관리감독을 하기 바람.
4. 난지창작미술스튜디오는 소각장 설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 바람.
5.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적극적으로 외국어 도슨트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람.
6. 서울시 해치 캐릭터와 별개로 미술관 자체 굿즈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기를 바람.
7. 리모델링 절차를 잘 챙길 것을 당부함.
8. 다자녀 가구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하여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하기 바람.
9. 미술관 옥상 공간을 직원휴식,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점검하고 보고하기 바람.
10. SeMA 벙커 가동률이 너무 저조하고 환경이 열악함.
11. 백남준 기념관도 방문객 저조하고 백남준 작품이 없음.

☐ 세종문화회관 : 5건

1. 요즘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음. 중소, 중견기업 중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후원금 및 기부금 유치를 잘 지속하길 바람.
2. 누구나 클래식 행복동행석 관련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 추가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기 바람.
3. 단원 채용 시, 남성의 경우에는 군필 또는 면제자만 응시자격임. 이는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자격조건을 두지 않는 것이 맞으므로 다음 채용 시 반영하길 당부.
4. 행복동행석을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세부기준을 마련 요청.
5.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화교류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있는지 살펴보고, 예술단을 활용한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을 검토하기 바람.

▢ 서울시립교향악단 : 6건

1. 서울시캐릭터 ‘해치’ 적극 활용 요청.
2. 플래시몹 홍보영상 제작 요청.
3. 불필요한 정원을 줄이기를 바람.
4. 단원들의 외부활동 시 엄격한 관리 요청.
5. 향후 장애인 좌석수 확보 및 접근 동선 등 고려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6. 올해 11월 진행한 지역주민 등과의 정선 기차여행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아리랑센터의 뮤지컬 공연이 정선 문화 등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극찬하며, 향후 서울시에도 지역의 유명한 공연 유입을 위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한 개최 필요.

▢ 서울문화재단 : 2건

1. 미혼남녀 대상의 문화향유 사업 관련 문화재단 홍보자료에는 남녀 간 만남의 성사라는 주요 목적이 부재한 바, 서울시 사업 포스터를 참고하여 사업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참가자들이 인지할 수 있다면 좋겠음.
2.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 관련 취업이 어려운 예술계를 감안하여, 청년 예술가 등 본 사업의 주요 참여자들 대상 타기관 취업 시 가산점 등 취업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음.

▢ 서울관광재단 : 3건

1. 서울스테이와 연계한 등산관광센터 운영 방안도 고려해보기 바람.
2. 단체교섭시 교섭대표를 2023년에는 지부 대표가 하고 2021년에는 지회대표가 한 것 같은데, 일단 단협이 체결되면 잘못된 협약을 했더라도 추후 돌이키기 어려우니 잘 챙겨보기 바람.
3. ‘서울의달’을 관광정책과가 설치하고, 관광재단에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만약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설치와 운영을 일원화했다면 민원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번 검토해주기 바람.

▢ 120다산콜재단 : 7건

1. 콘텐츠 크리에이터 겸직 시 새로운 콘텐츠 공개 전 사전 보고는 과도한 검열의 우려가 있어 개정 필요.
2. 내규상 사원증 시안과 현행 사원증의 시안이 달라 통일 필요.
3. 갑질근절을 위한 만족도 조사가 타만족도 조사에 비해 조사 기간이 짧음.
4. 스마트 상담센터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었는데, 구축 필요성 검토 바람.
5. 현재 120은 99%의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스마트상담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바람.
6.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의 소리 데이터를 대시민 공개하는 방안 검토.
7. 폭언 및 욕설 자동 차단 기술 도입 검토 요청.

라. 기타사항(자료요구 등)

▢ 홍보기획관 : 12건

1. TBS 재단 설립 후 방심위 법정 제재 내역(제재 내용 및 방송명 등) 일체.
2. TBS 예산 집행 내역 일체.
3. 서울시 명예시장 3년간(2022~2024년) 누가 명예시장으로 선정이 됐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 제출.
4. 홍보대사 연임 횟수를 표기해서 제출.
5.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실제로 작성한 자문 자료, 결과보고서(총괄관 생긴 후부터 현재까지) 제출.
6. TBS 예비비 지출내역 증빙까지 세부내역 제출.
7. 9월, 10월 TBS 직원들 출근 현황 제출.
8. 방송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방송이 안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TBS 방송 운영 현황.
9. 시민청 섹터별 만족도 조사 결과.
10. 콜라보 굿즈 기업 선정 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특혜 의혹이 없도록 대책 방안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
11. 브랜드총괄관 성과 자세히 작성해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
12. 홍보기획관-실국 광고비가 중복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닌지 비교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

☐ 문화본부 : 6건

1. 지난 3년간 항일독립운동 표석 관련 자료 일체.
2. 시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세부자료 일체(등급별 조치현황 및 계획).
3. 박물관과 공고 관련 계약 현황자료.
   - 단독입찰 후 재공고 없이 체결한 계약 현황
   - 단독입찰 후 재공고하여 체결한 계약 현황
4. 사진미술관 채용인원 경력·인력 관련 자료.
   - 채용자 경력·이력
   - 지원자 경력·이력
   - 채점표(전형단계별 채점표)
   - 단계별 심사위원 명단(이름, 경력·이력 포함)
5. 사진미술관 관련 이ㅇㅇ 자료 일체.
   - 사진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워크숍(’ 23.2월) 이ㅇㅇ 소장의 발표 내용과 발언 내용
6.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지원내역.

☐ 관광체육국 : 15건

1. 서울시태권도협회 3년간 예산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2. 2022~2024년 서울미식주간 관련 용역 착수 월간보고서 일체.
3. 미식주간 심사위원, 미식큐레이터 심사 세부내역 및 선정순위.
4. 야구소프트볼 협회 대의원 명단 및 선정기준.
5. 야구소프트볼 협회 최근 3년간 구의야구장 관람권 수익 및 사용료 납부내역.
6. 야구소프트볼 협회 최근 5년간 야구소프트볼협회 퇴직자 현황 및 퇴직금 지급현황.
7. 야구소프트볼 협회 야구소프트볼협회 현 상근부회장의 전무이사 근무 기간.
8. 야구소프트볼 협회 야구소프트볼협회 규약.
9. 야구소프트볼 협회 2020년 11월 ~ 2021년 2월 4개월간 상근 직원 4대보험 지급내역.
10. 서울시태권도협회 이사회 회의록(24.1.19).

11. 2022~2024년 3년간 미식주간 진행계획 및 집행내역.
12. 2025년 예산안 미식주간 10억원 예산 요청 내역.
13. 서울달 월별 이용객 현황 및 만족도조사서 샘플.
14. 2022~2024(최근 3년간) 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관련 요구자료 일체.
    - 참가업체명, 참가업체 실적, 상담건수, 금액, 실제 계약 체결건수
15.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장 불신임 사유 제출.

☐ 서울역사박물관 : 7건

1. 최근 3년간 굿즈 제작 및 판매, 사용현황.
2. 박물관 차량을 이용한 관람객 현황.
3.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보고서.
4. 최근 3년간 징계 세부현황.
5. 장애인 화장실 설치 현황.
6. 직원평가체계.
7. 소장유물 C등급 복원처리 실적.

☐ 서울시립미술관 : 12건

1. 최근 3년간 작품이 훼손된 사례(작품명, 훼손 이유, 대책).
2. 최근 3년간 자체 제작한 굿즈 목록(종류, 예산, 판매 현황).
3. 최근 3년간 국외 출장 보고서.
4.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세부내역(징계의결서).
5. 장애인 화장실 설치현황(크기, 편의시설 설치 여부).
6. 주차장 운영 용역 계약서, 운영 현황, 주차장 수입, 차단기 재원.
7. 소장품 진품확인서.
8. 리모델링 진행현황.
9. 관람객 집계 센서 제조사, 기능 등 관련 현황 제출.

10. 극한 호우 등 기후 재난 대비 안전관리 방안 관련 자료(’ 24년 안전관리방안 실행 결과 등).
11. 직원 평가 체계.
12. 작품 보존 환경 기준 상세 자료.

▢ 세종문화회관 : 4건

1. 서울시발레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학술용역 관련 자료.
   - 최초 과업 지시서, 과업 추가 변경 시 변경할 때마다의 과업지시서, 수행 단계별 보고서
2. 2015~2024년도 해외 공연 및 작품전에 대한 대관심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 대관 후 취소된 자료로 한정하여 취소된 내역과 취소사유 기재
3. 예술단 기획직 신설 관련 자료 일체 및 채용, 업무분장 현황.
4.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원 해외콩쿠르 참가 사례.

▢ 서울시립교향악단 : 5건

1. 2024년 기준 전체 단원의 직책, 파트, 연령, 근속년수 및 최근 5년간 해외순회공연 참석여부와 불참시 불참사유.
2. 행감 제출용 USB에 요구자료 별로 각각 낱개의 파일로 다시 제작하여 제출.
3. 서울시립교향악단 노조 협약서 제출.
4. 2024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유·무료 공연 목록.
5. 최근 3년간 실제 작성된 서울시립교향악단 외부출연, 출강, 해외여행 승인서 서식 사본 일체.

▢ 서울문화재단 : 2건

1. 미혼남녀 행사 관련 포스터와 개요 등 관련 자료.
2. 성희롱, 성폭력 등 비위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문화재단의 지원 배제 조치 사항(규정 등).

▢ 서울관광재단 : 11건

1. 2023년 국제관광·MICE 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했는데 2024년에 동일한 직위에 채용공고가 나왔음.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본부장을 다른 직무로 보내도 되는지 여부.
2. 2022년부터 경영평가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원인.
3.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관광 분야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4. 재단 정규직 인력현황 및 올해 채용여부.
5. 법적 의무고용 비율이 있는데 올해 장애인 근로자 및 고교졸업자 채용했는지 여부.
6. 관악산 등산관광센터 가오픈 진행 경과.
7. 2024년 북한산센터와 북악산센터의 방문자 수 및 물품대여 건수를 비교하면 북악산센터의 물품 대여율이 낮은데 그 이유.
8. 관악산 등산관광센터 이용 현황.
9. 최근 3개년 단체협약서.
10. 2022년 서울관광재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11. 감사결과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사항.

▢ 120다산콜재단 : 8건

1. 스마트상담센터 서비스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2. 2차례 몽골 국외공무출장의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3. 상담사 프로모션 운영의 성과는 무엇인지?
4. VOC(Voice Of Citizen)는 무엇이고 서울시 이송 건수가 줄어드는 사유.
5. 외부강의 시 복무관리 방안 등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
6. 사후겸직허가 감사 지적사항 조치방안과 겸직 관련 심의 문서 일체.
7. 최근 3년간 프로모션을 통한 상담 성과 개선 수치 일체.
8. 시민의 소리 서울시 이송건수 감소에 대한 사유와 실적 개선 방안.

마. 기타 감사의견

○ 감사 청구

- 감 사 기 관 :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 피감사기관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 감사요청내용 : 2024년도에 서울특별시(관광체육국)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에 지원한 290백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확인 및 적법성 여부

○ 기타 의견

- 대상기관 :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 감사의견 :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5번 관련〕
  - ▸ 현재 실시 중인 서울시체육회 감사를 지켜본 후, 이 중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감사건에 대하여 예산 및 보조금 집행 등 분야에서 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추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주요 감사사항
공 통	○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등
대변인	○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각종 매체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등
홍보기획관	○ 대시민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홍보대사·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간행물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서울 상징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 관리·처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문화본부	○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예술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독서 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한양도성 보존·복원·관리 및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 박물관·미술관 건립·운영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운영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기관명	주요 감사사항
관광체육국	○ 관광정책의 수립 및 관광진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MICE·프리미엄·웰니스 관광 등 관광산업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체육정책의 수립 및 전문체육 육성·전문 체육시설 건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생활·장애인체육 육성·진흥 정책 수립 및 관련 시설 확충·운영에 관한 사항 ○ 소관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서울역사 박물관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물 구입·기증·기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문화행사, 교육 등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 박물관 교류·홍보 및 분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서울시립 미술관	○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미술관 교류 및 각종 행사·교육 등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 미술관 문화행사, 교육 등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 미술관 교류·홍보 및 분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세종 문화회관	○ 재단 운영 및 인사(직원, 예술단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예술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공연·전시·강좌 등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소관 공간 및 시설의 관리·운영 및 대관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세종문화회관 대수선에 관한 사항 등
서울 문화재단	○ 재단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활동 및 시민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창작기반 및 공간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네트워크 허브 기능 및 교육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등

기관명	주요 감사사항
서울시립 교향악단	○ 재단 운영 및 인사(직원, 단원 등)에 관한 사항 ○ 오케스트라단 운영 및 연주 활동에 관한 사항 ○ 음악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시민 공연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서울 관광재단	○ 재단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서울 관광자원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 관광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관련기관 교류에 관한 사항 ○ 서울관광플라자 등 소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등
120다산 콜재단	○ 재단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상담 서비스 양적·질적 개선에 관한 사항 ○ 상담채널 다양화 및 자동화 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 ○ 시정 및 구정 통합 상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행정 사항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4.11.28.

❍ 운영위원회 송부 : ’24.12. 6.

❍ 종합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 : ’24.12.20.

6. 보건복지위원회

☐ 총 괄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요구 등
계	387	151	110	126
여성가족실	55	27	15	13
여성가족재단	33	11	8	14
여성가족 관련 기관 (증인 요구기관 포함)	56	19	16	21
복지실	68	30	20	18
복지재단	23	8	6	9
복지 관련 기관 (증인 요구기관 포함)	48	23	11	14
시민건강국	60	12	22	26
보건환경연구원	19	9	2	8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12	8	4	-
건강 관련 기관	13	4	6	3

여성가족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44	57	39	48
여성가족실	55	27	15	13
여성가족재단	33	11	8	14
여성가족 관련 시설 (증인 요구기관 포함)	56	19	16	21

2 세 부 내 역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여성가족실 -27건

1.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나, 인터넷 후기를 보면 부적절한 사용 및 운영 사례 확인됨. 현금성 지원인 만큼 관리·점검 철저히 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구직활동과 무관한 물품 구매, 강의 하나 듣고 두 개의 보고서 제출, 구직지원금 사용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개설한 '서울우먼업몰'에서 구직지원과 무관한 물품 판매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됨.

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2023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시설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예산 지원 안 되고 있음. 예산 지원 반드시 되도록 할 것.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시설)의 평균 입소율 64%에 불과한데 100억원 가량의 예산 투입되고, 이 중 70%가 인건비임. 입소율 저조한 원인 등을 분석하여 시설의 통합 또는 환경개선 등 재구조화 검토하고, 시설 입소자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재가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원가족 복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검토할 것.
4. 안심벨 사용을 위해서는 특정 운영체제(안드로이드 13 이상)가 필요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고가의 스마트폰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고가의 스마트폰이 필요한 현재 시스템이 1인 가구나 위험지역 거주자 보호라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아 보임. 사업대상에 따른 기기 사양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 조건에 대해 안내할 것.
5. 안심벨 배포 후 2주 내에 앱 연동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건수가 다수 있음. 배포 목표 달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관리 철저히 할 것.
6.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외에도 피해상담 창구를 다각화할 것.

7. KBS는 주 시청 연령대가 60대 이상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홍보매체로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므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책 홍보를 위해 정책 대상자 연령에 맞는 수단을 활용할 것.
8. 보호대상 아동의 환경을 고려한 적합한 아동 시설 배치가 필요한데, 현재는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9. 결혼식 지원 시 기업 협조를 통한 식사와 답례품 지원 등 여러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
10. 결혼식 장소 이용 시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 적극 검토할 것.
11. 주요업무 보고에 '서울키즈 오케이존' 관련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개소 관련 수치 없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12. 네이버에서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검색하면 스마트 서울맵이 뜸. 지역 선택 후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오케이존 가입 음식점이 나옴. 그런데, '서울형 키즈카페' 표시는 있으나 '서울키즈 오케이존' 마크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시 보완이 필요함.
13.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비예산으로 한화손해보험과 MOU를 맺었으며 현재 11개의 일반 음식점이 '안심보험'에 가입했으나 오케이존은 없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14. 공공예식장 관련 시행규칙 등의 근거 없이 대관료 무료 감면처리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시정할 것.
15. 용산구에서 직책보조비 부정수급과 기본재산 임의처분 관련 고발조치하고 시에 보고하였음에도 시는 개선명령과 조치사항이 없었음. 내부고발 사무국장 부당해고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고 원복 및 해고기간 내 받을 수 있는 임금 지급주문을 하여 공정력 있는 지방노동위 결정을 즉시 시행해야 하나 서울시에서 조치사항 없었음. 시정조치 바람.
16. 가족 결속력을 형성하기 위해 가족이야기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족단위 이동 접근성, 주차공간 등 적합하지 않은 건물을 활용하여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며 가족사진 등 프로그램 내용 또한 부적합하므로 검토 후 시정조치 필요.
17. 공공예식장 관련, 결혼식 후 식사 제공 방식이 같은 야외공간임에도 어떤 곳은 출장뷔페이고 어떤 곳은 도시락만 제공 가능하는 등 차이가 남. 신혼부부들이 공공예식장 결혼식의 만족도가 저조하므로 개선 바람.

18. 서울엄마아빠택시 만족도 조사 대상이 1,632명인데 대상이 적정한 건지 의문임. 만족도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의 지속 유무를 판단 해야 함. 지원금 10만 원이 평균적으로 3개월 안에 모두 소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과연 효율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9. 여성가족실 소관 공무원의 외부강의시 “외출”과 ‘출장’을 분명히 할 것. 또한,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에만 허용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함.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강의가 아니라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를 실시하는 등 법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
20. (사)시니어라이프 라는 법인은 이미 ‘2021년도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서 2,500만원 전액을 교부 받았는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부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시됨. 보조금이 환수도 되지 않았는데 조치 결과를 【추진완료】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추징하는 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
21. 새로 개관하는 거점형키움센터와 현재 운영 중인 거점형키움센터 내에 전문적인 강사를 활용한 장애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길 바람.
22.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가 운영비와 임차료(보증금)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일배움카드 등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 시 보조금 외의 몇 배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재정분석 없이 일괄적인 보조금 지원은 불합리함. 특히 서울시의 보조금 외의 수입에 관해서는 관리감독권한이 없으므로 각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전반 및 총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재정분석을 의뢰하여 보조금 지원체계 재검토를 조치할 것.
23.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사업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배포한 지키미 사업과 가장 큰 차이는 안심이 앱 연동이며, 긴급으로 계약발주를 한 이유도 앱 연동임에도 불구하고, 앱 연동율은 배포 2만건 중에 1만2천여건으로 연동율이 61%로 낮음.

    2차 3만건 계약발주도 긴급으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전문성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4.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반택시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배차 실패율이 높고 영아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불만이 있는데, 특정 업체만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음. 임산부 교통비처럼 택시 바우처를 주어서 어떤 택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25. 외국인 가사관리사 10월 급여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차등지급 되고 있으며, 월 최저인건비급여에 비해 급여가 낮음. 공공서비스를 민간기관에서 대행하게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의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매뉴얼, 지침 등 부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요금이 비싸서 저소득층은 이용하기 어려움. 최초 6개월 시범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26. 안심마을보안관은 같은 부서내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예산 낭비되고 있어 사업 통폐합 등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함.

-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이 구별 1개동으로 협소해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함께 하는 활용 방안을 검토 요청함.
- 안심마을보안관이 해마다 같은 지역만 순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편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이 필요함.

27. 공공예식장 관련 고급형, 실속형 등 비용이 저렴하지 않은데 협력업체 의무적 이용은 부담이 될 수 있음.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이용자들이 결혼식을 진행할 때 예약금 등을 걸어놓고 있는데 자본력이 약한 업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음. 또한 업체 공고문을 일정기간 유지바람.

◆ 여성가족재단 - 11건

1.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연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단체도 있음. 컨설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연속해서 평가가 저조한 단체의 경우 보다 심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 유튜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동영상 조회수가 73회, 79회 등 상당히 저조한 것을 볼 때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효성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서포터즈(120명)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것.
3. 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한 폭력 피해 심의 및 예방과 교육은 총 240회로 보고되었으나 이 중 30% 가량이 5~6명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강사료는 규모와 관계없이 1회당 15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등 실적을 늘리기 위한 형식적 교육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의례적 교육이 아닌 실제적으로 효과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운영할 것.
4.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사칭한 피싱문자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만으로 추가 피해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음. 디지털 성범죄 노출로 인한 공포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므로 홈페이지 보안 강화 등 철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5. 서울가족플라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025년까지임. 그동안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상당하고 건물 구조상 누수를 피하기 어려운 형태로 보여짐. 향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할 것으로 보여 건물하자 보수계획이 필요함.
6.. 여성가족재단 공간운영실 성과목표인 '안전사고 발생건수 0건'과 관련하여 출연기관 경영평가 안전 관리기준에만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또한 경영평가 안전 관리 기준 이외에는 내부적으로 안전사고 규정 기준 및 조치 규정이 없음. 대시민 시설 공간 운영에 있어 안전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시급한 시정조치가 요구됨. 또한 지표의 근거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안전사고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성과목표를 산정하는 등의 개선을 바람.

7. 여성가족재단은 향후 〈주요시책과 관련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재단의 설립목적과 조직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 재단이 해당분야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조사분석이 가능한지, ② 해당 연구과제 수행으로 여성가족 의제 발굴 및 현장 맞춤형 정책지원이란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한 예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의 경우 ① 여성가족재단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② 해당 연구가 이전 연구와 다른 차별성 또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연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듦)

8. 디지털 스튜디오 사업에 관한 사전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및 효과성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

   - 디지털 스튜디오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가 서울시 및 국공립 대학교수의 강사료 기준에 비해 과하며, 교육 총 참여인원 대비 소요비용도 지나치게 과다함. 교육과정 운영비에서 식당·편의점에서 식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내역, 컴퓨터 및 복사기 임대료를 불필요하게 지출한 내역을 소명하고,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조치를 하기 바람. 여성능력개발원 수탁기관이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영방식의 개선없이 예산지출하는 중간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개선 조치 바람.

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직 경력이 있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운영평가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책임연구자인 업체와 여성능력개발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이므로 시정 조치 바람.

10. 재단의 여성직원 근속년수가 타 출연기관 근속년수에 비하여 짧고 퇴사하는 직원이 많은데, 직장 내 갑질이나 낮은 보수, 관료적인 조직문화 등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분석하고 확산하는 것은 여성가족재단의 핵심 연구업무인데 위촉연구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대신 정리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개선을 바람.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9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애향원)**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고유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타 지역 센터들과 변별력을 가지도록 할 것.
2. 상담시간이 10시~17시로 직장을 가진 직장맘·대디가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중심의 상담시간으로 조정 필요.
3. 힐링영상은 다른 채널에서도 고품질의 영상이 많으므로 지양하기 바라며 직장맘지원센터에 맞는 소비자 중심의 영상제작으로 유튜브채널 운영관련 구독자 수와 조회 수 확대 필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4. 법인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센터장이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은 일반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법인의 정체성에 맞는 센터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조치 필요.
5.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고유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타 지역 센터들과 변별력을 가지도록 할 것.
6. 직장맘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재 10시부터 5시까지인 상담시간을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 필요.
7. 경력단절 예방 및 노동관련 상담 등의 주요사업이 새로일하기센터, 노동권익센터 등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서남권직장맘센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모색하기를 바람.
8. 센터 주요 이용시간(10시~17시)이 사실상 직장맘들이 휴가를 내서 와야 하는 시간임. 주 이용자들인 직장맘, 직장대디가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적절한 시간대로 변경 바람.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9. 강북 늘푸른교육센터의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함. 시설환경과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현장점검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종합평가 결과 낮은 점수에 대한 개선과 직원들의 복지, 처우개선 등 열악한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성과지표 목표는 계속 낮게 설정하고, 실적은 계속 높게 나옴. 실제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적절한 목표 설정할 것.

<강북,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공통>

11. 2개 기관에 대해 22~24년까지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해마다 비슷하게 지적되었는데,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조치 할 것.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12. 한 명의 청소년이 한 번 방문하여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각각 별개의 실적으로 중복집계 하거나, 제한된 인력에 비해 과도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과도한 실적 중심의 보고를 지양하고, 실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 있는 자료 제출할 것.
13.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사업비 비중이 약 20% 수준을 감안할 때 실제로 일시보호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지원되었을지 의문스러움. 사업비의 비중 올려야 함.
14. 기관에 대해 22~24년까지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해마다 비슷하게 지적되었고, 지난 회기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는 동의안을 받지 못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가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에서 기능을 이어받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십대여성건강센터>

15. 마약 관련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10대 여성들의 마약 사범율이 더 높은 추세를 보임. 특히 센터가 위치한 마포의 경우 홍대, 신촌 등 마약 유통이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성매매 등과 관련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 센터 운영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교육과 안내 뿐 아니라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16. 거의 비슷한 기간 비슷한 내용으로 2건의 프로그램을 한 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진행하였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서울시의 지도와 검토가 필요함.
17. 대부분 수의계약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외부 기관에서 대부분 시행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위탁을 준 사업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애향원 - 증인 이철**>**

18.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애향원은 사회복지시설 농촌 이전 계획에 따라, 재단법인 애향숙의 재산(김천시 토지)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애향원의 재산(중랑구 면목동 토지)을 감정평가 없이 교환하여 '84년 김천시로 이전하였음.
    이전 당시 이미 토지위에 재단법인 애향숙의 미등기건축물(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여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의 토지이용 및 활용이 제약받아 재산권에 침해(법정지상권)가 발생하였음. 사회복집법인 기독교감리회애향원 소유 토지 내, 건축물 중 '20.10월 재단법인 애향숙 소유로 일괄 등기된 12개 건물의 소유권은 재단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소유이며, 법인에서는 지금이라도 사회복지법인의 건축물로 등기를 변경하여야 함.
19. 애향원 시설의 누수 및 곰팡이 등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는 애향원에 전입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법인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함.
    또한, 사회복지법인 소유 토지 내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또한 사회복지지사업법 제26조의 의거하여 철저한 조사를 이행하기 바람.

2 건의사항

◆ 여성가족실 - 15건

1.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이 수반되어야 하나,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에는 성평등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주로 가임기 여성 지원과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성평등 관점 수반한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2.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주장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돌봄 노동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가 더 이상 서울시 공식입장이 되어서는 안 됨.
3.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했음에도 25년도부터 민간서비스로 변경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시장형으로 전환할 경우 가사관리사의 고용안정성 및 근로조건 약화, 서비스 수준 저하, 대형 업체의 시장 잠식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됨.
4.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시민건강국의 방문간호사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서 협업 체계 검토 바람.
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
6.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건에 대한 피해방지에 힘쓰기 바람.
7.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서로 다른 근로시간으로 인해 급여체계에 있어 편차(주당 41만원~71만원으로 최대 두배 정도 차이 발생)가 있으므로 임금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족으로 인한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기준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8. 가사관리사의 숙련도 및 서비스 태도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며 이용자 측에서도 언어소통 등에 대한 불만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하도록 노력할 것.
9. 아동 시설 배치 시,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선 바람.
10. 결혼식 지원사업 관련 서울시와 일반 기업의 협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려하길 바람.

11. 의자 대여나 서울시 공공기관 장소 협조 등 이용자가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12.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관련, 서울형데이케어센터처럼 인근 마을까지 운행하며 출퇴근시켜주는 차량 운행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건의함. 강서, 구로, 영등포, 양천은 시범사업이 없음.
13.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하자가 많음. 업체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함.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했으면 함. 예방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4.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일반형, 융합형이 자치구 지역에서 상호 간 갈등이 발생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시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15.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근본적으로 장애여성의 교육 수요가 많지 않고 취업률도 현저히 낮다는 한계가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한 지역에 치우쳐 있어 서울시 전역에 있는 장애여성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여건이라 장애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이 필요함.

◆ 여성가족재단 - 8건

1. 양성평등 실천이 재단의 주요 목표이고 중요함에도 '24년 양성평등 관련 연구는 1건에 불과하고 '25년도에도 연구계획이 2건만 예정되어 있음. 양성평등 관점이 후퇴되지 않도록 관련 연구에 매진해 주기 바람.
2.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의 딥페이크 특화 상담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방이 피해 상담 지원과 관련하여 명확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요식적인 배너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수정할 것을 건의함.
3.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딥페이크 상담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방에서 피해자 등이 상담할 경우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4.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대표번호를 이용자가 외우기 쉬운 번호 등 목적에 특화된 번호로 개선을 검토해 볼 것.
5.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관련 서울시교육청과의 스쿨핫라인 프로세스를 통해 연계 시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통한 연계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6. 서울가족플라자 2025년도 건물하자 보수계획을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하자 보수계획이 아닌 동일 하자 사유 발생 시 보수계획, 장마철 누수에 대처하기 위한 건물 구조 변경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 바람.
7. 출연기관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안전사고 발생건수 0건'으로 과소 설정하고 있음. 안전사고 예방차원의 목표설정 강화와 별도로 안전사고 규정 및 조치 규정을 내부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바람.
8.. 연구과제 자료에서 오타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노력할 것.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6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 개소 이후 12년이 지났고, 2018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내놓았지만, 상담서비스 위주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음. 법적 분쟁 해결 등 전문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밀착 지원 확대 등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
2.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의 역할 매우 중요한데, 2024년에는 회의를 한 번만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이행률 100%로 보고함. 역할과 활동 강화 필요.
3. 2024년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을 중소영세사업장 29곳에 대해 진행했는데, 모두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음. 어린이집 외에 다양한 사업장을 발굴하여 사업 진행할 것.
4. 온라인 상담신청하는 게시판의 제목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
5. 직장맘·대디와 같은 영어를 사용하지 말고 직장부모지원센터로 센터명을 바꾸어 시민들이 기관 취지의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음.
6. 가족센터와의 차별성이 있어야 함.
7. 법률지원팀장은 법률인(노무사)이 되어야 하며 운영위 자문위원도 특정 구성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8. 전체 운영비 5억9천만원인데 그 중 인건비 4억6천만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고, 단순 전화상담건으로 보여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십대여성건강센터>

9. 수도권 십대 여성 마약사범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 3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필로폰 등 향정사범도 증가하고 있음. 마약은 성적 착취나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십대여성청소년의 마약 노출 문제가 심각하므로 '25년도 사업 운영 시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프로그램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10.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이 많아 자립 초기 라포 형성과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양질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과 인원 확충 필요.
11. 영플러스서울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공간도 잘 조성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용률 저조함.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필요.
12.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지원의 초점이 주로 자립 직전이나 자립 이후에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 실질적 자립은 성장 과정에서부터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실태에 대한 점검과 파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13. 시설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음.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14. 내용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재검토가 필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업체선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가 필요.
15. 서울시의 위탁사업을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

16. 전담기관에서는 1인 46명을 사례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사례를 보면 1인 20명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음. 46명을 사례관리 하면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사례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인력보충의 필요성이 없을지 살펴볼 필요 있음. 또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고난도 전담팀의 전담인력은 1:1 전담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 바람.

-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으면 전문성이 결여되므로 직원처우가 열악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바람.
- 지도점검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람.

3 기타 자료요구 등

◆ 여성가족실 - 13건

1. 우먼업프로젝트 사업 개요 및 현황(진행사업, 예산규모 포함)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개요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사항
3. 안심벨(헬프미) 사용후기, 회수율
4.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대상 딥페이크 사건을 안심지원센터에 연계한 내역
5. 성폭력 피해자 시설별 실제 지원인원(누계구분)
6. 성매매 피해자 시설별 실제 지원인원(누계구분)
7. 해바라기센터 실제 지원인원(누계구분)
8.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
9. 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은평,중랑센터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익사업과 자치구 공모사업 수익의 운영비, 인건비 등 관련 경비 상세내역
10.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초, 송파, 은평 센터 외 15개센터 2023년 결산보고서 및 24년 예산서(보조금 외 포함)
11. 디지털 특화 프로그램 공모관련
    - 공모신청기관 제안신청서, 선정 기준 및 관련지침
12. 디지털 특화 프로그램 실적
    - 참여인원, 강사별 강의 건수, 총액, 만족도 조사 결과
13.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 애향원 소유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이력 포함),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필지별)

◆ 여성가족재단 - 14건

1. 2025년 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 목록(안)
2.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컨설팅 사업 세부내용
3. 한부모가족시설 관련 연구결과 요약본
4.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 발전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5. 스쿨핫라인에서 SPO의 역할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한 검증 절차, 방법

6. 서울시교육청과 구축한 핫라인 프로세스
7. 여성가족재단 2024년 수의계약 중 연구 관련 계약자료(과업지시서, 수의계약 사유서, 대표명 등)
8. 우먼업몰 관련
- 구직지원금으로 우먼업몰 이용률, 운영자 관련 서류, 협약서
9. 양성평등가족기금 관련
- 양성평등가족기금 예치금 관련 금리 명시 되어 있는 은행과의 기금 협약서
10. 방과후 어린이집 관련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방과후 어린이집 학년별(연령별) 이용 현황
1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 개인별 급여현황, 의식주 관련 평균비용
12. 공공예식장 관련
- 서울시 공공예식장 협력업체 관련서류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협약서)
13. 최근 3년 연구 관련 수의계약 내역
14. 여성가족재단 3년간 퇴사자 현황, 사유 등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21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활동자료
2. 사업장인식개선사업 활동자료
3. 최근 5년간 상담사례 분류별
4. 최근 5년간 노무상담, 심리상담 내역
5. 최근 5년간 권리구제 내역

6. 최근 5년간 찾아가는 교육, 법률교육 내역

7. 법률지원팀장 채용공고 및 자격조건

8. 운영위원, 자문위원 학력 및 경력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9. 최근 5년간 상담건수, 상담사례

10. 최근 5년간 노무사가 상담한 사례 및 노무사의 역할

11. 최근 5년간 법적 분쟁 시 법적·행정적 지원 사례(대표적 사례 제출)

12. 최근 5년간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및 관련 교육 건수, 주요 내용

13.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인건비 현황

- 2024년 인건비 예산 산출 내역
- 2024년 센터장, 저년차 노무사 인건비 내역

14. 2024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권리구제 사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15. 2024년 사업비 세부내역

- 인건비 명세표, 직원 이력서
- 1인가구 사례관리리스트 및 사례2건(개인정보 삭제)
- 거리아웃리치 실적 제출(세부사업별)
- 찾아가는 실무자 간담회 기관방문기록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16.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역할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 개입사례

17.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인력 처우, 경력, 역할, 서비스 제공 실적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18.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현황
19.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의 대학 진학률
20. 2024년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
21. 2024년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방별 생활인원 현황

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39	61	37	41
복지실	68	30	20	18
복지재단	23	8	6	9
복지 관련 시설 (증인 요구기관 포함)	48	23	11	14

2 세 부 내 역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복지실 - 30건

1.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성과발표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고, 유리한 점만 부각함.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의한 성과평가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실험 되도록 할 것.
 - 시범사업 1차연도와 2차연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과 지원기간이 다른데도 두 집단을 동일선상에 놓고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 등 성과 강조함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증가에 대한 설명 누락
 - 비교집단과의 비교에서 주요지표에 대한 비교 생략 등
2. '고독'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고, 이웃과 지역 등 민간의 역할 중요한데 민간 개입을 정책적으로 실행하기 쉽지 않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해 주기 바람.
3.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계획서 본문과 붙임 문서의 수당 지급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과 민원 발생하고 있음.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조례 또는 지침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4. 경로당 중식 주5일제 시행 관련하여, 인원수 고려한 부식비 차등 지원을 지적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부식비 증액이 반영 안 됨. 내년 상반기라도 조정되기 바람.
5.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 대부분이 지회 인건비임. '프로그램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최소 주 2회 건강, 미술 등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검토 바람.
6. 디딤돌소득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자격요건이 유지되는 바 서울시의 여러 발표 중 디딤돌소득 시범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효과와 명확히 구분하여 디딤돌소득에 의한 지출 증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분석해야 할 것임.

7.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평가모델에 대해 검증된 외부 기관의 심의·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와 인증절차를 강화하여 연구 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함.
8. 좋은돌봄인증기관의 예산지원이 기존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점과 관련하여 수혜대상 확대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연구를 수행할 것.
9. 선임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7명을 대상으로 12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전체 인증기관의 극소수에 해당하므로 처우개선방안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0. 복지관 직원 외부강의로 1년에 1,382여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함. 잦은 외부 활동으로 복지관 업무 집중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관리 등 조치할 것.
11. 복지관 직원이 외부 활동 시 강사료 외 추가로 출장비, 교통비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2.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위치가 경사져 있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적합하지 않음. 쉼터 4개의 수탁법인이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면 입소 인원을 유동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고, 종사자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니 검토 바람.
13. 자활사업의 생활시설 입소자가 등록장애인,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임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통합 지원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함.
14. 자활사업에 국비보조금이 투입됨에 따라 사업 유지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여짐. 지금 시대에 맞는 다른 사업을 발굴하여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 수립이 필요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 시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도록 구체적인 지도 감독 등 조치할 것.
15.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재직시 갑질 부당채용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관장 사직서 제출로 징계위원회가 취소되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다른 복지관으로 채용되었음. 시설장 채용 시 이전 직장에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후 채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16. 서울시와 시설 간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도·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
17. 24개 법인 장애인복지관의 3개년(22년~24년) 지도·점검 결과에서 계속하여 지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것.

18.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마다 매칭 대상자 수가 다르고 자치구별 고독사 위험군 편차도 심하며 야쿠르트 배송을 활용한 위험군 발굴 사업도 하는 등 중복사업이 많으므로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9. 2014년에 제정된 경로단 운영 규칙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것.
20. 어르신 일자리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일자리는 더 많은데,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함. 내년 일자리가 9만여 개로 늘어나면, 신청자가 13만명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21.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사직서 내고 1개월간 남은 휴가 쓰고 안나왔다면 아직 복지관 소속인데 이 기간 중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문제임. 사직서 내고 휴가 쓰고 안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함.
22. 특화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적은 상황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3종복지관 재구조화 TF를 운영한 결과가 미흡하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 구성 관련, 사회복지사협회는 공익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장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심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소수의 심의위원이 중복참여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신뢰성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강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심사 시 참석한 외부위원 2명이 같은 법인 소속인 것은 문제가 있음. 해당 위원 회피 시에는 4명이 심사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유효한 심의 위원의 수가 적어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24. 사단법인이 사회복지 관련 목적사업 변경으로 정관변경 신청을 했는데 주무부서인 복지실의 협의과정을 미이행하였으며, 총회 인원의 인감증명서를 미 첨부하는 등 정관변경 절차가 부실하였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우리나라 사회보장시스템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봄. 전국화 기회가 없어지거나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지 못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임.
    2021년 4월 최초 사업설계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가구를 대상으로 예

산이 40억원이었으나 2022년 10월 중위소득 85% 이하 1,600가구 대상으로 예산이 49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가족돌봄청년대상확대 등) 4번이나 치밀한 검증없이 설계가 변경됨.

또한 사업이 5년단위로 설계되어 해마다 예산심의를 의결해야 하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26. 2023년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전액 불용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고, LH를 통한 주택 공급 외에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함.
27.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인원 감소 문제가 있음. 종사자 탄력적 운영 등 시설의 효과적 운영이 필요함. 또한 쉼터는 비공개 시설이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모를 수 있으므로 대안 마련 필요함.

서대문피해장애인쉼터 이전 대상지가 엘리베이터 등이 없어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옆 건물에서 노출되는 등 쉼터로 적합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 필요.

28.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자치구별 경쟁률 편차가 큼. 선발인원을 자치구 배분이 아닌 시 전체로 해야 함.
29.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내년 수행 사업자 선정 시 많은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30.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짐. 뜻이 좋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센터 및 쉼터의 전체적인 통합이 필요함. 또한 10만이 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서울시 복지재단 - 8건

1. 공동연구원을 위촉할 때 객관적 절차가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위촉 계획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함.
2. 연구사업 수행내규 중 연구윤리 준수 규정에서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해 원칙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윤리 확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
3. 외부위원을 통해 '20~'24년까지 연구과제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감수를 진행해야 할 것.

4. 복지재단의 연구수행 절차를 강화하여 연구보고서의 기본적인 데이터 수치의 오류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서울시에서 100%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인용할 시 이로 인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결과물을 제공하도록 할 것.
5. 좋은돌봄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사업과 심사지표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절차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허들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서울시 내 보증금 650만원으로 이사 가능한 곳이 없을 것임.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내고 살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다시 고려하고 우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공동모금회와 논의하여 사업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6. 재단 발간 연구보고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공적 자료로 연구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오탈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발견된 오탈자를 수정토록 하여 공신력 있는 연구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7. 복지재단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예금이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 부채가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재정 문제가 있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8.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예산 5억원이 실질적 효과가 있는 생계비 등의 지원이 아닌 자원 연계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예산 대비 사업 효과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복지 관련 시설 -23건**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시립 양평 쉼터, 서울 광역자활센터,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1. 사업실적 집계시 실제 근무 인원에 따른 사업성과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2. 피해장애인쉼터 홍보방안 등 마련 필요하며, 특히 서대문피해장애인 쉼터 이전 대상지가 장애인쉼터로는 적합하지 않음. 또한 전체 피해장애인쉼터 4개소 법인을 하나로 모아서 종사자의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며 피해장애인들 퇴소 이후 모니터링 조치도 필요함.

<커리어플러스센터>

3.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보다 근로지원인 및 직무지도원 양성사업 중심으로 운영방향이 변질됨. 센터 본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인 훈련 및 취업지원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재정비할 것.
4. 발달장애인이 자립적으로 단독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바람.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5. 근로장애인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내역과 노사협의회 실시내역 정리하여 공유할 것.
6. 오금점에 투입된 재정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이나 운영수익이 비효율적임.
   오금점 현금 출납부상 비용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은 상황들이 반복되는 건 운영상 문제가 있기에 사업운영의 혁신이 필요함.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7. 민간위탁기관의 수탁기관 변경시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가 8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년 이후 대부분 퇴사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 및 인력관리에 신경 써 주기 바람.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8. 운영법인인 (사)동행연우회의 법인전입금 너무 적음.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시립 양평 쉼터>

9. 시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늘어나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0. 시설 이용자에 대한 연인원으로 자료 제출되어 1일 또는 한달간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알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11. 미해결 상태인 협동조합의 수익금 분배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서울 광역자활센터>

12.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비 사업에 대한 통합이 필요해 보임.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점검에 따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할 것.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13. 데이케어센터와 이동목욕센터 이중수급 4천만원이 발생하였음. 이에따라 법인 운영의 과실로 인한 법인의 영업정지 50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시의 요양센터 이월금으로 법인의 영업정지 과태료 1억원을 납부한 것은 위반임. 또한 채용공고 없이 채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기 바람.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14. 보호작업장에서 한 가지 임가공 작업만 진행 중인데, 참여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자립기반에 도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 검토할 것.
15. 알코올 및 정신질환 재활사업의 집행률 낮고,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회복지원 프로그램이 연말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의심됨. 재활 및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인별로 특성에 맞춰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
16. 일자리・신용회복 사업의 진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 바람.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17. 법인이 해당시설에 수행한 내부감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별다른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으나, 서울시에서의 지도·감독 결과로는 결산서상 이월금과 통장 잔액 불일치, 외부 회계감사 미실시 등 서울시와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상이한바 내부 감사를 공정하게 하여 투명하고 정당한 운영을 위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18. 조직의 관리 운영 측면에서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직원 채용시 면접관 관리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구시대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현행 법규 등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조치 필요.
19.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사업 중 '청년더부러지원사업'의 사업명에서 '더부러'라는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명 변경 검토 필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 증인 기민희, 문동팔, 최병학**>**

20. 한국재활재단에서 법인 후원금을 복지관의 지정된 계좌에만 보내야 했으나 일반계좌로 나누어 보내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 발생함. 재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
21. 복지관 갑질 등 비리제보 이후 재위탁 심사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재위탁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함.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 증인 심재은**>**

22. 2023년 결산에 이월금 16억원으로 매년 6억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도 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하는 후원금 역시 사용용도를 위반하고 있음. 그렇게 남은 후원금의 잔액이 법인통장에 16억원 쌓여 있음.

    법인의 목적 사업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마포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전화상담시설 운영은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법인은 17억여원의 이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법인전입금을 단 8,520,000원을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급함. 또한, 전문상담사 상근근로자가 1명으로 민감한 상담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음.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 50%를 초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급여지급 등 간접비로 '22년도 64%, '23년도 81%를 초과하여 사용함. 또한 오피스텔 기본재산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수익은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함.

23. 법인 허가 취소 관련 규정 점검이 필요함.

2 건의사항

◆ 복지실 -20건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발표한 '공공돌봄 강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실효성이 우려됨.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 역할 증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인력 구성(정원 24명 가운데 5명만 신규채용, 나머지 19명은 기존 복지재단 인력 활용)으로 충분한 서비스 제공 가능할지 의문임.
- 안심돌봄 120 전문적 상담과 연계 가능할지
- 좋은돌봄 인증기관 7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해도 서울시 전체 방문요양기관의 1%에 불과한데 좋은돌봄 인증기관 통한 고난도 및 취약시간대 돌봄 공백 해소 가능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2.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쉼터, 직업재활시설 등 복지실 소관 기관들의 이직률 높고, 3년 미만 근무자 비율도 매우 높음.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필요함.
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이 여전히 열악함.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위해 더 노력해 주기 바라며,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4. 복지실 소관 각종위원회 개최 및 예산집행 실적 저조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5.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집행률 저조하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부족으로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6.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 가구주 비율이 과소표집 되었고 39세 이하 연령층은 과대표집 되어 데이터의 균형성이 결여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전체적·균형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7.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외부 강의 상한선 등 규정 마련할 것.
9. 3종 복지관 임직원 대상 공통 외부 활동 기준 마련이 필요함.
10.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

11. 자활사업 지원 대상자가 중복지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필요함.
12. 자활사업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보조금 정산 시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지도 감독을 할 것.
13.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경로당 대상 체조교실을 운영하였는데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았음. 이와 관련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가능을 검토할 것.
14. 경로부장이 하는 일은 각 경로당 다니면서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잘 안배하여 격무업무에 직원이 더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자치구별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남. 강북구만 봐도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예산 지원액이 매우 적어 보이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16. 법인전입금 용도 사용에 대한 지침이 없음. 프로그램비, 기능보강비 등 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람.
17.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이 적음.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도 새로 구성하는 등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8. 복지관에 시비로 85%가 지원 되고 있는데 간판에서는 서울시를 나타낼 수 있는 표기가 미흡함. 구립이나 운영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시비 지원 복지관인지 알 수 없음.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간판을 다시 디자인할 것을 제안함.
19. 3종복지관 시간외수당을 주기 위한 근무기록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음.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전자시스템 도입을 건의함.
20. 예비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라며 3종복지관의 현실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기 바람.

◆ 서울시 복지재단 - 6건

1. 최근 직접지원 사업이 증가하면서 재단의 고유사업 축소와 직원들 업무과중이 우려됨. 직접사업을 하더라도 재단의 고유기능인 연구사업과 병행하도록 하고, 직원의 업무 과중 여부도 점검 바람.

2. 시설 평가 시 각 시설의 목표와 사업 특성에 따른 지표를 마련해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에는 피드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취업, 매출, 근로장애인의 소득 및 근로기간 등이 중요한데 평가항목에 잘 드러나지 않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 및 목표에 맞는 지표를 마련해서 평가할 것.
3. 표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립과 보고서의 신뢰성을 위해 표절검사 수행을 고려하기 바람.
4. 대상자가 서울시 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증금을 내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장기 환수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서울형좋은돌봄인증 관련 현장 심사위원 93명 중 대부분이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시설 종사자로 구성되어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6. 선진적이고 현재 패러다임에 맞는 미션과 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새롭게 대표이사 취임 후 경영방침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 복지 관련 시설 – 11건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시립 양평 쉼터, 서울 광역자활센터,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1. 사업실적 집계시 실제 사업성과를 측정 가능하도록 실인원 기반에 맞는 실적을 작성할 것.

<커리어플러스센터>

2.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센터명이 영어로 되어 있으며 또한 센터명으로 발달장애인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센터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으로 한글 표현으로 검토할 것.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3. 장애인이 훈련생 과정을 거쳐 근로장애인으로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훈련장애인 제도 활용 검토 바람.
4.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장애인'이라는 명칭 대신 '근로장애인'이라는 명칭 사용할 것을 제안함.
5. 법인에 지급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
6. 시설에서 고용된 장애근로인으로 인해 발생된 고용장려금을 시설에서 더 사용할 있도록 법인과 협의해 주기 바람.

<시립 양평 쉼터>

7. 시설 이용자가 줄고 있는 원인과 비어있는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
8. 시설 이용자에 대한 1일 또는 한달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필요.

<서울 광역자활센터>

9.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비 사업에 대한 통합과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점검, 사업모델 제시.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10. 2019년 10월 말 정신과 촉탁의 진료 종료로 외부진료만 이루어지고 있음. 정신질환 및 알코올 사용장애 입소자 비율이 많고 전문적 회복 기능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촉탁의 채용이 필요함.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11. 민간위탁기관 종합성과평가에서 성희롱, 성폭행 등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감점사례가 나왔으며 '21년 84점이었으나, '24년 77점을 받은 바 각 기관에서 평가 결과 지적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

3 기타 자료요구

◆ 복지실 - 18건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역대 원장 임기, 주요 이력
2. 청각장애인 쉼터 현황(자치구별)
3. 시각장애인 쉼터 현황(자치구별)
4.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자치구별 집행현황
5. 경로당 중식 주5일제 시행 이후 중식도우미 추가배치 현황
6. 작년 한 해동안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한 야간 돌봄, 고난도돌봄 현황 자료
7. 한국재활재단 장애인 활동보조사 3개년 월별 교육수입 현황
8. 굿윌스토어 마천미래형 직업재활시설 3개년 월별 고용장려금 수입 현황
9.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오금점 23년, 24년 월별 매출, 3개년 관리비 현황, 한마음캠프 사업 계획서
10. 굿윌스토어 마천 미래형직업재활시설 오금점 3개년 법인 전입금표
11. 노인지회 경로부장 24년 계획서상 45명 자료
12. 경로당 개수 및 인원
13.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관련
- 별도 세무보고 자료, 2023년도 세입세출 중 상세 세출 현황, 사업자등록증
14.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장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치 급여 받았는지 여부
15.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계약) 심사위원 후보등록신청자 명단 2년치(23년, 24년)
16. 법인전입금 기준
17.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현황
18. 번동, 북서울 장애인작업장 약정 및 법인 전입금 내역

◆ 서울시 복지재단 - 9건

1. 복지재단 위탁사업 목록 및 최근 5년간 신규 서울시 위탁사업 목록
2. 최근 5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3.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주요 기능·역할 및 인력
4.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계획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결과 보고서 기관 피드백 자료
6. 좋은돌봄인증기관이 25개 기관이 인증된다는 가정하에 선임요양보호사 직원의 처우개선이 7명으로 12개월간 120만원에 대한 현황 자료
7. 3개년 (22,23,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컨설팅 사업 현황 및 연도별 예산
8. 희망두배청년 통장 성과
9. 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예산이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함.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별도로 자료제출 바람

◆ 복지 관련 시설 -14건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시립 양평 쉼터,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 광역자활센터,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커리어플러스센터>

1. 사업 수입 내역
2. 2024년 집행 내역 (제출자료 정정)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3. 만나코퍼레이션 업체의 화물운송자격 관련 증명서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4.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운영법인 동행연우회 산하 시설 법인전입금 내역

<시립 양평 쉼터>

5. 이용자 현황(연령, 기간, 이용 구분 등)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6. 이용자 현황(연령, 기간, 이용 구분 등)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7.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이전 계획

8. 촉탁의 계약조건

<서울 광역자활센터>

9. 업무추진비로 화환 보내는 근거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10. 알코올해독센터 실적

11. 알코올 및 정신재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진행기록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12. 물품후원관련 인수증 포함 증빙서류

13. 차량이용관련 증빙서류

14. 동물후원 지정후원금 증빙 서류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04	33	34	37
시민건강국	60	12	22	26
보건환경연구원	19	9	2	8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12	8	4	-
건강 관련 시설	13	4	6	3

2 세 부 내 역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시민건강국 -12건

1. 손목닥터9988 사업 관련 실제 건강 개선 효과성 검증 없이 예산 등 사업 규모를 급속히 확대함. 불필요한 포인트 지급 줄이고, 건강 개선에 실질적 도움 되도록 포인트 지급 체계를 개편할 것.
2. 손목닥터9988 사업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상시모집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가입자 수 추계 및 예산운용의 불확실성을 초래함. 안정적 예산 운용을 위해 모집방식 재검토 필요함.
3.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는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기존 예산 수반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수립할 것.
4.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하여 자치구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하지만, 자치구는 인증받은 기관이 아니니, 국가에서 인증받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자살예방에 대한 실효성 방안의 하나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함
6.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못 받을 정도로 생계형 자영업자가 코로나 상황 때보다 더 어려움. 5백만원~1천만원 등의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저금리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7.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재정 상태는 당기순손실이 자본을 잠식한 열악한 상태로, 이러한 기관이 적격자 심의를 통과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개선이 필요함.
8. 정신생활시설 현장평가 관련 부실한 사례 발견 됨. 구로다온(행감책자 527쪽) 시설은 종합평가 의견에 인권항목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기재하였으나, '이용자의 권리 및 인권 항목'을 10점 만점에 12점을 주는 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개선이 필요함.

9.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이 아닌 당사자에 위탁하다보니 자격 등 모든 것이 애매함. 사례관리가 되지 않는 기관이므로 초기면담부터 잘 해야하며 초기면담 기록지 양식 변경 등 이용자 관리 점검이 필요함. 올해 중 시설장을 모아서 지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정 해야 함. 사례관리 전담요원이라도 두어야 함.
10. '25년 시립병원 손실보전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주체는 재난안전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김.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1. 최근 백일해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임산부의 백일해 접종이 중요해짐. 접종 가격은 상이하며 임신출산 바우처로 접종 권고하나 가족 등도 모두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전염성이 높으므로 특히 임산부 본인은 무료 접종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지원 필요함(용산구, 서대문구는 배우자 무료접종 시행 중)
12. 정신병원 행정입원 치료비에 대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예산 소진으로 인해 병원 미수금이 계속 발생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경기도 상황을 참고하여 국비가 소진되어도 지자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 9건

1. 연구과제 중 시민들에게 유익한 결과물이 많은데도 관련 보도자료 배포가 거의 없으며,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적고, 카드뉴스의 품질도 낮아 홍보의 효과성이 미미해 보임. 전체 예산 중 홍보비 비중도 너무 적음. 홍보 강화가 필요함.
2. 내구연한 초과 검사장비가 다수 있는데, 예산 부족과 고가장비 우선 구매 정책으로 장비 교체가 지연되고 있음. 검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뢰도 높은 장비로 정확한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교체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3. 업무보고서에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및 운영 현황이 누락되어 파악이 어려우므로,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음 상임위 업무보고서에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포함하고,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4. 동물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생사법경찰단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대응이 원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5. CPR 서포터즈 관련 활용도가 떨어지고 공공 앱 실태점검 등을 통해 미흡함이 확인되어 지속적 유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폐기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6. 언론보도에서 심리부검대상자 관련 기사를 확인하면 자살사망자가 자살 3개월 전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방문율은 2.3%에 그쳐 자살예방센터 전화상담 응답률 제고 등 개편이 필요함.
7. 자살예방센터 고가의 임차료 개선을 위해 이전추진 등을 통한 예산절감 필요함.
8. 유흥업소 마약 간이검사키트의 효용성 및 결과의 타당성 등 신뢰도를 고려해야 할 것.
9. 유흥시설 마약류 예방 관련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세부사업 편성 및 집행내역 시정이 필요.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8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임차한 공간 일부를 광역심리지원센터에 무상전대한 행위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됨. 이를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동일한 사례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통폐합으로 인해 구성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없는지 살피고, 연구원들의 학력 및 경력 대비 낮은 연봉체계 등 조직 운영상 문제 없는지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통폐합 목적 실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시행할 것.
3.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이용률 저조한데, 홍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가 원인으로 판단됨. 검진센터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동수단 확보,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의료원, 보라매 병원 공통>

4.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의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보면 퇴직급여충당금 차지 비중이 매우 높음. 서울의료원 부채비율은 계산이 의미 없는 자본잠식 상태이고, 보라매 병원은 이것 보다 좀더 좋긴한데 당기순손실(약 374%)으로 나와 있어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음.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모두, 민간병원에 비해 수익이 낮은 반면, 인건비·관리운영비가 높고, 경영효율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병원 평가 기준에서 재무적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므로, 의료원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며, 경남에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존폐논란에 휘말릴 수 있음.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시립병원 친인척 채용 현황과 관련하여 사후에 친인척 여부에 대하여 발견되면 채용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대책을 세울 것.

<어린이병원>

6. 레인보우 예술학교 학생 출결 통지서 등 공문 시행 시, 붙임 파일과 제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식별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소지가 있음.

<보라매병원>

7. 장례식장 수입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8.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수입금 횡령 사건 피해액 환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의 회계 감독관리에 대한 방침을 세워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조치 할 것.

◆ 건강 관련 기관 -4건

(한센병관리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한센병관리사업>

1. 외래진료 피부검진의 경우 의료수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 2억원의 자체수익금은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해 보임.
2. 한센과 관련 없는 분야의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해야 할 운영위원회에 전문적인 분들이 참여해야 할 것임.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3. 조직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 자구노력으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재구조화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4. 예산 중 인건비가 84%, 사업비가 4%를 차지함.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과다 및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추후 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길 바람.

2 건의사항

◆ 시민건강국 - 22건

1. 손목닥터9988 참여자에 대한 연령별 심층면접(FGI)을 통해 건강 개선 효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사업방향을 보완할 것을 제안함.
2. 유휴 시유재산을 활용해 '아이존' 신규 확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반가운 일임. 그러나 현장의 높은 수요와 대기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6년 사업 시작 이후 약 20년 동안 단 8개소만 운영되고 신규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음. 현재 진행 중인 확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 현재 운영 중인 아이존 8개소 중 2곳의 시설장이 공석인 상태임. 관리·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지도점검하고, 시설장을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람.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위탁사업비로 임차한 사무공간 일부를 '광역심리지원센터'에 무상전대한 행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
5. 2022년 5월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사업의 진행이 미진함. 조속히 추진 바람.
6. 2022년 5월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진행이 미진함. 조속히 추진 바람.
7.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통합되었으나, 통합 이후 성과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분석과 진단을 통해 통폐합 목적 실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검토할 것.
8. 아이존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 치료센터를 인증하고, 해당 센터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9. 시민건강국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10. 아동청소년 건강지원 시설에 대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발달장애 초등학생 대상자들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
11.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를 국가인증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2.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마약류 예방 관련 관(공공)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함. 부모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람.
14. 마약류 대책 관련, 민생사법경찰국은 마약수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는 보건의료정책과(마약대응팀, 의약무팀)에서 담당하는 등 서울시 시민건강국 및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복잡성을 띠고 있음.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가정 방문에 방문간호사가 2인1조 원칙임에도 상당수 자치구가 1인 방문을 진행하고 있음. 혹시 모를 위험상황 대비와 안전 확보를 위해 2인1조 방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
16.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후 센터 설립 조례 발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역보고서에 조례 내용이 포함되는 등 순서가 틀린 것으로 보임. 타당성 조사 내용 중 센터 수요조사시 5점 척도가 아닌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정부 포털 사이트 인지도 및 센터에서 받고 싶은 정보, 선호하는 교육 방법 등 문항 구성이 평균 점수를 올리거나 중앙부처 인지도를 낮추고,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의도 있는 구성으로 보임.

    센터의 기능이 필요한지 운영평가를 살펴본 후 내년 상반기에 운영종료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7. 시립병원 전반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장비가 많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서북병원, 동부병원 등은 검사장비 수가 적음. 해당 문제가 서울시의 협조 부족인지 병원의 의지 부족 문제인지 간에 개선이 필요하며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심의 전 보고바람.
18. 손목닥터 9988은 회원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지, 시민의 건강 등 변화가 목표인지 불분명함.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비용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람.

19. 백일해로 신생아 사망한 사건 등 24년도 백일해 환자가 3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급성호흡기 질환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홍보 등을 통한 예방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람.
20. 서울불꽃축제 직후 이촌한강공원의 미세먼지가 1,016$\mu g/m^3$에 달해 대기질 오염이 심각하며, 강한 빛과 소음,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 우려도 큼. 따라서 축제 추진 협조부서인 시민건강국이 레이저 드론 등과 같이 환경친화적 축제 대안을 검토하고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주기를 바람.
21.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서울도 이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포함되었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서울시 대책 수립 필요함.
22.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올해 예산 집행률 저조하니 내년은 신속 추진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서울시 지하역사 라돈 농도 전수 조사계획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하고 정확한 라돈 검사를 수행할 것.

2.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시험성적서 관리 및 발급 체계 미흡, 폐기물 보관 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철저히 개선 조치를 이행해 주기를 바라며,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4건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

1. 레인보우 예술학교 관련 추진실적 기준이 연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인원도 함께 표시하여 주시기 바람.

<은평병원>

2. 마약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 참여도가 제일 중요함.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과 관이 같이 갈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에 인색함. 홍보를 통한 예방 교육이 중요. 홍보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보라매병원>

3. 장례식장 수입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4. 비자의 보호입원 절차 미준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건강 관련 기관 -6건

(서울시 제대혈은행, 에이즈 예방 홍보, 에이즈 예방 교육,
한센병관리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서울시 제대혈은행>

1. 조례에 제대혈 공급비용 감면대상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규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추가되었으나, 실제 감면 및 면제 내역은 없는 상황임.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에이즈 예방 홍보, 에이즈 예방 교육 공통 >

2.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 구성에 대해 개선 필요함.

<에이즈 예방 교육>

3. 한부모가정 대상 교육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에이즈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확충할 것.

<한센병관리사업>

5. 한센병 치료보다는 장비 등 일반 피부과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도점검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6.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인력 유지율을 높이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적 복지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3 기타 자료요구

◆ 시민건강국 - 26건

1. 손목닥터 9988 관련
   - 이용자 중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회원현황
   (회원수 및 포인트 지급현황)
2. 시립은혜로운집 관련 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반납내역, 종합성과평가 결과
3.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관련
   - 무상사용 근거 및 관련 방침, 인테리어 비용 관련 지출자료(예산사업명 포함)
4. 감염병연구센터 조직개편 관련
   - 2022년 대비 인력 및 조직 현황, 근속 여부, 직급 관련 자격 현황
   - 감염병연구센터 폐지 관련 업무 이관내역
5. 코로나19 대응 백서
6.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종합대책 또는 보완대책 수립 여부(방침서 및 계획서, 예산반영 여부)
7. 시립병원(직영병원 제외) 전체 코로나19(2023.1월) 이후 금융기관 차입 현황
   - 이자율, 담보율, 서울시장 보증서, 대출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대출금 상환 내역 및 상환 계획
8. '22년 5월 공공의료 확충계획 관련 자료
   - 서울형 공공병원 추진실적, 예타 제출자료
   - 공공재활병원 추진실적
   - 사업별 방침서, 예산현황('22년 이후)
   - 강북구 어린이병원 설립 관련 추진실적
9. '22년 5월 공공의료 확충계획 예산 반영 자료
   - 항목별·사업별로 대차대조표 제출
10. 코로나19(2023.1월) 이후 시립병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또는 설비 투자 관련 자료 일체
11.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계약 내용
   - 보수 및 겸직을 통한 보수 포함

12. 시립병원별 전공의 사직 현황(퇴직금 지급내역 포함)
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관련
  - 아이존 근무자 이력 및 자격, 세부예산 내역(프로그램별 구분)
14. 보건지소 자조모임, 건강소모임 운영 현황
  - 예산, 자조모임이나 건강소모임의 방향, 대상자 수와 활동사항 포함
15. 마약류 예방사업 유흥업소 키트 배부 관련자료
16. 식품진흥기금 사용한 마약류 관리 예방사업 세부내용
17. 마약류 키트 배부 관련 예산 사업 편성내역
18. 시림병원 재활 로봇 보유 현황(대수, 가격)
19. 시립병원과 위탁병원 장비 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 내역서
  - 교체 추정 소요금액 포함
20. 최근 3년간 시립병원별(전체) 친인척 채용 현황
21. 손목닥터 9988 관련
  - 등록회원수('24년 현재 기준, 워치, 앱 구분, 연령별, 성별 구분)
  - 신체활동(걷기) 관련 자료
   (1일 2천보이하, 2~4천보, 4~6천보, 6~8천보, 8천보 이상으로 구분)
  - 향후 등록 회원수 목표와 소요예산
22. 최근 5년간('21~25년)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보조금 교부 현황
  - 예산편성 시기별(본예산과 추경예산), 일반회계, 기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공공의료 손실보전금과 기타(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산출한 '25년도 공공의료손실보전금 산출자료
23.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근거
24. 야간에 난임 시술 등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내 안내사항 등)
25. 기억키움학교, 초록기억카페 운영예산, 이용현황 등
26. 정신병원 입원 관련 민원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 8건

1. 특정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
   - 업체선정 과정 및 계약기간, 처리량, 처리단가 등
2. 내구연한 지난 장비 내역 등 현황 자료
3. 방사능, 식품 등 검사 관련 사업의 보건소 및 서울시 유관부서와 협력 추진현황
4. 동물위생시험소 관련 수의법의검사 시스템 현황 및 실시 자료
5. 동물위생시험소 운영활성화, 개선방안 계획에 대한 내역
6.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동안 조사했었던 내역
7. 학교 급식 관련 방사능 검사 현황 제출
8.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 유해물질 조사 관련
   - 실내공기질 부적합 14개소에 대한 조치사항 등

◆ 건강 관련 기관 -3건

(한센병관리사업)

<한센병관리사업>

1. 서울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관련
   - 서울시 보조금 외 2023년, 2024년 연도별 의료수입 및 수입 세부내역(진료수입, 검진수입 구분하여 공단에서 지급받은 급여액)
   - 위 2023년, 2024년 연도별 의료수입에 대한 집행내역(인건비, 운영비, 의료장비 구입 등 구분하여 집행액)
   - 2023년 서울시 보조금 예산 세부 결산서 및 2024 집행 내역(인건비, 사업비 등 집행내역을 세부 결산서 항목 기준으로 작성)
2. 한센의원 주요 장비 현황, 병원근무 직원이력 포함된 명단
3. 한센복지협회 만족도 조사 통해서 환자 필요물품 수요 파악하고 있는 부분 제출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총 괄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합 계	298	211	37	50
재난안전실 (도로사업소 포함)	83	61	7	15
소방재난본부	67	51	0	1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포함)	42	25	11	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12	7	4	1
건설기술정책관 (품질시험소 포함)	34	19	8	7
도시기반시설본부 (시 설 국)	60	48	7	5

가. 시정 · 처리 요구사항 …… 211건

[재난안전실] — 61건

1.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시범 적용한 버스 정류장 뿐만 아니라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까지 재강슬래그가 포함된 강성포장을 확대 추진할 것

2. 경계석이 미끄러워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계석 미끄럼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3. 영동대로 북단 고가 방음시설 수선 유지 충당금을 시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대책을 마련할 것

4. 광진교 하부공간 계단이 개방되어 있어 시민들 이용에 위험한 측면이 있는바, 정비할 것

5. 성수역 출구와 같이 CCTV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지역은 보행공간 확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6. 보도와 관련하여 최소유효폭 1.5m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

7.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구간 자료 검토 후 정비 가능한 지역은 정비할 것

1.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배상금 지급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재난문자 발송 시 도로통제 구간에 대해 정확히 기재할 것

3. 지주설치 위치 관련 민원이 많은데 지하에 매설하는 등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

4. 교통안전시설 중 제어기와 관련하여 침수 시 이상없도록 신속히 교체할 것

5. 경계석, 점자형 보도블록은 미끄러우므로 미끄럼방지를 위해 안전한 재질로 교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6. 공사장 안내판에 현장소장 연락처(공용 휴대폰)를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 돈화문로 11길 일대 포차거리 및 동묘시장에는 보행위험 요소가 많아 위험하므로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8. 차량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지하매설물 등이 연쇄적으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

9. 신호수 종사자 안전장비가 부실하고 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적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사장 신호수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0.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 특별교부금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교부되어 집행되지 못하는 집행 문제가 있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1. 세굴방지공에 대해 일정한 주기로 점검 할 것

12. 교량 상부 구조에 비해 교량 하부 구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임. 교량 하부 관리를 위해 정확히 유속 데이터를 관리 할 것

13. 최근 5년간, 수중구조물 점검 용역 낙찰 업체가 달라도 잠수부는 동일한 부분에 대해 점검할 것

14. 광진교, 성산대교 등 손상이 발생한 후 4~5년이 지나 보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손상을 방치하지 말 것

15. 수중 구조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수중 구조물 균열에 대한 기준 강화를 추진토록 할 것

16.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속히 보수할 것

17. 한강교량의 안전상 문제를 고려하여 원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 추가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

18. 잠수교 공중 보행로 공모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해 철회된 사례가 있는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19. 한강버스라는 새로운 대중교통 운행 추진에 대해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바, 사전에 시민의 안전 및 재난 안전 관점에서 철저한 검토 후 시행할 것

20. 최근 5년간 지하도상가 공기 중 TVOC(휘발성 유기화합물) 평균 농도가 증가 추세 중에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9개소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1. 포트홀이 '22.~'24.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 지하도상가 임대료 체납 해결을 위해 세무조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3.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매우 많고 예산 집행 지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연도 내 예산집행이 가능토록 계획성 있게 사업추진 일정을 정하여 예산 집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4. 안전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 참석 위원이 중복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5. 안전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비롯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출석률 50% 미만인 위원들을 해촉할 것

26. 어린이안전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다수 발견된바,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

27. 아치 단부 물고임, 방호울타리 기둥 밑판 부식, 암사IC 하류부 방음벽 유리파손, 교통안전시설물에 광고물부착, 유지관리용 보행로 관리 미흡, 교각손상 등 구리암사대교 여러 부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시정 조치할 것

28. 시설물 대장에 있는 암사동 신사아파트는 없어진 아파트로 수정할 것

29. 암사지하차도 터널 높이와 관련해 관리대장과 실제 측정 치가 7cm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기록관리토록 할 것

30. 암사지하차도의 경우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고 손상이 있는 상황임에도 상태등급이 A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재평가를 실시할 것

31. 고덕천교에 균열 등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할 것

32. 지중화 사업은 주민 민원이 많은 사업으로 신속히 진행할 것

33. 신기술 도입 등으로 서부간서지하도로 터널 끼임 사고 및 오진입 사고를 방지할 것

34. 서부간선지하도로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방안을 마련할 것

35. 수출의 다리 사업이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할 것

36. 구로IC 도로구조 개선 사업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문제없이 잘 진행할 것

37. 서소문고가 개축 지연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만큼 더 이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할 것

38. 공동구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하는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도입을 추진할 것

39. 지반침하로 피해입은 시민에게 충분한 보상할 것

40.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반침하관측망 등 신기술 도입으로 지반침하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시민제보사항 〔붙임〕연번2,3 참조)

41. 제설제를 충분히 비축하여 이상기후에 대비할 것

42. 의료파업으로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1,000억을 부담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보전대책을 강구할 것

43. 재난안전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44. 방음터널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할 것

45.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도 육안으로 하자가 있는 구간이 많이 목격되고 있음. 기존 설치된 105개소의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 전후를 비교하여 안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

46. 구로구 IC 구조 개선 사업 관련 4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검토하여 문제없이 진행하기 바람

47. 2호선 신림역~신대방역 구간에는 방음벽이 설치된 반면, 신대방역~대림역 구간에는 설치되지 않음. 이에 대해 소관 부서와 논의 바람.

48.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노후된 공공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유지 보수 미흡으로 개선사항 요청 1) 서울 내 주요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정기 점검 주기 강화. 2) 긴급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예산 우선 배정. 3) 사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인프라 단계별 보수 계획 수립. 4)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신고 플랫폼 운영.
(〔붙임〕연번1 참조)

49.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무불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통신사 지주, CCTV, 교통안내 표지판 지주 등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도시 미관도 저해하는 만큼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주 설치 인가 및 관리 감독처를 일관화 할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5 참조)

50.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횡단보도 턱낮춤이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 설치되고 있으나 오히려 좁거나 제거되지 못한 시설물들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는 만큼 보도의 턱낮춤보다는 횡단보도의 턱을 인도만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6 참조)

51.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경부고속도로 내 죽전역 임시정거장이나 가천대역 임시정거장과 같이 복잡한 도심에 들어오지 않아도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올림픽대로 인근 천호역이나 암사역 등 전철과 연계되는 지점에 임시정거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7 참조)

5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영등포구 소재 도림동 보도블럭과 경계석 교체 공사 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방안을 요청함.
(〔붙임〕연번8 참조)

5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수락고가차도의 방음벽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주민설명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수락고가차도 공사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붙임〕연번9 참조)

54.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보도의 낙엽을 차도로 날려 보내 방치함으로써 차도 배수로가 막히는 일이 발생하고 운행하는 차량으로 낙엽이 날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보도의 낙엽을 바로 포대에 담아 치우거나 보도와 차도의 낙엽을 동시에 청소하는 등 방안 마련을 요청함.
(〔붙임〕연번10 참조)

[소방재난본부] — 51 건

1. 소방청의 언론 대응 지침(2024.9.14.)은 소방대원들의 언론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와 대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2024년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후 회계연도부터 소방 분야에 동일한 비율로 예산이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임.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예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3. 현재 소방관 신임 교육 기간은 6개월(24주)로 간부후보생 교육기간인 1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다만, 소방대원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다방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임. 따라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법정 교육기간 개선을 위해 소방청에 적극 건의할 것.

4. 과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전문교육과정의 훈련 기간(현재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3일,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지휘관 양성 1일)의 확대와 교육 내용의 심화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5.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전반기와 후반기 구분 없이 관내 25개 소방관서에서 각각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합동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6. 도봉구 아파트 화재와 부천 숙박시설 화재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 훈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대단지, 고층 건물, 학교, 병원, 호텔 등의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구청, 시민, 소방서가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7. 부천 호텔 화재 시 에어매트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소방재난본부는 에어매트의 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에어매트 설치 및 운용이 화재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현장 중심의 훈련 방안을 강구할 것.

8.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연기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피난용 소방용품의 도입이 필요한 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소방용품 개발의 필요성을 소방청에 적극 건의할 것.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특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서 노후 전선 교체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자부담이 많아 신청이 저조하여 전통시장은 여전히 전기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황임.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적극 협력하여 노후 전기 시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10.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었고 서울시 내 전통시장 346개소에 자율소방대가 전부 구성된 만큼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

11. 남구로, 광장, 까치산, 마장축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진된 화재순찰로봇의 시범운영 결과, 화재발생 제로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따라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상인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화재순찰로봇 운영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

12. 지난 10월 28일 소방재난본부의 화재증거물 감정센터가 소방청이 인증하는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되었음.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의회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3. 전기자동차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리튬 전용 D급 소화기나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관련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의 신제품 개발이 지연 중임. 이에 소방청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14. 화재 대피를 위한 완강기 불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완강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한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15. 현재 소방재난본부는 종로, 중부 소방서를 제외한 23개소 소방서와 보라매와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에서 완강기 체험시설을 운영중이나, 이 중 실제 탑승하여 내려오는 체험이 가능한 곳은 19개소이며 더욱이 성인 체험시설은 단 6개소에 불과함. 따라서, 모든 연령층에게 완강기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완강기체험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것.

16. 인천 청라 전기차 주차장 화재를 통해 관로 보온재로 인한 화재 확산, 연기로 인한 유도등 식별 불가, 인접 차량 화재 확산 방지 대책 부재 등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소방재난본부는 이를 서울시시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소방청과 행안부에 적극 건의할 것.

17. 소방사다리차는 진입이 어려운 고층 화재에서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화재현장 투입과 인명 구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존의 소방사다리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화재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소형사다리차의 추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

18. 소방학교는 신규 임용 예정자, 전문교육 대원, 그리고 민간교육 참가자 등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시설로, 교육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교육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19. 다수의 소방관 사상자가 발생한 양천구 목동 아파트 화재 및 폭발사고 당시 'SOP 200 화재대응 공통 표준작전절차'에 따른 사전 조치인 가스 차단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정보가 상황판과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부실함이 확인됨. 이러한 문제를 교훈 삼아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

20. 소방이 도입을 추진 중인 소방선박(702호)은 도입시기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시기는 2025년 3월로 시기적 차이가 있어 한강에서의 안전상 공백이 우려된다 하겠음. 이에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한강버스 운항 일정이 소방선박 도입 시기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것.

21. 전기차 및 지하철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복합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는 특수 대응팀 창설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2. 해외 실화재 훈련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나리오 기반 훈련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훈련 중 안전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23. 소방이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 배점을 행정안전부 기준인 60점보다 10점 높은 70점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 평가로 인한 업체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높은 낙찰률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4. 서울시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501동, 617명)의 일부가 화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소화기와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닐하우스의 화재 안전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25. 개인용 이동장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건수가 106건에 달하며 특히, 개인 소유 이동장치는 현관 앞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대피가 어렵고, 공용 이동장치는 한 장소에 밀집되어 있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크다 할 것임.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26. 심리 상담의 본질은 직접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음. 따라서, 더 많은 대원들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찾아가는 심리 상담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담 의사 및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7. 비대면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대 저연차 공무원은 37건, 50대 이상 중장년층 공무원은 24건으로 집계되어 해당 연령층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미흡한 것이 확인됨. 이에 다양한 연령층의 소방공무원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여 상담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8.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비밀업무 등 보안업무 관리 부실 등 동일한 문제가 매년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바 소방재난본부는 감사 결과에 의한 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할 것.

29. 각 소방관서에서 시행된 적극행정 수범사례 중 유용한 사업을 발굴하여 서울시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30.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직은 총 180명으로, 이들의 육아휴직 등 정당한 권리 사용이 보장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공무직과 공무원 간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1. 신속동료구조팀(RIT)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상 및 순직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32.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민 수탁교육 확대는 교육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교사 대상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적극 도모해 줄 것.

33. 최근 부실한 소방 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관서별 급식 단가를 확인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관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중인 만큼 소방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시에 서울소방공무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

34. 월드컵대교, 올림픽대교, 구리암사대교의 CCTV 설치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이 확인됨. 이에 대해 가처분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35. 코로나19 이후 시민안전체험관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새롭게 발굴하고, 수난 사고를 포함한 급류와 침수 상황 등을 가정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36. 소방대원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디오북이나 도서 등 힐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대원들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휴식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7. 소방대원의 안전 장비는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환경의 특성상 수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모품 지정이나 내구연한 단축을 소방청에 적극 건의하여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할 것.

38.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119 구급대의 대응은 응급처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후 병원 이송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치구에서 보호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호자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한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관용 차량 운행 및 관리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은 문제 해결 의지의 부족을 의심케 하는 바임. 이에 대한 소방에 즉각 개선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40. 소방대원들에 대하여 요양을 요하는 심각한 부상 사례 등 구체적인 통계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순직자 유족과 공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41. 소방대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더 높은 내열성과 안전성을 갖는 FBI 소재 등의 방화복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42. 현행 수당 체계가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여지는 바, 소방청 및 인사혁신처에 적극 건의하여 야간 수당, 구급활동비, 위험 근무 수당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43. 소방서의 열악한 출동 대기실 환경으로 남녀 공간 구분이 어려운 현실임. 최근 사생활 보호와 근무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출동 대기실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4. 실화재 훈련장의 교관 업무는 고위험성과 업무 강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피 부서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 충원 및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5.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민원 대응 부담 등으로 최근 3년간 화재 진압 중 주차 차량 강제 처분 건수는 단 2건에 그치고 있음. 이에 민원 처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강제 처분에 대한 소방대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46. 2024년 기준, 소방차 출동 중 사고 건수 32건 중 18건(56.2%)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긴급 차량 길 터주기를 위한 시민안전 홍보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47. 도로 경계석이 높아 차량이 긴급 상황에서 피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로 경계석 높이를 조정하고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여 차량이 긴급 상황에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

48. 최근 서울시 관내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시 비용 요구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동일 교육 대상에 유상·무상 교육 혼용 또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사례가 드러남. 이는 소방안전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상·무상 교육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감독 방침을 수립할 것.

49. 북한산 산악구조대 청사 축조 과정에서 법적 규제와 적법성 검토의 미흡으로 인해 설계 변경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됨.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축소된 산악구조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

50. VR 장비를 활용한 소방시설 교육은 공간의 제약 없이 다수의 교육생이 동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임.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최신 기술이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첨단 교육 장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보임.

51. 구급차에 비치된 기계식압박장비는 기존의 대원들이 수동으로 처치하던 CPR을 자동으로 전환하여 요구조자에게 다양한 처치를 동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비이나, 현재 장비의 노후화 및 보급률이 87% 수준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의 교체와 구급차량에 각 1대씩 운영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추친할 것.

[물순환안전국] — 25건

1. 중랑물재생센터 하수도과학관 등에 설치된 인공습지나 각종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바, 편익시설을 비롯한 시민이 이용하는 주변 시설들을 일제 점검하여 조속히 조치할 것.

2. 하수관로 내 유수장애 시설물이 자치구별로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유수단면적을 협소하게 하여 하수 흐름의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바, 이전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사업 등이 주민협의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바 주민들과 고양시 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4. 하수슬러지의 처리방식 중 건조 방식과 탄화 방식을 비교해서 중량 감소 효과와 악취 감소 효과, 운영 효과 등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를 검토하여 하수슬러지 처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5. 2017년에 수립한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급자족 종합계획'에 따른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그동안 달성하지 못했고 2025년 목표인 73% 역시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바, 현실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 빗물받이가 불법 덮개와 쓰레기로 막혀 제 기능을 못 해 집중호우 시 심각한 침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조례상 빗물받이 청소 횟수를 재검토하는 등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7.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운영효율성을 높일 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8. 탄천물재생센터 주변 도로상에서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 파악과 함께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9. '25년도에 청계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진출입로 철재 계단 등이 노후되어 위험하거나 미관상 좋지 않아 보이므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10. 아이들의 사용이 빈번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에서 과거 수질기준 대비 18배의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1.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 오염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물순환안전국이 수년간 정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소송과 비용 환수라는 비효율적인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12. 물순환안전국 기술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독점계약을 방지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약 사항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토록 할 것.

13. 서울시의 지반침하 문제는 노후 하수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체 작업의 가속화와 재정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재난관리기금 및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신속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시민제보사항 〔붙임〕연번2,3 참조)

14. 용산 어린이 공원의 경우 토양 내 비소 및 납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화 없이 개방되어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 안전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인 정화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

15.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이나 족구장, 강아지놀이터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데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빗물펌프장 복합화 사업에 포함하여야 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것.

16. 현재 탄천물재생센터에만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환경적 부담이 불균형하게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

17.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순차적 멸실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아직은 그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주택 및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토록 할 것.

18. 하수악취 관리목표제 3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자치구별 평가점수 중 50점 미만 자치구가 2022년 이후 오히려 계속 늘고 있어 하수악취 관리목표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되므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19. 현행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적립 방식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바 매년 일정 비율의 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0. 현재 추진 중인 강남역·도림천·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에 대해 사업이 늦어져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시민제보사항 〔붙임〕연번4 참조)

21. 10㎝ 빗물담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건물 하중 문제 등으로 건물주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하중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할 것.

22. 물재생센터 내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파크골프장 외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3. 총인처리시설 확충 등 물재생센터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위한 소요 예산이 막대한 만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중·장기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4. 하수관로 수위계의 고장이 잦아 유지관리 어려움 및 강우 시 활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적기에 고품질의 제품을 확보하여 침수 피해 예방을 제고할 것.

25. 현재 규정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회의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물재생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7건

1. 하수슬러지의 처리방식 중 건조 방식과 탄화 방식을 비교해서 중량 감소 효과와 악취 감소 효과, 운영 효과 등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를 검토하여 하수슬러지 처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 2017년에 수립한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급자족 종합계획'에 따른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그동안 달성하지 못했고 2025년 목표인 73% 역시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바, 현실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3. 탄천물재생센터 주변 도로상에서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바, 원인 파악과 함께 악취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

4. 탄천물재생센터 마루공원 등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바, 편익시설을 비롯한 시민이 이용하는 주변 시설들을 일제 점검하여 조속히 조치할 것.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최근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바, 타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강력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단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6.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효율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한 설계관리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한바 이에 대해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조치를 통해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7. 현재 규정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회의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물재생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건설기술정책관] — 19 건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참여율이 저조하여 심의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위원 참여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것.

2. 현행 하도급 실태 점검 기준으로는 관리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반복적 위반 사례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반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

3. 기술용역 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건부 적정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사후결과의 등록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심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별 참석률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5.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중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필수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자치구가 일부 존재하므로 해당 자치구를 독려하여 조속히 충원할 것.

6. 하도급 사전 승인 심사제도가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심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당초 운영 목적과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

7. 청계천로 차집관로 보수공사에서 무자격자 하도급, 미승인 하도급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더해 입찰 참가 제한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것.

8. 서울시의 부실공사 방지 정책은 감리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마련할 것.

9.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자치구들을 독려하여 위원회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 우수 건설현장 표창 수여 업체 중 과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수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장에 대한 점검 실적이 미흡하므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시행할 것.

12.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에 있어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 수준을 강화할 것.

13. 민간 공사장의 불법하도급 점검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자체 점검 실적이 미흡하므로 이를 적극 독려하고 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 이면계약이나 허위 사실 기재 등 서류 위조 행위의 확인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검증 방안을 마련할 것.

14. 불법하도급 업체의 현황 파악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의존하는 점검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자체적인 불법하도급 업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15.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자문단의 위촉,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자문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할 것.

16. 매년 10~15% 발생하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의 지속적 문제를 건설업계의 관행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원도급의 문제로 확인된 페이퍼컴퍼니 등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7. 서울시는 올해 건설상 시상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야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대외 홍보와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등 시상 제도의 품격을 제고할 것.

18. 건설공사 계약금액 순회 점검의 주기와 실적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2~3년간 미조치된 사항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하고 점검 이후의 이행 상황과 제재 방안을 강화해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

19.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 계량기 지정에 따라 유효기간과 재검정 주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고장 횟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내년 예산에 수리재검정 시스템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48 건

1. 서울시의 간접비 청구 거부로 소송이 진행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한 바, 관행적으로 작성되는 합의각서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할 것.

2. 서울 영화센터 건립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추가 간접비가 발생한 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기 산정 부분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

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당초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방음벽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하였는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4.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장기간 공사 진행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5. 하수관로 공사에도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할 것.

6. 도기본 발주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스마트 안전기술의 적용 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교육도 철저히 병행할 것.

7. 유사한 규모의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비 적용 비율이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바, 이를 개선할 것.

8. 월드컵대교 안양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375%가 증액된 바, 증가된 공사는 별도 발주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9. 특정기술 선정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외부 심사위원의 비율을 늘려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

10. 특정기술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입찰공고와 부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것.

11. 성동교 확장공사의 특정기술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사 및 설계감리의 업무 소홀 등에 대해 부실벌점부과를 철저히 시행할 것.

12. 성동교 확장공사가 하천첨용허가 미승인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개축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13. 공사장 신호수 관련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 관련 검토를 철저히 할 것.

14.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부과하는 벌점과 관련하여 경고 이력에 따른 벌점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5.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성동구에서 별도 계획중이거나 실행중인 중랑천 관련 사업들로 인해 설계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것들이 다수 발생된 바, 공사 연장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나 공사 전 유관기관과의 사전조율을 신중히 실시할 것.

16. 도시기반시설본부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 출석률 50% 미만인 위원들은 전원 해촉할 것.

17.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내용이 부실한바,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할 것.

18.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이 철거가 되지 않은 채 설계가 이루어져 지반조사가 이루어져 설계변경이 발생한 바, 철거공정이 필요한 공사는 별도 발주할 것.

19.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과의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20. 공사중 미확정설계공정은 금액조정 없이 반영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으로 정하고 설계과정에서 추계하여 계상할 수 있는 공정은 당초 공사에 포함토록 할 것.

21. 굴착공사 공법 선정에 있어 공사 현장 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신중히 선정할 것.

22. 굴착 공사중 공사현장의 토질 변화에 따라 공법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수가압식 세미쉴드 공법이 연희동 지반침하의 원인일 수 있는 바, 공법 변경에 대해서 검토할 것.

24.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언어 소통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도기본 공사현장에 실시간 통역시스템 적용을 확대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25. 전기차 화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도기본이 실시하고 있는 공사 현장 중 지하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 지상으로 설계 변경할 것.

26.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대해 지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한 곳은 지상층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화재 대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화재에 대비할 것.

27.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사장 내 화재 대응 설비를 마련할 것.

28. 신림봉천터널 등 기존 설계된 시설의 지하차도 화재 대응 설비 설치 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치할 것.

29. 준공 후 시민들이 많이 사용되는 시설의 경우 설계나 공사 중 스마트 안전기술을 갖춰 준공 이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30. 공사장 안전관리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

31. 관급자재의 과도한 사급자재 전환은 공사비용 증액과 연결되는 만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2. 도기본 진행사업 중 공정률이 30% 미만인 공사를 살펴보면 민원이나 지장물, 하천점용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33. 도기본 발주공사 및 용역의 입찰공고가 변경된 사례 중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반영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입찰 공고시 철저한 검토로 공고 후 공고내용이 변경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

34. 도기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이 변경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는 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 공사기간 동안 근무가능한 현장대리인을 채용하여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35.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발생이 다수 확인되는 바, 공사장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에 유념할 것.

36.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영상을 재검토하여 관리감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37. 보도 설치 시 최소 유효 폭을 확보토록 하고 기준 이하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비할 것.

38.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의 경우 당초 총 사업비 310억원으로 2019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으로 700억원으로 증액된 바 설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고 각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39. 기후위기로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바 폭염 대비 공사장 점검 계획을 확대추진할 것.

40. 폭염이나 장마 등 공사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1. 공사장 휴게공간 및 냉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것.

42.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이 가장 중요한 바 철저히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를 실시토록 할 것.

43.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이 장기간 공사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더 이상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

44.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착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

45. 폭염 뿐만 아니라 강우, 한파, 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로 인한 공사감독의 작업중지 명령이 있을 경우 안심수당 지급으로 건설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것.

46.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시공사 등 회사명이 포함되지 않은 채 제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바 이를 시정할 것.

47.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영세업체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급 대책을 마련할 것.

48. 안전지수제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안전한 공사장을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

나. 건의사항 …… 37건

[재난안전실] — 7 건

1. 기술설명회 최소 분기별 1회 개최 필요하며, 내부적으로 기술 관련 면밀한 검토하기 바람

2. 블랙아이스 방지포장 실증사업 확대 바람

3. 제강슬래그 시범사범 사업을 내년도에도 2~3곳 시급한 곳 우선 실시하며,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시급한 곳은 신속히 보수해주기 바람

4.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주기 바람

5. 어린이 통학로 인근 500m 시간표시 적색신호등 증설해주기 바람

6. 한강대교에서 동작으로 유턴하는 구간 신호등 설치 바람

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단절구간 타당성조사가 종료 되는대로 향후 계획과 함께 위원회에 보고할 것

[물순환안전국] — 11건

1.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원활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타 하천 대비 도림천과 안양천 주변에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안양천 피크닉장 조성 사업을 조속한 추진하기 바람.

3. 청계천 진·출입로 주변이 안전상·미관상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4. 최근 전기요금 단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어 물재생센터 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이용시설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기 바람.

5. 청계천 내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특히, 보건 위생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6. 하수 및 분뇨처리장 종사자 장려수당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할 것.

7.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하여 노후도가 높은 자치구를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8.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들의 사유를 파악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9. 물재생센터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력 소비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람.

10. 물재생센터 위험구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연내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람.

11. 유량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실효성 있는 침수예측 시스템 운영을 도모해 주기를 바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4건

1. 물재생센터 내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이용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람.

2. 하수 및 분뇨처리장 종사자 장려수당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할 것.

3. 물재생센터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력 소비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람.

4. 물재생센터 위험구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연내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람.

[건설기술정책관] — 8 건

1.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력 및 장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 및 장비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시 예산 절감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부실시공 및 안전성 저하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과 품질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3. 공공공사를 도급하는 업체 중 감리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보도의 경계석과 점자 보도블록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5. 주요 공종의 직접 시공과 관련해 공동이행 방식과 주계약자 공동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12월 3일 상임위 토론회에 참석하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된 상황을 고려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7. 고용개선지원비와 관련하여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8.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술사 자격증 취득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7 건

1.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봉은사역 구간에 대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와 관련하여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 대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보니 무단횡단이 많아지고 있는바,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이중 횡단보도를 제거할 것.

2.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삼성역 방면 공사로 인해 좌회전 차선이 명확하지 않아 교통정체가 심할 뿐만 아니라 그 구간의 버스 전용차선으로 인해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사중에는 일시적으로 버스전용차선을 해제할 것.

3. 구일역 육교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방안을 검토할 것.

4. 책임감 있는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5.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구청장, 시·구의원 등 지역 대표들과의 간담회 실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6.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상부 도로의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바,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할 것

7. 신기술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50건

[재난안전실] — 15 건

1. 어린이 통학로 관련 교통실, 교육청에서 온 공문 제출

2. 구로 IC 구조개선 추진 현황 제출

3. 한강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 제출

4. 버스중앙전용차로 강성포장 실적 및 계획

5. 각 도로사업소별 버스정류장 강성포장 계획

6. 재강슬래그가 포함된 고강성 콘크리트 추가 설치 계획

7. 제설제 및 친환경 제설제 구매계획, 발주 현황 제출

8.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자동염사분사장치 자치구별로 현황 제출
(설치연도, 설치비용 포함)

9. 재난안전실 소관 기술설명회 내용 및 결과 제출

10. 외국인노동자 보호방안 및 가이드라인 검토 계획 제출

11. 성능개선충담금 관련 법령개정 건의한 자료 제출

12. 2018년 정밀안전점검 점검 방식과 현재 개선된 정밀안전점검 대조표 제출

13. 서소문고가 교통 대책 자료 제출

14. 행정사무감사 중 옹벽, 석축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관련 자료 보완 제출

15. 방호울타리 관련 300억 특교금 중 차량용 방호울타리 43억 외 예산의 집행내역 (자치구별)

[소방재난본부] — 16건

1. 찾아가는 상담실 24시간 콜센터 실적 및 비대면(전화 등)을 통한 심리상담 운영 현황

2. 119 안심병원 운영(위치, 지정일, 실적 포함) 현황

3. 공무직 관련 부서운영비 편성 기준,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세부 내역

4. 소방서별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대처 매뉴얼' 등 배포 실적

5. 전기차(버스) 화재대응 합동훈련 현황 및 향후 계획

6. 주거용 비닐하우스 단지 중 강동(둔춘동, 고덕동)과 강남(율현동) 일부에 단독경보기 및 보이는 소화기가 미설치된 사유

7. 2024년도 서울시 관내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 결과 제출

8. 소형사다리차 장·단점 및 확대 보급에 대한 소방재난본부 의견서 제출

9. 2024년도 하반기 소방재난본부 자체감사 처리 결과

10. 최근 5년간 공상자 중 요양이 필요한 직원 현황

11. 강제처분 관련 담당 민원 업무 처리 담당 부서 신설(119 광영수사대 확대·개편 계획) 계획안

12. 소방안전교육 유상과 무상으로 추진 경위 및 선정 기준 자료

13. 실화재훈련장 국외 건립 사례 벤치마킹 결과

14. 소방학교 저수조 확대와 오염수 여과 현황

15. 실화재 훈련장 건립 관련 소방 요구사항 포함된 제안서, 심사 기준과 평가 자료 등 공모 자료 전체

16. 소방대원 급식비 및 출동 간식비 필요 예산안 보고

[물순환안전국] — 6건

1. 서울형 하수악취 자율형 목표관리제 기본계획 및 운영 현황(최근 3년간 자치구 실적 및 평가 포함).

2.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재원별, 연도별 적립 및 집행 현황.

3. 서울시 투자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타 기관 결과 분석 자료.

4. 토양오염 실태조사 중도 취소 현황(상세 사유 포함).

5. 물순환안전국 기술용역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반복 계약 근거자료.

6. 빗물펌프장별 복합화 추진 현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1건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택 운영 지침.

[건설기술정책관] — 7 건

1. 월드컵대교 공사의 도급 업체들에 대한 자료

2. '24년 실시한 민간 공사장 불법하도급 공사장 30개소 내역과 점검 결과

3. 최근 3년간 부적합 건설사업자 적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부적합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기준

5.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입찰 자격제한 기준 및 업체현황

6. 부실공사 제로 정책의 최신 수립 현황

7. 건설공사 계약금액 순회 점검 개선 방안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5 건

1.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 재제출할 것.

2. 8월 이후 폭염 관련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제출.

3. 서울시 공공공사 지열시스템 준공 이후 3년간 운영 현황.

4.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시공사 등 회사명이 누락된 자료는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

5. 최근 3년간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 내역

〔붙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

연번	1	상임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교육위원회
제목	**서울 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10가지 문제점과 실행안**		
내용	서울 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10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점 과 실행계획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 1.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건축물 관리 문제** - **문제점**: 불법 건축물의 관리 부실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 왜곡. - **실행 계획**: 1.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확대 및 전담 조사팀 신설. 2. 위반 건축물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방침 강화. 3. 부동산 투기 방지용 공공감시 시스템 구축 및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 4. 공공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기 방지 시스템 운영. ### 2. **청년 주거 문제 및 임대주택 공급 부족** - **문제점**: 청년 주거비 부담 및 임대주택 공급 부족. - **실행 계획**: 1.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기존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강화. 2.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마련, 임대료 일부 지원 및 주거비 감면 혜택 제공. 3. 민간 협력을 통한 청년 주거 공공임대 플랫폼 개발 및 운영. 4. 도시 내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촉진. ### 3. **교통 체증과 대중교통 문제** - **문제점**: 일부 지역의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 **실행 계획**: 1. 대중교통의 환승 시스템 개선 및 노선 추가 검토. 2. 서울 외곽 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강화, 버스 및 지하철 노선 확대. 3.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혼잡 구간 관리. 4.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확대 및 안전한 주행 인프라 구축.		

4. **노후된 인프라 시설 관리 미흡**
- **문제점**: 노후된 공공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유지 보수 미흡.
- **실행 계획**:
1. 서울 내 주요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정기 점검 주기 강화.
2. 긴급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예산 우선 배정.
3. 사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인프라 단계별 보수 계획 수립.
4.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신고 플랫폼 운영.

5.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 **문제점**: 불필요한 사업에 자원 낭비,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 **실행 계획**:
1. 예산 심사 절차 강화 및 외부 전문가 그룹의 예산 검토 과정 투입.
2. 기존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정밀 감사 및 폐지 검토.
3. 시민 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제도(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4.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연계 예산제도 도입.

6. **환경오염 문제**
- **문제점**: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
- **실행 계획**:
1. 한강 및 주요 하천 주변의 오염원 철저 조사 및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2.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차량 도입 지원 및 디젤 차량 규제 강화.
3. 공원, 녹지 확대를 통해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 증대.
4. 민관 협력 하에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7. **불평등한 교육 자원 배분**
- **문제점**: 교육 시설 및 자원의 지역 간 불평등.
- **실행 계획**:
1.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 지원 예산 우선 배정.
2. 지역별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재정 균형 배분.
3. 지역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학습 자원 확충.
4. 모든 학교에 동등한 디지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8. **학교 내 폭력 및 안전 문제** - **문제점**: 학교 내 학생 간 폭력과 안전 문제. - **실행 계획**: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사 및 심리치료사 배치 확대. 2.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신고 및 지원 시스템 구축. 3. 학교 내 CCTV 추가 설치 및 안전 감시 체계 강화. 4. 학교 내 폭력 문제 발생 시 엄정한 조사 및 처벌 강화. ### 9. **교육행정의 과도한 경쟁 중심 정책** - **문제점**: 지나친 성적 경쟁으로 인한 학생 스트레스 및 정신 건강 악화. - **실행 계획**: 1.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2. 경쟁 완화형 평가제도 도입, 절대평가 및 과정 중심 평가 확대. 3.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및 학교 내 복지 서비스 강화. 4. 예체능 및 진로 탐색 중심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0.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미흡** - **문제점**: 디지털 전환이 미흡해 공공서비스 접근성 저하. - **실행 계획**: 1. 서울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촉진,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 2.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 구축. 3. 공공 데이터의 개방 및 시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운영. 4. 모바일 친화적 공공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홍보.
비고	

연번	2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서울특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3번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서울시민 불편은 물론 도로 및 기타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된 바 있으며,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모두 200여 건으로,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점검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지하수의 흐름이 강한 서울 특성,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지하수위의 변화 등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꺼짐 현상을 대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서울시민 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드립니다.		
개선 건의	서울특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계획	서울특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 올해 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현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연간 대비 계획이 적절했는지, 2. 땅꺼짐 현상에 대해 빠른 대처와 시민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3. 차후 가능성 있는 땅꺼짐 현상 예상 지역에 대한 대응책을 완비했는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안드립니다.		
기대 효과	이를 통해, 올해 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현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연간 대비 계획이 적절했는지와 함께, 빠른 대처와 시민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봄으로서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운전,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차후 가능성 있는 땅꺼짐 현상 예상 지역에 대한 대응책을 완비했는지 살펴봄으로서, 차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번	3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싱크홀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확립 및 시민제보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달리던 앞차가 갑자기 푹 꺼졌다...연희동 싱크홀 사고 영상보니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067(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067) 최근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도로가 갑자기 꺼지며 차량이 추락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하에 묻혀 있던 도시가스 배관이 손상되어 자칫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이 있었다. 소방 당국과 구청은 사고 원인으로 노후 상수도관과 빗물펌프장 관로공사를 지목했다. 이러한 싱크홀은 주로 노후한 지하 인프라와 부실한 공사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의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또한 시민제보를 통해 싱크홀 발생 사례를 수집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선 건의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는 배관 시설을 비롯한 지하 인프라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하수도와 같은 지하 시설의 부실한 관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철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미비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주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한다. 또한, 시민 제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 체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세부 계획	시민 제보 시스템을 통해 싱크홀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지보수 관리 체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예산 낭비 여부도 함께 조사하여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주기적인 점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강화. 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 효과	시민 제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한 문제나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하 인프라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연번	4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지속 지연에 따른 폭우 대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보**		
현황 및 문제점	지난 2022년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서울특별시 곳곳에서, 특히 반지하 주택들이 침수되는 등 각종 재산 피해가 있었고, 서울시민들의 불편도 매우 컸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의 경우,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총 3군데서 진행될 예정이나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 지연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시간을 앞당기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복수의 기업이 아닌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된 것에 따른 것으로서, 1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다면 조속한 시일내 재공고를 하거나 해당 기업과 계약하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나아가 유찰이 계속되어 당장 3군데 동시 착공이 힘들면 3군데 중 1, 2군데 부터 시작하면 되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공사 시작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서울 관내 폭우 대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선 건의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지속 지연에 따른 폭우 대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계획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지속 지연에 따른 폭우 대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1.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 있어, 유찰이 계속되어 당장 3군데 동시 착공이 힘들면 3군데 중 1, 2군데 부터 시작하면 되었음에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며, 2. 1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다면 조속한 시일내 재공고를 하거나 해당 기업과 계약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며, 3. 차후 장마철 집중 호우를 막기 위해, 조속히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대 효과	이를 통해 현재 계속 지연 중인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지속 지연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혀나감으로서, 보라 확실하고 빠른 폭우 대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가능한 곳들 부터 빠른 공사들이 시작 가능해짐으로서, 보다 필요한 서울시민들에게 대규모 빗물 배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지속 유찰 및 지연에 따른 폭우 대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번	5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보행권/인도 및 도로변의 지주 설치물 및 각종 설치물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	문제 제기) 현재 저의 거주지는 동대문구 이문동입니다. 도로를 걸을 때 다음과 같은 *1) 각종 지주를 마주칩니다. 장애 또는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거나와 무관하게 비장애인인 저 역시 보행에 지장을 받습니다. 또한 전깃줄이 늘어져 있거나 노후한 안내문들이 불안정한 상태일 경우 위험도 느낍니다. 특히 이면도로의 경우 관리가 부실한 설치물들은 쉽게 우범지대화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신주, 각종 지주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행정감사가 진행되는지 *2)질문 드립니다. *1) 도로변의 설치물 1. 전기를 위해 설치된 전신주. 2. KT, LG, SK 등 통신회사 지주. 3. 국토부 소관으로 보이는 가로등을 위한 지주 4. 어린이 보호 구역, 주차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등 안내문 및 CC TV 등을 위한 지주. *2) 질문 및 제안 1. 질문 위와 같은 다양한 지주들은 각기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며 그 예산 및 관리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요. 2. 제안 모든 설치물들이 지중화 된다면 좋겠지만 구도시의 경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 용량의 제한 및 관리 주체 상이로 각각 설치되었을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에 그 여러가지를 통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전신주에 가로등이 같이 설치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통신사 지주들과 안내문 지주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쉽게 마주 칩니다. 가로등을 기존의 전신주를 이용, 부착했듯이 각종 안내판이나 CC TV, 통신사 지주를 함께 통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건의	무분별할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통신사 지주, CCTV, 교통안내 표지판 지주 등을 통합해야 하며 각기 운영 관리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는 것인지에대한 질문. 가로등을 기존의 전신주를 이용, 부착했듯이 각종 안내판이나 CC TV, 통신사 지주를 함께 통합할 방안 마련 제안.		
세부 계획	각각의 지주 설치 인가 및 관리 감독처를 일관화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	1. 위험하게 방치되는 설치물들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보장. 2. 관리 주체 일관화로 관리행정 편의증진 및 불필요한 세금과 경비 절약 3. 도시 미관 개선.		

연번	6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횡단보도, 인도만큼 높이자		
현황 및 문제점	서울 시내 곳곳의 거리를 지나다보면 곳곳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에 대한 개량공사를 완료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통행인인 보행자들과 장애우나 그들이 타고 나니는 휠체어, 혹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인 걸로 안다. 물론 엄부 담당자들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한 후 내린 결정이겠지만, 이런 공사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어떤 곳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처래하기도 한다. 그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현장의 지형이나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업체나 시공자들이 기간에 맞추느라 졸속하게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간선도로나 스쿨존지역에서 더 그러하다. 횡단보도의 표시(폭)보다 턱없이 좁게 만들어지고, 제거하거니 이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진입을 방해하여 휠체어나 자전거 등은 2대가 서로 교행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경사가 높게 시공된 곳에선 비라도 내리거나 채 마르지 않은 낙엽들이 놓여 있거나, 추운 겨울엔 얼음이라도 얼면 사람들이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어린이나 노역자들의 경우 골절과 같은 부상을 당하기 쉽고, 자전거 등도 쉽게 넘어지곤 한다. 이렇게 되면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던 사업이 오히려 사고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혐오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다.		
개선 건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인도의 턱을 낮추기보다 횡단보도의 턱을 인도만큼 높이는 험프(Hump : 둔덕)형이 오히려 보행자나, 노약자, 장애우 혹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싶다.		

세부 계획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곳곳에서 횡단보도 인도 턱 낮추기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한 공사 결과, 어떤 곳에서는 횡단보도만큼 충분히 넓은 곳이 잇는가 하면, 어떤 곳은 턱없이 좁거나, 지나치게 경사져 자전거나 휠체어, 유모차 등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멈추어 있기가 힘든 곳도 많다. 이런 곳은 주로 스쿨존이나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서 많이 목격된다. 그런데 이런 지역의 경우 여러 대의 자전거가 동시에 진입하거나, 지전거와 휠체어, 혹은 유모차 등이 교행하게 될 때, 일방에서는 멈춰 서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인도 낮추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이용하게 되어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고, 이면도로의 경우 속도를 낸 자동차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전거를 발견하고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 낮추기 공사 후 배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에서는 비라도 내리게 되면 빗물이 넓게 고이게 되어 횡단보도 이용자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가을엔 바람이라도 불고, 낙엽이라도 쌓이게 되면 허방다리를 짚거나, 겨울철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라도 얼게 되면 사람들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심하면 골절이 되어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 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애써 그런 곳을 피하게 되는 현상을 보면,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가 싶다.
기대 효과	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애써 그런 곳을 피하게 되는 현상을 보면,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가 싶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횡단보도 인도 턱 낮추기 사업은 뜻하는 바에 부응하는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개선 건의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횡단보도 통행인들과 노약자, 장애우 등에게 보행의 방해를 주지 않고, 주변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서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해 주고,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감을 줄 수 있게 횡단보도를 인도만큼 높이는 험프(Hump : 둔덕)형 횡단보도를 개설한다면, 세부실태(문제점)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이 공법은 사업 시공기간을 단축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도 감소시킬 수 있으렴, 도로의 디자인까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횡단보도를 인도의 연장선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험프(Hump : 둔덕)형 횡단보도 개설 방안을 제안해 본다.

연번	7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한강 88도로 전철과 연계 임시 정거장**		
현황 및 문제점	오늘 참석하고 의제를 발표한 이민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전부터 시민 불편 상황으로 88도로는 차도 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절대 정차할 수 없는 경부 고속도로는 동탄 죽전 경기 남쪽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고속도로 위에 죽전역 임시 정거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라도 전철과 연계해서 경기 남부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 오지 않아도 지나는 길에 고속도로 임시 정거장을 이용합니다 수도권 고속도로도 가천대 역에 임시 정거장을 만들어서 성남시민 송파구민은 복잡한 도심을 들어 오지 않아도 자유롭게 승하차를 하는 것은 도로가 시민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88도로 마지막쯤 천호역 암사역 등등 전철과 연계되는 지점에 잠시 설 수 있는 임시 정거장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하남 구리 모두가 지나는 길에 자유롭게 도로를 이용할것 같습니다 정차를 할 수 없으니 도심으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불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천대역 연계와 죽전역 연계를 보십시요 외곽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개선 건의	88도로 전철 연계노 교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 계획	88도로 임시 정거장 설치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호역 암사역 강추		
기대 효과	복잡한 도심을 들어가지 않아도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대입니다		
비고			

연번	8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시민안전 대책 철저**		
현황 및 문제점	영등포구 소재 도림동 새마을금고 주변 보도블럭 및 차도와 인도 경계석 교체 공사를 하면서 안전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사고 우려 및 도심미관을 크게 해침(첨부 사진 참고)		
개선 건의	영등포구 소재 도림동 새마을금고 주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주차장, 공항버스 주차장을 끼고 있는 도로 보도블럭과 경계석 교체 공사를 하면서 안전 시설물 설치나 안내가 전혀 되지 않아 보행시민 및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줌. 제대로된 안전 시설물이나 안내가 요구됨.		
세부 계획	보행로에 깔아놓은 천들이 한쪽으로 밀려 보행에 불편함으로 고루 잘 펴고, 공사 현장에는 안전 띠와 안전판 등을 설치해 시민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공사 주변 정리가 되지 않아 자재 등이 널부러져 도심 미관을 해치므로 깔끔한 정리가 요구됨.		
기대 효과	- 상기 불편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 시민 안전과 보행이 편리함. -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 승하차에 편리를 제공함, - 도심 미관을 드높이게 됨		
비고			

연번	9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수락고가차도 공사방치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용	수락고가차도 방음벽 공사 방치에 대한 궁금증. (1).수락고가차도 공기가 20204.12까지이지만 주민들이 사는 은빛아파트 구간만 4개월째 진행 안하고 있는지? (2). 주민생활공간이 우선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방음벽 철거이후 아무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3). 공기가 남더라도 주민불편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락고가차도는 왜 예외인지? (4). 4개월 동안 시행기관이 주민들에게 직접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회 등의 절차가 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비고			

연번	10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가을철 낙엽 인도에서 차도로 쓸어내려 운행차량에 날려 보행시민불편**		
현황 및 문제점	가을철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인도의 낙엽을 차도로 날려 보내 방치함으로써 운행 차량으로 인해 낙엽이 날리고 또 낙엽이 운행차량 바퀴에 짓이겨지면서 먼지화되어 날리면서 보행시민들에게 불편을 줌(사진은 영등포구 도림로 307 서울성락교회 주변 맞은편) 또 차도에 날려보낸 낙엽으로 인해 차도 배수로(하수)가 낙엽으로 막혀 많은 비가 내릴 시 하수가 역류해 각종 재해 요인이 됨		
개선 건의	인도 낙엽을 차도로 내려 보내지 말고 인도에 모아 비닐 쓰레기 봉투에 담든지 낙엽 포대에 담아야 할 것임. 정 차도로 날려 내려 보내려면 그 즉시 차도의 낙엽도 함께 쓸어 담아 치워서 도로를 말끔히 해야 함.		
세부 계획	인도의 낙엽이나 차도의 낙엽은 동시에 청소해 보행시민이나 차량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 인도의 낙엽을 차도로 날려 보내 방치하면 일부 낙엽은 또다시 운행 차량에 날려 인도로 들어옴. 이로 인해 인력 낭비 일부 초래됨.		
기대 효과	인도와 차도의 낙엽을 동시에 청소함으로써 - 주변 도심이 청결해지고 시민 보행 불편 해소 및 차량 운행이 원할해짐. - 차도 낙엽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하수구 막힘을 방지함. - 청소 인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		
비고			

※ 감사 중점사항

가. 재난안전실(재난안전기획관, 도로기획관) 및 산하 도로사업소(6)

(1) 재난안전실(재난안전기획관)

○ 안전관리위원회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재난상황 전파 및 사회재난·폭염·한파 대책 수립 등 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실(도로기획관)

○ 도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지하도상가 관리 및 지하도 상가 정책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보도관리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기술 지원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3)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 및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나.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 구급에 관한 사항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물순환안전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2)

(1) 물순환안전국

○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물순환 정책,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 풍수해 대책, 하천·유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 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처리시설(탈수시설 포함)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라. 건설기술정책관 및 산하 사업소

(1) 건설기술정책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 건설업 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부실공사 제로 대책 등 건설 혁신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노후 건축물,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시험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마.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등

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시설(하수, 슬러지, 분뇨, 차집관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재이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시설 중 공단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된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내 기타 부대시설(체육시설, 주차장, 사택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8. 주택공간위원회

□ 총 괄

기 관 별	계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별도보고, 자료제출 등)
계	236	54	117	65
주 택 실	83	9	55	19
미래공간기획관	46	2	25	19
디지털도시국	41	17	19	5
서울주택도시공사	60	24	14	22
서울디지털재단	6	2	4	-

가. 시정 요구사항 ····· 54건

[주택실] — 9 건

1. 애드가 쌍문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2. 공동체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 관련 서울보증보험과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 공동체주택이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음. 주거용은 불법임. 공동체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가 미실시 되었음. 공동체 주택의 공공지원 재검토 및 재구조화가 필요함.

3.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2월 공공리츠 개발 용역을 위해 1억 8천만원을 전용함. 의회에서 예산 확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2월에 바로 전용한 것은 예산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4. 도봉구 청년안심주택에 살던 6 가구가 민간임대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 같음.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음.

5. 반지하 매입 심의 가결이 1,435호인데 매입약정은 47호임. 공고 후 4,684호가 심의에 올라갔는데 부결이 절반 이상임. 반지하 매입은 침수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으로 신경써주기 바람.

6. 10.31.자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클린임대인 등록 임대인이 14명, 매물이 1로 되어 있는데 기사 정정해야 함. 제도는 좋은데 신청자격이 너무 높음. 진입장벽을 낮춰야 함.

7. 최근 5년간 용역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높음. 행감 자료가 충실하지 않음.
8.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토지가 우정사업본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착공 공사때까지 몰랐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공사를 중단했어야 함. 변상금과 사용료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매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지. 비엔날레 추진하려고 무리하게 공사한것 아닌지.
9. 평창동 사회주택 적정성 재검증 필요함. 40%가 개발 불가하나 필지 전체를 매입했고 결국 매각함. 평창동 토지의 경우에만 대지면적과 매입금액이 월등히 높으며, 해당 필지 방치되고 있어 지역사회 위험요소임. SH 자체감사가 힘들것 같고, 서울시 감사청구를 요청함.

[미래공간기획관] — 2 건

1.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개선 필요. 임기 내 활동 이력이 없는 연임 공공건축가도 있음. 지난해 추진한 용역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
2. 설계공모 심사 시(잠수교 사례처럼) 공모작에 대한 안전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검토,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디지털도시국] — 17 건

1. 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소 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시 예산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WeGO 회원국들의 회비 징수율이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3. 시에서 국제부담금으로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의회의 감시가 약한데 이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4. 스마트라이프위크 행사 시 일부 참여기업, 시민 인터뷰에서 불만이 있었고 행사 종료 이전 부스를 조기철수한 사례가 있었음
5.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수가 매우 저조한데 개선 필요
6. 에스플렉스센터의 임대료 체납업체에 대한 법적검토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7.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및 노후 CCTV에 대한 조속한 교체 필요
8. 서울시민이 매크로를 활용한 부정예약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바람
9. 서울톡을 비롯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챗봇에 대하여 예산의 적정성, 운영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10. 서울톡 챗봇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용자수도 적으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함. 투입공수 점검 및 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
11. 스마트서울뷰 사업이 정보시스템 운영성과평가 비용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효과대비 유지관리비의 적정여부를 점검해서 개선 바람
12. 디지털도시국 소관 정보화사업 유지보수에 500억이 들어가는데 예산편성시 예산타당성 검토대상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검증 필요
13.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2등급 시스템 대상 원격이중화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14.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예산 단위사업 명칭과 그에 편성된 일부 사업내용이 상충이 됨

15. 에스플렉스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업체에 대하여 조속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16.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에 대한 공개율은 높으나 부분공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과도한 부분공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17. CCTV, 공공와이파이 보급에 자치구별 편차 해소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 24 건

1. 주거안심종합센터 변호사 배치 관련,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변호사가 상주하는지? SH는 대응방안 검토 요청.

2. 임대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

3. 골드시티사업 추진 시 타 지방 공사와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지방공기업과 공사 설립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4. 임대주택 방역 시행 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품·횟수 ·품질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정리-청소-소독 이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방안을 수립할 것.

5. 골드시티 관련, 서울시민이 얻을 메리트 (우선 입주나 특별공급 우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용역 과업에 해당사항을 포함시킬 것.

6. 매입임대 사업비 정산은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정리가 필요.

7. 매입임대 하자관리 시 공사는 별도 비용을 투입하여 하자적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입임대 매매계약 추진 전 철저한 품질점검이 필요

8. 매입임대 관리업체 선정 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

9. 평창동 소재 토지를 토지지원리츠 사업을 통해 선매입 했는데, 사회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건축행위가 불가한 토지를 부적절한 금액으로 매입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서울시의 감사가 필요해 보임.

10. 미매각 부동산들이 방치 중인데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필요함. 가든파이브의 경우 매각이 안 되면, 임대로 적극 전환하여 관리할 것.

11.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이주자택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할 것.

12. 근린생활시설용지 관련, 권익위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공고 시 유의사항 등 제반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라고 하였음. SH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토지매각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

13. 재개발임대 수수료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데, 빠른시간 내에 용역 등을 추진하여 해결할 것.

14.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신규사업 전망이 너무 낙관적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민감도 분석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15. 새원마을 보상 이후 별도 추진 사항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서울시와 신중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도출할 것.

16. 근로기준법에서 임신·육아·출산·사산 시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한 경우가 있는데,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람.

17. 직원 수 대비 적정 법인카드 총량을 산정하고, 분실방지 등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18. 저장강박세대로 인한 임대주택 화재 발생 사례가 있는데, 현재는 세대별 방문점검에 한계가 있으므로 점검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

19. 관리사무소 직원의 하자발생 세대에 대한 욕설 등 갑질 사례가 있는데, 시정해주시기 바람.

20. 혼합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임대세대가 과반임에도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SH의 역할이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 특히 마곡지구 특정단지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업체와 6년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시정해주기 바람.

21. 주거안심종합센터 인력배치 시, 전문자격증 소지 직원채용 관련 지침과 인력배치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

22. 임대주택 공가 종류 중 실질적인 공가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공급불가 공가)은 표현 변경을 검토.

23. 위탁관리업체 관리운영 관련, 종합평가 시 부적격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 업체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

24. 특정업체에서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참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약기준 개선 필요.

[서울디지털재단] — 2 건

1. 장애인 의무고용,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의무 고용을 적극 실천해주시기 바람
2. 경영평가 결과가 3년 간 '다 등급' 수준인데 상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나. 건의사항 ····· 117건

[주택실] — 55 건

1. 시공사 책임준공 없는 PF가 있음. 천안 공공주택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에서 벗어나 하자없이 준공할 수 있는 실익을 제공하고 있음. 서울시도 이 같은 사례를 개선방안으로 동의하는지?
2. 정부 8.8 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 이후 LH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SH는 부수적으로 참여하는데 서울지역 사업에는 SH가 주로 참여하여야 함.
3.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오프라인 수강생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음. 교육프로그램에 공사비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4. 정비사업 공급관련, 정부는 인허가 기준인데 서울시는 구획지정 기준으로 실제 공급까지 차이가 커서 시민이 체감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함. 신통과 모아타운 정비사업에 처음에는 다 들어올 수 있게 한 후, 문제가 생기니 진입구조를 높여 신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5.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미지원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6. 역세권장기전세 등은 면적기준산정에 국공유지를 편입하여 반영하지 않는데, 신통은 국공유지를 편입하여 인정해주고 있는데 신통이 역점사업이다 보니 차별적 요소라고 생각됨. 기준이 원칙적으로 필요함.

7. SH 미정산 관련 SH와 서울시간 수천억 금액간 괴리가 있음.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매년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서울시 입장을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8. 주택실 내 자문기관 중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자체 방침으로 설치 운영중인 자문기관들이 있음. 빈집정책자문위원회는 실장방침으로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음. 조속히 조례 설치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 미비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함.

9. 현재 서울의 당면 과제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대폭 공급해야 하며, 상식파괴 정도의 정책을 수립해야 함. 서울은 택지가 부족한데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 공원이 아닌 신혼부부 주택을 지어야 함. 또한 소득규제 해제 위해 정부에 건의 한 적 있는지?

10. 신혼부부를 위한 둔촌동 미리내집 공급에 임대주택 1,000호 중 300호를 공급했는데 너무 적었던 것 같음.

11. 청년안심주택 문제가 된 사업장에도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이 지원되었음. 10년 동안 지원해 준 경우도 있는데 임대주택을 짓는 게 더 나을 것임. 청년안심주택은 사업 확장이 아닌 출구전략을 세워야 함. 시행자들만 혜택을 받아 지속할 당위성이 사라졌음.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제공된 인센티브는 회수 방안을 모색해야 함.
12. 클린임대인 제도는 약자와의 동행 취지에서 좋다고 생각하나 신청이 저조한데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년 본격 시행 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13. 전세피해 예방 동영상이 업로드된 주거포털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보지 못하고 있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14.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임시주택은 LH 공가를 활용하는데 SH공가 활용을 해야 함.
15. 안심고시원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소유주가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16. 공사비 초기 검증이 잘 되지 않고, 추가 검증도 부실하여 공사비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늘어나는 비용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므로 보완책이 필요함.
17. SH감사 결과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자치구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매입임대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 청년안심주택등이 공급되어 상쇄됨. 매입단가 상한폐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며 매입임대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함.
18. 승강기의 중대고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증액 필요할 것 같고, 경기도의 장기수선 표준화를 벤치마킹하기 바람. 신축아파트 승강기 검사 기준규정은 왜 7년전 기준이 적용되는지 법개정이 필요한지?

19. SH 본사 이전 진행이 부진함. 26년 착공이 어려워 보임. 주택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함.

20.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택정책자문단에 주택건설협회 및 민간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함. 필요하면 조례 개정하겠음.

21. 민간부동산 제공 입주정보와 서울시 발표 수치가 편차가 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킴. 시가 하는 발표는 공식적이고,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니, 보정을 최대한 해서 개선해야함. 보완 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기 바람.

22. 청년안심주택 준공은 계획에 비해 매우 미비한 상황임. 실천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발표해야 함. 사업자가 신청한곳이 대상지가 되다보니 갈등이 많이 생기고 청년들이 전세사기와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김. 안정감 줄수 있는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고민해봐야 함.

23. 장기수선충당금 집행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관리비가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해야 함. 입주자 회장 중임 제한 규정이 없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고소 고발 등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소송비용을 대납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규제해야함.

24.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파산 또는 비위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구청장이 주택설립조합 취소할수 있는데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음. 비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 인가 취소 바람.

25. 주택실에서 SH의 사회주택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창동에 임대주택 짓겠다고 매입했다가 처분한 사례가 있음.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함.
26. 지원주택 공급 물량이 계획 대비 매우 적으며,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음. 또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주택을 매입해 추가 공사로 세금을 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운영위원회 연2회 개최를 위해 조례개정안 발의할 예정임.
27.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외부위원 4분 임기가 곧 종료되는데,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28. 서울시는 장기전세2에만 소득규제 완화를 요청함. 저출생 대책으로 일반주택 공급 시에도 소득규제 완화가 필요함.
29. 모아주택은 준비없이 시작되어 추진이 않되고 이웃끼리 원수만 되고 있음. 투기대책 및 근본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30.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SH 매입임대가 감소하기 때문임. SH는 주택실이 감독하는 산하기관이나 서울시 방침에 따르지 않음. 주택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장치가 없기 때문임. 평가, 예산, 인사권 다 기조실이 가지고 있음. 규정을 개정해야 함.
31. 2005년 이전 준공한 노후 임대단지는 34개이며 노원구가 가장 많음. 76%가 저소득층이며 자살률도 높음. 노후 임대단지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함. 영구임대로 이주 중이나 법적 규정이 미비함. 관련 조례 개정도 필요함.

32. 하계 5단지는 당초 삼구형에서 삼육형으로 바뀜. 고품질 임대주택 만들겠다더니 평형수를 줄여 주민들이 납득 안됨. 또한 중요한 시설인 보건소도 빠짐. 영구임대에 대해 고품격 주택으로 갈건지 서울시가 방향을 정해야함.

33. SH가 운영중인 주거안심종합 센터 자치구별 상담인원의 편차가 있음. 예산 배분 등 검토 필요함. 인력중 자격증 미보유 자도 있는데 지침에 맞는 것인지. 센터별 월별 실적 자료 및 주민 만족도 조사가 없다고 하는데 SH와 협의해서 평가 등 필요함.

34.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의무가 아닌데 계획을 세웠음. 당해 구역 임대주택이나 타구역 재개발임대주택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조건이 안되서 거주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구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 책임있다고 봄.

35.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고시 후 주민간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곳이 있음. 자치구 공모통해 선정된 경우 제대로 된 통지 없이 시행됐고,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유자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된 곳이 많음. 관리계획 고시후 해제 근거 마련이 필요함.

36. 도심복합개발 법률 시행령 부재로 사업지 검토가 어려움. 서울시에 도입 가능한지 판단 필요하며,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논의 필요함.

37. 주거기본조례를 주거복지센터 기능에 법률상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는데 시행 중인지. 16개소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SH 직영운영의 장단점이 있음. 내년에 용역을 통해 검토가 필요함.

38. 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미해산, 미청산 되고 있음. 조합장이 청산 업무 게을리 할 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데 정비사업 완료후 정당한 사유없이 청산 안할 시 조치 실행되고 있는지. 조합점검과 해산 요청 필요하며,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서도 점검 필요함.

39. 조합 청산계획을 준공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준공 이전에 청산계획을 받도록 조치가 필요함.

40. 서울시 예상 입주물량의 연도별 편차가 크고, 민간업체와 수치 차이가 너무 큼. 시장에서 아파트로 포함하지 않는 물량은 서울시에서도 비아파트로 분류해야 함.

41. 청년안심주택 예상 공급량과 목표치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청년안심주택이 민간 매각되면 일시에 정책이 종료될 수 있음. 공공이 지속가능하게 책임질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해야함.

42. 녹색건물 추진 기준 변경 1년도 안돼 재변경 하고 있는데 지열에너지로 인한 안전성 검증은 됐는지, 지열 에너지 기기 설치가 적합하지 않아 현장조사 공사까지 기간 소요가 많다고 함. 지열에너지 저주파 소음 등 예상 문제가 많은데 지열에너지 의무화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생자문위원회 대신 결의기능 있는 위원회가 필요함. 녹색건물 인증건수가 급감하고 있음.

43. 청년안심주택이 30년후 민간 분양으로 돌아갈 때 거주 청년 대책 필요함.

44. 전세사기 가해자는 가해자로 확정될 때까지 임대사업자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제재 조치가 필요함.

45. 임대주택 관리를 LH는 직영, SH는 위탁운영 중인데 시범적으로 직영 운영 검토가 필요함.

46. 임대주택 내 갈등이 관리소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음. 직영방법 및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함.

47. SH 공사비 검증 인력에 금융 전문가가 필요함. 레미콘 회사가 제때 도착 못하는 이슈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하계5단지 공사비 문제도 지속 관리하기 바람.

48. 매입임대주택 계획 달성 가능한지. 정책 홍보가 더 필요함.

49. 주거안심종합센터 자격증 소지자 근무 기준이 SH와 서울시의 지침이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50. 내곡 세원마을은 15년에 보상하고 22가구가 잔존하여 방치되고 있음. 서울시가 명확히 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바람.

51. 수서택지 지구는 집을 새로 짓는 것임. 도시개발을 벗어나면 주택실 소관이 됨. 수서지구 개발 내용을 보면 현행 규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보임. 주택실의 견해를 보고해주기 바람.

52.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구릉지로 지형적 여건상 사업성이 부족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내년에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정비 용역을 준비 중인데, 용역 완료 전이라도 조기 시행되어야 함. 또한 재정비위원회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심의하여야 함.

53. 골드시티 사업은 SH 단독 사업인지, 주택실에서 총괄적으로 관여하실 필요가 있음. 6억짜리 용역을 공사가 왜 선제적으로 하는지 공사가 앞서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 공동사업자와도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과업지시서에 서울시민이 우선 이어야 함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정량 평가 꼴찌가 정성평가에서 압도적으로 이겨 직원도 3명인 소규모 업체가 용역을 받아 석연치 않음.

54. 매입임대 정산과 관련하여 시는 2,200억을 받아야한다, 공사는 3,500억을 받아야한다고 서로 주장이 엇갈림. 각자 입장이 달라 정리가 안되고 있고 양 기관 간 금액 차이가 있다보니 소송으로 갈 여지가 크다고 봄. 담당 선에서 협의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과 공사가 탑다운 방식으로 정산해야 함.

55. 중구에 있는 우리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도시계획에 걸려있다고 들었음. 우리집은 화장실도 대문도 못 고치고 있음. 15개동 모두가 지구단위계획에 걸려있음. 이런 점을 주택실에서 자치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함. 희망의 집수리사업 관련 20년부터 중구는 집행률이 가장 낮음. 자치구별 예산 배분이 형평성 있게 되고 있는지.

[미래공간기획관] — 25 건

1. 공공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런 베이스) 장소는 환승역 중심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함. 석계역, 돌곶이역 등 유휴공간이 많은 역사가 있음.
2.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 쏠림 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필요.
3. 대관람차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적정성 및 적격성조사 등 진행 중으로 적격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여 주기 바람. 최초 발표 때 5800억, 민간제안 9200억, 그 이후 1조871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적격성조사 의뢰 시에는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 절차가 있는데 적격성조사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4. SH공사의 참여도 문제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추진과정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만 해도 되는 건지? 신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5.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의 심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을 강화시킬 것.
6.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교통분야 전문가도 추가 위촉할 것.
7. 방배 5구역 재건축 체육시설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부채납시설로 계획되어야 함. 전문체육인 등 소수를 위한 체육시설이 되면 안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맞게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바람.

8. 용역 품질 검수를 위하여 발주한 목적과 활용성에 맞게 성과품이 완성되었는지 전문가 검증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함.

9. 남부터미널 부지 일대 개발구상안 마련 필요. 주변 지역 슬럼화로 도시 활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필요함에 따라 행정 주도의 미래공간 창출 공간 구상안 마련. 남부터미널 일대 도시 활력을 위한 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 정책 추진 의사 문의.

10. 대관람차 조성 관련 지반조사의 경우 매몰비용 발생 및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개월 단축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했던 건지?

11. SH 본사 이전 관련 총괄건축가 자문 내용 별도 보고바람.

12. 노들섬 홍수 관련 안전 문제는 없는 건지? 사업추진 방식을 바꾼 것은 특정 건축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닌지? 설계공모자가 무분별하게 예산 증액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준공 후 상단부 변경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바람.

13.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관련 경쟁 도시 대비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유치한계 예상되니 치밀한 계획 및 적극적 대응 필요.

14. 마포농수산물시장 공간기획 시 무산된 경기도 CJ라이브시티 사업과 같이 민간자원 검토 요청.

15. 곤돌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유도와 연결한다고 하는데 송전탑 지중화 등도 함께 계획되는 것인지?

16. 민간(신세계백화점,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등)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시청역 지하공간 펀 스테이션 조성 시에도 이런 미디어 파사드 적용 검토 필요.

17. 펀 스테이션 선정 역사가 동측에 집중되어 있고, 서남권은 타 지역 대비 거점 공간이 부족한바, 서남권에 대한 추진 검토 요청. 강서구의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 마곡나루역의 경우 서울식물원으로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요청.

18. 「사전협상 운영지침」 관련, 제도개선 사유, 3종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기여 미부과 개선 사유.

19. 사전협상 완료 후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는지? 재협상 후 감정평가시 감정평가 비용부담(공공:민간=5:5) 적정한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측 전액 부담 적정.

20.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시 민간 측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 필요(잦은 지침 개정은 사업자 혼란 우려).

21. 사전협상 추진부서 일원화 필요.

22. 공공토지지산 및 공공시설등설치기금 관련 업무에 관한 추진조직을 사전협상 추진 총괄부서로 일원화 필요. 공공기여 관련 기준(공간본부) 등 내용 설명 필요.

23. 균형발전 사전협상 관련 검토대상지, 기존에 협상을 완료한 대상지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적용 가능 여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도 적용 시 균형발전위원회의 대상지 선정은 사전협상제도의 추진부서 일원화 방향과 배치,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기간 3개월 가능 여부.

24. 향후 총괄건축가 위촉 시, 외국의 유명한 전문가를 포함 검토할 것.

25. 자체공간기획 운영 예산 집행내역에 공공건축 간행물 용역비용과 우편 발송비용이 별도로 편성되어있는데, 일괄 용역으로 입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디지털도시국] — 19 건

1. 서울기록원 보존서고가 2030년에 95% 정도까지 만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확보 방안이 필요함
2. WeGO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3. 서울지갑 앱에 대한 구글 평점이 낮음.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통합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4. 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성을 고려하여 동부권, 동남권에도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이 필요함
5. 각 CCTV 관제센터의 1인당 관제대수 등 자치구별 고르게 운영하는 방안 필요
6. 지능형 CCTV 보급에 대한 자치구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자치구 독려 필요
7. 현재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관내 CCTV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SLW 관련, 첫 행사 개최로 나름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경쟁도시, 경쟁민간행사 대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보고할 것. 특히, 글로벌리더쉽 확립 등 거대담론으로 인한 내실 보완에 주력할 것

9.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출범시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소, SAP 등 전문영역을 확보한 기관이 입주했으나 모두 철수함. 원인과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10. 서울디지털재단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연계성 확립. 재단의 강남 이전 등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할 것
11. 공공와이파이 관련, 서민대상 사업임에도 10년이상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근본적인 대책 강구 필요
12. 보안에 취약한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해킹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13. 직원들이 사이버 보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라며, 정보보안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 바람
14. 직원 근무성적 평가에 정보보안 활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15. 보안강화 조치가 개별 담당자의 행정적 업무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업무지원시스템 조속히 추진 필요
16. 대시민 서비스로서 데이터 복지 차원에서 서울면적 대비 공공와이파이 공급범위에 대한 목표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17. 버스정류소 BIS를 활용하는 방식 등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방안 강구 필요
18. 지하철 역사 내 와이파이 상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점검 필요
19. 웹3.0 행사 관련 대금 지급이 지연된 업체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의 구제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서울주택도시공사］ — 14 건

1. 콜센터 직고용 관련, 향후 노사전협의체에 주택공간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 하계5단지 관련, 이주택지 평형과 SOC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주민들이 납득하겠는지? 당초 계획대로 SOC시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주절차나 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 및 홍보가 필요.
3. 한강버스 관련, 대여금 등 문제점들은 SH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기 바라며, 의회 지적사항을 신속 보완하여 사업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4. 매입임대 실적제고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5. 역세권 관련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역세권개발 사업화 용역 범위에 이를 포함하여 시행할 것.
6. 장기 임대주택 거주자는 퇴거 후 주거사다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7. ㈜한강버스에만 사업을 맡기지 말고, 실시간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일정대로 추진할 것.
8. 주거안심종합센터 인력관리 관련, 강남구의 임대주택 수 대비 직원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 보강을 요청.
9.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는데, SH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기 바람.
10. 가든파이브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1. 불법전대 방지를 위해 공유숙박 사이트와 업무협약을 하면 좋지 않을지? 공공주택특별법상 불법전대자의 입주제한 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매입임대주택 기계식 주차비율에 대한 설계기준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실적제고를 위해서라도 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

13. 최근 수행된 정비사업 발굴 용역 중 부실한 용역이 상당수 있는데, 불필요한 용역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을 수행하기 바람.

14. 사옥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직접 만나서 협의하기 바람.

[서울디지털재단] — 4 건

1. 디지털재단의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디지털 도시국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텐데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람

2.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격차해소사업 및 서비스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길 바람

3. 이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중인데 내부적으로 복무 등 조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주길 당부함

4. 스마트시티센터가 8층에 위치해서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에스플렉스센터 1층 공간을 이용해서 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길 바람

다. 기타(별도 보고, 자료제출 등) …… 65건

[주택실] — 19 건

1. 토지지원리츠 사업장 목록, 토지 매입방식, 사업자 선정 관련 등
2. 정비사업 아카데미 결과 등
3. 역세권 청년주택 진행사항(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
4. 저출생 주택공급 관련 소득규제 폐지 국토부 건의 공문
5. 제3차 미리내집 공급 예정지 및 1,2차 모집공고문
6. 매입임대주택 관련 정산금 경위 공문
7. 긴급주거지원 관련 구별 LH 임대주택 공가 현황
8. 6~7급 겸직 및 외부강의 현황, SH 심의 수당 기준
9. SH 정산 관련 25% 산출 근거
10. 공사비 검증 고도화 내용
1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명단
12. 주택실 사업추진 중 외부기관 관련 모니터링 오류 사례
13.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 미이행시 조치 결과
14.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15. 감사위원회 및 서울시 조사 결과 지적사항
16. 서울주택공사 예산 및 인사 권한 변경 위해 개정 필요한 조례
17. 공동주택관리 관련(서면질의)
18.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김태수 위원 3번, 용역 관련) 재제출
19. 희망의집수리 업체 선정 근거, 구별 신청 및 선정 현황, 만족도 조사 등

[미래공간기획관] — 19 건

1. 수의계약 관련,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구축 용역은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용역인지? 민관동행 민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도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지?
2. 송현동 부지 내 이승만기념관 관련 총괄건축가 자문 내용 별도 보고 바람.
3.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세 개 시장을 아우르는 계획이고 컨설팅 용역은 세 개 시장 별도로 발주했는데, 쪼개기 발주 아닌지?
4.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관련 당초 선정된 평가위원이 위원회 개최시 변경된 사유.
5.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SH공사 사장의 공사 직접 개발 및 임대 보도('24.10.14.) 관련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추진했는지 여부.
6.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7. 미래공간기획관 용역 계약 방식 중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이유는?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한시적 특례기간은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장된 것이므로 1억원 미만의 용역에 적용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짐. 그러나 미래공간기획관 수의계약은 1억 이상 용역이 65%로 매우 큰 비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 행정안전부 특례 연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원칙대로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 바람.

10.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구축이 마곡 등 기존지역을 대상으로도 시행될 수 있어야 함. 또한,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내용 잘 검토 바람.
11. 사전협상 대상지별 추진 현황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도봉구 성대 야구장, 서초구 서울레미콘, 송파구 송파ICT 부지)
12. 최근 입안된 수서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안)과 관련하여 수서차량기지 및 수서공영주차장 개발과 연관되므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주기 바람.
13. 11.14. 기준 집행률이 44.9%인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바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14. 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 관련하여 대형 버스 주정차 문제의 검토가 필요함.
15.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구축 용역 입찰업체 목록 및 입찰공고문
16. 민관동행 민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입찰업체 목록 및 입찰공고문
17. 마포농수산물시장 건축혁신방안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서
18.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기본구상 및 사업화전략 수립 착수보고 자료
19.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 집행현황 및 추진 경위

[디지털도시국] — 5 건

1. 스마트라이프위크 관련 , 종합계약 표준협정서상 동행사업담당관에서 경제정책과로 담당부서가 변경된 후 협정서 재체결 현황
2. 디지털시장실 이름변경 관련, 디지털시장실 구축 계획 및 구축비, 구축업체, 소요예산 현황 자료
3. WeGO 회원 도시 중 회비납부 상위 도시
4. 자치구 자가망 확충 및 CCTV 보안장비 설치 수요 전수조사 결과
5. 정보자원 통합관리 사업 및 노후장비 현황

[서울주택도시공사] — 22 건

1. 매입임대 관련 2023년도, 2024년도 다세대 등 빌라 주택 가격 통계
2.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수
3. 한강버스 관련
   - 한강개발사업단에서 진행한 모든 법률자문의뢰서와 자문결과(일자별 정리)
   - 이크루즈 합작 법인 설립 전에 추가 출자가 불가한다는 내용 대여금도 못 가져온다는 내용 서울시와 SH와 통보했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공문
   - 한강버스 120억 단기대여금 관련 이사회 속기록 전체
   - 전기추진체 도입 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누군지, 어떤 의견인지, 자문료를 얼마를 주었는지 등 내용 일체
   - 서울시 육상 충전설비, 관제시스템 추가 지원해주겠다고 의사표명한 내용

4. 임대주택 물건투척 관련 지난 8월 달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건의한 내용

5. 콜센터 관련 질의(11.7.)에 대한 공사 입장

6. 골드시티 관련 사업화 전략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 내부 방침, 과업지시서

7. 강동구 공공임대주택 공실 현황

8.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용역 용역비 산출근거 자료, 착수보고 및 결과보고서

9. 5년간 SM그룹과 직접 거래 또는 수주한 현황자료(자회사 포함, 2019~현재까지)

10. 재개발임대주택 위탁수수료 관련 용역 추진 내역

11. 고덕강일 근생 6-1 필지 계약 후 계약해지 사유

12. 청년안심주택 성범죄자 입주 관련 지난 7월 12일 입주자격 제도개선 건의 내역

13. 장기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자료제출

14. 서울도심(종로·중구) 저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발굴 용역』 계약내역서 제출

15. 가든파이브 처음 분양시점부터 연도별로 계약 현황, 관리비 현황(분양, 임대, 공실)

16. SLW 예산 집행내역(행사비, 분담금, 부수 설치비용)

- 참여 기업간 협의 내용, 계약 관계, 관련 예산 편성 집행 내역

- 스마트 홈 부스 전시 참여 업체 선정 내역, 선정방법, 공사 내 부서별 협업내역

17. 가든파이브 연도별 계약현황(분양, 임대, 공실, 관리비까지 연도별로 작성, 가든파이브 준공시점부터 모두 제출)
18. 5년치 보증금 관리현황(발생원인별로 구분) 및 실제 계좌에 있는 내역으로 제출
19. 전기추진체를 예비선으로 하는 계획은 언제부터였는지의 자료
20. 주택관리업자 종합평가 세부기준 및 심사서류
21. 2020~2024년 수의계약 연도별 건수, 수의계약 평가기준표
22. SH공사 전체 건축,공공, 복합 전체 설계공모내역, 20~24.9월 까지 일시, 사업명, 심사기준, 심사위원 구성, 사업비, 계약금액, 선정업체, 업체별 계약건수, 업체별 계약금액

[서울디지털재단] — 0 건

※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 · 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2, 2023, 202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주택정책의 개발 · 조정 및 장 · 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및 주택임대차상담에 관한 사항 ◦다가구 · 원룸 등 매입임대주택 총괄에 관한 사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 활성화에 관한 사항 ◦민간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사업관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지원 시공자 · 설계자 · 정비업체 ·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민간 · 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사항 ◦노후 저층주택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휴먼타운 2.0/뉴빌리지) ◦신속통합기획 추진과 관련된 사항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정부 및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제도와 관련된 사항 ◦정비사업 통계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 · 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정비사업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 ◦정비기반시설 입체·복합화와 관련된 사항 ◦G밸리 주변지역 주택 확대방안과 관련된 사항 ◦부동산 이상거래 및 투기방지대책과 관련된 사항 ◦주택·건축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건축 관련 법령(건축법, 건축기본법 등)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빈집 관련 계획 수립, 빈집 매입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항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에 관한 사항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한옥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민선8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21, 2022, 202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실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미래공간기획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 · 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2, 2023, 202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 등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사항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선정사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노들 글로벌 예술섬 계획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등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국내·국제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등 주요 도시공간 기획에 관한 사항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 검토에 관한 사항 ◦사전협상제도 운영 · 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송현문화공원 등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대관람차 사업추진 등 도시활력 거점조성 공간기획에 관한 사항 ◦지하철역사 혁신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22, 2023, 202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미래공간기획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디지털도시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 · 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2, 2023, 202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계획 수립 · 활용 · 조정에 관한 사항 ◦디지털정책 홍보 · 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 플랫폼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시스템 정책수립 · 조정 ·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 · 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 조정, 시스템 구축 · 운영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 · 조정 · 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관, 기록문화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 · 감독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 · 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 운영, 유통 · 개방 및 개발 지원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 · 운영 ◦사회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보통신 정책 수립 · 조정 및 총괄 ◦스마트조시 등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 · 조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리 ◦정보보안 정책 수립 · 조정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운영 지원 및 지도 · 감독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 · 감독 ◦2022, 2023, 202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디지털도시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 · 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2022, 2023, 202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검증에 관한 사항 ◦건축 및 토목 조경공사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질의 · 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임대주택 위탁관리·직접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 등에 관한 사항 ◦ 골드시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21, 2022, 202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디지털재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 · 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2, 2023, 202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22, 2023, 2024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디지털재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9.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총 괄

기 관 별	계	시정 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자료요구
계	216	105	56	55
도시공간본부	42	23	13	6
균형발전본부	27	11	11	5
디자인정책관	24	14	3	7
미래청년기획단	46	23	12	11
글로벌도시정책관	32	17	9	6
서울디자인재단	45	17	8	20

가. 시정 요구 사항 ····· 105건

[도시공간본부] — 23건

1.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강남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강남북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강북과 구도심에 대한 대책을 병행해 수립하기 바람.

2.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전제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고 아파트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 일상권과 공간 대개조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조건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관리기준 중 복원비오톱에 대한 이전·복원·관리 비용을 모두 토지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든 부담을 토지주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거나 유지관리에 대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음.

5.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늦어져 주민들의 정비수단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갈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6.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에 따른 인근 주민 재산권 제한 및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서울시에서 ICAO에 제안한 김포공항 고도제한(안) 또는 의견에 대한 내용을 별도 보고 바람.

7. 용적이양제도 실시에 핵심은 '용적가치 산정방식'인데 용적 가치에 대한 산정 기준이 명확하기 않은 경우 실질적 합의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용적 가치 기준 산정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또한 제도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8. 신고도지구 지정 관련, '24년 6월 서울시 고도지구가 재정비되었으나 해당 지역 내 건축물 노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고도지구 높이 완화기준을 경관 보전뿐만 아니라 사업성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제2세종문화회관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 변경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10.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대상지가 여의도 공원 내 '한국 전통의 숲'이므로, 임상이 양호한 식생 등에 대해서는 보전방안 마련이 요구됨.

11.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하여 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외부위원들이 있으므로 위원회 중복 위원들의 조정을 거치는 등 개선해야 할 것임.

12.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질의사항 중 미회신된 질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질의내용이 시민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속히 답변을 받아야 할 것임.

13. 최근 3년간 각종 기념품 및 상품권의 구입단가가 상이함. 저렴한 구매가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배포·잔여개수 자료를 정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4.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정되고 있고 현재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보상체계 마련 또는 구역 해제 등 조치가 필요함.

15.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 사업비가 불용되었음. 대학 혁신성장시설 내 지역기여시설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6.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 총 사업비 25조 6천억, 개발 이익 31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국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서울시가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더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17. 공간혁신구역 관련, 용도지역 개편에 대한 서울시 가이드라인 정립과 투명한 지정 절차가 필요하며, 과도한 상권 확대로 공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모니터링 해야할 것. 또한 공간혁신구역 지정 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급부로 공공기여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임.

18.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학교시설 결정 후 미집행 용지 다수 및 일부 미활용 용지의 경우 세금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음. 학교시설 변경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만큼 개발계획 수립 시 교육청 취학 관련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체계 구축 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 구성에도 교육전문가 포함하는 방안 고민해야.

19.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지 선정 관련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 오세훈 시장이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고, 심지어 도시공간본부는 상업지역 물량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하니, 시장의 발표와 담당 부서의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 바람.

21. 용적거래제도 관련, 용적가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토지 소유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개발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개발이익 환수, 난개발 해소 등 도시계획 운영상 규제와 손실에 대한 보상해결 기법으로 접근하면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명확한 기준 제시 바람.

22.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하여 재원확보,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므로 재원조달 방법 제시할 것. 서울시 15개 자치구에 걸친 사업인 만큼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23.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초기 2~3년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차츰 실효성이 감소함.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조정으로 일부 구역의 지정 해제를 진행했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일괄적인 운영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정책 운영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균형발전본부] — 11 건

1. 서울혁신파크 매각 관련하여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등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위한 기업설명회부터 개최함.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및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정리 등 절차를 준수하고 개발 논의를 시작할 것.

2.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2~2024년 불용률 20% 이상 사업이 41건으로

5건은 100% 불용임. 정무적 판단 및 시민설득 과정을 거쳐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용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람.

3. 문정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미래형 업무단지를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공실이 생기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음.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살펴보고 현실에 맞게 반영해주기 바람.

4. 매년 반복되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문제 등 고질적 체납자 관리가 미흡함. 예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서울혁신파크의 SH 관리위탁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지 않음.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절차상 주민들 오해를 불러오는 것임. 정무적 판단 및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

6. 2023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 2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사후보고는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다시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7. 도시재생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과밀부담금 징수 전망이 15일만에 300억원에서 1054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면밀하고 책임 있는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함.

8. 도시재생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도시재생기금 전체 규모와 맞먹는 9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다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 회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본사업계획과 현재 진행과정, 앞으로의 세부계획까지 다시 한 번 제시해주기 바람.

9. 균형발전본부 소관 위원회의 출석률이 저조함. 개선 조치할 것.

10. 사업 추진 시, 강남 3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삼지 말고, 각각의 지역 특색에 맞는 목표 설정을 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고려할 것.

11. 현대차 GBC 개발 속도가 느려,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 피해가 막심하니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디자인정책관] — 14 건

1. SBA의 DDP 공간 조성 관련,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무리하게 일정 추진하고 예산 편성 후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으로 13억여원의 예산 손실됨.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내부 공간 접근 및 이용 불편함. 동대문 일대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할 것.

2. DDP 인근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는 동의하지만 SBA의 DDP 분할 위탁 결정 전에 충분한 사전 협의 및 논의가 선행되어야 했음.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및 정책 결정 시 재발 방지를 요청함. 또한, SBA가 DDP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 과거 진행해오던 사업과도 크게 차별점 없어 보여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요망.

3. DDP 내 SBA 관리공간에 미디어 파사드 등이 설치만 했지 안내 인력은 없고 휴식 공간은 조명이 어두워 시민이 불편을 느낌. 비어 있는 공간도 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DDP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디자인정책관, 서울경제진흥원, 경제정책실 사업 내용 중 중복되는 것을 정리해 각 부서 및 기관에서 고유의 역할을 정하고 역할에 집중할 것. 또한, DDP는 그 자체의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시장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분야에 SBA가 DDP에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SBA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므로 공공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역할을 고민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음.

5. 이슈대응 디자인 개발 사업 자체는 미미한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치구에 배포하고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6.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수변 야간 경관개선 등의 사업들이 예산 집행률은 낮고 사업 추진도 미미한데 점검 바람.

7. 디자인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 사업의 빛공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8.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아울러, 조례상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시민참여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 바람.

9. 동일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바람. 또한, 행사 대행용역에서 입찰방식을 제한경쟁보다는 일반경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함.

10. 2023년에 개발된 지하철 노선도가 온라인 플랫폼에 보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할 것.

11. DDP 내 유구전시장 이전 예산을 ‘24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경써서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12. 서울빛 사업은 서울색을 활용한 조명연출사업으로 명명해 서울색 사업과 함께 운영될 필요가 있음. 서울색을 매년 설정하는 것은 도시 정체성 정립에 혼란을 줄 것이므로,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색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 검토할 것. 또한 서울색 선정 시 시민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할 것.

13. 추경편성을 통해 추진한 지하철유휴공간 혁신프로젝트 '러너스테이션'이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조성 및 운영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초래하게 된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함. 추경은 긴급한 사업에 편성해야하므로 숙의과정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할 것.

14.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정책을 책임지는 곳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DDP 고유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잡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

[미래청년기획관] — 23 건

1. 천호 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1차 용역 결과가 부적정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2차 용역을 반복해서 수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 청년자율정책 10개를 엠보팅에 투표를 붙였는데 투표기간이 10월 7일까지임. 이 시기는 이미 내년도 본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시기라서 예산에 반영하기 적절하지 않고 요식행위처럼 보임. 시기를 조정하고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3. 주택실의 청년주택 공급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도 미래청년기획관이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택실과 긴밀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바람.

4.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부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인턴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시정하기 바람.

5. 긴급생활안전 이자지원 사업 점검 및 종료사업 절차개선 바람. 미래청년기획관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들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임.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와 마무리를 잘 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해주기 바람.

6. 청년센터 직원과 법인 임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지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필요.

7. 해외청년봉사단 봉사활동 종료 이후 귀국준비금, 커리어적립금 등 과도한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 시정조치 필요.

8. 청년 관련 조례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보다 아닌 것이 많은 상황임. 총괄부서라면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함. 미래청년기획관의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 수행하기 바람.

9. 청년기본계획 재수립 시 빠른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가 미흡함. 지난 5년간 청년들의 실태조사 필요. 청년기본조례 이외 8개 조례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태조사 시기·내용을 통합해 예산을 절감하고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10. 청년 기업직무체험 프로젝트, 미래청년일자리,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매력일자리(뉴딜일자리) 등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사업이 여러 부서를 통해 시행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중첩 사용되고 있음. 한 부처에서 정리해서 내실있게 진행하고, 청년과 기업이 동시에 살 수 있는 윈윈구조를 구축하기 바람.

11. 서울시 내 9개 자치구에는 아직 서울청년센터가 설립되지 않음. 청년센터가 인기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치구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특조금 지원 등 각 자치구별로 청년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2.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비극적 현실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고립·은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청소년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 검토 필요

13. 해외청년봉사단 활동 종료 이후 비교적 장기 봉사에 치중되어있는 KOIKA 규정을 준용해 지원된 각종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서 향후 시정 조치 필요.

14. 청년 해외원정대 파견 국가 선정 시 명확한 목적과 선호 분야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 등 검토가 필요하며, 해외관련 용역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 현장실사가 반드시 필요.

15. 청년홍보채널 SNS, 유튜브 등 활용 성과 개선 필요. 유튜브를 청년몽땅정보통에 사업 설명 첫 화면에 실행하게 하는 등 기존 정책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16. 청년수당 콜센터를 한 업체에서 5년간 연속 수행함. 규정에 따르면 제안서에 업체 식별 정보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서울시 사업실적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17. 영테크 용역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기존 업체에 유리한 구조로 다양한 청년 분야 전문가 양성에 불리하다고 봄. 제안서 평가 시 경쟁적 요소 도입 노력 필요. 또한, 영테크 용역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설계를 잘했다면 사업비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바람.

18. 청년수당 지급 중단 사유로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사유 비중이 가장 높은데, 미제출 이유 파악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19. 영테크 사업 신청자 중 군인이 두 번째로 많은데, 향후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영테크 참여 인원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급식위원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등 청년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슈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청년 의무 위촉 제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외위원회를 재검토할 것.

21.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이 일반 기업이나 다른 기관들의 기술력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들에게 맞는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22. 미래청년기획관의 주요 업무 목표 목적은 '청년들의 성장 도약, 취약한 청년들을 함께 가는 약자와의 동행, 청년들의 정책 참여'임. 업무 목표에 따른 조직 진단과 사업별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함.

23. 청년 공간 대관이 동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음. 형식적 이용 혹은 특정인이 목적성을 갖고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특정 목적을 가진 유료 프로그램이 공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요망. 무료 공간 이용 시 일부 청년이 혜택을 독점한다는 불공정성이 제기될 수 있음. 아울러, 대관 기록에 대한 관리 및 투명성 강화 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 17 건

1.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공무국외출장은 소속 공무원(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용 절차 중인 사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것은 잘못임. 유권해석을 '사람'이 아닌 '직위'로 하는 건 조례 위반으로 판단됨.
2. 글로벌센터 상담서비스 축소에 따른 다양한 언어 상담 보완책 마련 및 기존 이중 상담 전문인력 활용하는 방안 강구할 것.
3. 시티넷 등 국제기구 협조 통해 서울시에 국제기구나 국제비영리단체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센터빌딩 공실 해결을 통해 공간 효율화를 도모하기 바람.
4.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인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이중언어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외국인주민 분들이 편리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5. 서울외국인포털과 지역 외국인노동자센터 홈페이지를 사용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관련, 총예산의 인건비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민간위탁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 필요.
7.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금의 용도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 재해 구호경비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핵심인 공적개발원조(ODA)를 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 반영하기 바람.

8. 다양한 외국인주민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주민지원 시설별 프로그램 차별화와 운영 체계화 등 재정비가 필요함.

9. 효과적인 외국인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서울시 타 부서 및 정부 부처 등과 협업하여,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데이터 확보와 체계적인 분석·관리 요망.

10. 주민세 등 외국인 소액 체납자 증가 추세인데,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등 각종 외국인주민지원 시설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 강화로 외국인주민의 체납을 방지해야 할 것임.

11. 서울시 ODA 예산 비중은 지방자치단체 최하위 수준이므로 서울시 위상에 걸맞은 ODA 예산 확대와 함께, 서울의 선진 정책 경험을 토대로 다자개발은행(World Bank 등), 국내 ODA 전담기관(KOICA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

12. 중도입국청소년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가 그 역할을 100% 수행하고 있지 못함. 부산시-부산시교육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서울시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밖 청소년으로 남아 있는 중도입국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3. 시장 해외순방지역과 국제협력지역이 다르고 친선·우호협력도시 중 국제개발협력 실적이 있는 곳은 미미하므로 국제교류협력과 국제개발협력을 접목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14. 지역 외국인노동자센터 중 일부는 종합복지관 내 위치해있고, 종합복지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개편하기에 앞서 시급한 개선을 요함.

15.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설을 운영 중이나 외국인주민 입장에서는 혼동 가능성이 있음.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주기별로, 영역별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강구할 것.

16.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있는 국제기구 시티넷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없으므로, 시티넷의 역할을 정립하기 바람.

17. 시티넷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계속 시 지원 예산 늘어나고 있음. 재정독립 방안과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것.

[서울디자인재단] — 17 건

1. 서울라이트 DDP 행사기간 동안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행사와 관련한 사전 홍보를 강화해 인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2. DDP 행사 및 투어, 전시 실적은 방문객 수와 만족도 수치로 판단되는데, 정교한 데이터 기반 관리 방안을 고려 바람.

3. 통합홍보비 8억7천6백만원 예산을 책정했으나 컨텐츠 내용 및 개수, 조회수, 시민 참여 등 모든 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고,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함. DDP의 정체성을 살리고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이고 참신한 홍보 마케팅 노력이 필요함.

4. SBA가 DDP 공실 공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재단은 반성하고, DDP 운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디자인분야 혁신을 통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사업을 다채롭게 만들어주시길 당부함.

5. DDP와 새활용플라자를 운영하고 빛축제를 대행하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 서울의 모습을 그리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정립해 나가기 바람.

6. 2024.2.6. 입점업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영업손실 민원에 대해서는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함. 이와 관련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7. 창업센터 운영 사업은 조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정관에는 빠져 있으므로 정관개정을 통해 조속히 반영하기 바람.

8. 시설관리는 재단의 주요 사업이 아님에도 4개의 시설(33,900평 규모)을 관리하고 있음. 그럼에도 사용되는 시설은 미미하여 실질적 사업이 어려운 상황. 새로운 각오로 서울디자인을 이끌어 가는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보고해주기 바람.

9. 재단에서 취급하는 굿즈가 저가의 소소한 상품에 불구하므로, 성수동 가죽·구두, 종로 금세공품, 전통고예 등과 결합해 고가의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임.

10. 카페 드 페소니아 관련 명도소송 안좋은 사례임. 명도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울러, 카페운영업체인 우일티에스 홈페이지에 재단과 DDP CI가 협력업체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시정 바람.

11. 재단 로고 사용이 홈페이지 및 업무보고서 모두 통일되도록 사용 바람.

12. 24년 7월 DDP 설치 조각품 민원 관련하여 파악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추후 보고 바람.

13. 서울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 및 정책 관련하여 DDP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재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 바람.

14. 수의계약 관련 1인 수의계약 또는 억단위의 수의계약 건이 많음. 재단은 반복적 용역 수행과 수의계약 남용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15. 전문직 가급 자리를 비워두지 말고, 빠른 채용을 통해 공석이 없도록 할 것.

16. 새활용플라자 사업 성격이 재단과 맞지 않음.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을 확보할 것. 또한, 새활용플라자 지하 1층 하역장은 한곳에서 독점한다는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는데 관련하여 민원이 없도록 운영 바람.

17. DDP 홈페이지의 관리 상태가 부실함. 업데이트를 철저히 할 것.

나. 건의 및 기타사항 ····· 56건

[도시공간본부] — 13건

1. 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와 인근지역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하거나, 공간 대개조의 개념과 연결해서 새로운 유형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용적률 거래제가 법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국가유산이 많아 정비가 어려운 도심권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3.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하여 충분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균형발전본부와 발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4. 과거 용적거래제도와 유사한 '결합건축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성공사례가 없었으며, 당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함.

4. 공공개발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함. 다만, 해당 토지를 소유한 개인 소유자와도 협의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람.

5.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한 철도지하화 사업구간 내에 오류역사~온수역 제외된 것과 관련, 서울시(안)에는 기술적 사유로 제외해놓고 국토부 최종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무책임. 도시 연결성 측면이나 경인선의 상징성 측면, 서울도심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온수역 포함된 경인선 전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 구간에 포함되어야 함. 경기-인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토부에 건의 필요.

6.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면적이 제각각인 상황이며, 주택공급 활성화에 있어 사업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유사사업에 비하여 소극적인 면이 있음.

7.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관련 조례 추진 시 기본계획도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축소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기 바람.

8. 대학 혁신성장시설 내 지역기여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기 바람.

9. 종로구 부암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필지에 대해 저해 요건이 없을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10.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공간 재편에 대한 기준을 먼저 잡고, 민간 등에 공모·자문 하는 방식 검토 필요.

11. 올해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한 구로평상, 신흥시장 클라우드 같은 개성있는 건축이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2. 2021년 4월 창신동 남측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음에도 2022년 7월 취임한 구청장이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종로구와 조율해주기 바람.

13.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이 순수자연취락인지 투기 목적 건축물인지 파악하여 순수자연취락에 대해서는 신축 행위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한옥촌 조성 등)을 제시 바람.

[균형발전본부] — 11 건

1. 신내 차량기지 일대 봉화산 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 중랑구에서 제안을 받아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2. 남산 곤돌라 소송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한 항고 절차 추진 시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명 및 대응이 필요함.

3. 남산 곤돌라 소송 관련, 시민들의 남산 접근성·편리성 강화 등 남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항고 과정에서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 중 각종 재개발 사업에 착수해 도시재생 명목으로 기투입된 예산 2,434억원이 매몰비용으로 전락. 향후 정책 결정 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5. 보존 위주의 1단계 도시재생에서 조성한 거점시설들이 2단계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와 협의해주기 바람.

6. 수색역 DMC역 차량기지 이전 관련하여 고양시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협상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것.

7. 남산 곤돌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남산케이블카의 문제점(개인사업자의 독점 및 전횡, 비공익적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 식도면허 갱신, 공원점유허가 등 서울시가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8. GBC 관련, 현대차의 세부개발 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재산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각별한 노력 요망.

9. 균형발전본부가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도시공간본부와 이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해주기 바람.

10.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 주민, 주민대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임.

11.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이후 시설물의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체육시설에 명칭사용권(naming rights)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에도 명칭사용권을 적용하여 유지보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임.

[디자인정책관] — 3 건

1.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운영 능력을 제고하고 독자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DDP 분할 위탁 운영 결정 과정에 소관 상임위 보고가 누락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부분과 DDP 기업 유인 요소가 적어 SBA에 일부 공간 위탁하게 된 것에 대한 반성 필요.
3. DDP가 시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정책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

[미래청년기획관] — 12 건

1. 고립·은둔청년, 특히 은둔청년들을 위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나 형식적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을 도모해주기 바람.
2. 미래청년정책은 불확실하고 창의력이 필요한 사업인 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도 있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래 세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신념으로, 청년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주기 바람.
3. 청년 관련 타부서 소관 조례들을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 부족한 부분 등 각별히 신경쓸 것.
4. 청년정책 홍보 유튜브의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방안 고민할 필요가 있음.
5. 청정넷 관련, 다년차 청년 참여자들의 경우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할때 청년들의 참여도 및 이행능력 높이기 위해 청정넷 청년 선발 시 다년차 청년 참여시킨 서류심사가 필요해 보임.

6. 청년몽땅 정보통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7. 종로에는 '서울청년센터'가 없음.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종로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람.

8. 은둔과 고립에서 단기간에 탈출한 청년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울청년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9. 미래청년기획관의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보면 '경쟁력 강화와 도약 기회 마련, 불안·걱정에서 청년들을 구조'라고 돼있음. 불안·걱정의 근본 원인은 지나친 경쟁인데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불안도 없애준다는 건 모순임. 청년들의 교육비 지원,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주기 바람.

10. 청년 전문가를 양성할 것인지, 청년 창업가를 발굴할 것인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청년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사업을 고민하기 바람.

11. 강남, 용산 종로 등 청년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 및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업 추진이 필요.

12.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관련, 외부 심리상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어 일부가 개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직접 상담사를 채용하여 공공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도 도모할 것을 제안함.

[글로벌도시정책관] — 9 건

1.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겠으나 외교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므로,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힘써주기 바람.
2. 글로벌빌리지센터 추가 개소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함.
3. 잦은 소관부서 이관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서울글로벌센터가 외국인 지원 기관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필요함.
4. 서울시가족센터 사이트(패밀리서울)에서 취업 등 홍보 강화 및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운영사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5. 현재 구로구 가족센터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권역별 거점센터 육성을 통해 타 자치구의 수요에도 대응해야 하며, 수요증가에 따른 예산 확대 및 아이돌봄 인력 처우 개선이 필요함.
6.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신설된 조직으로 아직 업무비중에 따른 인원 배치 및 사업계획이 미흡함. 앞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고려해 인력 재배치와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7. ODA사업이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고 실제 사업규모는 미미함. 실질적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에 걸맞는 교류협력 역할 수행으로 서울시 위상을 높이길 바람.
8. 요식업 등 영세 상인의 인력난 해소 위해 비자 완화 등 실절적 인력수급에 적극적 노력 필요함.

9. 외국인유학생의 정착 사업 추진시, 취업 기회 제공에서부터 정착 지원까지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외국인유학생들이 서울글로벌센터까지 '찾아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외국인유학생 정착 지원센터는 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궁극적인 정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것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할 것.

[서울디자인재단] — 8 건

1. SBA의 DDP 분할위탁 관리 및 공간활용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요구.
2. 아트홀 1층 카페 명도소송이 장기전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SBA 퓨처리움 공간 입주가 불가한 상황. 전반적인 SBA 사업 성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공간 미활용을 원인으로 분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의 신속한 종결에 힘써주기 바람.
3. 홍보 관련 NFT 구매자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하고 있는데, DDP를 서울시민에게 알리려면 정보 알림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개선 바람.
4. 디자인재단 경영평가 관련, 5년 연속 기관 평가 결과 저조는 재단 경영층의 리더십 부재, 경영목표 및 현안 해결 노력 부재, 사업 관리와 조직관리 부실의 결과임. 재단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영진의 자정 노력 시급.
5. 외부강의 신고 조사 관련 지적이 없도록 적법한 행위로 진행해야 함. 지적대상이 모두 간부급임. 향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람.
6. DDP의 활성화가 인근 동대문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주기 바람.

7.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공공기여 기부체납 공간 등을 활용해 확장할 필요가 있음.

8. 안전문제, 인사문제 및 경영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

다. 자료요구 ····· 55건

[도시공간본부] — 6건

1. 역세권 활성화사업 46개소 추진현황 자료

2. 역세권 활성화사업 46개소 추진현황 및 신축건축물 비율 자료

3. 철도지하화사업 총사업비 관련 산출근거 및 제안서

4.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비오톱관리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간 현황자료

5. 1종저층주거지 관리체계, 1종 전용 및 1종 일반현황 분석 자료

6. 비욘드조닝 실현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 용역의 현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균형발전본부] — 5 건

1.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스마트시설 도입계획

2.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 집행정지 건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

3.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현황

4. 신성장 거점사업 관련 내년도('25년) 예산편성 내역

5. 舊 서울의료원부지 사업계획 용역 내용

[디자인정책관] — 7 건

1.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계획 및 24년도 점검내역 일체
2.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개발, 읽기 쉬운 디자인도시 조성, 이슈대응형 디자인 개발,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개발 사업의 입찰 공고문, 업체 제안서, 제안서 평가 결과보고 및 결과물 일체
3. DDP 내 상업적인(이윤 창출 가능한) 공간의 디자인재단과 SBA 비율 산출 자료
4. SBA와 디자인재단 간 시설관리 협약서
5. SBA에서 디자인재단에 납부하는 관리비 납부 자료
6. SBA의 G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 및 성과 자료
7. 시민휴식공간 조성, 도시경관개선,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좋은간판 공모전 개최,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 수변 야간경관 개선 사업의 예산과목별 세부내역, 추진계획, 지연사유

[미래청년기획관] — 11 건

1. 청년참여기구 관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 현황, 분과 선정 기준, 분과별 회의 개최 횟수, 총원 대비 참석자 현황
2. 청년자율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운영 계획('19년~현재), 집행 현황('20년~현재)
3. 청년 해외봉사단 사후관리 및 취업 현황, 성과보고 동영상 및 보도자료
4. 미래 청년 일자리 고용 승계 현황

5. 청년 의무 위촉 제외 위원회 목록

6.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환수 현황

7.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받은 사유

8.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별 지원사유

9.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현황과 사업 이후 결과 및 비용

10.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추진 현황

11.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상담파트너 위촉 상세 사업계획 및 현황

[글로벌도시정책관] — 6 건

1. 외국인 유학생 유입에서 체류·취업 연계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세부자료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대학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 결과 및 정리 내용 공유

3.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각 자치구별 현황자료('23년도~올해)

4. 오세훈 시장 해외순방 일정('23년도~올해)

5. 서울시 ODA 챌린지 집행예산 자료

6. 시티넷에 편성된 예산 최근 5년간의 예산 목, 예산 목별 세부 사용 내역, 추진된 사업 및 그에 따른 성과 일체

[서울디자인재단] — 20 건

1. DDP 전시 관련 SBA와 디자인재단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자료

2. 최근 3년간 세입금 출연금 비교 자료

3.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및 예비비 금액

4. DDP 카페 드 페소니아 무단점유 조치 현황

5. DDP 디자인스토어 입점업체, 입점물품, 매출액 자료

6. 제로웨이스트 9월 시민행사 자료 일체

7. 최근 3년간 재단 운영 4개 시설 예산 및 인원 현황

8. 디자인재단 시설관리 4개 시설물에 대한 세입·세출 자료 및 각각의 시설물을 관리·운용하는 인력 현황 자료

9. 서울디자인 2024 수익 내역 자료

10. 재단 전문직 9명의 경력, 전문 분야, 현 업무분장 자료

11. 제로웨이스트 2024 추진계획, 집행사업 내역 일체

12. 최근 4년간 새활용플라자 교육 사업 내용 일체

13. 2023년도 종합성과평가보고서 새활용플라자 분임 경위

14. 경영평가 처리 결과 관련 보수체계 개선 자료

15. 최근 4년간 성과급 지급 내역

16. 재단 협력(후원) 기관 협력 내용(새활용, 서울라이트, 서울디자인 2024)

17. 2024 경영평가 평가보고서 자료(2023년 실적)

18. 서울시와 재단이 맺은 위수탁 협약 목록 및 협약서 사본

19. 서울시 굿즈 제작 수량 및 판매수익(2022년 초기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판매 부처별), 기획·제작·판매 등 사업 개요

20. 최근 5년간 홍보 예산으로 사용한 전 비용의 예산 세부 항목,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서, 운영 계획서, 추진 실적, 결과보고서 일체

※ 주요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 청취, 시책질의 · 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도시공간본부	○ 도시계획 용도지역 · 지구, 구역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수립 · 결정에 관한 사항 ○ 서울대개조 관련 정책 수립,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 추진현황 ○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수립·운영, 재창조 전략 추진 ○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구상,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현황 ○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추진현황 ○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관련 업무 추진현황 ○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신규·재지정 검토 등 총괄 ○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및 관리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 · 시행,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 등 관리 현황
균형발전본부	○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도심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및 남산곤돌라 도입 추진 ○ 동북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 총괄·조정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조정 ○ 서북권 서울창조타운(舊 혁신파크) 및 수색·DMC역 복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 ○ 서남권·동북권 신규 거점사업 추진 현황 ○ 국가상징공간조성 및 세종로공원 정비사업 등 광화문광장

	일대 편의·상징성 강화 관련 사업 총괄·조정
디 자 인 정 책 관	○ 디자인 정책 수립 / 디자인서울 2.0 기반조성 ○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진흥 ○ 디자인재단 지도·감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리·운영 ○ 디자인산업 정책기반 조성 / 디자인 협력 개발 및 확산 ○ 디자인전문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지원 사업 추진 ○ 도시경관 정책 수립 및 시행 /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및 야간경관 개선 ○ 좋은빛 환경조성 / 빛 활용 축제·미디어 사업 추진 / 옥외광고물 정책 총괄 기획 등
미 래 청 년 기 획 관	○ 청년정책 기본계획·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청년수당 사업 운영 및 관리 ○ 미래 청년 일자리, 직무체험 프로젝트, 해외 일경험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 시행 ○ 서울영테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등 금융 관련 사업 시행 ○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관리 ○ 청년 마음건강 사업,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시행 ○ 청년정책 홍보 및 소통 전략계획 수립·시행 등
글 로 벌 도시정책관	○ 외국인·이민정책 관련 정부부처협력 및 제도개선 ○ 외국인인력·유학생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시설의 설치·운영 ○ 다문화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각종 민간위탁 시설의 기관선정, 운영 및 관리

	○ 해외 지역별 민관 교류·협력 및 해외 초청연수 프로그램 ○ 서울시 친선도시·우호도시 선정 및 교류·협력 ○ 각종 국제회의 총괄·조정,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 ○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우수정책 해외진출 지원(ODA)
(재)서울디자인재단	○ 국내·외 디자인 행사, 전시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사항 ○ DDP 운영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DDP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 ○ 디자인인재발굴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브랜드 및 DDP 자체 브랜드 정체성 확립 및 상품개발과 확산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운영 등

10. 교통위원회

□ 총 괄

(단위: 건)

구 분	계	시정조치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자료요구)	비고
계	330	168	92	70	
교 통 실	132	70	41	2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3	13	8	2	
서울교통공사	102	40	29	33	
서울시설공단	73	45	14	14	

□ 시정·처리 요구사항 ----------총 168건

【교통실】 시정·처리 요구 70건

1. 지하철 요금 올해 150원 추가 인상 안된 점 유감, 사전협의 후 금년 내 조속히 처리 해야 할 것이고 요금 인상이 주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적정요금 검토가 매년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공영차고지 CNG 충전소 수익기부협약에 서울시가 관여하여 표준계약을 재체결해야 하며, 잘못된 사안에 대해선 철거 명령 등 적절한 제재조치가 필요
3. 특히, 교통실은 공영차고지 CNG 충전소 업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환수 및 법적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것
4. 미성년 등 무면허 승차가 심각함. PM업체별 면허 인증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5. PM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피해 잇따르고 있음. 즉시견인구역 확대 검토 바람
6. PM 주차장을 市에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PM 업체 부담으로 진행하고 도로점용료 할인 등을 검토해야 함.
7. 제3기교통카드사업시행합의서에 향후 공모절차 진행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함
8. 티머니 사회환원유보금 집행률을 올려 시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 바람
9. 보행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할 경우 시민만족도 조사표본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함

10. 바닥신호등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설치하고 확대 설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할 때임
11. CNG충전소 수익기부협약서 표준안을 만들고 무상 사용기간 만료된 CNG충전소의 관리 방안을 전면 재검토 바람
12. 수익기부 협약서에 서울시 포함하고, 관리감독 및 CNG 충전사업자 통제 권한 내용을 포함시켜 협약서 상의 목적에 맞게 동일한 기준에 의한 협약서 작성이 필요함
13. 서울교통공사 선로검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DLP 등 예산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교통실에서도 검토 바람
14. 창동역 환경개선 적극 검토 바라며 지하철 노후환경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15. 10월 금천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계획 변경 신고 수리 알림 보고 관련, 보고 사항과 다르게 더 많이 감축운행 중으로, 사실과 다른 보고에 대해 금천구 관리감독 필요
16. 마을버스 이용불편 개선을 위해 자치구 역할 정립 및 서울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고, 행정관리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17. 버스 중복 정류소 4개 초과에 대한 세부 규정을 조속하게 만들어서 개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8.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필요하고, 굴곡버스 등 신개념 교통수단도 함께 검토 요청
19. 행정자산의 사용 수익 일부(20%)를 기부하고 있음에도 자산 주인인 서울시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기부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서울시를 협약 당사자로 같이 포함할 것
20. CNG 충전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타 충전소 비용, 전기차 사업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 수익을 최소화한 것은 기부금을 축소 납부한 것이므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및 환수할 것

21. 수공협과 CNG 충전사업자가 체결한 수익기부 협약서가 불공정하고 엉터리 협약서이므로 전면 수정하여 재작성할 것
22. 수공협과 CNG 충전사업자 체결 건 관련하여 감사·소송·고발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
23. 교통실에서 기존에 작성된 협약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표준협약서로 재체결할 것
24. 기후동행카드 실물 카드 현재 PVC로 가장 유해한 플라스틱 소재임. 서울시 정책과 따로 가는 티머니의 교통카드 사업 가이드라인 없이 맡기는 것 문제. 친환경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반적인 정책 제시 필요, 2033년 서울시 제4기 교통카드 사업에도 친환경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할 수 있도록 협약 시 해당 사항 명시해 주시 기 바람
25. 모바일 카드, 후불카드에 대한 적극 홍보 등 실물카드의 비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홍보 필요하고, 모바일 전환 방법 및 대책 마련하여 보고 바람
26. 서울교통공사 부채에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 및 보고 요망, 서울교통공사의 기후동행카드 손실금 및 무임 수송 부담 서울시 차원 대책마련 필요, 무임 수송 국비 부담 보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지속 요망
27. PM 불법주차, 견인업체의 불법셀프견인 문제 등 해결 위해 서울시의 시스템 구축 바라며, 이용자 책임강화를 위해 견인료를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바람
28. 추후 CNG 충전소 기부채납 협약 시 재무제표 제출 의무 부과 및 미이행 시 위약금 부과하고, 부정이 발견될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조치 바람
29. CNG 충전소 수익기부금 적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 미납 시 충전시설 압류하여 서울시로 가져올 것
30. 법인세 이중 계상 관련해 철저히 검토하고 보완할 것

31. 서울동행맵 이용부터 불편사항 접수까지 교통약자 대상자 하나하나 고려하여 접근해 안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망
32. 서울동행맵 개선하는데 시각장애인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 만들어 줄 것 요망
33.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주차장 및 민간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이 도입되어야 함에도 민간주차장의 경우 설치가 매우 미비함. 민간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34. 교통실은 택시 플랫폼회사의 요금 및 취소수수료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결할 의무가 있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택시 플랫폼회사의 과도한 취소수수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부당한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35. 택시 플랫폼회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교통실은 택시 플랫폼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등 현황 파악에 노력할 것
36. 25년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부 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나오기 전 전기버스 구매시 배터리 정보 공백 상태로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니, 버스조합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7. 전기버스 폐배터리 처리 관련, 시민의 안전에 결부된 사항이니 폐배터리 처리시기가 도래하기 전 해결 방법을 적극 검토할 것
38. 서울교통공사에, 재정건전성이 매우 심각함. 서울교통공사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국비, 시비를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39. PM 이용자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부여하는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연구 해주기 바라며, 행정적으로 불법 이용자에게 패널티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요망
40.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해외 관광객용으로 너무 저렴함. 현실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재검토 요망
41. 코로나19 이후 버스 관련 급격히 발생한 적자와 대출 등 부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42. 버스 요금 동결과 환승 할인으로 시민 편의는 증진되나, 수익보다는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확실하게 개선돼야 하며,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 요망
4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사고 감소율 간의 상관관계, 몇 세의 고령운전자부터 운전면허를 반납받는 것이 교통사고 감소를 극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서울시에 없는 상황. 연구를 조속히 시행해 정책 반영 요망
44. 전남 장흥은 생계유지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하나 면허반납 어려운 65세 고령자 대상 '차로 이탈 경보장치' 무상 지원, 경기도 성남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10만원 성남 상품권+농협정기예금 우대금리 지원, 서울시도 선불형 교통카드 이외 고령자 면허반납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 요망
45. 어린이보호구역 이외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에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보호·안전 장비 설치 적극적으로 추진 요청
46. 버스에 시각장애인 탑승 시 대외적 매뉴얼 필요
    - 장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
47. 나비콜 잦은 오류발생과 대기 수시간에 따른 시각장애인 이용불편 증가에 따라 편의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요청

48. 바우처콜 아이폰 운영체제에서는 앱 오류가 난다는 제보가 있는데, 전방위적인 점검 후 보고 바람
49. 택시에 장애인 탑승 시 매뉴얼 필요(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택시 기사 역시 장애인 탑승 유도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음을 자각하는 장치 등이 필요함)
50. 서울동행맵과 서울교통공사 또타앱이 같은 목적지에 대해 다른 기준에 따라 안내하고 있어 다른 경로로 안내되고 있는데, 최적화된 기준 마련 요망
51. 서울시 경전철 청소용역의 독식 구조로 인해 경전철의 청결 상태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노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독식 구조의 문제점을 세밀히 조사하여 개선해줄 것
52. 경기도 버스의 서울 도심 집중 현상으로 강남 및 도심 등의 혼잡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것
53. 현재 3자 협의체가 공식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실이 주도적으로 시공사와 운영사 간 협의를 이끌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4. 녹번역, 아현역, 충정로역, 남부터미널역 등 노후 지하철 역사 상태 심각함. 안전 문제와 직결되므로 긴급히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들은 예산 확보 바람
55. 신분당선 경기철도 소송 사례를 참고하여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끌어내는 데 노력을 기울이길 바라며, 법률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56. 무임수송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정책 전환 방안 고민해볼 시점이며, 공청회 같은 소극적 방식이 아닌 여론조사 등 시민 의견을 적극 들을 필요가 있음

57.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은 교통유발부담금 0원임. 조세 형평성에 따라 부과 기준 조정 필요하며 서울시의 적극 행정 필요함
58. 위례신사선 지연되지 않도록 남은 행정절차 노력 필요
59. 장애인콜택시 출근시간대 운행대수 증가를 위해 단기운전원 추가 투입 등 방안 마련 바람
60. 택시시장 보호에만 집중하여 플랫폼 중심으로 변모하는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이 미흡했다 생각됨. 교통실에서 나서서 적극 행정을 펼치기 바람
61. 버스 운행실태점검 중 주관적 평가 요소에 대해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어렵다면 감점하지 않는 방안 검토
62. 버스회사 평가 점검사항별 배점표 항목 중, 청결 여부는 기사 책임이 아니므로 차고지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조치 바람
63. 버스준공영제 '사전확정제'는 현장과 현실을 전혀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임
64. 준공영제 혁신방안에서 500억을 절감한다는 표현은 인건비 절감에 대한 신호로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소통으로 만들어가기 바람
65.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관련 감염병에 대비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대책 마련 바람
66.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홍보가 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람
67. PM관련 시민 안전과 편의성 제고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동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바람

68. 승용차 위주 신호체계 개선해 버스전용차로 이용 효율성 높일 것
69. 티머니의 물적분할을 통한 신설회사 설립이 새 법인에 대한 서울시 관리 감독 권한(주주권) 약화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방안 마련할 것
70. 운송원가 보전율 높이는 방안으로 조례에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출에 대해 시장님께 다시한번 강력히 건의해 주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시정·처리 요구 13건

1.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 총사업비 변경이 잦음. 특히 8호선 연장사업은 12차례 변경됐으며 2006년 대비 2022년 163% 증가함. 예산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함
2. 위례선 트램 사업과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산정 관련해서 트램 시험 계획 수립 및 안전 설계,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의 편차, 그리고 국산화 및 부품 수급 등의 문제 발생. 또한, AI 기술 적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중요한 부분으로, 각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
3. 유사한 공사 규모임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비율이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할 것
4. 진접차량기지 보안 강화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보안·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5. 현재 도시철도국의 공사보험은 대부분 소멸형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그 간의 보험금 지급실적 미미하므로 환급형 보험 전환을 통한 보험료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
6. 철도차량기지를 테러 대상시설로 지정할 예정임에 따라 보안이 강화된다면 차량 입고 후에는 시설 보완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시설을 보완할 것
7. 위례선 건설사업 관련 지난 8월 궤도도상 변경을 하였는데, 이전 철근배근 도면을 보면 배근단면이 맞지 않고, 중앙부 황철근이 누락 된 것을 알 수 있음. 설계단계에서 감리를 받았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점, 궤도폭의 높이가 늘어났음에도 직접공사비가 감소 된 점,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점 등 부실 공사가 우려됨

8. 공사비 증가분은 설계책임자가 부담해야 할 것
9. 북위례 분양 당시 서울시 발표자료 등에 지상주차장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전면지하화) 공원부지에 3층 높이의 지상주차장이 생기면서 민원발생
10. 주차장 진출입구가 단지내 도로로 연결되어 아이들의 등하교실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됨
11. 서울시는 대체 주차장 확보와 지하 주차장의 비상용 전환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과 주민 소통 강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 모색 필요
12. 하청을 많이 주는 현장에서 부상 사고가 잦음. 계약 시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원청업체에 어떤 점들을 요구해야 하는지 고민할 것
13. 사고 현장별, 업체별(원청/하청), 원인별 이력 관리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바람

【서울교통공사】 시정·처리 요구 40건

1. 역사별 미화종사자 1인당 휴게 공간이 무척 협소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2. 드론시스템이 아닌 기존 검증된 선로검측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서울교통공사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섣부른 신기술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3. 통합관제시스템 상황판 부품이 DLP 레이저에서 광원 LED로 급격히 최저사양으로 변경된 것은 효율적이지 않음. 단가 적정 여부와 품질 고려를 다시 해주기 바람
4. 전동차 소음기준 80dB 초과구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5. 스크린도어 등 점자 안내 스티커 및 음성유도기 고장 등 전수조사 후 개선 조치 바람
6. 전동차 입찰 시 부정행위 한 업체 입찰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전동차 납품지연 해소하기 위한 공사 대책 마련 필요함
7. 기후동행카드 2025년도 1100억 운영손실금 발생하였음(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서울버스운영조합)는 각각 50%씩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 서울교통공사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이미 서울시가 상당 부분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서울버스조합과 달리,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서울교통공사만이 손실을 온전히 부담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구조임. 만성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따른 손실금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서울시가 재원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8.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방지대책 마련

9. 현장직무교육제도의 부실운영과 편법운영으로 임금 보전 수단으로 운영되어선 안됨. 개선책 마련

10. 담합신고를 상시화해 엄중한 책임이 가중되도록 재발방지하여 시민 피해 최소화 할 것

11. 서울 지하철 첫차 운행 시간 조정을 제안, 새벽에 출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하철 첫 차 운행 시간을 약 30분 앞당기는 방안 제안

12. 7호선 출근시간대 혼잡해소를 위한 서울접경지역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추가 편성 제안

13.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자회사 다수 이직, 공사 출신 면접관 참여 등 면접 기준 모호함

-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 취업에 대해 공정성을 기하는 방안 마련 필요

14. 서울교통공사 직원 근태 관리 관련

- 서울교통공사의 근태 관리체계 미흡, 지문·홍채·태그 제도 도입 등 사용자 관리책임 강화

15.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보강하고 감사 기능 강화 요망

16. 통상임금소송 관련

- 통상임금 수당항목들 부채로 방치
- 빠른 결단이 재정건전성에 도움

17. 행선안내게시기 관련

- 방치된 구형게시기 전기세 지속 지출, 철거 및 빠른 신형게시기 교체 요청
- 오류송출 중인 구형 게시기 안내되도록 재조정 요망

18. 스크린도어,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전방위적으로 역사 전체 사용된 점자 표기 오류, 날카로운 부분 등 전수조사 필요

19. 화장실, 개찰구, 출입구 안내 등 음향신호기 작동 검토 필요
20. 서울교통공사의 6월 기준 총부채가 7조 833억 원으로 이자만 하루에 3억 7천만 원이며 승객 1인 운임적자가 798원으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려됨. 자구노력과 함께 국·시의 지원이 시급하니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자 해소 방안을 수립할 것
21. 차량기지 검수장비의 기계장비 현황을 확인하니 차륜전삭기, 차륜선반 등이 독점 공급되며 하자가 다수 발생함. 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기계장비의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2. 신형지하철노선도 시인성(글자크기) 크게 떨어져 교통약자 및 외국인에게 전달성 부족, 전동차 내 안내 시인성 높이기 위한 개선 방법 강구 바람
23. 열차도착안내전광판 관련 승강장플랫폼에서 시야확보(기둥 또는 상부지장물에 가림)가 어려워 승객 몰릴 시 행선지, 열차 위치 확인 불가, 특히 교통약자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근처 플랫폼에서 전광판 확인 어려운 역사 다수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 강구 필요
    - 공사 시야 미확보 역사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역사별 대안 마련 시급
24. 노조 사무실 현황 관련 개소, 면적 수치가 작년과 상이함
    - 공간 필요성 여부 재검토 필요
25. 자회사 중 ENG만 군 복무경력 미인정되는 사항으로 형평성 등 문제가 큼. 이에 대한 빠른 개선 필요
26. 20년이 지난 차량의 수리비용이 신규 구매비용의 75%를 초과할 경우 교체가 되어야하는데 유치선부족으로 대폐차가 이루어 지고 있어 유치선을 확보할 것
27. 1역사 1동선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되는데 환승역에 대한 이동 동선 개선도 실시할 것

28. 인력 감축을 위해 1인 승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오히려 인력 증원을 검토할 것
29.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하고 유흥업소와 당구장 등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됨. 또한 근무하지 않고도 받아간 급여, 수당 등이 12억 원으로 환수 처분되어야 함. 선량한 근무자들의 박탈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일부 노조 간부들에만 국한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한 전체 노조원을 대상으로 감사청구 등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30. 최근 1년간 음주 후 운전하려다 적발된 기관사가 33명임. 징계를 받은 건 단 3명이었으며, 이중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다 적발된 기관사도 있었음. 상습 음주자의 경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31. 업무단톡방 개인정보 유출 문제 심각함. 정보 유출 피해를 받은 직원에 대한 보호와 재발 방지 위한 대책 필요
32. 최근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도 연간 2억 건에 따르는 해킹 공격을 받고 있음.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 필요함
33. 서울교통공사 감사가 유럽감사인대회 참석 과정에서 등록비, 개별 가이드비 등에서 불투명한 예산 사용 지적. 타 기관과의 금액 상이 및 여비 규정 위반 정황 확인
34. 법인카드 무단 사용은 기본 윤리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공공기관 신뢰에 심각한 훼손 초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필요.외부 감사 필요
35.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독립적 감사 요구
36. 9호선 2·3단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필요
37. 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과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교육 철저히 하기바람

38. 납품받은 지 3년이 안 된 전동차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하자보수 및 영업손실에 대한 비용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책임이 큼. 앞으로 사고 축소·은폐 의혹 발생 방지 및 피해 비용과 복구 기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39. 전동차 구매계약 위약벌 조항 추가로 인해 9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 당부
40. 1~8호선 근로자와 9호선 운영부문 근로자의 상이한 근무체계 적용 및 인력부족 해결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설공단】 시정·처리 요구 45건

1. 전문위원·전임교수·시립대 과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바람
2. 휴직제도 위법 사용 등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및 징계 수위 상향 등 검토하여 보고 바람
3. 서울시 산하기관 중 병가 악용 사례가 서울시설공단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데, 휴직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음. 교육 강화와 처분 수위 상향 등을 검토 바람.
4. 장애인콜택시 소속 직원의 무단결근, 가해 100% 교통사고 높은 비중 등 징계가 잦은데 교육 강화와 처분 수위 상향 등을 검토 바람
5. 장애인콜택시, 따릉이앱에서 낮은 접근성 평가를 받고 있거나 시각장애인 사용이 어려워 개선 바람
6.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음. 감축을 위한 노력 바람
7. 서울시설공단 임직원의 징계 건수가 많은데 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8.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음주측정과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있어 신속하고 철저하게 구축해주기 바람
9.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매뉴얼에 대해 보호자 동승에 대한 부분 안내 필요함
10. 내년 도입되는 따릉이 가족권과 연계하여 새싹따릉이 이용을 활성화해주기 바람
11. 성북천 따릉이 유기사건과 관련 자전거 투척으로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교량 상부나 하천 근처의 대여소 이전 검토 바람

12. 남산곤돌라 사업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데 현재 소송으로 공사 중단되는 등 쟁송이 우려되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13. 전문위원 제도 개선: 임금피크제에 대상 전문위원들이 출근없이 연간 2회 사업추진보고서 제출만으로 온전한 급여를 받는 현행 방식을 불합리함. 안전관리자 역할, 신규 직원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위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14. 전임교수 운영 개선: 매년 동일한 교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강의하고 있음. 연구실적 향상 및 새로운 교안 작성 등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필요
15. 서울시립대 과정 운영 문제: 선발 후, 교육 시작 전까지 보직 부여없이 휴가로 대기하는 현행 방식의 비효율성 지적, 대기 기간 활용 방안을 포함한 운영개선 필요

(13.~15.위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활용방안, 전임교수 운영, 교육과정 대기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16. 감사원 감사 관련,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위행위 등이 사전에 적발될 수 있도록 내부 감시·감사 시스템 적극 개선 바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관련 임직원 징계 철저하게 해주길 바람. 또한, 유사 사안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 조사 실시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 드림
17. 상암월드컵 경기장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흡연문제가 심각함.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쓰레기 분리가 잘 이뤄지도록 안내할 것
18. 5년간 따릉이 민원의 50% 이상이 따릉이로 인한 통행불편 사항임. 따릉이가 보도에 거치되지 않도록 재배치하며 거치대 증설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9.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듦.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20. 기후 위기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상암월드컵경기장과 고척돔구장의 다회용기 도입이 시급함. 또한 고척 돔경기장 다회용기 도입 관련, 잠실 등 타 경기장 사례 참고하여 다회용기 분리수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홍보·안내 방법을 강구 할 것
21. 축구 경기 간, 축구 경기와 공연 간에 물리적 잔디 생육기간 없음. 올해 최소 3일 간격으로 열려. 내년부터 연간 일정 잔디 생육 염두 하고 계획 수립 요망
22.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련 해외사례 연구 및 투자 전무, 향후 기후 등 적합한 잔디 개발을 위한 연구와 투자 확대 요청
23. 화장시설 예약 관련, 인터넷, 앱 외에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24. 금하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 사망사고 관련 안전망 미설치 방향으로 추락 등 사고발생 경위에 의구심이 드는데, 사실 확인 바람
25.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 2건의 감리업체가 동일한데, 과업수행 능력이 우려됨. 사고 발생한 두 지하차도의 안전성에 대해서 재점검해주길 바람
26. 청계6가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공사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설공단이 패소했는데, 부실한 공사, 허위 노무비 청구 등 소송 근거 마련과 변호인 섭외로 향후 소송 과정 적극적 대응 요망
27.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용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 강화 등 개선 바람
28.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주유비 리베이트 사건 관련 재발 시, 강력 대응 바람

29.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 목적과 공영차고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개선된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그 외 업체 간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어 차등이 필요하고 공영차고지 사용요율 상향 및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할 것
30. 현행법과 조례상 금지된 상가 전대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임차인 명의로 세금이 납부되는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으로 서민 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수탁 운영 방식 개선 등 제도적 해결책 마련할 것
31.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작년에 발생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건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함. 개인정보유출 후속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개인정보관리 강화가 필요함
32. 금품수수, 개인정보유출 등 조직 내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감사 강화하길 바람
33. 혼잡통행료, 장사시설 사용료,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주차장 사용료 등 서울시설공단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관련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함
34.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련, 채광 조건이나 환기 조건이 안 좋은 것이 잔디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잔디 이외의 구장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함
35. PM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논의해주기를 바라며, 자동차전용도로 내 보행자와 이륜차 등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함
36. 청계천 대규모 곤충 발생 관련, 방역법상 해충에 대한 방역뿐만 아니라 해충이 아니더라도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곤충까지도 적극적으로 방역하는 것을 검토하기를 바람

37.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관련, 출·퇴근 시간대 운전원 집중 투입을 통해 운행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통실과의 협의 적극 추진 필요
38. 전기차 화재 대응 설비가 미비한 주차장에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필요하며,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설비 구비 방안 검토 요청
39. 포트홀 발생 증가로 인한 민원과 사고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처리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배상 지급율은 현저히 낮음. 또한 기후 변화와 관리 부실이 포트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투명한 배상 절차 개선이 시급함.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기 바람
40. 소화기나 질식소화포 구매내역을 살펴보면, 제원은 동일한데, 업체별 단가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음. 구매와 관련하여 감사실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보고 바람
41.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의 노후화와 관리체계의 미비로 인해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발생. 이로 인해 놀이기구의 안전성과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의 유기적인 대응과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서울시설공단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
42. 국제회의나 협력,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기반 조성, 외국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글로벌센터 운영 목적과 관련 없는 행사에 대관이 승인되고 있음. 개인의 출판기념회, 일반 기업의 승진교육, 입사 시험과 같은 글로벌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대관 승인 지양할 것

43.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에 있어 배터리 화재안전성 관련 구매지침(내부 방침) 미비, 에너지 밀도, 재활용 가능성, 화재안전성 모두 고려한 지침 수립 바람
44. 수탁법인이나 상가운영팀이 아닌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불법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대부계약서 조항대로 계약 해지 후, 임시로 직영 전환된 상가(점포)의 피해를 입은 전차인에 한해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 개선안 마련 바람
45.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문제가 되는 지하도 상가들은 수탁 기간 종료와 함께 직영 전환해 시설관리의 투명성·전문성·공공성을 확보할 것

□ 건의사항 ---------- 총 92건

【교통실】 건의 41건

1.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하철 무임수송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상향 계획 세워서 대중교통요금 산정시 적극 반영할 것
2. PM과 자동차 견인료가 같아서 PM만 견인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음. 적정 견인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법 견인업체 행정처분 강화해야 함
3. 업무보고 주요 지표 대중교통 시민 만족도를 100%로 목표치 설정해야 함
4. 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 수요 중심이 아닌, 교통복지 측면에서 교통소외지역 노선도 검토 바람
5. 티머니 사회환원 재원 계좌관리를 서울시가 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6. 공영차고지 CNG 충전소 기부채납을 받아 제3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7. 현재 태그리스 기술은 실증 단계로 여전히 노약자나 장애인 접근이 어려움. 만약 확대 시 여건이 조성된 후 추진 바람
8. 시내버스 기사 채용 조건이 마을버스 기사 경력 2년으로 다시 바꾸면 마을버스 기사 구인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 같은데 검토 바람
9. 시내버스 운전자 자격요건 마을버스 경력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검토 바람
10. 외국인 근로자 마을버스 운전자 도입 검토 바람

11. 해당 충전소가 아닌 타 충전소의 사용 수익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산정한 것은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재검토할 것
12. 그 동안 CNG 충전소 사업자들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후 조합 또는 별도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명령 및 시 자체 충전소 설치 후 위탁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
13. 서울의 관문이 되는 공항리무진버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와이파이 설치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신속한 설치 필요
14. 무임수송 손실 보전에 대해 국비 지원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해 줄 것
15. 5호선과 9호선이 마치 경기도 주민들의 전용 지하철처럼 운영되어 서울시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서울시 관내 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운행 검토해 줄 것
16. 현 따릉이 보험약관을 보면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사고 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음. 25년도 가족권 도입 계획에 따라 이용연령 제한이 없어질 경우 대책이 필요함. 따릉이 가족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가족권 사용 시 미성년자(15세 미만) 보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주기 바람
17.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정책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
18. 공유 전기자전거의 경우 무단 방치 등 민원이 많음에도 견인의 근거가 없음. 전기자전거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조례 개정, 과태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19. 전기버스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지킬 것

2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1996년부터 인근 주민들은 통행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음. 남산터널 인근 거주주민의 혼잡통행료 감면을 위해 조례개정 등을 시급히 시행할 것
21. 도로 점용 허가 등의 방법을 통해 업체가 PM 주차장 만들도록 시에서 협조 및 적극 인도 요망
22. 서부선은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노선이므로 추진에 노력 부탁드리며 실시협약까지 빠른 인계 요망
23. 현 예타제도하에서는 강북횡단선 사업 추진 어려움. 균형발전본부 쪽과 협력하여 예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요망
24. 아이나비, 카카오모빌리티, 티맵 등 일반 민간네비게이션에 보호구역 음성 안내되도록 서울시와 협약등을 통해 음성 등이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 요망
25. 바우처택시 카카오T로 서비스 확대 적극 건의
26. 서울교통공사 시 정책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인력 충원에 대해 적극 검토 바람
27. 택시기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당요금 처분 강화(과태료 상향)를 국토부에 건의할 것
28. 택시 부당요금 과태료 처분이 민원에 의한 적발보다 단속에 의한 적발이 높으므로 시민활동단과 연계한 단속을 강화할 것
29. 24시간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심야 이동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야버스를 대폭 증차할 것
30. 버스 운행실태 점검 기준 중 과도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개선할 것
31. 드라이브스루 93%은 안전 필수시설이 아예 없거나 미흡함. 2021년부터 경보 장치 등 안전 필수시설 7종 설치 의무화 됐지만 기존 매장은 예외로 되어 있어 안전 공백 발생함. 안전시설 재점검 후 조치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 업무협조 바람

32. 버스회사 평가 관련, 부산, 인천은 성과 이윤을 근로자와 분배한다고 하는데, 도입 여부 검토 바람
33. 택시 외부광고는 노사가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으나, 택시 표시등 광고에 대해서는 합의 이뤄진 게 없음(여전히 낙찰받은 업체가 위임장 징구 중).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노사배분 협의 적극 독려 부탁
34. 플랫폼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서울시가 티머니 1대 주주로서 분할회사 신설에 있어 충분한 의사권을 피력할 것
35.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권역별 쉼터 조성 검토
36. 신규운수종사자 및 장기근속자 근로장려금 지원 검토
37. 공유형 전동 킥보드, 운행 제한 구역 도입 검토
38. 버스중앙차로 신호체계개선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시내버스 통행속도 증가를 통한 경쟁력 확보할 것
39. 사모펀드 진입 장벽을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사모펀드 진입으로 인한 준공영제 공공성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바람
40. 전기버스 구매 관련 배터리 화재 안정성 확보, 고밀도·재활용 가치 높은 국산 배터리 도입으로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 타국의 시장교란 행태에 경각심을 가져 주기 바람
41. 철도분야 자율주행에 관련 용역을 통해 장기적 대비책 마련할 것
(인력문제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건의 8건

1. 위례트램(궤도) 설계 업체에 대한 패널티 검토
2. 지반 침하시 도철 공사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면 당당하게 대처가 필요하며 공사 중에는 철저한 관리 필요
3. 우이신설연장선 재입찰 준비 중인데, 참여 기업 없으면 관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지연 예상이 됨. 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참여 독려가 필요함
4. 서부선 경전철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요청
5. 악성민원 답변 내용에 담당자 실명을 넣는 것은 개인의 피해가 우려됨으로 직원 보호를 위해 직책만 표기 요청
6. 상수도관 빗물펌프장, 상하수도 등 인근 지표투과레이더가 싱크홀을 미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7. 노원구청 자료에 따르면 염수분사장치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니 효과성을 확인해 볼 것
8. 위례선 트램 LTO 배터리 장착 관련 향후 발주 시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배터리 재원을 조건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 불가능한 폐배터리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기 바람

【서울교통공사】 건의 29건

1. 전동차 입찰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문 확대 필요
2. 담합이 이뤄질 수 없는 다양한 방법 강구 필요
3. 통합관제 DLP 관련 기존 신규 설치한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람
4. 통합관제시스템 관련 감사청구 등 외부기관 통한 검증 받길 바람
5. 공사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외적 노력이 필요함. 특히 금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공사채 발행 기간을 3년 이하로 잡는 것을 제안함
6. 메트로환경, 그린환경 두 회사 근무 형태 비교
   - 두 회사의 근무형태를 비교하여 차이점 확인
   -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7. 악의적인 보도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 조치 필요
8. 시민의 발이 되는 전동차인 만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제조사가 선정되도록 해줄 것
9. 서울교통공사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의 단합을 통해 발전해 줄 것
10. 수익성 없는 장기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와 SBA가 함께 노력할 것
11. 서울교통공사 계약 시 국내외 우수한 기업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력이 동반 상승하도록 유도할 것

12. 서울지하철 안전박물관, 광화문역 지하철박물관, 경희궁 미술관 등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던 박물관이 폐관하여 50년 공사 역사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함.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와 전시물을 활용한 서울지하철 박물관을 조성 할 것
13. 업무방해성 단순/반복민원은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것 고려 필요
14. 역사 내 불법무허가 상행위 단속 강화 및 강력 제재 필요
    - 가이드마련 등 기준 필요
15. 타임오프 무단결근 관련
    - 중노위 쟁점 중 고인·유족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당부
    - 타임오프 사용 활동 확인절차 필요
16. 서울교통공사 직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안 마련 요청(적정수준 임금 인상)
17. 지하철역 사고 관련 데이터 기반한 안전 예방 조치 건의
    - 무사고 역에 대한 표창 제도 도입 건의
18. 휠체어리프트 철거 후 또타어플 신속 반영 요청
    - 서울시 동행맵과 또타어플 교통약자 루트 맞출 필요성 있음
19. (전동차 제작 3사) 부품의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와 내구연한 이후 10년간 부품 수급해 줄 것
20. 지하철 경찰대가 18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된 상황에서 보안관의 특별사법권한 부여가 절실함
21. 최근 3년간 지하철 화재 3건, 7일 이상 차량 정비가 필요한 사고가 5건 발생하였는데 제조사와 비용부담 협의를 잘 진행할 것
22. 역장책임제 이후 역내 안전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앞으로도 꾸준히 신경 써 줄 것

23. 정책 인건비 관련 서울시와 보조 협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함
24. 충정로역, 아현역 등 노후 역사 환경 상태 심각함. 리모델링 시급 역사 예산 확보 관련 서울시와 협의 필요함
25. 사업에 대한 신중한 계획으로 물리적,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없도록 추진 바람(태그리스사업 중도 협약 해지 후 재추진 관련)
26. 전동차 계약 및 제작, 납품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노후 전동차 연장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안전 문제가 없도록 할 것
27. 저품질 전동차 납품 문제 해소 및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 마련 통한 서울교통공사 피해를 최소화 할 것
28. 서울시에 9호선 2·3단계 구간 위탁운영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
29. 철도분야 자율주행에 대비한 장기적 계획 마련 필요

【서울시설공단】 건의 14건

1. 공공자전거 경쟁사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저가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공공자전거의 이용 빈도가 낮은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 공공자전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따릉이를 활성화 할 것
2. 상암월드컵경기장의 흡연시설이 잘 활용되도록 시민 안내에 노력할 것
3. 따릉이 가족권 도입에 따른 새싹 따릉이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새싹따릉이 확충 및 관리에 노력할 것
4. 정확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정보 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람
5. 서울시설공단의 '2024 매력 아젠다 40' 사업은 37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나 9월 현재 12개 사업만 완료됨. 적극적으로 시민 홍보를 해주기 바람
6. 서울시 추모시설의 화장로 개선 및 증설로 화장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하며, 하늘정거장 홍보 등 유족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야간·우중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 서울시설공단 관리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서울시 내 타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도 전파해 주기를 바람
8. 해양장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업무체계 구축에 대하여 고민해 주기를 당부함
9. 현재 5,000대의 새싹따릉이가 운영되고 있으나 2024년 9월 기준 이용률은 전체 따릉이 대비 2.2%에 그치고 있어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 할 것

10. 화장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바람
11.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 관련 직원들에게 적극 교육·홍보 바람
12. 시 사업 대행에 있어 수지율 개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해주기 바람
13. 전기차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설 및 시민 보호 및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문성, 책임성 강화하기 바람
14. 공유재산이 법과 원칙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

□ 기타(자료요구) ---------- 70건

【교통실】 기타(자료요구) 21건

1. 적색 잔여시간 표시등 확대 설치를 위한 자재값 등 비용 차이 관련 자료 제출 바람
2. 태그리스 실증 관련 관계 기관과 협의한 자료 제출 바람
3.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조직도, 직원현황, 업무분장 자료
4. 준공영제 혁신 관계자들과의 의견 청취 대상, 내용, 결과
5. 노선 전면 개편 관련 의견 협의 결과(티머니, 조합)
6. 2024년도 교통실 불용예산 현황 및 사유
7. 현재까지 50%이상 집행하지 않은 예산 및 사유
8.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 안전장치 설치 예산 설치 업체별 제조사 점유율 및 국산 부품 현황
9. 보행로 위험지역 417개소 세부 위치
10. 무임 수송 국비 보전을 위한 서울시의 법령 개정 요구내역
11. 공영차고지 CNG 충전소 관련, 기부채납 건축물 무상 사용 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 내역
12. 무상 사용 기간 경과 후 건물 사용료 내역(2019.12.4.~)
13. 수익기부협약서 서울시 법률 검토 자료
14. 수익기부협약서 상 수익 운영에 따른 기부금 영업이익의 20%로 설정 근거
15. 티머니의 사회환원금 사용 내역
16. 저상버스 도입 이후 최근 3년간 휠체어 탑승자 현황(월별 또는 연도별)

17. 서울동행버스 관련 시각 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18. 운행 실태 점검 리스트 샘플 10개
19. 최근 3년간 드라이브스루 안전시설 정기점검 실시내역, 시정조치 내역이 반영된 결과보고서
20.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문항과 답변자료 원본
21. 업무보고 장애인콜택시 운행률(일일평균) 설명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기타(자료요구) 2건

1. 도시철도 총사업비 조정과 관리 방안
2. 철로 열팽창 방지를 위해 흰색으로 도색 등 연구 결과 검토 및 적용 검토 요망

【서울교통공사】 기타(자료요구) 33건

1. 감사인대회 300만원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2. 4호선과 8호선 신조전동차 도입할 때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당시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필요성과 구축을 위해 작성했던 방침서 사본 제출
3.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도입현황 및 향후 계획
4. 공사채 관련 이자비용 절감 방안
5. 전동차 예비율 관련 적정 예비율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6. 지하철 유실물 현황
7. 최근 3년간(2022~2024.10.)채용 공고 일체
8. 채용 시 면접관 현황
9. 해당자가 있을 때, 재취업심사 실시 여부
10. 재취업심사 위원회 구성
11. 공사 통합전 근태 관리방식, 변경 되었다면 사유
12. 철도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대한 절감방안 타기관과 논의 필요, 의회에서도 지원할 것
13. 노선안내판 실물 크기 제출
14. 1호선 구형 행선안내게시기 관련(설치현황, 중복운영사유, 내구연한, 향후 처리계획, 전기요금내역)
15. 철도차량 입찰담합 관련 진행사항
16. 폭염 대비 선로 관리 방안
17. 사당복합환승센터부지 소송 경과
18. 행정사무감사 파일 한글 제출

19. 홍제역 2번출구 E/S 추진현황
20. 노동조합관련
  -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및 사용인원
  -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21. 신도림, 교대, 고속터미널, 동묘앞, 선릉, 가산디지털단지역 6개 역 주요 단속 사례(잡상인, 이동상인, 등)
22. 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지출 대비 수익현황(시설사진 포함)
23. 노조사무실 현황
24. 승무원 음주 측정 관련 건수 및 징계기준 일체
25. JTBC 보도 관련 도착정보 먹통 조치내역
26. 감성방송 관련 불편 민원 상세 내역
27. 지하철 보안관 무단이탈 징계 내역
28. 최근 3년간 공사 압수수색 현황
29.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30. 2022년~2024년 감사인 대회 등 해외출장 관련
  - 해외 공무출장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해외 공무 출장 취소 사유 및 위약금 지급 여부
  - 감사인 대회 참가 경비
31. 업무추진비 관련
  - 2023년, 2024년 사장, 감사, 본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집행액, 집행율)
  - 임원 해외 출자 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최근 3년)
32. 전동차 관련
  - 국내 철도차량 주용 제작사 현황
  - 1,4,8호선 신조전동차 220칸 구매 진행 사항
  - 신조전동차 구매사업 관련 민원사항

33. 수서기지 유치선 객실 배전반 화재 관련

- 사건 진행경위, 복구비용 분담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해결 방안
- 업체와 작성한 원인조사관련 업무협약서 사본
-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서울시설공단】 기타(자료요구) 14건

1. 최근 3년간 장애인콜택시 사고 현황
2. 교통사고 지급 보험료, 징계 처분내역, 교통사고 세부내역
3. 음주측정 시스템 설치현황 및 단가, 설치 계획 등
4. 병가 부정사용에 대한 상벌회의록 제출
5.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최고위과정 지원 현황
6. 공공자전거 따릉이 도난 및 분실 사유
7. 전문위원 사업추진보고서 일체
8. 서울시설공단 법정교육과정 현황과 직원별 이수 현황
9.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흡연부스, 흡연구역 설치 현황
10. 2년간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 현황
11. 상암월드컵경기장 노점 관련 민원에 대한 현장사진 및 보고자료
12. 일반차량 대비 장애인콜택시에 제공되는 주유비용의 차이
13.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 설치된 질식소화포, 스프링쿨러, 소화기 현황과 설치업체 간 제원, 유지보수 등 비교자료
14.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중 점검이 누락된 놀이기구에 대한 점검결과 사후통보 등 해명관련 자료 일체

※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감사자료 및 문서확인 등

※ 중점 감사사항

○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 2023·2024회계년도 세입 · 세출 및 예비비 지출 현황

○ 2023·2024회계년도 세입 · 세출 및 집행 현황

○ 2023년도~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23년도~2024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24년도 각종 인 ·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 2024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 사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2024년도 행정소송 계류 및 패소사건의 판결문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 현황

○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집행 현황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11. 교육위원회

총 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계	532	245	144	143
서울시교육청	474	198	138	138
교육지원청	19	15	1	3
직속기관	21	20	0	1
교육연구정보원	3	2	0	1
융합과학교육원	3	3	0	0
교육연수원	1	1	0	0
학생교육원	1	1	0	0
유아교육진흥원	5	5	0	0
보건안전진흥원	5	5	0	0
학생체육관	1	1	0	0
교육시설관리본부	2	2	0	0
도서관·평생학습관	11	9	2	0
학교안전공제회	7	3	3	1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정요구사항 198건, 건의사항 138건, 기타사항 138건 –

[시정요구사항]

1. 감사관실은 교육감 궐위 된 이후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협력담당관이 부교육감 지시 없이 교육감의 캠프에 참석하는 등 직원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경고 조치할 것
2.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이후 보육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을 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
3. 대변인실은 전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판결로 해당직 상실 후, 교육청 명의로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공적인 기관의 중립성을 침해한 사례이므로, 향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시 공적인 입장과 개인적 입장을 엄격히 분리할 것
4.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 고용률 미달이므로 우선고용의무율 준수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협력하여 고용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추천받는 등 채용 상황을 개선할 것
5. 감사관은 교장의 갑질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하여 피해자 입장에 대한 고려와 대책을 마련하고, 무징계로 종결되는 사례를 줄이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
6. 교육청의 보수적·폐쇄적 조직 문화 때문에 교육청이 자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많으므로 감사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공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7.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율이 현저히 낮아 유치원 내 응급사항 발생 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단설 및 공사립 모두 포함)에도 보건교사를 적극 배치하도록 할 것
8. 대외협력담당관은 교육감-국회의원 모임 행사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조국혁신당이 포함된 바 특정 정당과 소통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9. 교육정책국장은 학생들의 난독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과 난독증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0. 아동학대 사안 해결 기간 동안 가해교사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가 잘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학교폭력전담조사관별로 업무량의 편차가 크고 운영이 미숙하므로 조사관당 업무량 적정 배치 및 체계적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관 교육 및 연수 강화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것
12.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오히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강압적으로 사안처리를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사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13. 서울시의 경우 학교폭력심의 지연율이 82%에 달하고 있는 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4주)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심의 지연으로 2파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지원청별 심의 기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심의위원 인력 확충과 효율적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
14. 교사와 학생 간 성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 학생 보호를 중점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체계를 마련할 것
15. 조리종사원 채용 시 종사원의 건강상태 확인과 위생교육을 철저히 할 것
16.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도리어 가해자가 맞폭제도를 악용 하는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대처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17. '정신건강'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은 바 정신건강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자살 시도 학생들에 대한 조치 또한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
18. 학교 주변 전자담배, 액상담배 무인판매점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단속을 강화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진로직업 글로벌 현장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현장교육을 통해 취업을 하는 사례가 적은 바, 이는 글로벌 현장학습과 취업 연계의 효과성이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취업과 관련된 현장 실습형 프로그램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정비 할 것
20. 강서구에 폐교가 초1, 중1 예정인데 이곳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것
21. 외국인학교의 학생 정원이 규정보다 초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규정 위반 외국인학교에 대해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22. 늘봄학교는 국책사업으로 늘봄학교 강사 인력풀의 일관된 관리를 위해 학교별 인력 채용을 개선하고 본청에서 인력 채용 및 지원자의 균형있는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23. 늘봄강사 교실이 확보되지 않아 겸용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등 일반교사와 분리조치가 되지 않아서 늘봄강사들이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할 것
24. 늘봄 예산으로 구매한 기자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관리 및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
25. 교육감은 일반인이 공무원 관명사칭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
26. 감사관은 갑질문제 처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갑질문제 처리 제도를 보완할 것
27. 교육감은 갑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자치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구체적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28. 갑질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높이고 본청 차원의 재심제도를 마련하는 등 갑질 신고 접수와 처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9. 교육감은 갑질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을때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한 구제방안과 갑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
30. 교육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이 필요하고, 어른들의 눈높이가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
31. 시간제 강사, 영어회화강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교원과는 달리 보호조치에 차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시간제 강사, 영어회화 강사에 대한 치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2. 소규모 학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33. 하절기에 학교 실내체육관을 학생들이 이용할 때 에어컨을 가동해주지 않는 다는 민원이 있는 바 이를 시정할 것
34. 기조실장은 사업명을 정할 때 시민, 관계자들이 뚜렷이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사업명으로 선정할 것
35. 안전총괄담당관은 통학로 안전 개선 우수사례 성과보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36.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정성적, 정량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7. 교육정책국장은 통학로 관련 자문위원 구성시 학부모 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시정할 것

38. 고교학점제가 특수학교에도 안착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학교의 단순한 과목구성을 개선할 것
39.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
40.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업체가 사용허가기간 종료후에도 무단점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무단점유 시기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1. 재산관리인인 교장은 학교시설의 계약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현황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할 것
42. 부교육감은 인사관리 관련 투서 이후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 출신자에 대한 승진 및 배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것
43.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앞두고 계약업체가 연간회원권을 남발하는 등으로 학생,학부모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으로, 학교장 및 교육청은 사용허가 관련 계약상황을 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4. 재산관리관인 학교장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업체와 갈등이 있을 시 교육청과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에 대한 대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
45. 학교 내 성비위 신고에 대한 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외부에 내부고발한 교원이 면직처분된 사례가 있는 바 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46.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
47. 교육감은 우촌초가 현재 관련 소송 진행 중을 이유로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등 사학재단의 비리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48. 사학재단의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임시이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9. 감사관은 우촌초를 운영하는 일광재단 관련 제보 사항으로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 부패신고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대처할 것
50. 감사관은 감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51. 감사관은 사립학교가 이사장 개인의 사유기관이 아닌 만큼 환일고 관련 이사장의 학사 개입문제 등 관련 문제를 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52. 총무과장은 직원동호회가 친목단체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동호회가 간부중심의 상하관계가 아닌 직원들 간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할 것
53. 기조실장은 서울시 이전수입금이 많이 감소한 바 이전수입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행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54. 감사관은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 중에 법정 납부금 납부율이 5%에 불과한 재단이 있는 만큼 기관 선정 방식을 보완할 것
55. 학교통합지원센터와 별개로 학교행정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인지 제고할 것
56. 대변인은 보다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정책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57.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청의 차별화된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58. 교육정책국장은 방과후과정 신청 시 우선순위로 맞벌이 부부에게 주어지므로, 학부모가 허위를 내는 경우가 있는 만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방과학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9.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문해력 관련 결과 자료를 지역단위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0.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성과 중 학교별 사설 모의고사 참여율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목표 달성이 용이한 부분만 성과지표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시정할 것
61.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도 초등교육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62. 서울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IB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3. 중구 A학교 가정통신문에 '추수감사예배'를 진행한다고 알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64.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은 독서교육지원본부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운영이 대부분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어 본부의 시설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시정할 것
65.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은 독서교육지원본부의 자문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자문비용 지급이 기준보다 높게 지급되고 있는 등의 사항을 시정할 것

66.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위한 인근 대학과 MOU를 맺어 운영하고 있는 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67. 고교학점제 설명회 내용을 다문화학생들도 접할 수 있도록 외국어 버전으로 자료를 제공할 것

68. 특수학급의 과밀로 인한 특수교사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급 증설, 지원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69.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평가회, 성과보고회를 호텔과 같은 고가의 시설에서 진행하여 예산 낭비 사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할 것

70.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5년 사이 최저인데,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71.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절차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할 것

72. 우촌초 정상화를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지만 해당 학교의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임시이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3. 운화학원이 운영하는 수입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사학법인이 진행하는 수입사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있는 만큼 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학법인의 수입현황 파악할 것

74. 사립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으로 예배를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75. 노사협력담당관은 조리종사원 결원율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내고 있는 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76. 조리종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급식실 업무의 부분위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77. 안전총괄담당관은 대명초, 고덕초 등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방안을 마련할 것

78. 교육정책국장은 학교간 균형 배정을 위해 일반고등학교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79. 교육정책국장은 IB학교를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로 세분화 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해당학교들이 모두 인증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80. 학교급식으로 학생들에게 패스트푸드 제공, 공산품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바 식품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81. 금년 급식비 인상율이 5% 불과한데 반해 농산물 가격은 급상승함에 따라 부실 급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

82.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특수학교에 법률에 규정된 필수시설(엘리베이터)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 환경을 조성할 것

83.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 연계를 위한 산학 협력 체계 도입 등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84.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보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85. 대부분의 도서관이 도서관 면적 대비 수장율이 150%를 초과하는 등 자료보전 공간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86. 기조실장은 학폭위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가해자들이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악용한다는 민원이 제기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87. 교육행정국장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남부액 감면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88. 김포공항 근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교에 대해 특수창호 설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89. 기조실장은 주요업무보고자료의 작성 기준이 모호하므로 사업명과 예산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안 중심의 보고 방식 도입 및 관련 자료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것

90.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수당 지급 기준을 시정하고 시민감사관의 위촉 방식, 역할, 지위 등에 대해 개선할 것

91. 안전공제회 공제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하고 공제금 지금 관련 소송 등에 행정력 및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92.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으로 공무원의 책무 위반과 교직 사회의 기강을 흐린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교육에 종사하는 관계자인 만큼 엄격한 잣대 마련할 것

93. 원로교사가 별도의 휴게시설을 제공받는 등 교직사회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원로교사제도가 특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94. 교육정책국장은 12월에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95.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 결과 전국 평균 이하이므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세울 것

96. 최근 5년간 성폭력, 성희롱 피해 교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교사 피해 건수가 많으므로 학생 분리 지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교권 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

97.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교사들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시정할 것

98. 초등의대반과 관련된 학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학원의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대책 마련할 것

99. AI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사교육 업체들이 선행학습 등을 부추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육청이 사전에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교육 실태 점검 대상에 AI 교과서 관련 에듀테크 및 출판사 업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

100.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급식 폐기물 수거량이 많다는 민원사항이 있으므로 급식 관련 자재 발주시 신중한 업무처리와 나이스 시스템에 폐기율 기재를 철저히 하는 등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101.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성교육, 성평등, 성인지감수성 등 다양한 성관련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각각의 취지와 성격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것

102.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단 자문심의위원 및 위촉조사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 연수 이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심의위원, 조사관이 필수 연수를 받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103.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그램이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보다는 기존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연수 프로그램에 불과한 바 사업 개편할 것

104. 딥페이크 가해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의 징계 수위를 높이고 학폭위 개최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

105. 초등학교에 위클래스와 전문 상담 교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인력 배치 및 위클래스 설치를 확대할 것

106. 학생 자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생명존중위원회와 연계한 애도 교육, PTSD 검사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대상 범위와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할 것

107.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학교장 직인 등)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간 해당 사안 관련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안내 체계를 마련할 것

108. 신임 교육감은 공약으로 내세운 '암기식 교육 지양' '학생진단치유센터 지표 마련(행복지수개발)' '행복전문위원회' 등이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상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109. 정당 관계자 또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상대와의 간담회 등에 업무추진비를 비용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0. 총무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원문공개 비율이 전체 시도교육청 중 16등에 불과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문공개 비율을 높이도록 할 것

111. 통학로 개선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바 향후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학로 개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2.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113. 안전총괄담당관은 학교방문사전예약제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긴급한 학교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측과 학부모측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 등 시행 초기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

114. 감사관은 자유감사제도가 없는 사립학교에서 회계문제가 발생하는 등 관리 문제가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115. 감사관은 개포도서관의 경우 자체감사 등을 통해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116. 교육정책국장은 독서와 글짓기 관련 사교육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공교육 차원에서 문해력 및 어휘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논술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행할 것

117. 서울 관내 학교에서 교사의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인해 학생들이 재시험을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시험문제 출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8. 디벗 관련하여 보급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바 교육정책국장은 디벗기기 분실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감가상각 비율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차등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119. 분실한 디벗을 위치추적을 통해 찾고 있는 방식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여 디벗 분실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것

120. 도서관 내에 수유실 및 임산부 휴게실 설치가 관계 법령에 적시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할 것

121. 학교폭력 가해자가 또다시 학폭사고를 일으킨 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122. 국제고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타 고등학교 대비 1.8배에 이르는 등 과다배출에 대한 제보가 있는 만큼, 사안과 관련한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 및 향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저감 대책, 관리방안 등을 수립할 것

123. 개포도서관이 착공 전부터 조기 휴관하여 그동안 도서관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신속하게 대체 공간을 마련할 것

124. 사립초 신입생 원서 접수는 아동 1인당 최대 3개교에 지원 가능함에도 다른 가족들의 신원으로 원서접수를 하는 등 사립초등학교 입학지원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5.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경우 화장실 등 남녀 시설을 구분하여야 하는 문제,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시설지원이나 행정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126.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원간의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127.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과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

128.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폐원 등에 대한 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129. 교육정책국장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130. 교육정책국장은 돌봄수업의 학습프로그램 운영이 명칭만 00놀이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 저학년 대상으로 돌봄수업은 교과과정과 연계성이 없는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

131. 교육정책국장은 20%가 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 늘봄교실과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늘봄학교가 정규 초등교육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할 것

132. 늘봄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이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어, 한자, 수학 등 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학년별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133. 교육정책국장은 늘봄 프로그램에 교사가 참여하게 되면 교원업무 경감의 반대되는 정책 방향임으로 늘봄실무사 채용관리를 철저히 할 것

134. 교육정책국장은 내년 학생수는 줄지 않는데 교사는 500명 줄어들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5.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시의 경우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

136.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도서관에 사서,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곳에 대한 학교도서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137. 다문화 언어강사가 다른 교원대체직종과 차별되게 저임금을 수령하는 등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 방안을 마련할 것

138. 대안학교 지원 예산이 내년도 20억 가량 삭감되는 등 2024년 기준 교사 인건비도 부족한 사태가 예상되는 바 대안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39. 2024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현황을 살펴보면 1,543대 중 74대만 설치되어 저감장치 설치율이 낮아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바,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와 저감장치 설치가 지연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140. 감사관은 학교감사 시 감사 대상이 사전에 알려지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 등 공무원이 학교시설에 위장 전입하는 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할 것

141. 총무과장은 학교 부설 주차장의 주말 및 공휴일 개방 확대와 주차장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2. 감사관은 내부고발(사무실투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된 감사요구에 응하여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

143. 교육청은 채용 서류 보존 기한 확대 및 자료 파쇄에 대한 책임여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것

144. 전자칠판 및 디벗에 중국산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 많아, 이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할 것

145. 교육정책국장은 독도교육 강화 및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6. 교육정책국장은 생태전환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육식보다는 채식을 장려'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도리어 편식을 강요하고 있는 바,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식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것

147. 교육정책국장은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겸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할 것

14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학생 자살 증가와 낮은 마음 건강 지원 시스템 구축률을 개선하고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할 것

149.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생존수영 교육의 만족도가 낮고, 급수별 실력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충 교육 등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150. 기간제교원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른 학교에서 채용되지 않도록 이력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151. 정보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은 교육과정 등 교육청의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언어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52. 생태전환과 함께하는 디지털역량강화연수의 경우 교원 연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직이 참여한 바 이를 시정할 것

153. 생태전환과 함께하는 디지털역량강화연수 프로그램에 보드게임, 스마트팜 교육 등은 디지털교육과 무관한 바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

154. 초등학생 아이들이 교내에서 상담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위클래스, 위센터 외에 외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

155.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생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임명장 대신 당선증을 수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156. 평생교육과장은 최근 기사화 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건물에 2개 학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곳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도 점검을 할 것

157. 생존수영 만족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조한 바 수준별 수업 진행 방안을 마련할 것

15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대 및 공간문제 해소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159. 성범죄 사실이 밝혀질 시 여가부에 통보하는 시기가 기존에 비해 늦어지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 통보 시기도 늦어지고 있어 이를 시정할 것

160. 신봉초 외벽시공에 사용된 에폭시 접착시공법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공법을 지양하고, 학교 내 인조 라이스톤 외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161. 지구촌학교의 무리한 교실 학급수 증설로 인해 교실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는 바, 교육청은 지구촌학교의 학급증설 승인 전에 학교 공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이를 시정할 것

162. 지구촌학교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동안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바 현재는 보조급 지급 대상이므로 이를 시정조치할 것

163. 대안학교의 교장 자격 요건이 규정상 일반학교 교장보다 완화 되어있는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64. 부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 문제로 일부 학교들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심한 관리를 통해 순조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165.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18년에 비해 최근 급격히 늘어나 올해 교육청이 장애인고욕부담금으로 79억을 납부한 바, 장애인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6. 기조실장은 위원회 구성시 청년기본법 개정사항인 청년 위원 위촉 의무화 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개정사항이 해당 조례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조치할 것

167.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큰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8.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69.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도입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담조사관 조사 시 교원이 의무적으로 동석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동석 여부를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170. 딥페이크 등 학생들이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1. 혁신학교 운영 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72. 총무과장은 교육청이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높아 교육청의 지출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73. 국민신문고 민원조치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7~8%에 불과함으로 시민들의 국민신문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4. 유보통합추진단은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 시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

175. 원어민 강사대상 연수 참여율이 낮으므로 참여율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

176. 원어민 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불만사항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것

177. 교육정책국장은 사립학교에서 종교 교육 참여를 강요하는 등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178. 교권침해 신고 건수 중에서 중학교의 경우가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음에 따라 중학교 교사의 교권침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79. SEM 119활동을 통해 교권침해 신고접수 건이 많은데 이에 대안을 마련하고, SEM 119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

180.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127, 117을 통한 신고가 여전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바 조사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81. 학부모들이 유치원비 증가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182. OECD 타국가에 비해 읽기, 쓰기, 문학에 대한 학습시간이 부족한 바, 국어 시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183. 식품 알러지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대체식 준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4. 경계선 지능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바, 특수교육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5. 특수교육 지원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86. 특수학급 신증설 사업 관련하여 학급 수에 따른 지원청별 편차가 발생하고, 특수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곳이 있어 추가적으로 특수학교에 교원 및 상담교사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87. 특수학교와 외부병원과 자매 결연하는 등 외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8. 사이버 도박범죄를 일으키는 범인의 절반이 청소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189. 감사관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감사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 부활을 검토할 것

190. 감사관은 중대부고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조건부 승인한점, 13년간 사업준공기한 연장을 진행하지 않은 점 등 교육청의 업무태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

191. 교육정책국장은 청소년 유해도서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바 학교도서관에 배치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92. 전자칠판이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학교와 수의계약을 통해 보급되고, 중국산 저가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OEM 방식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개선할 것

193. 전자칠판 구매 2년 이내 AS기간에도 수리비가 많이 집행되는 등 과도한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자칠판 구매 시 양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4. 2022년도 디벗 구매 당시 레노바(중국산) 제품을 구입하여 A/S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95. 학생들이 디벗을 소지하고 하교하는 경우 파손 등에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6. 청소년 유해도서(음란도서)를 학교 내 비치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내 비치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197. 학교폭력예방법 16조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에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분리조치가 현재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는 바 이를 시정할 것

198. 늘봄교실 공사가 진행된 300교 중 90개 학교가 성능과 전기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저가 자재 사용(중국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늘봄교실 난방 공사 표준시공안’을 각 학교에 송부하고, 부실자재로 시공한 90개 학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건의사항]

1. 부교육감은 환일고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신임 교육감의 과거 이력사항 중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내역이 서울대학교, 포털사이트에 빠져 있는 바 프로필에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결여가 염려되므로 정치와 교육 분리 원칙을 잘 지켜줄 것
3. 특별채용 복직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결정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검토 및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며 절차적 적법성 외에도 교육계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교육청 내 특정 인맥과 라인 중심의 채용 및 복직 관행(교육 카르텔)에 대해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공익 제보자 보호 및 일반 교사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할 것
5. 2024년 교육감-국회의원 모임 행사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조국혁신당 포함됐으므로 특정 정당만 소통하지 않도록 명확한 소통기준을 마련할 것
6. 교육청이 의원들에게 교장 및 교직원의 연락처 제공 제한 및 의원 감사 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

7.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이 증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학생들을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통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통학로 개선사업은 교육청의 자체예산없이 진행하고 있는 바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적극적인 통학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
9.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 확대 및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및 제도를 개정하고 공립유치원 증설을 통해 유치원 교육 환경의 형평성과 질을 높일 것
10.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새로운 교재 활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도 교사 배치 등을 통해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는 등 교사 연수 및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1. 유치원 내 아동학대 발생 시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유치원 알리미에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위반 사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유치원 자체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
12. 유치원 아동학대 신고 후 사건 조사 및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신고된 교사 및 학생을 신속하게 분리하도록 하고 해당 절차를 개선할 것
13. 수시 채용되는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건강 상태 고려 및 위생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단기 채용 인력 또한 정기적 위생 교육 및 철저한 관리 체계 내에서 운영할 것
14.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 검토하고 과대 인가 정원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15. 신임 교육감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과대한 면이 있고, 인수위원회 내부에 이해관계자가 부당하게 교육행정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
16.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교육감은 선재적인 대응이 필요함.
17. 공교육과 사교육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학원 교습비 조정이 필요하며, 교습비 조정 과정에서 학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8. 학원 교습비에 대해 학원이 불복하여 개별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용되는 사례가 적은 바, 교육지원청 간의 학원 교습비가 격차가 곧 지역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원 교습비 단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합리적인 방향 설정할 것
19. 기조실장은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위해서 급식실 환경개선,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0.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목동의 경우 대단지입주가 이뤄질 예정으로 이에 대한 학생배치 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것
21.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영어유치원과 관련된 감사를 제대로 추진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22.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영어유치원의 교습비 환불에 관해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어 계속된 민원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23. 특수교육의 경우 만족도 높은 내실화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할 것
24. 학교급식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바 통합된 기구를 마련하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5.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청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역사적 장소를 이용한 책읽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추진할 것
26. 복합화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복합화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27. 복합화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독립적인 관리 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
2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을 통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29. 학생들의 마약 관련 유관기관, 대변인실 등과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캠페인 진행할 것
30. 학교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내부고발한 교사에 대한 전보조치를 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
31. 감사관은 교육청 전반에 관해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
32. 환일고 관련하여 감사관, 해당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등이 참여한 감사 TF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진행할 것
33. 특성화고 교장 워크숍이 일선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렇게 불필요하게 일선학교에 부담을 주는 성과보고회나 워크숍은 지양할 것
34. 휘문고등학교 이사장의 2018년 횡령 혐의와 현재 수서경찰서의 수사의뢰 사항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
35.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하여 인력 충원 및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6.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교사 간 공동 연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37. 급식 조리 기구 현대화 및 급식실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38. 급식실 개선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39. 학교 급식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급식기획팀에 배정 하는 등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려할 것
40. 조리종사원 인력문제의 해결책으로 급식업체 부분위탁 방안을 검토해 볼 것
41.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통학로 개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안전 통학로 우수 사례 공유, 정책 포럼 개최 등 통학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것
42. 노후 학교 개보수 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할 것
43. 학교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할 것
44. IB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 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5. 해외 IB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IB 교육과정에 조화롭게 도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6. 교사의 창의적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47.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및 혁신 기술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48.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지원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49.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비와 시설개선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등 학교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0. 신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중앙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예산 삭감에 대해 대응’발언은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이 아니라 일몰 규정에 따른 미편성 사항으로 이는 교육감이 잘못된 내용을 시민에게 호도하는 것으로 시정할 것.
51. 신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 청소년 대상 행복지수 개발 및 조사’ ‘학생에게 문화예술바우처 10만원 지급’ 등을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을 것
52. 감사관은 감사관 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
53.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성비위 교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54. 유치원 원장 대상 연수를 진행할 시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비용 책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원장이 아닌 교사가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 체계적 관리 및 공정성을 요할 것

55. 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명확한 구분하여 각 교육의 목적에 맞는 내용 및 대상을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56.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니 교육부에 증원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것

57. 노동인권교육실태 위탁 연구를 '한국노동사회연구회'가 맡아 진행하였는 바 해당 업체가 정부 정책과 반대 성격이 강한데 연수업체로 적합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

58. 국제고의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한 자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59.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 유해성분 검사에 있어 기존의 제한적인 검사 기준(6개 성분)에서 확대된 기준(18개 성분 및 상층부와 하층부 검사)을 적용하여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강화 및 예산 증액을 통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것

60. 불법 촬영 점검 대상 학교 수와 실제 점검 결과 학교 수간의 수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교가 체계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61. 서울시 도서관 및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자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

62. 폐교 및 유휴 교실이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해당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63.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통학버스 운영률 또한 미미하므로 취원율이 저조한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64. 학교 석면 제거 속도가 지난 2년에 비해 지연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의 석면 잔존율이 30%에 이르는 바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초등학교의 석면제거 공사를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5. 교사 징계와 관련된 결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하고 공익제보자가 불합리하게 해임 조치 되지 않도록 할 것

66. 초등의대반 학원 관리감독에 있어 국회측에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등의대반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할 것

67.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필수화하고, 모든 심의위원들이 연수를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관리 체계 마련할 것

68. 신임 교육감은 '다가치 학교',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급식로봇 확대' 등 취임 시 표방한 공약 관련 정책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69. 신임 교육감은 학생 1인당 문화예술 바우처 공약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구상할 것

70.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평가할 때 인성검사 수준의 무의미한 측정 보다는 학생의 실제 학습능력의 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71. 총무과장은 농협서울본부와 함께 진행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2024.8.13.)의 행사 개최 시기가 농협과 금고 계약이 이뤄진 후로 계약에 따른 대가성 여부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에 대해 법적 검토할 것

72. 청사이전 계획 수립 시 보다 근무 인원이 증가하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바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7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 단축 등 신속 심의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쏟고 그 결과에 대해 공유할 것

74. 신임 교육감이 개인재산으로 소유한 토지가 농지법 위반인지 확인할 것

75. 신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반대했던 사안임으로 신임 교육감이 이를 추진할 시 교육위원회와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조치할 것

76.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의 법률자문 운영 체계에 대하여, 법률 자문 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내부 변호사 활용 강화할 것

77. 감사관은 공립학교에서 각종 비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 대해 자율감사제의 역할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적발 시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78. 감사관은 장기적으로 사립학교에도 자율감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79. 기획조정실 및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상품개발이나 굿즈 판매 다양화 등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홍보와 수입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개설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것

80. 교육정책국장은 수능 후 고3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교내 학습프로그램 개발이나, 대학 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학습 방향 등 유익한 정책을 구상할 것

81. 교육감은 학교시설개선 예산 감축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82.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담임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3.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과 학교현장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

84. 교육정책국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학교시설 확충 및 특수학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85. 운동부 학생들의 최저학력제 시행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86.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감사관은 학교 내 성폭력 피해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학교폭력에 관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87. 교육행정국장은 25년도 시설예산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안전관련 시설예산이나, 냉난방기 시설문제 등 학교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88. 교육행정국장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학군조정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

89. 신임 교육감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견해가 후보자 시절과 당선 직후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해당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

90. 교육자치법을 비롯한 유보통합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은 중앙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할 것

91. 학교급식 종사자의 결원 문제가 심각한 바 급식 종사자의 배치기준 개선과 대체 전담 인력 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

92. 신임 교육감 당선 확정 전 선거캠프에 당시 노조 등 일부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 등 일부 공무원들이 교육감과 가까워졌다는 소문에 대한 불안감과 불공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임으로 교육감은 향후 인사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해줄 것

93. 신임 교육감은 공약으로 정확한 역사교육을 위해 2억원을 배정했다고 언급하는 바, 이는 이전 역사교육이 부정확한 역사교육으로 역사왜곡을 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표현을 시정할 것

94. 기조실장은 학교시설비 예산 절감 및 유보에 관한 현재의 예산 반납·재편성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

95. 교육정책국장은 AI교과서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실행할 것

96.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청 공무원의 교육연구비 수준을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97. 교육정책국장은 저연차 교원의 퇴직을 막고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

98.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 업무가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적정 수준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

99.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직원 또는 교원의 성범죄 발생 시 관련 교육 외에 강력한 조치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부서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00. 교사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 교사로 수업하고 수당을 지급을 받고 있는 바 방과후수업 총 시간을 제한할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

101. 지구촌학교 교장이 성비위 문제가 있었던 전례가 있던 교장이 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학교의 교장 선임 자격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

102. 지구촌학교 등 대안학교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워 대안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103. 수능지원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능 감독관은 감소하였는 바, 대입수학능력시험 감독인원 중 필요 인원 수를 적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차기 수학능력시험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4.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선도 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105. 교육정책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신청서를 각각 받고 있어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신청방식을 일원화하고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를 할 것

106.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일반 유치원과 달리 폐원신고 직후 바로 폐원이 가능하므로 학부모들이 학원비 환불 문제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폐원 신고 전 조기통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

107. 경기도에 비해 학교시설 개방율이 낮은 바 서울시내 학교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108. 학교시설 개방 시 스쿨매니저와 같은 시설관리 인력 확보와 안전사고 경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

109. 지역사회공유학교 모델형 기본계획 추진현황 점검할 것

110.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있는 바 이는 관련 조례 규정 위반사항으로 시정 조치할 것

111.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중에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12. 공립초·중·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교육감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시 개별 학교장을 사업주로 기재하는 등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바, 3일 미만의 경미한 산재는 현행대로 처리하되, 3일 이상의 중대한 산재의 경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개선할 것

113. 학교 내 산재가 발생 했을 시 그 기간에 따라 보고 체계가 다른데 이를 본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14.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예산관련하여 지방재정교부금 감축, 서울시 전입금 감축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청 기금의 기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

115. 유보통합추진단은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 시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

116. 특수교육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으므로 해당 학생을 위한 교실 공간 확보를 위해 개선할 것

117. 마약예방교육 관련하여 설문조사 진행 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적이 없는 바, 아이들의 관점과 시선에서 마약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것

118. 소아당뇨학생이 스스로 주사를 투약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안을 마련할 것

119. 사립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 또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120. 감사관은 사립재단이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 내 갑질, 교권 및 학습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사립학교에 대한 세밀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할 것

121. 교육감은 성수공고 부지에 성진학교 설립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므로 대안으로 덕수고 부지에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2. 퇴직 앞둔 학교장 회계부정·업무해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감사 중 정년퇴직으로 징계 회피하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 재도입을 검토할 것

123. 공립학교의 자체감사로 적발한 건수가 종합감사로 적발한 건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바 공립학교 자체감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4.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형평성 있는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5.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자료요구 시 개인신상정보 문제로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 삭제 후 자료제출에 협조할 것

126.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다른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것

127. 운동부 없이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이 대회(시합) 참가 시 학교장의 승인 하에 학교 명을 걸고 참가할 수 있게 조치할 것

128. 최근 3년간 총 11,642건의 학교폭력 징계 중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2명, 전학도 132건으로 1.1%에 불과한 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할 것

129.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지원이 내실화 될 수 있게 조치할 것

130. 학생인권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해 특정 정당에 입법제안 모의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정치 활동에 몰두하는 바 엄중 조치할 것

131. 경기고의 경우 조리종사자의 고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일부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조리종사원이 부족한 학교에서 일부 위탁운영 방식을 추진해 볼 것

13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식기렌탈 사업이 기존에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었고,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만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중복 예산 지원 아닌지 검토할 것

133. 학교 식기세척 업무가 단기간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검토할 것

134.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의 사진을 텔레그램에 업로드 하여 벌어진 성희롱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보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해준 이유에 대해 보고할 것

135. 중대부고는 학교이전 시설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부 사항을 27년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조건부 승인을 한 교육청도 책임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136. 중대부고가 미준공 상태로 인해 건축법에 의해 노후화된 시설의 증·개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

137. 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할 시 내부형 교장공모제, 고입전형 내신 석차 백분율패지,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향후 단체협약 시 교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138.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이 요구된 증인들의 불참사유서 미제출 및 불참 사유에 미비한 부분이 많은 바 이를 개선할 것

[기타사항]

1. 노사협력담당관은 교육감 선거 결과발표일에 교육감당선자의 선거캠프에 방문자 및 방문시기 보고할 것
2. 유보통합 추진 상황 및 간담회 등 관련 자료 제출할 것
3. 서울시에 파견된 교육청 인력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할 것
4. 늘봄학교 향후 일정, 학교별 교실 현황, 늘봄학교 민원 세부내용 제출할 것
5. 2024년 늘봄학교 시행교 명단,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제출할 것
6.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진행한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비용, 참여인원 수 제출할 것
7. 최근 3년간 갑질신고 건수 내용 및 조치 결과,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현황 제출할 것
8. 서울미래교육지구 관련 자치구별 제작 교재, 지원청별 미래역량 함량 프로그램 발굴 자료 제출할 것
9.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현황 제출할 것
10. 늘봄학교 전체 참여율, 중간 이탈 학생수, 늘봄학교 프로그램 종류와 참여율 제출할 것
11. 늘봄교실 현황(공사완료, 공사진행중) 제출할 것
12. 급식로봇 도입 신청학교 및 실도입(선정) 학교 현황 제출할 것
13. 공·사립 유치원 영양사 배치 현황 제출할 것
14.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유치원 알리미에 게시된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위반 사례 정보 공개할 것
15.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시설개선비 등) 현황 자료 제출할 것
16. 학폭심의소요기간 지연 지연현황 및 지연 사유 제출할 것
17. 최근 5년간 법원 보호처분, 형사처분 받은 현황 제출할 것
18. 최근 5년간 학폭심의 후 학부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제출할 것
19.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자격증 소지 여부 현황, 현재까지 조사관 이탈 사유, 지원청별 조사관 배치현황 제출할 것
20. 최근 5년간 학생 및 교직원 성범죄 신고건수 및 징계처리 결과 제출할 것
21. 학폭, 맞폭 건수 및 처리결과 제출할 것

22. 조리사 근속연수, 연차별 퇴직현황 제출할 것
23. 최근 5년간 교내 사망사고 (학생,교직원) 현황 조치 및 사망 경위 제출할 것
24.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과 자격기준 제출할 것
25.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학생 정원 변경에 대한 인가 요청 및 처리결과 자료 제출할 것
26. 늘봄학교 강사 인력풀 구성 절차 및 채용 관련 심사위원 구성 현황 제출할 것
27. 늘봄학교 강사의 분야별, 유형별 배치 현황 제출할 것
28. 늘봄 예산 및 기자재 관리 현황 (늘봄 예산으로 구입한 기자재 목록 및 관리 책임자, 관리 방식, 늘봄 예산 및 일반 학교 예산편성 차이 세부 정보)제출할 것
29. 신임 교육감의 공약추진위원회(인수위) 운영계획서 및 향후 운영계획 제출할 것
30.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서울시내 자치구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등록) 현황 제출할 것
31. 학교 또는 학원 등 신고의무 교육시설별 총 신고(등록)차량 대수(2024년도 기준) 제출할 것
32. 학원 교습소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 합동점검 및 시정조치 내역, 안전 점검 결과 제출할 것
33. 2024년도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결과 제출할 것
34. 교육지원청별 산학겸임교사, 시간강사, 시간강사 결원보충 및 결강대비 인력풀 현황 제출할 것
35. 교원안심공제 치료 지원 대상을 시간강사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추계액 제출할 것
36. 2024년 1월 강동송파 관내 학교장의 욕설 관련 사실확인서 및 조사확인서, 갑질 감사 보고서 제출할 것
37. 목동아파트단지 학생 수 증가 예측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할 것
38.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안전 대책 강화 관련 교육감 보고 자료를 제출할 것
39. 2023~2024년 통학로 협의체 관련 회의자료 제출할 것
40. 급식업무 담당 7개 부서 협의체(TF)회의록 제출할 것
41. 미인가 대안학교가 건축용도를 보완하여 인가 처리된 현황 및 해당 자료 제출할 것
42. 급식로봇 관련 매뉴얼 제출할 것

43. 2023~2024년 사립 초·중·고 법인 전입금, 이월 현황 및 사립법인별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 제출할 것
44. 최근 5년간 초·중·고 운영하는 사립법인 재산 증감률 제출할 것
45. 2024년 경계성지능 청소년 관련 사업계획, 수립방침 자료 제출할 것
46. 우촌초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제출할 것
47. 2014~2024년까지 일광학원 법인 및 우촌초 교직원 고용 명단 제출할 것
48. 일광학원을 피고인으로 고소한 사건 리스트, 일광학원 및 우촌초 구성원 중 수사 대상, 고소·고발 사건내용, 처리결과 제출할 것
49. 학교통합지원센터와 별도로 학교행정지원센터 신설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정책연구 결과 제출할 것
50.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 최우수,우수법인 선정 평가지표 제출할 것
51. 학교행정지원센터 조직 관련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제출할 것
52. 탄소제로실천 선도학교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할 것
53. 쎈진학나침반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할 것
54. 중구 A학교의 2023~2024년 학교교육계획서 제출할 것
55. 최근 3년간 성과공유회, 평가회 관련 자료 제출할 것
56. 학교폭력 담당 업무 행정인력 증원 관련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교육부의 검토결과 자료 제출할 것
57. 2024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인적 구성(비전문가와 전문가 구분), 심의회별 위원 참여율, 항목별 가해학생 조치 기준 제출할 것
58. 최근 5년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현황 자료 제출할 것
59.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에서 일광학원에 대한 검토 자료 제출할 것
60. 통학로 안전 확보 지연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통학로안전협의체 운영 현황 제출할 것
61. 노후 학교 시설의 전수조수 및 개보수 계획 제출할 것
62. 최근 3년간 교육감 표창장 심사 및 수여 현황 제출할 것
6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원 공모사업 관련 자료 제출할 것
64. 안전총괄담당관은 초등학교 교육안전지도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교통봉사자 희망연결시스템(모이자구) 사업 설명 및 자료 제출할 것
65. 2023~2024년 교육청-노조 관련 협약서 제출할 것

66. 청년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 제출할 것
67. 혁신학교와 MOU 맺은 대학원의 학교별 재학생 인원, 인당 보조금 지급액 제출할 것
68. 개인정보진단평가 결과 세부내역 제출할 것
69. 교원연수 중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 자율연수의 내용과 참여대상, 투입예산 자료 제출할 것
70. 중등사회과교원 학생인권 연수에 참여한 25명에 대한 자료, 예산규모 제출할 것
71. 2023년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 제출할 것
72. 학교노동인권 교육활성화 기본계획, 2024년 서울학생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제출할 것
73. 최근 3년간 당뇨병 질환을 겪고 있는 학생 현황 제출할 것
74.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자문심의위원 위촉조사단 전문성 강화 연수 현황 제출할 것
75. 교육감 선거 이후 비서실에 채용된 직원 명단, 근무기간, 담당업무, 채용 시 제출한 서류 제출할 것
76. 최근 1년간(2023.9.~2024.8.) 전 조희연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금액 현황 제출할 것
77. 최근 3개년 서울 특수학교(급) 신입생 정·현원 현황 및 전체 총 재원 자료 제출할 것
78. 특수학교 중장기 설립 계획 및 특수학급 2025학년도 설치 계획 제출할 것
79. 2023년 학폭 심의현황, 후속조치, 후속 민원, 최근 이슈된 사안 심의 결과 자료 제출할 것
80. 학폭 관련 증인신문, 학폭심의위원회 개선 관련 민원현황 제출할 것
81. 최근 5년간 법원 보호처분 형사처벌 현황(학생) 제출할 것
82. 학폭심의소요기간 지연 사유, 지연율 제출할 것
83. 최근 5년간 학폭심의 후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제출할 것
84. 학폭전담조사관의 상담심리 자격증 보유현황, 지원청 배치 현황, 사퇴한 조사관 자료 제출할 것
85. 최근 5년간 성범죄 신고건수(학생 및 교직원), 징계처리 결과 제출할 것
86. 최근 5년간 학폭 맞폭 건수, 처리결과 제출할 것
87. 조리사 근속 연수, 연차별 퇴직 현황 제출할 것

88. 운동부 최저학력 미충족 시 불이익 관련 교육부나 시·도교육감 회의에 교육청이 건의했던 내용 제출할 것
89. 교육부에서 2024.11.12.자로 유예한 '학생 선수 최저 학력제 적용' 관련 보고 자료 제출할 것
90.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학폭위 심사위원의 질적인 향상과 관련된 객관적 데이터 제출할 것
91. 성추행 피해 중학교 신원 노출 2차 피해 관련 자료(민원조사 결과보고서 및 특별장학 결과 등) 제출할 것
92. 최근 3년간 중등교사 정원 현황(기간제 포함) 제출할 것
93.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제출할 것
94. 급식 위탁운영 또는 외주운영 학교 중 직영으로 급식운영을 회귀한 현황 자료 제출할 것
95. 가스열펌프(GHP)저감장치 부착 관련 2024년 사업비 집행 현황 및 2025년 예산편성 여부 제출할 것
96. 학교 급식실 산재 등 위험사고 예방 대책 가이드라인 제출할 것
97. 중국 역사 왜곡 대응 관련 교육교과과정, 교과서 내용 제출할 것
98. 각 지역청의 행사성 예산 2024.9. 집행 내역 및 집행 예정 예산 현황 제출할 것
99. 교육청 내 각 기관들의 주차장 주말·공휴일 개방실적 제출할 것
100. 2024년 세출예산 유보액 국과별 내역 제출할 것
101. 최근 3년간 대안교육기관 지원 내역(기관당 지원항목, 지원금액), 사람사랑나눔학교 내역, 지구촌학교 예산 지원 내역 제출할 것
102. 특수학급 신·증설 관련 5개년 계획 제출할 것
103.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 검토자료 제출할 것
104. 교육청이 여성가족부로 통보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자료 제출할 것
105. 서울시교육청 소관 위원회 현황(위원회 및 위원 정수) 제출할 것
106. 2018년 이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제출할 것
107. 직업계고(특성화고) 학교별 졸업생 취업률, 근무유지율 자료 제출할 것
108. 직업계고 졸업생 중 취업자의 사업장 규모 현황(300인 이상, 30인 미만 구분) 제출할 것

109. 특수학급 중 과밀학급 유무, 전체 특수학급 대비 과밀학급 비율, 특수교사 1명 당 학생 수 자료 제출할 것
110. 행동중재전문교사 인력 충원 현황, 인력 양성방법, 인력 배치현황 제출할 것
111. 산업재해조사표 자료 제출할 것
112. 학교시설개방 관련 스쿨매니저 사업 현황 자료 제출할 것
113.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이력서 제출할 것
114. 재정공시심의원회,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최근 2년간 회의 내용,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내역 제출할 것
115. 학교 각급별 기본운영비 기준 제출할 것
116. 2014~2018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자료 제출할 것
117.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시설설비 기준에 미흡한 시설 현황과 학교시설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
118. 최근 3년간 학교급식에 의해 알레르기를 일으킨 학생 현황 제출할 것
119.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계획서 제출할 것
120. 교육청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분포 현황 제출할 것
121. 교육청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위반 등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제출할 것
122.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운영비 감액 혹은 교육시설환경개선비 감액한 현황 제출할 것
1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결과보고 자료 제출할 것
124. 교육감 비서실 및 조희연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제출할 것
125. 최근 3년간 퇴직 교장 현황 제출할 것
126. 양강중, 수명중, 신목초 회계 관련 감사 보고서 제출할 것
127.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채용 및 자격 기준, 최근 공고문,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할 것
128. 학폭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지침 및 예규 제출할 것
129. 특별채용 해직교사 3명 법률자문 의뢰서, 법무법인명 기재하여 제출할 것
130. 공동학폭(중부-성동광진 공동학교폭력사안) 현재까지 상황 관련 제출할 것
131. 2024. 8. ~ 11. 국민신문고 민원내역 제출할 것

132. 감사관은 중대부고 설립과정에서 타인소유 토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사업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하고, 이후 학교법인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신청은 13년간 미실시한 것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할 것
133. 학교 내 청소년유해도서 비치 현황 제출할 것
134. 급식실 식기세척기 렌탈 선정 학교 61개 중 34곳이 동일한 업체와 3개월로 쪼개어 수의계약 한 사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할 것
135. 노동인권담당관이 이전에 소속했던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바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할 것
136.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의 각 조사별 보고서와 처리결과 제출할 것
137.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조사관 명단 및 주요 경력 제출할 것
138.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명단(주요 경력 포함) 제출할 것

교육지원청

–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1건, 기타사항 3건 –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관내에서 발생한 특정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잘못된 발언이나 사안처리과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징계방안을 마련할 것
2. 강서양천교육지원청장과 교육정책국장은 행사성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교원 연수 등 예산의 목적에 맞는 구체적 집행을 실행할 것
3.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 과학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해당 학교의 피해 학생 치료 지원 및 당시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재발방지책 마련 등 후속 조치 철저히 할 것
4. 교육장은 현재 학교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수명중학교의 행정실 직원에 대한 부서 이전과 같은 적절한 조치할 것
5.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소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신고 취하를 종용하고, '학생 직접 훈계', '사안 축소·은폐', '성급한 화해 유도' 등 교육부 지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기타사항]

1.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생태전환과 함께하는 일반직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의 사업내용 제출할 것
2.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한 25년도 예산안 절감 내역 제출할 것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 욕설을 한 사례가 발생한 바 교육자의 공직 기강과 품위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강빛초중 이음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지원청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를 시정할 것
2. 대명초, 고덕초 통학로와 관련하여 통학버스 운행문제, 육교설치 문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할 것

▣ 동부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동부교육지원청은 군자초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통학로 안전 문제로 답십리초로 전학을 가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할 것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사교육경감시대 불법과외교습 근절 등의 정책 수립 시 건전한 사교육 우수사례를 반영하여야 할 것

▣ 북부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북부교육지원청은 통학로안전협의체 구성 시 2개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위한 인근 대학과의 MOU를 맺어 운영하고 있는 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우촌초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이며, 학교운영에 관한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성북강북지원청 교육장으로 부터 독서 교육 부문 우수표창을 받은 바 표창 선정 기준을 재검토할 것

▣ 중부교육지원청

[시정요구사항]

1. 중부교육지원청은 환일고(운화학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교사들이 주장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면밀히 검토할 것
2.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주변 친구들간의 분쟁사항을 시정할 것

[건의사항]

1. 중부교육지원청은 수영장 사용허가 업체의 전대문제와 여성 탈의실에 남성이 출입하여 불거진 문제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

[기타사항]

1. 중부교육지원청은 환일고(운화학원)의 종교수업 관련 민원 사항 결과보고서 제출할 것

직속기관

– 시정요구사항 20건, 기타사항 1건 –

▣ 교육연구정보원

[시정요구사항]

1. 교육연구정보원은 센진학 나침반(대학진학 정보 서비스)사이트의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2. 교육연구정보원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기타사항]

1. 쎈진학나침반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할 것

▣ 융합과학교육원

[시정요구사항]

1.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학생들의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융합과학교육원은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과학 프로그램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 융합과학교육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및 융합과학교육,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교육연수원

[시정요구사항]

1. 교육연수원장은 교사 연수 진행 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

▣ 학생교육원

[시정요구사항]

1. 학생교육원장은 천마산 야영장 해체 공사 진행 현황이 더디게 진행되고, 해빙기 시기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

[시정요구사항]

1. 유아교육진흥원은 가족체험교육, 문화체험교육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운영 중에 있는바, 이러한 체험교육 활동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의 규모를 확장시키도록 할 것
2.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학부모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등 평가 기준을 내실화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할 것
3. 유아교육진흥원의 원장이 최근 1년만에 임기를 마친 사례가 있는 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사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4. 유아교육진흥원의 현원에 대한 보고 자료에 사무직원 누락사항을 시정하고, 진행하는 사업(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이 연내 진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유아교육진흥원은 전반적으로 사업집행률이 낮은 바, 사업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개선할 것

▣ 보건안전진흥원

[시정요구사항]

1. 보건안전진흥원은 초등학교, 유치원 놀이시설 바닥재에 탄성포장재 등 유해성분 조사할 때 타 시도에 비해 성분 조사 항목이 적은 바 이를 시정하여 유해성분 조사항목을 확대할 것
2. 보건안전진흥원은 기관 사이트의 게시물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바 이를 시정할 것
3. 보건안전진흥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4. 보건안전진흥원은 급식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보험 관련 예산이 급감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그린급식 교육자료집이 2021년도 제작이후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바,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 교육이나 환경교육 측면을 반영한 교육자료를 만들 것

▣ 학생체육관

[시정요구사항]

1. 학생체육관을 교원 행사 보다는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정요구사항]

1. 교육시설관리본부는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사업의 불용율이 높은 바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에 신중히 기할 것
2.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흑석고, 개포도서관 건립 등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도서관 · 평생학습관

–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2건 –

▣ 정독도서관

[시정요구사항]

1. 도서관 민원업무의 고충과 보호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독도서관은 서울시 운영 도서관과 협업을 통해 ‘서울아트책보고’와 같은 예술 관련 도서 소개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3. 정독도서관 관장으로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직급 체계 개선을 검토하여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
4.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박물관 시설이 노후화 된 바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

[건의사항]

1. ‘레고로 만드는 특별전시회’를 다른 지역구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독도서관장은 수유실이나 영유아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영유아시설이 부족한 도서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등 노력할 것

▣ 강서도서관

[시정요구사항]

1. 강서도서관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개발 중으로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늘어나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용 방안을 마련할 것

▣ 남산도서관

[시정요구사항]

1. 남산도서관은 남산도서관에 비치된 고문헌 디지털화 작업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업을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남산 아카이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마포평생학습관

[시정요구사항]

1. 마포평생학습관 등 각 평생학습관의 특화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용산도서관

[시정요구사항]

1. 용산도서관의 구내식당 입찰이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용산도서관의 가족시네마 이용 대상에 1인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기타사항 1건 –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시정요구사항]

1.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선임 관련하여 공모를 통한 외부 채용방식과 부교육감이 겸임하는 방식 중 조직의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
2.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용절차를 공모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타시도의 경우 이사장을 부교육감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사장 임용방식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3.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가 선임되는 등 감사원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사장 선임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할 것

[건의사항]

1. 학교안전공제회는 이사장 선임 절차가 조직의 안정성을 최우선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인사 또는 부교육감 겸직 중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신임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선발을 앞두고 있는 바 직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안전공제회를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내부통제에 대한 비전을 마련할 것
3.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관련 기금이 25년 1월 고갈될 예정으로 학교안전공제 관련 기금의 수익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보험사의 기금 운용을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타사항]

1.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소송업무 수행 내역, 피해자 상담 지원 내역, 학교폭력 지원 내역 제출할 것

9.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조치의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할 것을 요구함(기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 특기사항 : 없음

10. 중요근거 서류 : 없음

※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 ○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 ○ 서울교육 홍보물 · 영상물 · 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 · 보급 ○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홍보대사 · 홍보자문단 및 시민기자단 운영 ○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 ○ 미디어 홍보전략 개발 및 관리 ○ 그 밖의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운영 ○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리 ○ 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운영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 공익제보센터 운영 ○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총괄 ○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공인관리 ○ 보안·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 회의 및 행사 ○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 학교의 차량정수관리 ○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식당 운영 ○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 업무 ○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비상·전시동원 업무 ○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훈련 ○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 ○ 민원 제도 개선, 각종 민원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 ○ 기록물의 운영(기록물의 생산·수집 활용 및 폐기 등) ○ 정보공개제도 운영 ○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및 검색·열람 제공 ○ 업무관리, 기록물관리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재난 · 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 · 지휘 ○ 국가안전관리 세부계획 및 학교안전관리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에 관한 사항 ○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 관련 ○ 국 · 공유재산 재해예방 및 대책 수립 ○ 교육시설재난공제 관련 업무 ○ 산업·중대재해 예방 총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 관리 ○ 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 유보통합 업무 총괄 ○ 서울시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추진 ○ 유보통합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 교육정책의 총괄 기획·개발·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 주요업무계획 및 중기발전계획의 수립·관리 ○ 국정과제 및 공약사업 관리 총괄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및 조정 ○ 공무원 인건비 편성·관리 ○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 ○ 조직·정원관리·행정사무 개선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소송 총괄 및 수행(국가·행정·민사소송 등)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운영·지원 ○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장학 및 유·초·중등 교육과정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정원·인사·연수·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 혁신미래학교 지정·운영 등 학교혁신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수학·과학·영재·정보·외국어·독서 교육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 운영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바칼로레아(IB) 탐색에 관한 사항 ○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평생교육의 기획·운영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지원 ○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지도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운영 지원·지도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지도·감독 ○ 학교(성)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 다문화, 탈북학생교육 관련 업무 ○ 학생인권 교육·상담·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진로·적성·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 ○ 학교체육에 관한 운영 및 지도 ○ 학교 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업무 ○ 수련활동소규모테마교육여행 운영 지도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 학교보건·환경위생·학교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생배치계획 ○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관리, 결산 ○ 국·공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 처분) ○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내진보강, 석면제거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 투자(BTL) 관리 ○ 노후학교 공간재구화 사업에 관한 사항 ○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에 관한 사항 ○ 신청사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서울교육정책 및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등의 조사·분석·연구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교 교육활동 지원 관련 정책연구 ○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 인성·진로 및 진학 교육자료 개발 ○ 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비롯한 교육정보화 운영 지원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		○ 전시관 교육 기획·조정 ○ 과학교육 연구 및 연구 활동 지원 ○ 과학·영재교육용 자료 개발 및 보급 ○ 전시관 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 시행 ○ 학생 과학교육·과학대중화 교육 지원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 ○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육 연구 및 정보 제공 ○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유치원 학부모교육 운영 ○ 유아 체험교육 활동 운영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 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자료 관리 ○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관리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연수 운영 ○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 체육관 사용 ○ 특기학생 훈련 지원 ○ 체육기능 향상 ○ 체력단력실 운영 ○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학교시설관리 예산 지원 및 시설보수 지원 ○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지원 및 사업비 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 ○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 ○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 평생학습관 자료의 상호대차 ○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기 관 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 자료 보존 및 관리 ○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 ○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 ○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 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 ○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 ○ 도서관 홍보 등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 유·초·중·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 유·초·중·고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 업무 지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고 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유치원 포함)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 ○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 관리 등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제급여 지급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

□ 증인 출석 요구

일 시 (장소)	대상 기관	증인출석대상		출석사유	출석 여부
		성 명	소속 (직책)		
2024. 11.14.(목) 11:00 / 11.15.(금) 10:00 (교육위원회 회의실)	서울시 교육청	김동한	양재고등학교 (교사)	조희연 前 교육감 불법채용 관련	×
		김진철	시흥중학교 (교사)	조희연 前 교육감 불법채용 관련	×
		김학한	신목고등학교 (교사)	조희연 前 교육감 불법채용 관련	○
2024. 11.15.(금) 10:00 (교육위원회 회의실)		진교훈	강서구청 (구청장)	'지역자원과 연계한 강서 인공지능 미래교육 업무' 관련	×
		김민주	원당초등학교 (교장)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관련	×
		지혜복	前 용강중학교 (교사)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징계 관련	○
		최은석	前 우촌초등학교 (교장)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에 대한 감사와 공익제보자 보호(복직) 조치 관련	○
		이규태	前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우촌초등학교 운영과 공익제보 관련	×
		엄범순	우촌초등학교 (교장)	우촌초등학교 운영과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관련	×
		김은미	학교법인 운화학원 (이사장)	환일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내부 공익제보 관련	×
		이정철	환일고등학교 (교장)	환일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내부 공익제보 관련	○
		오대균	양강중학교 (행정실장)	부정한 회계지출 건에 대한 감사결과 확인 등 사유	×

【 참 고 :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현황】

구 분	기관명		비 고
평생학습관 (4)	- 고덕평생학습관 - 노원평생학습관 - 마포평생학습관 - 영등포평생학습관		4개 기관
도서관 (17)	- 강남도서관 - 강동도서관 - 강서도서관 - 개포도서관 - 고척도서관 - 구로도서관 - 남산도서관 - 도봉도서관 - 동대문도서관	- 동작도서관 - 서대문도서관 - 송파도서관 - 양천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용산도서관 - 정독도서관 - 종로도서관	17개 기관
교육지원청 (11)	- 동부교육지원청 - 서부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 - 북부교육지원청 - 중부교육지원청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11개 기관